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전환’을 모색하다”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오전 9:30~6:00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관 · 평화관

공동주최: (사)북한연구학회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초대의 글

존경하는 북한연구학회 회원 여러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계속되는 대남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되었던 대화와 교류협력은 실종되고, 안보와 군사적 대응태세가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연구학회는 위기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는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패와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 핵실험 이후 남북한의 인식변화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통일인프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와 관계없이 양질의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춘계학술회의가 한반도 위기를 헤쳐 나갈 회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패널 이후 임시 총회도 개최되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최진욱

■ 프로그램 안내

시간 장소	통일관 정산홀	평화관 1층 대회의실	평화관 2층 국제회의실
9:30~10:00	등록 / 개회사		
10:00~12:00	제1회의 [기획패널1]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한의 인식변화	제4회의 [자유패널1]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식량문제	
12:00~13:20	점심 식사		
13:20~15:20	제2회의 [기획패널2]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제5회의 [자유패널2] 김정은 권력승계와 북한문화	제6회의 [대학원생 패널]
15:20~15:40	휴 식		
15:40~17:20	제3회의 [기획패널3] 통일인프라: 성찰과 제언		
17:20~17:30	휴 식		
17:30~18:00	2013 북한연구학회 임시총회		

■ 2013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 [통일관 PROGRAM]

■ 통일관 지하 1층 정산홀	
등록 09:00~09:30	
개회식 및 축사 (09:30~10:00)	개회사: 최진욱(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제1회의 [기획패널2]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한의 인식변화 (10:00~12:00) 사회: 박명규(서울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북한주민의 시각” 발표: 박영자(이화여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발표: 홍 민(동국대)
	토론: 조정아 (통일연구원) 이수정 (북한대학원대)
점심식사 12:00~13:20	
제2회의 [기획패널1]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13:20~15:20) 사회: 박종철(통일연구원)	“북한 핵무장 능력평가” 발표: 강정민(KAIST)
	“3차 핵실험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발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효과 및 실효성” 발표: 임강택(통일연구원)
	토론: 임수호(삼성경제연구원) 장용석(서울대) 박지연(이화여대)
휴식 15:20~15:40	
제3회의 [기획패널3] 통일인프라: 성찰과 제언 (15:40~17:20) 사회: 강성윤(동국대)	<김중도론: 라운드테이블> 최완규(북한대학원대) 고유환(동국대) 김영수(서강대) 유효열(고려대)
휴식 17:20~17:30	
17:30~17:40	통일부장관 인사말
북한연구학회 임시총회 (17:40~18:00) 사회: 이정철 총무이사	(사)북한연구학회 신임회장 선출 (사)북한연구학회 정관 변경

■ 2013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 [평화관 PROGRAM]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등록 09:30~10:00	
<p>제4회의 [자유패널1]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식량문제 (10:00~12:00)</p> <p>사회: 박순성(동국대)</p>	<p>“김정은체제의 대남전략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전망” 발표: 안성호(충북대)</p>
	<p>“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의 개념적 재검토: 신정경분리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 성기영(연세대)</p>
	<p>“북한 식량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 발표: 문경연(세종연구소)</p>
	<p>토론: 김갑식(입법조사처) 임을출(극동문제연구소) 정은미(서울대)</p>
점심식사 12:00~13:20	
<p>제5회의 [자유패널2] 김정은 권력승계와 북한문화 (13:20~15:20)</p> <p>사회: 이우영(북한대학원대)</p>	<p>“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 비교연구” 발표: 서유석(북한연구소)</p>
	<p>“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 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발표: 강동완 (동아대)</p>
	<p>“집단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영화 읽기 - <자강도사람들>을 중심으로” 발표: 전영선 (건국대)</p>
	<p>토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정수(단국대) 조은희(이화여대)</p>
■ 평화관 2층 국제회의실	
등록 13:00~13:20	
<p>제6회의 [대학원생 패널] (13:20~15:20)</p> <p>사회: 김석향(이화여대)</p>	<p>“대북 전단살포와 분단 번역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 임석훈(동국대 박사과정)</p>
	<p>"북한 축적체제의 위기와 대응: 약탈국가와 핵의 공존" 발표: 이재경(성균관대 박사수료)</p>
	<p>"북한문화외교의 태동(광복이후부터~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발표: 모순영(이화여대 박사수료)</p>
	<p>토론: 김종욱(동국대) 윤철기(북한대학원대) 고인환(경희대)</p>

차례

제1회의	발표 1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및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 : 사회집단별 ‘핵-권력·체제’ 영향력 실태와 관계 분석	박영자	10
	발표 2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홍민	36
제2회의	발표 1	북한 핵개발 현황 분석	강정민	59
	발표 2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 전략적 핵 균형의 관점에서	조성렬	70
	발표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및 실효성	임강택	98
제3회의	<라운드 테이블> 최완규, 고유환, 김영수, 유호열			
제4회의	발표 1	김정은체제의 대남전략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전망	안성호	124
	발표 2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의 개념적 재검토: 신정경분리 모델을 중심으로	성기영	155
	발표 3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 분석: 북한 경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문경연	168
제5회의	발표 1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 비교분석	서유석	187
	발표 2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강동완	200
	발표 3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읽기 :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영선	215
제6회의	발표 1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임석훈	231
	발표 2	북한의 약탈국가화: 축적체제의 위기와 대응	이재경	251
	발표 3	북한 문화외교의 태동(광복 이후부터~1950년 6·25전쟁이전까지)	모순영	275

제1회의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한의 인식변화

제1발표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및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 : 사회집단별 '핵-권력.체제' 영향력 실태와
관계 분석 - 박영자

제2발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 수행적 분단과 핵무기의 코스모폴리티스 - 홍민

간지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및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 : 사회집단별 '핵-권력-체제' 영향력 실태와 관계 분석

박영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SSK연구교수)

I. 연구 시각과 목적:

중심 권력에 비껴서 권력-체제 정체성에 다가가기

본 연구는 핵을 과학기술이 아닌 권력 Agenda로 인식하며, 기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외교문제와 통일문제 또는 동맹파와 자주파 등으로 초점이 구별되었던 대북통일 관련 문제의식들이,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북한정권의 의도, 공식·비공식 제도-행위자 실태, 권력-부를 둘러싼 작용과 반작용, 구조의 지속과 변동, 체제의 성격과 정체성 등 북한체제 내부 진단과 권력 문제로 수렴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향이 요구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각종 성명·회의결과·법령개정 분석과 김정은의 현지지도·이동/접촉 경로, '핵무기, 선군사상, 미제척결, 불바다 전쟁, 절대존엄 사수, 김일성민족 인민들의 열광,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 등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그리고 탈북민이나 북한현장 소식통들의 정보 등에 의한 질적-맥락적 분석만으로는, 역동적인 북한 권력과 체제의 현실태와 정체성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체제내부 작동을 중시하는 본 연구는 북핵문제를 북한 '권력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때 권력의 문제는 '권력자의 문제(리더십)'가 아니라 '권력 작동의 문제(시스템)'이다. 부분적으로는 중범위수준의 '국가-사회' 또는 '정권-주민'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나, 이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한 정치사회(인간공동체) 내 권력의 '배열구조와 작동기제', '정당성과 영향력', '통합력과 균열구조', '상관성과 상호작용' 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을 권력과 체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북한 권력시스템 중심부에 위치하여 핵무기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과 소수 지배엘리트들의 생각을 추론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권력시스템의 위계구조와 작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 균열 구조의 계선에 따라 형성된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실태 및 주요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려 한다. 최종적으로 현 단계 북한 권력시스템 작동

실태 및 북한 체제의 정체성 진단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즉, 중심 권력에 비껴서 핵-권력의 문제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이자, 북한주민의 시각에서 북한체제 작동의 영향력 실태와 요인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작업이며, 아래로부터 북한체제의 정체성을 독해해보려는 시도이다.

북한 체제나 권력을 하나의 단일한 덩어리로 인식하지 않는 본 연구는 북한주민을 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구조 및 역사경험과 생활세계의 차이 등에 따라 구별되는, 정치신분적 계층(구계층), 경제적 계층(신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 균열 구조에 따라 집단별로 범주화하여, 기술통계 분석법으로 첫째, 북한사회의 집단별 '핵무기 인식' 실태와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각 집단별 주요 정치요인 의식 차이를 확인한 후, 셋째, 핵과 관련되어 김정은체제의 주요 정치-정책 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북핵과 관련되어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수립에도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통일, 남북한 교류, 대북지원 의식과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즉, 정치-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 집단별 '핵무기-권력-체제' 영향력 실태와 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종속변수인 연구의 중심소재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정권의 정당성 뿐 아니라 '북한 정체성'까지를 상징하는 핵무기,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이다.

II. 연구 배경과 방법

1. 연구의 배경: 핵과 권력, 누가 북핵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1) '핵=권력'의 역사구조와 김정은정권의 핵정책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의 폭발력 증대·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2월 미국본토에 다다를 수 있을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함께 이전 실험과 다른 의미로 국제적 파장을 주고 있다. 운반체계에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의미의 '소량화'와 '경량화', 그리고 플루토늄 뿐 아니라 농축우라늄을 가지고도 핵 생산이 가능한 '다종화' 때문이다.

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신속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기에, 대량의 '핵의 무기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협상 및 '제한적 군사행위(폭격)' 등을 통한 제거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는 북한당국의 발표이지 그 사실 여부와 생산기술 정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자발적 협조 없이 그 누구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전보다 진전된 핵기술을 보유한 것은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우라늄이 풍부하다.

핵무기 사용이 아닐지라도 남한과 연결된 그 작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실험을 연속한다면, 일차원적 위험 지역과 사람들은 한반도와 남북한 주민들이다. 이는 북핵이 단순 핵문제로부터 그 위험과 갈등구조, 그리고 해결방법이 복잡한 다차원적 한반도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복합 구조적 문제로 전환된 북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 '핵은 왜 만들어졌는가?' '누가 필요로 하는가?' '누가 통제하는가?' 등 역사, 권력, 구조, 행위주체를 중시한다.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듯,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 파시즘 정권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들에 힘입어 미국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완성되었고, 일본에서 그 엄청난 파괴력이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핵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

첫째, '최초의 그리고 절대적인 핵위력'은 2차 대전 이후 국제 권력구조 중심에 있는 미국과 자유주의 권력을 상징한다. 둘째, 핵은 20세기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냉전이란 적대적 체제 경쟁 하의 소비에트 권력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핵기술 보유 과정에서 벌어진 체르노빌의 재앙 등이 이를 상징한다.

셋째, '핵=권력' 구조이다. 1960년대까지 핵실험에 성공한 2차 대전의 승전 강대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과 2013년 현재까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국제권력을 장악하고 있다.¹⁾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핵=권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며, 이는 각국의 국내 정치권력 구조에도 연계된다.

넷째, '핵보유=안전보장'이라는 패권적 보수 진영 논리의 정당화이다. 유엔안보리가 상징하듯 핵무기를 가진 절대강자들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패권 논리는, '핵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²⁾'이라는 보수적 권력정치 담론을 정당화했다. 핵억제력은 상대방의 핵공격을 우려하여 자국의 안전을 위해, 상대국이 핵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핵전력(核戰力)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주의 정책 논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핵문제가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듯, 북핵 문제 또한 과학기술 수준의 그 종류 분석과 검증 문제가 아니라 북한 권력과 체제의 문제이다. 1990년대~2013년 현재까지 20년 이상, 자체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

1)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인도와 파키스탄을 당근과 채찍으로 공동 관리하며, 북한, 이란 등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따르면,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은 북한이 지난 2003년 6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처음 사용한 말로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주장해온 '물리적 억제력'과 '전쟁 억제력'이란 말을 대신한 표현"이라고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5&docId=74073&mobile&categoryId=505>.

는 경제난과 “비사회주의 현상”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국가예산 대비 천문학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집중투자하며, 북한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가?’ ‘현 시기 필요는 무엇인가?’ ‘누가 통제하는가?’

북한 내부정세에 기초할 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듯, “김일성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현재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젊은 “수령”과 노회한 관료’로 구성된 3대 세습인 김정은 정권의 안착화를 위해서이다. 셋째, 핵을 통제하는 주체는 김정은체제의 소수 지배연합이다. 그리하여, 핵을 주도하는 김정은체제 소수 지배연합의 대내외적 목적과 필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내적으로 김정일 사후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진행된 숙청 등 권력엘리트 구조조정의 후과를 차단하고, 시장화와 ‘국가(관료)-사회(주민) 균열’로 체제이반 현상이 확장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인정받으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뎌내는” “강성대국과 선군사상” 식 기대와 열망의 내핍과 집단주의적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서이다. 외적으로 미국 주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여, 국제적 협상력을 증대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해외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다.

결국, 핵을 통제하는 주체 측면에서는 최소한 김일성민족을 표방한 자신들의 기득(既得) 권력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즉, 핵과 권력의 현실주의 역사가 그러했을 뿐 아니라, 김정은정권의 핵정책은 ‘핵=권력=체제 지속’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노선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정책 변화는 중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북핵 효과성 진단과 북한체제 연구의 Refocusing: 누가 북핵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앞서 필자는 김정은체제에서 북핵의 목적과 필요에 대해, 내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안착화와 정당성 확보, 외적으로 국제 협상력 증대와 정권안정 보장, 그리고 해외자금 유입 등이며, 대내외를 통틀어 최소한 “김일성민족”을 표방한 김정은과 소수 지배연합의 기득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2013년 4월 현재까지 연일 이어진 ‘불바다 전쟁선언’ 등의 수사적 공식담론을 논외로 하고, 그 목적을 향한 북한정권의 행보와 대내외적 효과는 어떠한가?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작년 말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이후 모든 권력엘리트들을 풀가동하여, 그 성공들을 매개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체제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충성심을 고취하는 대규모 주민동원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이후 연이은 권력엘리트들의 숙청·하방·부서재배치 등 권력구조 조정의 혼돈과 후과 및 북한주민들의 ‘젊은 수령과 탐욕스런 관료들’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대북추가 제재와 강력징벌 등 강력한 외교 언사들이 횡횡하나, 3차 핵실험 직후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비확산”이라는 공식 대응기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협상력을 확보한 것이다. 비확산이란 지금 가지고 있는 핵까지는 인정하되,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는 핵정책 기조이다. 해석해 보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나, 미국의 가장 위험국가인 중동지역으로의 확산은 막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시간의 문제가 있으나 핵 비확산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게 김정은체제의 국제적 협상력은 이미 높아진 것이며 더 높아질 수 있다.³⁾

전체적으로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성공이 상징하듯 정권교체 1년 후 현재 김정은체제는 예상에 비해 빠르게 안착화되고 있다.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또는 이라크의 후세인과 같은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유사한 질의 ‘수령-독재 정치시스템’ 일지라도, 김일성체제와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와 운영방식, 그리고 국가-사회 관계는 달랐으며, 김정일체제와 김정은체제의 그것들 역시 다르다.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구조로 볼 때,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젊은 수령인 김정은의 통치와 리더십 중심성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오랜 정치경험 과정에서 치열한 세력투쟁을 주도하며 스스로 자신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에 반해, 김정은은 2008년 이후 김정일과 그의 가신들이 빠른 시기에 만들어낸 지도자이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과 관련해서 북한의 공개된 정치일정을 추적하면, 김정일체제와 달리 관련 결정들이 조선노동당 공식기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식-제도적 규칙과 제도 보다 비공식적인 결정구조를 선호했던 김정일체제에서의 2006과 2009년 핵실험은 김정일 개인의 결정권이 컸다. 그러나 2013년 김정은체제에서는 공식 제도에 의한 집단적 결정권, 즉, 파워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장기적으로 이는 ‘북한체제의 정체성 변화 가능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수령과 소수 지배연합이란 북한의 중앙권력 정체성’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기본적 이유는 조선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북한 공식기구에 제도화되어 있는 수령시스템의 특성 즉, 가계/가문-혈연에 기반한 소수측근 지배연합(권력엘리트 집단)의 장기지속성과 계승성, 그리고 강력한 인적-물적 연계성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독재 정치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독재정치 네트워크들을 제거하려는 ‘반독재 네트워크’는,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당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체제의 고위직 내부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⁴⁾ 북

3) 이로 인해,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다. 비확산 협상은 핵을 가진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확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 또는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개입력 또는 협상력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주가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핵문제 또한 중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구조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 연구의 재초점화(Refocusing)가 필요하다. 그 중 필자가 주목하는 주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권력 형성'이다. 예를 들어 북한 권력과 체제의 위계적 작동과정에서 파생되어, 서로 다른 이해와 환경으로 '구조적 차이와 갈등이 있는 집단들'로 구별되는, 체제 내부 집단 행위자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들 행위자 집단 간 권력 및 체제 인식·관계·행동의 차이(집단-간 차이)와 정치적 기회구조 창출 환경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조사에 기반하여, 북한 내부로부터 체제 민주화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계층별·세대별·지역별 주체 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구조, 즉 '사회 구성체' 이해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⁵⁾

점점 상수화 되어 가는 북핵과 관련된 위협과 불안은 결국, 북한 내부에서 '누가 핵의 통제와 관리, 그리고 결정 권한을 가질 것인가' 라는 권력 주체 및 영향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주체 형성, 즉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생존전략과 발전전략, 삶과 노동, 갈등과 희망, 대립·타협·투쟁·연대 등 아래로부터의 드러나는, 권력을 향한 미묘한 의식과 몸짓의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본 연구주제와 연결 할 때, 관심의 초점은 민주주의와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구조와 핵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및 균열 구조는 존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가? 북한체제 내부 변동으로 김정은정권의 핵정책 변화가 가능한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연일 '핵'과 '핵무기'에 열광하고 있으며, 수령-체제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대규모의 충성맹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과 연출이 혼재되어 있다. 그 현장에는 중앙권력의 신민(臣民) 모델을 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정체성과 강제된 정체성, 그리고 이중화되거나 숨겨진 정체성 등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덩어리로 연출되어 그 정체성의 범주화와 성격 규정이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은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차이가 드러나는 북한의 사회집단별 핵무기와 북한 권력-체제 관련 주요 정치-정책 요인에 대한 인식실태 및 상호 간의 상관성은 어떨까?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북한-북한 사회-북한주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로 구별되는 사회집단별로 좀 더 세분해 보았을 때, 새로운 균열구조와 창발의 행위주체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들이 북한체제의 변동에 중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등등에 대해 권력 작동의 추상수위를 낮추고 체계적인 조사설계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경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한다.

4)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제28권 제4호(2012년 겨울) 참조하기 바란다.

5) 이와 관련하여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제46집 제5호(2012 겨울)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조사 방법과 내용

1) 조사 설계와 자료: 과정과 방법

애초 본 연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병행, 즉 통합연구 전략에 따라 구상되고 준비되었다. 자료의 원천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SSK연구팀(북한균열과 남북통합)의 1단계 연구주제인 '북한의 정치사회 균열'이란 대주제 하에서, 첫째, 2011~2012년 중순까지 진행된 70여 명의 2009년 이후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민 심층면접 구술텍스트 자료, 둘째, 특히 북한 권력과 체제 작동에 대한 정보력이 높은 상층, 고학력, 고위직 등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조사 구술텍스트 자료, 셋째, 본 연구팀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과 문헌분석 등의 질적 연구성과 자료이다.

넷째, 북한체제 변동 및 남북통합 연구위한 시계열적 자료 축적과 탈북민 패널 구축 모형설계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데이터들, 즉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 통합 방법론으로 분석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 자료와 내용의 방대함과 시간제약으로, 본문에서는 질적 연구성과와 2012년 2010년 이후 탈북민 40명에 대한 예비조사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과학적 조사설계 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2010년~2012년 북한지역을 떠난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 설문지 조사기법으로 이루어진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조사과정은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중앙권력 변동기인 2009~2012년 탈북한 북한지역 출신 주민 300여명과 함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SSK 연구팀에서 진행한 [북한의 정치사회 균열]에 대한 질적 조사 분석결과와 양적 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북한의 사회 집단별 핵무기 인식과 '핵무기 및 북한 권력-체제 정체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되는 주요 정치-정책 요인', 더불어 특히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적 함의가 높은 통일·남북관계 관련 의식 실태를 규명하고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기술적 분석방법은 기존 질적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설계된 양적 조사기법에 따른 계량 통계분석이다. 2010~2012년 북한지역을 떠난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5년 이상 북한과 탈북민 연구를 수행한 박사급 연구원들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고 본 조사를 위해 훈련된 조사원들이, 2012년 11월~2013년 1월 간 face to face 방식에 따른 1대 1 설문지 조사로, 산출된 양적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 SPSS 19.0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연구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표본의 편향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나, 탈북민 수의 증가와 함께 이

루어진 표본의 대표성 상대적 증대, 질적 연구 성과에 기반한 비판적-맥락적 분석, 그리고 북한과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변수의 재구성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분석의 적실성을 높이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변수설정을 위하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2종류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아래 <표 1>은 북한주민인 모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대표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대상인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이후 <표 2>를 통해 표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수를 재구성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다루기에, 여기에서는 중첩이 없도록 행정구역, 직업-직종, 학력을 중심으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분석결과와 비교하며 다룬다.

<표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모집단과의 비교

		본 연구의 표본분포		2008북한인구센서스 ⁶⁾
		명	%	%
북한 거주지 행정구역	강원도	9	4.5	9.1
	양강도	62	31.0	3.1
	자강도	2	1.0	13.7
	평안남도	8	4.0	17.5
	평안북도	7	3.5	11.9
	평양시	4	2.0	13.4
	함경남도	17	8.5	13.3
	함경북도	83	41.5	10.0
	황해남도	4	2.0	9.8
	황해북도	3	1.5	9.0
	무응답	1	0.5	-
직업-직종	관리직	3	1.5	1.6
	전문/준전문가	38	19.0	8.3
	사무직	21	10.5	0.8
	서비스직	15	7.5	6.7
	농수산임업직	16	8.0	34.8
	기술직	28	14.0	21.0
	기계조립	7	3.5	14.3
	단순노무	30	15.0	12.3
	군인	12	6.0	-
	학생, 주부, 질병, 은퇴	22	11.0	-
무직/ 무응답	8	4.0	-	
학력	고등중학교 미만	10	5.0	20.8
	고등중학교 졸업	116	58.0	59.4
	전문학교 중퇴	6	3.0	-
	전문학교 졸업	30	15.0	5.0
	대학교 중퇴	8	4.0	-
대학교 졸업이상	30	15.0	8.8	
합계		200	100.0	100.0

6) 김두섭 외, 『북한 인구나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2011) 각 분석 내용에 기초함.

<표 1>을 보면,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생활하였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83(41.5%)명이고, 양강도가 62명(31.0%)로 두 지역출신자가 전체 표본 수의 72.5%를 차지한다. 표집의 편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양강도이다. 양강도는 북한주민 중 3.1%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본 조사표본에서 양강도출신 주민 표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무려 10배에 달한다. 또, 함경북도 주민이 본 조사에서는 41.5%의 비중을 점하며 이는 모집단의 비중(10%)에 비교하면 4배 이상인 것이다. 본 조사표집 중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타 지역출신들은 27.5%이다. 북한 주민 모집단의 분포를 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직업-직종 분포이다. 본 표집의 편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도 북한인구센서스 조사결과와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북한주민의 직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 숙련직 34.8%(425만명), 기능원 17.4%(212만명), 기계조작·조립원 14.3%(174만명)의 순이다. 한편, 본 응답자들의 직업분포는 전문직(19.0%)과 단순노무직(15.0%), 기술직 출신(14.0%)의 순으로 많았다.

단, 관리직(1.5%>1.6%)과 단순노무직(15.0%>12.3%)의 경우 비율은 북한인구센서스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본 조사에 사용한 표집의 직업분포를 북한주민 전체와 대비시 본 조사응답자들은 전문직, 기술직 비중이 높은 반면, 농림어업직과 기계조립직 비중이 적었다. 단, 표본의 단순노무직과 관리직 비율은 북한주민 전체와 비슷했다. 군대인원을 조사에서 제외한 북한인구센서스와는 달리 군대 종사자 수의 규모가 6.0 %로 나타난다. 이처럼 탈북민이 종사했던 업종은 북한 전체인구 모집단 비율과 차이가 난다.

학력을 보면, 본 조사 표본의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북한주민 전체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8.0%로서 2008년도 북한인구센서스에서 59.4%라는 응답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단,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중이 북한주민 인구센서스에서는 20.8%이나 본 조사에서는 5.0%로 15% 정도 적다. 반면, 대졸자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북한주민 모집단의 평균에 비해 표본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본 조사응답자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조사대상집단의 대졸자 비중은 15.0%이다. 이는 북한주민 인구의 대졸자 비중(8.8%)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다음 절에서 북한과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재구성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분석의 적실성을 높이려 한다.

2) 변수 구성/재구성 및 분석내용

본 연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편으론,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실태와 사회집단별 차이는 어떠한지? 또 다른 한편으론,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과 상관성이 있는 '정치-정책 요인'은 무엇이고, 어떤 양상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는가? 이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정한 종속변수는 '핵무기 인식'이다. 북한의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1차 독립변수군은 성, 탈북년도, 정치신분적 계층, 경제적 계층, 세대, 지역이다. 이 독립변수군은 북한 사회구조의 현 단계 주요 균열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앞서 밝힌 탈북민 표본의 편향성을 수정하기 위해 재구성된 변수들이다.

'핵무기 인식과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2차 독립변수군은 전쟁, 선군사상, 미제척결, 민족주의, 당-수령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 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이다.⁷⁾ 이 2차 독립변수군은 1차 독립변수군의 종속변수로도, 1차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 간의 매개변수⁸⁾로도 설정된다.

1차 독립변수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집단별 비교분석의 대표적 독립변수로서 성별이다. 2011년 11월 김정일 사망을 기점으로 북한 중앙권력 중심이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전환되는 전후 시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일체제와 김정은체제 시기 북한 사회집단별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즉, 정치권력 전환기 북한특수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로서 탈북년도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통계 분석에선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외에 연령대, 직업, 학력, 거주지 행정구역을 기초적 독립변수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 탈북년도 외에 정치신분적 계층(혈연-토대와 체제 위계의 상·중·하 지위 기준), 경제적 계층(부와 소득 위계의 상·중·하 지위 기준), 세대(20대/30대/40대/5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기준), 지역(일상생활 양식 기준 도시/농촌)을 독립변수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지 않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계층, 세대, 지역 범주로 북한의 사회 집단별 핵무기 인식 실태 및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화 이후 북한의 계층구조가 정치신분과 재산/부의 규모에 따른 경제적 신분으로 이들이 불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계층을 두 변수로 나눈 것이다.

셋째, 직업과 학력이 정치신분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 모두에 일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본 조사의 직업과 학력표본이 모집단의 표본과 차이가 있는 것에 비해, 질적 조사에 의한 최근 북한의 구계층과 신계층 양측의 계층구성비와 본 조사의 계층구성비가 모집단과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7) 이 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군국주의 변수군(전쟁, 선군사상), 적대적 폐쇄주의 변수군(미제척결, 민족주의), 수령독재 변수군(당-수령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 앞선 변수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나 남북한의 정치와 정책에 중요 요인인 통일·남북관계 변수군(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으로 범주화를 시도한다.

8)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나 순서적으로 보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넷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지역 편중성을 고려하여, 북한사회의 지역별 차이에 유의미한 국경/내륙과 도시/농촌 중, 도시/농촌 차이를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는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수 재구성은 현 단계 북한체제의 특수성 반영과 탈북민들이 모집단인 북한주민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현 단계 북한과 표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변수를 재구성한, 본 응답자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독립변수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북한과 탈북민 특성 반영

		남 성	여 성	전 체
탈북년도	2010	32.5% (25명)	67.5% (52명)	100.0% (77명)
	2011	40.6% (41명)	59.4% (60명)	100.0% (101명)
	2012	54.5% (12명)	45.5% (10명)	100.0% (22명)
정치신분계층	상층	33.3% (6명)	66.7% (12명)	100.0% (18명)
	중층	43.3% (42명)	56.7% (55명)	100.0% (97명)
	하층	35.3% (30명)	64.7% (55명)	100.0% (85명)
경제계층	상층	50.0% (4명)	50.0% (4명)	100.0% (8명)
	중층	41.3% (50명)	58.7% (71명)	100.0% (121명)
	하층	34.3% (24명)	65.7% (46명)	100.0% (70명)
	모름	0.0% (0명)	100.0% (1명)	100.0% (1명)
세대	20대	45.8% (22명)	54.2% (26명)	100.0% (48명)
	30대	44.0% (22명)	56.0% (28명)	100.0% (50명)
	40대	36.5% (23명)	63.5% (40명)	100.0% (63명)
	50대~	28.2% (11명)	71.8% (28명)	100.0% (39명)
지역	도시	42.3% (60명)	57.7% (82명)	100.0% (142명)
	농촌	31.0% (18명)	69.0% (40명)	100.0% (58명)
전 체		39.0 (78명)	61.0 (122명)	100.0 (200명)

2차 독립변수군은 '핵무기 인식과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의 상관성과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이다. 선행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 김정은체제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권력과 체제 정체성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되는, 전쟁, 선군사상, 미제척결, 민족주의, 당-수령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 6개 변수와 함께, 앞선 변수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나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수립에도 중요한 함의가 있는 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 3개 변수로 총 9개 변수이다.

한편 이들 9개 변수를 그 성격에 따라 군국주의 변수군(전쟁, 선군사상), 적대적 폐쇄주의 변수군(미제척결, 민족주의), 수령독재 변수군(당-수령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 통일·남북관계 변수군(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와 범주는 학술-이론 차원 뿐 아니라 앞선 연구배

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정책 차원에서도 핵과 권력의 역사 및 북한 핵무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북한체제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정치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9개 정치-정책 요인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주제이기에 1차 독립변수인 북한의 사회 집단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설정되기도 하며,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 차이에 이들 9개 정치-정책 요인이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 간의 매개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북한의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의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분포(%와 빈도)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검증을 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실태와 카이스케어 검증에 의한 유의확률(p-value)을 통해 집단-간 핵무기 인식 차이 여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사회 '집단-간 인식' 차이 규명을 위해 평균비교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분산분석의 F검정⁹⁾ 통해 각 집단별 평균값을 통한 평균차이 비교하고, 분산의 동질성 검사로 핵무기 인식에 집단 간 차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확률을 통해, 특히 어떤 사회집단이 핵무기에 열광하거나 부정적인가를 밝힌다.

4장에서는 정치요인 인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및 상관성'을 밝힌다. 평균비교 분산분석으로 5점 척도로 구분된 각 응답군의 평균을 살펴본 후, F검증을 통해 핵무기 인식과 각 정치요인 간 응답의 동질성 분석결과 어떤 정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핵무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다음으로 '핵무기'와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상관분석¹⁰⁾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요인인지? '핵무기 인식'에 각각의 정치요인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즉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또는 상관이 없는지? 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집단(독립변수)*주요 정치-정책요인(매개변수)*핵무기(종속변수)' 모형의 이변량 분산분석과 상관분석까지를 수행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북한의 사회집단과 정치요인을 추출해 본다.

9) 회귀분석의 한 형태인 분산분석[ANOVA(ANalysis Of VAriance)]은 '아노바'라고도 읽으며, 각 케이스의 관찰값과 평균 간 차이인 편차를 제공해 합산한 후 표본크기로 나눈 분산을 이용해 2개 이상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10)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라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두 변수간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 정도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상관관계가 $0 < \rho \leq +1$ 이면 양의 상관, $-1 \leq \rho < 0$ 이면 음의 상관, $\rho = 0$ 이면 무상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0인 경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A%B4%80%EB%B6%84%EC%84%9D>

3. 분석의 전제: 표본의 북한체제 불만도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 중요한 지점은 탈북민 표본의 북한체제와 정치에 대한 '상대적 부정편향'이란 특수요인이다. 상당수 탈북민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북한 권력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갈등을 경험하며, 그 체제를 떠난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나 경제 관련 요인 보다 정치나 체제 관련 요인에서 이런 경향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핵무기를 비롯하여 북한의 권력과 체제, 북한정권의 주요 정치와 정책 인식에서, 모집단인 북한거주 북한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론되는 부정인식 편향성이다.

본 조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고 분석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비판적 해석의 도구들을 다양한 문항으로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에 해당하는 변수(문항)는 "북한체제의 불만도"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전제'로서, 본 탈북민 응답표본의 각 집단별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수준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3장과 4장의 결과 분석 시 이를 참조하여 해석하려 한다.

5점 척도로 구성된 구체적 질문문항은 "북에 사실 때 선생님의 생각 또는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 정도는 어떠했나요?" 이고, 각 집단별 교차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북한 정권과 체제 불만 정도

단위: % (명)

조사 주제			북한 정권과 체제 불만도					유의 확률 (양측검정) P-value	
변 수	범 주	척 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명)
전 체			8.5%	8.5%	26.5%	27.0%	29.5%		100%
			17	17	53	54	59	200	
성	남성		11.5%	5.1%	17.9%	29.5%	35.9%	100(78)	.069+
	여성		6.6%	10.7%	32.0%	25.4%	25.4%	100(122)	
탈북 년도	2010		11.7%	5.2%	29.9%	26.0%	27.3%	100(77)	.605
	2011		5.9%	10.9%	22.8%	26.7%	33.7%	100(101)	
	2012		9.1%	9.1%	31.8%	31.8%	18.2%	100(22)	
정치 신분 계층	상층		16.7%	5.6%	16.7%	33.3%	27.8%	100(18)	.072+
	중층		5.2%	9.3%	37.1%	24.7%	23.7%	100(97)	
	하층		10.6%	8.2%	16.5%	28.2%	36.5%	100(85)	
경제 계층	상층		12.5%	0.0%	62.5%	12.5%	12.5%	100(8)	.186
	중층		6.6%	10.7%	28.9%	28.9%	24.8%	100(121)	
	하층		11.4%	5.7%	18.6%	25.7%	38.6%	100(70)	
	모름		0.0	0.0	0.0	0.0	100	100(1)	
세대	20대		12.5%	12.5%	33.3%	25.0%	16.7%	100(48)	.487
	30대		8.0%	8.0%	28.0%	30.0%	26.0%	100(50)	
	40대		4.8%	4.8%	22.2%	28.6%	39.7%	100(63)	
	50대~		10.3%	10.3%	23.1%	23.1%	33.3%	100(39)	
지역	도시		9.2%	7.0%	27.5%	30.3%	26.1%	100(142)	.234
	농촌		6.9%	12.1%	24.1%	19.0%	37.9%	100(58)	

+ : $p < .1$: 90% 신뢰수준, * $p < .05$: 95% 신뢰수준, ** $p < .01$: 99% 신뢰수준, *** $p < .001$: 99.9% 신뢰수준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정도'는 매우 높음(29.5%) > 높은 편(27.0%) > 보통(26.5%) > 낮은 편(8.5%) = 매우 낮음(8.5%) 순으로 나타나, 질적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탈북민들의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정도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이 높았다는 응답이 56.5%로 약 60%에 해당한다.

각 사회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검증결과, 성별과 정치신분 계층 집단에서 유의확률(p-value)이 각각 0.069와 0.072로 나타나,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 정권과 체제에 불만수준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북한 정권과 체제와의 갈등이나 비사회주의 검열 등으로 인해 탈북하는 경우가 남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신분 계층별로는 불만이 높았다는 응답이 하층(64.7%) > 상층(61.1%) > 중층(48.4%)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분적으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토대-출신성분 등으로 정권과 체제로부터 소외되었던 하층이 가장 불만이 높았다. 다음으로 대개

북한의 정치신분적 상층 계급은 목숨이 위태로운 정치적 배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겪지 않으면 탈북하지 않기에, 상층 응답자 표본의 편향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나, 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은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상층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Ⅲ.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의 실태와 차이: 누가 핵무기에 열광하는가?

본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사회집단별 핵무기 인식을 규명하기 위해, '핵무기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성, 탈북년도, 정치신분적 계층, 경제적 계층, 세대, 지역(도시/농촌)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실태를 파악과 집단별 각 범주의 인식 분포(%와 빈도)를 확인한다. 또한 집단별로 핵무기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에 의한 유의확률(p-value) 결과치로 집단별 핵무기 인식 차이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결과를 앞선 응답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체제불만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하다. 다음으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사회의 '집단-간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변수로 평균비교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독립변수인 각 집단별 핵무기 인식의 평균 차이 양상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규명하기 위해, 첫째, 분산분석의 F검정으로 각 집단별 평균값을 통한 평균차이 비교를 한다. 이는 평균값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예민한 의식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북한 사회 내부 각 집단별 평균값과 집단 중위수¹¹⁾ 등을 통해 집단 간 핵무기 인식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각 사회 집단 간 핵무기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통한 유의확률을 산출한다. 이 분석기법은 어떤 사회집단이 핵무기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핵무기 인식에 집단 간 차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확률을 통해, 특히 어떤 사회집단이 핵무기에 열광하거나 부정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핵무기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구체적 조사문항은 "북에 사실 때 선생님의 '핵무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이고, 각 집단별 교차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¹²⁾

11) 집단중위수는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치값으로 중심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12)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는 3명, 1.5%이다.

<표 4> 북한의 사회 집단별 핵무기 인식 실태

단위: % (명)

조사 주제			핵무기 인식 실태					유의 확률 (양측검증) P-value	
변수	범주	척도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 (명)
전 체			22.3%	15.7%	23.4%	20.3%	18.3%	100%	
			44	31	46	40	36	197	
성	남성		22.1%	10.4%	24.7%	22.1%	20.8%	100(77)	.554
	여성		22.5%	19.2%	22.5%	19.2%	16.7%	100(120)	
탈북 년도	2010		15.8%	17.1%	21.1%	17.1%	28.9%	100(76)	.040*
	2011		29.3%	12.1%	25.3%	21.2%	12.1%	100(99)	
	2012		13.6%	27.3%	22.7%	27.3%	9.1%	100(22)	
정치 신분 계층	상층		11.1%	16.7%	22.2%	33.3%	16.7%	100(18)	.360
	중층		24.2%	12.6%	18.9%	24.2%	20.0%	100(95)	
	하층		22.6%	19.0%	28.6%	13.1%	16.7%	100(84)	
경제 계층	상층		12.5%	12.5%	62.5%	0.0%	12.5%	100(8)	.137
	중층		20.2%	14.3%	20.2%	24.4%	21.0%	100(119)	
	하층		27.5%	17.4%	24.6%	15.9%	14.5%	100(69)	
	모름		0.0%	100%	0.0%	0.0%	0.0%	100(1)	
세대	20대		16.7%	12.5%	25.0%	25.0%	20.8%	100(48)	.718
	30대		14.0%	14.0%	26.0%	24.0%	22.0%	100(50)	
	40대		29.5%	16.4%	21.3%	16.4%	16.4%	100(61)	
	50대~		28.9%	21.1%	21.1%	15.8%	13.2%	100(38)	
지역	도시		23.4%	17.7%	22.0%	20.6%	16.3%	100(141)	.564
	농촌		19.6%	10.7%	26.8%	19.6%	23.2%	100(56)	

+p<.1: 90% 신뢰수준, *p<.05: 95%신뢰수준, **p<.01: 99% 신뢰수준, ***p<.001: 99.9%신뢰수준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생각은 보통(23.4%) >매우 부정(22.3%) >긍정(20.3%) >매우 긍정(18.3%) >부정(15.7%)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값을 제외하고 긍정 값과 부정 값으로 재분류했을 때, 긍정인식(38.6%) >부정인식(38.0%)로 긍정인식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38.6%라는 긍정인식 자체도 높은 수치이고, 무엇

보다 앞선 분석에서 밝혔듯 이들이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정도'가 전체적으로 60%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광은 허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검증결과, 탈북 코호트에서 유의확률(p-value)이 0.040으로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탈북 코호트별 핵무기에 대한 긍정인식 차이와 분포를 볼 때, 1순위가 2010년 46.0% 2순위가 2012년 36.4%, 3순위가 2011년 33.3%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변동기 급변했던 북한내부 통제정책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2009년 2차 핵실험의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2010년 탈북코호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좀 더 세부적인 집단별 실태와 차이는 다음의 <표 5> 평균비교 분산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사회의 '집단-간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변수로 진행한 평균비교 분산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

<표 5> 북한의 사회 '집단-간' 핵무기 인식 차이

핵무기 인식 BY 집단-간		평균	중위수	집단중위수	F	유의 확률
전 체		2.96	3.00	3.01		
성	남성	3.09	3.00	3.22	1.014	.315
	여성	2.88	3.00	2.86		
탈북년도	2010	3.26	3.00	3.34	2.944	.055+
	2011	2.75	3.00	2.78		
	2012	2.91	3.00	2.91		
정치신분 계층	상층	3.28	3.50	3.40	.981	.377
	중층	3.03	3.00	3.17		
	하층	2.82	3.00	2.75		
경제계층	상층	2.88	3.00	2.83	1.303	.275
	중층	3.12	3.00	3.25		
	하층	2.72	3.00	2.66		
	모름	2.00	2.00	2.00		
세대	20대	3.21	3.00	3.33	2.492	.061+
	30대	3.26	3.00	3.36		
	40대	2.74	3.00	2.65		
	50대~	2.63	2.50	2.50		
지역	도시	2.89	3.00	2.89	1.515	.220
	농촌	3.16	3.00	3.27		

+*p*<.1: 90% 신뢰수준, **p*<.05: 95%신뢰수준, ***p*<.01: 99% 신뢰수준, ****p*<.001: 99.9%신뢰수준

먼저 평균비교로 앞선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드러나지 않은 집단 별 세부적인 핵무기 인식의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면, 위의 <표 5> 평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로는 남성이 핵무기에 긍정적이며, 정치신분 계층별로는 상층 > 중층 > 하층 순으로 긍정적이고, 경제 계층별로는 중층 > 상층 > 하층 순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세대별로는 30대 > 20대 > 40대 > 50대 순으로 긍정적이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핵무기 인식이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각 사회 '집단-간' 핵무기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통해 집단-간 차이의 유의확률을 산출한 결과, 탈북년도 코호트와 세대 코호트가 각각 유의확률 0.55와 0.061로 90%신뢰

수준에서 핵무기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성, 계층, 지역 변수에 비해 세대 변수와 탈북년도 변수가 핵무기 인식과의 영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코호트이다. 탈북년도 코호트는 정세변동 영향도 크지만 탈북민 개개인의 특수성이 상당히 개입되는 데 반해, 세대 코호트는 전통적이며 중요한 사회균열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앞선 평균비교에서 확인했듯이, 질적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 북한의 2-30대 젊은 세대들이 전쟁과 핵무기에 열광한다는 점이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이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나찌와 히틀러에 열광했던 독일의 젊은 세대 중하층민의 광기를 떠올리게 한다. 앞선 표본의 높은 체제불만도까지를 고려했을 때, 핵무기에 대한 북한주민의 열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사회집단별로 “북한의 핵무기에 열광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앞선 평균의 차이 비교와 본 조사의 표본분포 한계, 그리고 필자의 질적 연구 결과까지를 결합했을 때, 그 선봉에는 2-30대 젊은 세대, 남성, 농촌 지역 주민, 경제적으로 중간 계층들이 있다.

IV. 정치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및 상관성': 핵무기와 상호작용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가?

이 장에서는 핵무기와 상호작용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가? 라는 연구문제로 주요 정치-정책 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및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핵무기 인식'으로 독립변수를 북한 체제와 권력을 상징하는 주요 정치-정책 요인인 전쟁, 선군사상, 미제척결, 민족주의, 당-수령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 6개 변수와 앞선 변수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범주가 구별되나, 북한의 정치-정책의 주요 요인이며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수립에 함의가 높은 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 3개 변수 총 9개로 설정한다.

그리하여 평균비교 분산분석을 통해 주요 정치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검증을 한다. 5점 척도로 구분된 각 응답군의 평균분포를 살펴보고, F검증을 통해 핵무기 인식과 각 정치요인 간에 응답의 동질성 분석결과 어떤 정치-정책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핵무기 인식과 관련성이 높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즉,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통해 핵무기 인식과 주요 정치 요인 각각의 '집단-간' 응답 및 인식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여, 핵무기와 상호작용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무기'와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된 핵무기와 각 주요 정치요인 응답범주(집단)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의 유의확률(양측 검정 p-value)을 통해, 핵무기와 주요 정치 요인 각각의 응답범주 결과를 교차했을

때, 어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요인인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핵무기'와 '주요 정치-정책 요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핵무기 인식과 각각의 정치-정책 요인은 어떤 상관성을 드러내는지, 즉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를 규명한다.

본 분석의 핵심 변수이며 주요 정치-정책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구체적 조사문항은 "북에 사실 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전쟁, 선군사상, 미 제국주의 사상과 풍조 쓸어내기, 민족주의, 조선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김일성민족·김일성조국, 통일, 남북한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북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 원조)" 이다.

이 정치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균비교 분산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정치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검증

핵무기 인식 BY 주요 정치요인		평균	집단 중위수	F	유의 확률 (집단간)
전 체		2.96	3.01		
전쟁	매우부정	2.50	2.29	8.994	.000***
	부정	3.14	3.15		
	보통	3.44	3.40		
	긍정	3.42	3.62		
	매우긍정	4.04	4.33		
선군사상	매우부정	2.15	1.92	18.707	.000***
	부정	2.11	1.84		
	보통	2.78	2.74		
	긍정	3.20	3.39		
	매우긍정	4.30	4.50		
미제척결	매우부정	2.87	2.75	4.342	.001**
	부정	2.53	2.45		
	보통	2.69	2.59		
	긍정	3.26	3.52		
	매우긍정	3.81	4.10		
민족주의	매우부정	2.80	2.80	.594	.667
	부정	3.00	2.83		
	보통	3.00	3.08		
	긍정	3.17	3.31		
	매우긍정	2.70	2.55		
당수령 무조건 총성	매우부정	3.00	3.00	.262	.902
	부정	3.16	3.31		
	보통	2.95	3.00		
	긍정	2.88	3.05		
	매우긍정	2.86	2.73		
김일성 민족	매우부정	3.05	3.07	.225	.924
	부정	3.07	3.19		
	보통	2.98	3.10		
	긍정	2.80	2.88		
	매우긍정	2.91	2.80		
통일	매우부정	4.33	4.33	1.537	.193
	부정	3.00	3.00		
	보통	2.33	2.40		
	긍정	2.92	2.96		
	매우긍정	3.02	3.13		
남북한 교류	매우부정	1.00	1.00	2.125	.079+
	부정	4.00	4.00		
	보통	3.09	3.11		
	긍정	2.98	3.03		
	매우긍정	2.92	2.93		
대북 지원	매우부정	1.33	1.33	5.135	.001**
	부정	2.67	2.67		
	보통	3.12	3.22		
	긍정	2.95	2.90		
	매우긍정	3.23	3.35		

+.p<.1: 90% 신뢰수준, *p<.05: 95%신뢰수준, **p<.01: 99% 신뢰수준, ***p<.001: 99.9%신뢰수준

핵무기와 상호작용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표 6>의 평균 비교 분산분석 통한 주요 정치요인 의식과 핵무기 인식 간 동질성 검증 결과, 전쟁, 선군사상, 미제척결, 대북지원, 남북한 교류/협력이 핵무기 인식과의 응답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즉, 이들 정치요인이 여타 요인에 비해 핵무기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 및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p-value는 0.000으로 99.9%신뢰수준에서 핵무기 의식과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평균비교와 함께 볼 때, 전쟁에 대한 긍정의식이 높은 이들이 핵무기에 대한 긍정의식도 높다는 것이다.

선군사상 p-value 또한 0.000으로 99.9%신뢰수준에서 핵무기 의식과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평균비교와 함께 볼 때, 선군사상에 대한 긍정의식이 높은 이들이 핵무기에 대한 긍정의식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미제척결 p-value는 0.001로 99%신뢰수준에서 핵무기 의식과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평균비교와 함께 볼 때, 미제척결에 대한 긍정의식이 높은 이들이 핵무기에 대한 긍정의식도 높다는 것이다. 이들 각각의 구체적인 상관관계의 방향과 강도는 <표 7>에서 살펴본다.

위 세 요인에 대한 결과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다음으로 아주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북지원(북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 원조) p-value가 0.001로 99%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핵무기 의식과의 동질성이 확인되었고, 평균비교와 함께 볼 때,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의식이 높은 이들이 핵무기에 대한 긍정의식도 높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관계의 강도는 다음의 <표 7>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분석결과는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핵무기가 미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력이나 에너지/우주개발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중요한 협상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편 주목할 요인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 p-value가 0.079로 90%신뢰수준에서 핵무기 의식과의 응답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균비교와 함께 볼 때, 그 방향은 역방향이다. 즉,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긍정의식이 높은 이들이 핵무기에 대한 부정의식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주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에, 향후 대북정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상관관계의 방향과 강도는 <표 7>에서 살펴본다.

한편 북한체제 및 김정은 정권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자 북한체제의 생명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당·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및 김일성 민족' 인식과 핵무기 인식 간에 응답의 동질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두 정치요인이 여타 다른 요인에 비해서 핵무기 인식과의 집단-간 유의

확률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북한주민들의 핵무기 인식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핵무기에 열광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목적과 달리, 북한주민들이 핵무기와 당-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나 김일성 민족과의 긍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관계의 방향과 강도는 <표 7>에서 살펴본다.

<표 7>은 '핵무기'와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교차분석과 상관분석의 주요 결과들이다.

<표 7> '핵무기'와 '정치' 인식 간 상관성

조사 주제		핵무기 * 주요 정치-정책 요인 상관관계					상관성 판정
특성	요인	카이 ² 검정 13) (p)	Pearson 상관계수		Spearman 상관계수		
			값(r)	p	값(r)	p	
		군국주의	전쟁	.000	.388	.000	
선군사상	.000		.503	.000	.508	.000	중양상
적대적 폐쇄주의	미제척결	.000	.073	.309	.265	.000	약양상 ¹⁴⁾
	민족주의	.112	-.031	.668	-.024	.745	약음상
수령독재	당·수령	.612	-.054	.448	-.055	.443	중음상
	무조건충성	.791	-.054	.452	-.056	.436	중음상
	김일성민족						
통일· 남북관계	통일	.009	.020	.783	.063	.380	중양상 ¹⁵⁾
	남북교류	.011	.006	.932	-.022	.757	약음상 ¹⁶⁾
	대북지원	.000	.226	.001	.169	.018	약양상

+p<.1: 90% 신뢰수준, *p<.05: 95%신뢰수준, **p<.01: 99% 신뢰수준, ***p<.001: 99.9%신뢰수준

13) 핵무기와 각 주요 정치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도출된 카이스케어 검증 결과의 p-value로, 핵무기와 주요 정치 요인 각각의 응답 범주 간에 상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14) 피어슨의 상관계수 값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값의 결과가 표준 분석 기준을 적용할 시 차이가 날 때, 표본 수가 적을 경우 상관성 분석에 더욱 유의미한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값에 따른 상관관계 특성을 따른다.

15) 위와 동일.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데이터가 서열척도인 경우 즉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관계수로서,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순위를 매겨 서열 순서로 바꾼 뒤 순위를 이용해 상관계수를 구한다. 두 변수 간의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며 자료에 이상점이 있거나 표본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다.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A%B4%80%EB%B6%84%EC%84%9D>

16) 위와 동일.

'핵무기'와 주요 '정치-정책' 인식 간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교차분석과 상관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5점 척도로 구성된 핵무기와 각 주요 정치요인 응답범주(집단)에 대한 카이스케어 검증의 유의확률을 통해, 핵무기와 주요 정치 요인 각각의 응답범주 결과를 교차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 및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전쟁, 선군사상, 미제척결, 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이다.(각각의 p-value는 <표 7>의 카이검정(p) 참조).

한편, 앞선 분산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수령독재 변수군은 핵무기 인식과의 상관성 또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산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통일 인식과 핵무기 인식의 상호성 및 상관성이 교차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핵무기 인식과 각각의 정치-정책 요인의 상관성 판정이다. 즉, 핵무기 인식과 각각의 정치-정책 요인이 어떤 상관성을 드러내는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이다. 표준 상관계수 판정 기준¹⁷⁾으로 본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핵무기의 상관성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이다. 둘째, 선군사상*핵무기의 상관성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이다. 그러므로 군국주의 변수군과 핵무기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셋째, 미제척결*핵무기의 상관성은 약한 양적 선형관계이다. 반면에 넷째, 민족주의*핵무기의 상관성은 약한 음적 선형관계이다. 따라서 핵무기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북한주민들의 미제척결 인식과 민족주의 인식은 적대적 폐쇄주의 변수군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다섯째, 당·수령 무조건 충성*핵무기의 상관성은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이다. 여섯째, 김일성민족*핵무기의 상관성은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이다. 이는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핵무기 의식과 수령독재 변수군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최소한 북한주민의 시각에서 "핵무기≠김정은정권"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통일*핵무기의 상관성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이고, 아홉 번째, 대북지원*핵무기의 상관성도 약하지만 양적 선형관계로, 핵무기가 통일과 대북지원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확인된 반면에, 여덟 번째, 남북교류*핵무기의 상관성은 약한 음적 선형관계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 긍정적일 수록 핵무기 인식은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남북교류, 대북지원을 핵무기에 대한 동일한 범주군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관성이 약하기에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17)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 r이 -1.0과 -0.7 사이이면, 강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3과 -0.7 사이이면,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1과 -0.3 사이이면, 약한 음적 선형관계, r이 -0.1과 +0.1 사이이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형관계, r이 +0.1과 +0.3 사이이면, 약한 양적 선형관계, r이 +0.3과 +0.7 사이이면,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 r이 +0.7과 +1.0 사이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9개 '정치-정책 요인'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로 설정되기에, 매개변수이자 독립변수로서 위의 9개 정치요인을 가지고, '북한 사회집단*주요 정치-정책요인*핵무기' 모형을 설계하여 각각의 주요 정치-정책 인식(종속변수)*북한 사회집단(독립변수)에 대한 교차분석과 함께, '북한 사회집단(독립변수)*주요 정치-정책요인(매개변수)*핵무기(종속변수)' 모형의 이변량 분산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북한의 사회집단과 정치요인을 추출해 보았다. 교차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결과값 모두를 총체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이 모두에서 북한체제의 주요 정치-정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인식 차이와 상관성을 드러낸 결과는, 첫째, 선군사상*성별이다. 둘째, 선군사상*구계층이다. 셋째, 대북지원*성별이다.

이 결과는 군국주의적 북한체제 관련, 북한사회에서 가장 외현화된 집단균열 양상과 북한 사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체제 민주화의 1순위 전략 집단 고려'에 큰 의미를 가진다.¹⁸⁾

18) 구체적 내용 분석과 결론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본 발표문은 미완의 논문으로 추후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 수행적 분단과 핵무기의 코스모폴리틱스

홍민(동국대)

1.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세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연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북한의 강경한 도발적 발언과 조치들, 마치 최첨단 무기의 현란한 '쇼케이스(showcase)'를 펼치듯 디스플레이되는 미국의 군사력과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정부 인사 및 군사전문가들부터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의 '말'들이 어지럽게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들 이슈를 다루는 언론들이 북한의 위협적 태도, 한반도에 증강되는 무기, 외신들의 반응 등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핵무기 자체의 위험성과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경우도 주로 북한 도발 가능성, 핵무기 무장 여부, 개성공단 지속 여부, 대북 지원 지속 여부 등 한국의 대응에만 집중돼 있다. 여론이라는 것이 주요하게 이들 언론의 프레임 속에서 생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의 깊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

우선 핵실험 이후 국민들의 위협 인식을 살펴보면, 핵실험 직후 2월13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채택 이후인 3월 중순, 개성공단 진입 금지와 각종 미군의 첨단무기들이 등장한 직후인 4월8-9일 조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²⁰⁾ 세 차례 조사에서 다소 질문의 차이가

19) 북한의 제3차 핵실험(2. 12)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3. 7) 이후 연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3. 5) 및 남북한 불가침합의 폐기 선언(3. 8), 핵 선제 타격권 행사 위협(3. 7),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3. 15), 1호 전투군무대세(3. 26) 및 전시상황 돌입 선언(3. 30),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4. 2), 개성공단 진입 금지 조치(4. 3),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 동해안 이동(4. 4), 평양 주재 외국 공간 철수 요구(4. 5) 등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 전역 즉각 타격가능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2. 13), 함참의 '지휘세력 응징' 발언(3. 6) 등으로 대응했고,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B-52 전략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훈련(3. 19), 공격형 핵잠수함 사이엔호 부산 입항(3. 20), 미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반도 훈련(3. 28), F-22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 공개 출격(4. 1), 미군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X-밴드 레이더 한국 급파(4. 2), 괌기지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고도 방어체계(THAAD)' 투입 발표(4. 4), 미 인도양 항공모함 한반도 이동(4. 6) 등의 대응을 했고, 여기에 일본도 북한 미사일 요격 방위대세(4. 7)를 발령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응 움직임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20) 이들 세 여론조사는 모두 한국갤럽 자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있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묻는 질문에 76%→47%→24% 등의 변화가 있었다. 현상적으로 위기 상황은 오히려 고조되는 듯 했지만 위협 인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위협을 느끼는 세대별 차이에서 20대의 위협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았고 일관되게 높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라고 답한 20대의 비율이 86%→54%→33%였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주목할 부분은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위협인식은 가장 낮으면서도 응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이 위협 수준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많고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20대의 위협인식이 높은 반면 60대의 위협인식이 낮은 부분은 북한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으며,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0-40대에서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위협 인식이 낮게 나온 부분은 상대적으로 청년시설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분단모순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능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2월13-15일 조사: <질문>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는데요. 귀하께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표본수(명)	(매우+약간) 위협적이다	(그다지+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6	76	21	2
성별	남성	498	77	22	2
	여성	508	76	21	3
연령별	19-29세	181	82	16	2
	30대	205	74	25	1
	40대	219	68	29	3
	50대	191	78	21	1
	60세 이상	210	81	15	5

□ 3월18-21일 조사: <질문> 귀하께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것으로 보십니까, 국지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구분		표본수(명)	(전면전+국지적) 도발할 것	(전쟁이나 도발하지) 도발하지 않을 것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1	47	47	6
성별	남성	600	47	48	5
	여성	611	47	46	6
연령별	19-29세	217	54	44	2
	30대	240	51	47	3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시되었다.

	40대	264	45	51	4
	50대	237	51	42	7
	60세 이상	253	37	51	12

□ 4월 8-9일 조사: <질문>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구분		표본수(명)	도발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모름/응답거절
전체		616	24	67	8
성별	남성	305	28	65	7
	여성	311	21	70	9
연령별	19-29세	112	33	64	3
	30대	125	23	69	8
	40대	135	26	65	9
	50대	117	23	65	12
	60세 이상	127	18	73	9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9.7%(2007)→52.2%(2008)→63.3%(2009), 67.3%(2010)→78.3%(2011)로 변화했다. 이 조사 시기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다음 해부터 2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2009년을 포괄한다. 수치로만 본다면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불안의식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 불안의식도 커진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핵개발이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대북정책이 어떠한가에 따라, 또한 실질적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적대감 내지 거부감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²¹⁾ 이런 점에서 보면 2008년 이래 중대한 긴장의식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모험주의적 행태가 반영된 것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협인식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적 행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수준, 대화 가능성과 분위기,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등이 밀접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의 세 조사에서 도발 위협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맥락적으로, 우선 북한의 도발적 언행과 한미연합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발언이 거의 없고 북한 역시 박근혜 정부를 직접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강경한 원칙론에 내세우며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전 정부에서 느끼던 국민 피로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출범 초기이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고 안정화시키기를 바라는 기대가 반영된 점, 셋째,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상당 부분 예측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21)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서울: 창비, 2012), p. 163.

□ 2월13~15일 조사: <질문> 귀하께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6	64	28	7
성별	남성	498	65	29	6
	여성	508	64	28	9
연령별	19-29세	181	48	44	8
	30대	205	53	39	8
	40대	219	63	31	6
	50대	191	78	17	4
	60세 이상	210	78	13	9
주요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406	74	21	5
	민주통합당	268	59	35	6
	없음	289	59	30	12

두 번째,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핵실험 직후 2월 13-15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4%, 반대가 28%를 차지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을 표시했다. 찬성을 한 응답에서 60대 78%, 50대 70%, 40대 63%, 30대 53%, 20대 48% 등의 연령순으로 찬성의사가 높았다는 점이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대 44%, 30대 39%, 40대 31%, 50대 17%, 60대 13% 등으로 찬성과 반대로 젊은 순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대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다. 이들은 찬성에서도 낮았고 반대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들이 북한 위협 인식이 높은 반면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만으로 이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비핵화' 세대에 해당하고 핵무기가 갖는 인권의 측면에 민감한 세대일 수 있다는 점, 핵무기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취업이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할 가능성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월13~15일 조사: <질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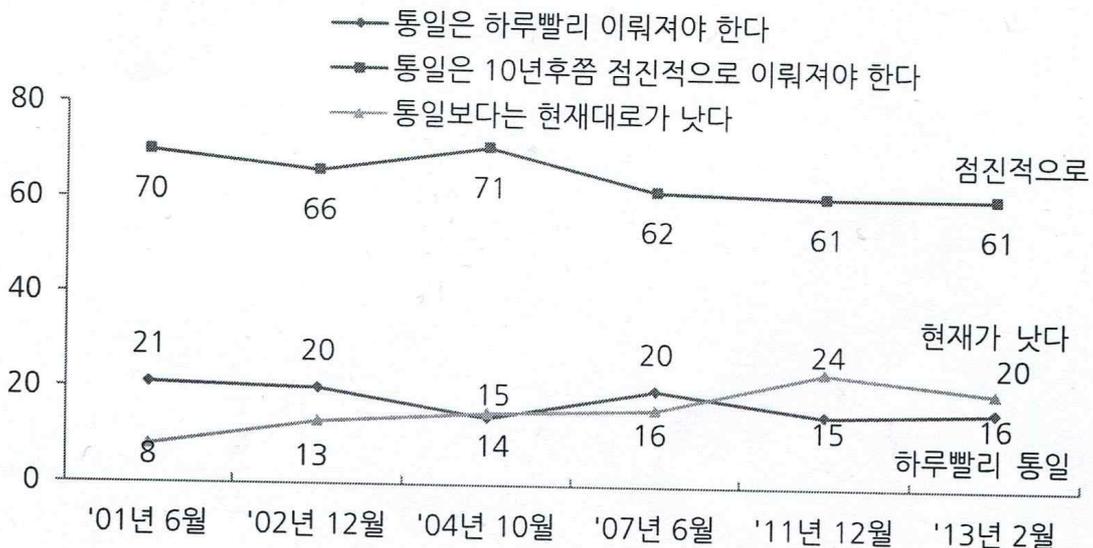
구분		표본수(명)	대북지원 전면 중단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6	46	47	7
성별	남성	498	44	52	4
	여성	508	48	42	10
연령별	19-29세	181	49	44	7
	30대	205	39	56	5
	40대	219	35	62	3

	50대	191	50	43	6
	60세 이상	210	57	30	13
주요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406	57	36	7
	민주통합당	268	38	59	3
	없음	289	41	48	11

세 번째, 대북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핵실험 직후 2월13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전면 중단' 46%, '인도적 지원 유지' 47%를 차지했다. 전면 중단 응답은 60대 이상 57%, 50대 50%, 20대 49%, 30대 39%, 40대 35% 등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나이든 50-60대와 20대에서 전면 중단 응답이 많고, 30대와 40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다. 20대의 전면 중단 의견이 많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소위 '20대의 보수화'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50-60대의 응답과는 질적으로 다른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들이 북한 인권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전용이나 투명성 문제,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다 많은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인도적 지원 유지에 응답한 순은 40대 62%, 30대 56%, 20대 44%, 50대 43%, 60대 30% 등으로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대가 할 수 있는 4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네 번째, 개성공단 지속 여부를 묻는 한국갤럽의 4월 10일 여론조사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48%, '중단해야 한다'는 41%로 남북경협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원하는 국민이 좀 더 많았다. 개성공단 사업 지속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7%)에서 가장 많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49%) 중, 특히 20대에서도 많았다.

□ 2월13~15일 조사: <질문> 남북통일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핵실험 직후 2월13일과 4월9일 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진 않았다. 다만 미세하지만 현재대로 있는 게 낫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20%→22%)했고,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감소(16%→11%)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실시된 동일 질문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와 점진적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현재대로 낫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증가했고 저연령일수록 점진적 통일 방안에 더 공감했다.²²⁾ 또한 현재대로 낫다는 의견은 남성(13%)보다

통일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미 기존의 주기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다. 과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략 50-60%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20% 내외의 응답자가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20% 내외의 응답자는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냈다.²³⁾ 이렇게 볼 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통일인식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통일 당위성은 상당 부분은 규범화된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느린 변화를 보여주는 성질의 사안이란 점, 도발이나 위협과 바로 연결돼 통일의 부정적 의견으로 전환되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느리고 소폭이지만 현상 유지적이고 점진적 통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3차 핵실험 이후의 한국사회 핵보유 찬성의 인식세계와 비교해 볼만한 또 하나의 여론조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78년 6월 서울의 한 대학(중앙대학교) 신문사가 그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이 핵무기를 제도·보유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의 핵문제가 가시화되기 한참 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이 89%나 나왔다. 열 명에 아홉 명이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한심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는 핵인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²⁴⁾ 이영희는 이미 25년 전 북한 핵무기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일반 대중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그것을 사무(四無)와 삼과(三過)로 표현했다. 사무(四無)는 핵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감각, 무민족하고, 삼과(三過)는 핵에 대해서 인간이성의 과신, 기계의 정밀성에 대한 과신, 군사력에 대한 과신이다. 그는 외국의 핵무기가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그만큼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무지, 핵무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길들여져 '메가톤'이라고 해도 공기총만큼에 대한 감각도 없어 보이는 태도, 미국의 이성과 호의에 대한 과신, 자기 민족이 남의 나라 핵무기, 핵전략, 정치논리, 국가이기주의의 불모가 되고 노리개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민족적 자각도 긍지도 저항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개탄한 바 있다.²⁵⁾

핵무기는 소위 '절대 무기', '악마의 유혹'으로 칭해지며, 인간이 창조해 낸 물리적 폭력의 가장 극단적 최대치, 응축을 보여주는 사물이다. 또한 핵무기는 그 개발과 유지에 인간, 과학,

22)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이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속도에서도 '현상유지'와 '관심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3) 박명규, 위의 책, p. 167.

24) 이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창작과 비평』 통권 제61호(1988), p. 75.

25) 이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p. 71.

기술, 제도, 교육, 화폐, 정보, 에너지, 문화 등 방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그런 핵무기 물질적 문화를 확장·이전하는 것을 통해 그 존재 이유와 함께 위험을 양산하는 행위 체이기도 하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내외부의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 위험한 군사주의의 폭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물이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의 누군가를 향할 수 있다.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한반도 구성원들을 볼모로 하는 분단이 재생산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그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주의 강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분단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는 사정거리가 가장 긴 구조적, 심리적 폭력이다. 사실상 분단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다양한 폭력성을 지녀왔다.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주관적 폭력, 상징적 폭력 등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핵무기가 특정 민족, 집단, 개인의 그릇된 피해의식의 보상물, 위로물, 또는 상처난 자존심을 위한 사물로 등장할 때 분단은 더욱 요원해 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무장론이나 핵무기 재배치론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롭게 살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핵무기의 심각한 인권유린, 북한 핵무기를 통해 강화되는 군사주의와 분단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평화권'의 차원에서 문제시하는 것이다.

2. 분단의 잡종들과 신냉전적 우경화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 중.” 4월 10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다음 날 새벽까지 포털에선 '연천'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결국 이 누리꾼은 글을 삭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애들이 장난치길래 해봤는데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반도 초긴장 상황에 전쟁을 부추기고 위기감을 키우는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엔 “6시38분 북한 폭탄 연평도 발사, 시민 62명 사망”이란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로 유포되기도 했다. 클릭하면 돈을 빼가는 '스미싱' 주소를 첨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전쟁이 나면 스포츠실용차(SUV)는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소문도 인터넷을 떠돌아 차량 소유자들을 긴장시킨 바도 있다.²⁶⁾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물론이고 무책임한 '전쟁불사론'도 전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극우성향 누리꾼들의 집합소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이제 지나간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다”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에 직면한 미국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며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전쟁 준비 완료됐다”며 군용 단검과 비상식량, 나침반을 장만한 사진을 올린 누리꾼도 있었다.²⁷⁾ 이들을 '신냉전적 우경화', '탈이념적 우경화'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우경화는 기존의 좌-우 이분법과 스펙트럼에는 포착되지 않는 과거와는 다른 우경화이다. 이들은 분단의 괴물, 잡종들(hybrids)이라고 할

26) 비상사태 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에 따라 차량동원령이 선포되고 대상 차량으로 지정돼 동원 영장을 전달받은 소유자는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27) 한겨레신문, 2013. 4. 12

수 있다. 결국 질문은 분단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것,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전개된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분단을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해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의 잡종은 핵무기와 민족주의의 기괴한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핵무기와 민족주의는 친화적으로 위험한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분단의 잡종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자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민족의 심장이라고 하고 핵무기를 김일성민족주의와 결합시키고 있는 측면은 민족주의가 핵무기라는 사물과 결합하면서 분단의 기형적 잡종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신의 체제 존속, 권력엘리트들의 기득권을 위해 민족을 불모로 한 핵무기 합리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핵무기를 통해 수난 받는(위협받는, 고립된) 민족을 호명하고 이를 통해 분단의 기형적 민족주의 - 물론 민족주의의 정상성은 없다 - 를 재생산하는 것이다.²⁸⁾

물론 아직 소수라고 추정되지만, 3차례의 걸친 북한의 핵실험(2006, 2009, 2013), 천안함사건(2010. 3)과 연평도 포격사건(2010. 11), 미사일 발사(은하 3호) 발사 실험(2013. 1. 23) 이후 오히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익숙한 보수-진보 스펙트럼, 운동 지향적 이념 궤적에서는 해석하기 힘든 잡종(hybrid)들이다. 이들은 사상·이념에 특별한 관심도 없다. 소위 '사이버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의 정서에 오히려 영토 확장, 군사강국을 꾀하는 보수 민족주의가 깃들어 있는 점은 흥미롭다. '대북강경론'의 근거가 됐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패권국 미국에 맞서, 남한이 못하는 걸 유일하게 그 작은 나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뒤늦게 알게 되고 매료되고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²⁹⁾ 되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동경과 신유주의에 포박된 삶의 질서에 대한 반감이 결합한 것이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분단국가'가 만든 괴물이자 분단의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³⁰⁾들이다. 이 시대는 기존의 생산력과 과학기술과 시스템을 물신화함으로써 다른 모든 균열을 덮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체제가 유토피아를 설파하는 동안 국민은 또 다른 파국에 기형적으로 열광하게 된다.

이들이 분단의 잡종인 이유는 이들은 북한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경쟁과 낙오라는 신자유주의의 전쟁 같은 삶을 강요하는 '자본주의-분단국가'라는 실존, 삶-존재양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군사·안보프레임은 북한을 악으로 타자화하고 안보를 성역화하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여전히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여념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

28) 2012년 12월 28일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그것을(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김정일의 '최대의 유산'으로 칭하면서 그것에 의해 "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약소민족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9) 한계레신문, 2011. 11. 29.

30)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스탠리 큐브릭(Stanly Kublic)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나는 어떻게 근심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Dr. Strangelov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대통령 특별고문이자 전 나치주의자였던 천체과학자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테크놀러지와 컴퓨터의 신봉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기계(인조 팔)에 의해 생명이 겨우 유지되는 퇴물 파시스트이다. 이 영화는 자신이 만든 핵무기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미소 냉전의 무능력함, 인류가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인간을 묘사해 암울한 인류의 미래를 예고한다. 냉전의 허약한 본질과, 상호 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를 비꼬는 블랙 코미디다.

상은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앞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나 가끔 열광적으로 등장할 뿐 일상에서 존재가 의문시 된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이렇게 국가가 일상에서 실종된 상태를 '액체근대(liquid times)'라고 표현한바 있다. 이 '액체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집합적인 유대 속에서 안정을 찾고, 예상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단단했던 시대가 녹아 흘러내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대는 불안과 취약함 속에서 '파생적 공포'를 겪는 사회이고 '유동하는 공포'가 풍토병처럼 일상에 창궐하는 세계이다.³¹⁾ 이 녹아 흐르는 추동한 힘을 바우만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를 보호했던 국가의 실종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세계의 재앙과 무질서, 한국의 불안과 참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과 같은 근대적 이데올로기들이 요란한 말 속에서 녹아내려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국가도 사회도 이념도 이상도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생존투쟁과 안전 강박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원칙은 희소성이고 폭력이고 쾌락이다.³²⁾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곳저곳에서 '조국의 아들들'이 호명되었고, <무한도전>과 <개그콘서트>는 한 달 넘게 방영 중단되었으며, 급기야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국영방송'의 기치를 드높이던 KBS는 천안함 성금모금 방송을 편성했고, 한화그룹은 천안함 유공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천안함의 진실은 아직 대중의 의문 속에 있지만, 조국의 안보는 서둘러 - 애도 속에 - 봉합되었다. 애도의 정치는 분단을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중요한 장치이다. 국가로부터 인정된 슬픔, 안보를 감정적 상태로 끌어 올리는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한다.³³⁾

분단은 세상을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로 정화를 하는 분단-안보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그 밑으로 거대한 사회기술적 체계, 분단의 잡종들을 양산하고, 특정한 감정상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일상은 자본주의라는 삶의 고통, 일상의 삶에 스며든 더 치명적인 악이 국민들을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분단-안보 프레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없을 때, 그들 자신이 괴물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05년 연천 530GP 총기 난사 사건은 분단의 잡종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분단의 내부는 폭력과 신경증의 일상화 속에 있다. 안보라는 히스테릭한 위협-감시망에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광폭하고 잔인한 신자유주의적 삶에 포위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기 사건이나 군대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우리는 개인의 불행 탓으로 돌린다. 그것을 통해 사회는 다시 한 번 국방과 안보를 신화화된 정상성의 위상 속에 놓는다. 국방과 안보의 판타지는 일종의 이러한 분단의 폭력성과 신경증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반도의 청년들은 착한 자식들이라는 판타지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개인의 비정상성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안보라는 통치 '장치'에 의해 군복이 입혀지고 손에 총이 쥐어진 청년들이 그 자체로 분단 폭력의 희생양이란 목소리는 작고 작기만 하다. 총이 주어진 젊은이와 총이 없는 젊은

31) 지그문트 바우만 저·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2009), pp. 13-14.

32) 문강형준, 「과국의 지형학」 (서울: 자음과 모음, 2011), p. 39.

33) 주디스 버틀러 저·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서울: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p. 15.

은이의 차이는 분단의 사물로서 '총'이 갖는 행위성, 분단의 사회-기술적 연결망이 갖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국방과 안보라는 신성한 영역에서 불거져 나오는 비명 소리, 사물들의 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분단의 냉소적 이성과 유동하는 공포

“언젠가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할 것이다.” 분단의 냉소적 이성이 다양한 얼굴과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우만의 말처럼, 공포에 직면하여 자신이 공포가 되는 삶에서 비롯된 냉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8만원세대'부터 시작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잉여세대' 등으로 호명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분단을 '냉소'로 소비한다. “대한민국은 통일보다 정규직이 소원이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현시되고 재현되는 한반도 위기와 전쟁의 위기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 일상엔 하루하루가 실존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 그들에게 당장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존적 삶의 전쟁이다. 분단의 저열함과 한반도 위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일상의 전쟁을 치루면서 분단을 냉소할 여력밖에 없는 것이다.

분단의 냉소적 이성은 위기의 불감증이나 분단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상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잉여인간',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루저'로 전략할 공포를 안고 사는 그들에게 진지하고 심오한 통일관과 안보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통일에 무관심한 청춘에 대해 혀를 차며 비판하는 어느 토론 자리의 저명한 교수를 보며 그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실존은 이들 청춘들과 너무나 멀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통일과 분단 인식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의 통일관이 문제시되어야 하고 그들의 시각이 보다 현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 눈높이는 정확히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차원에서 통일의 철학이 고민되고 분단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를 유포시키고 신자유주의의 중독으로 이끈 기성세대가 정작 신자유주의의 실존에서 살아가는 청춘을 구태의연한 과거의 통일관으로 비판하려는 자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핵무기는 남성 중심적 지배질서를 강화하고 사회의 젠더 위계를 강화한다. 전쟁에 관한 오래된 주제 중 하나는 남성 및 남성성을 파괴의 기술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성적 이미지는 언제나 전쟁이라는 세계의 일부였고, 군대 그 자체와 무기 제작자들은 남근 숭배 이미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의 무기가 그토록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남성 생식 능력의 약속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원자 폭탄의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그 폭탄 사이에 얼마나 강한 심리적 유착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송고한 폭탄과 이에 관계된 남성들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며 서로 하나로 융합되는 느낌 - '각자가 서로를 대표하고 지지하고 강화하고 대변할 정도로' - 을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폭탄의 발명과 사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로스 알라모스의 물리학자들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의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

한 글들을 읽다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그 무기의 위력에 환희, 경탄, 자부심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오펜하이머는 마치 '프로 권투선수'처럼 연구실 전체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갈채를 받았다. 리처드 파이먼(Richard Feynman)은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반응이란 대단히 의기양양하고 흥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행복한 일에 푹 빠져, 마시고 취하고, 지프차 보닛에 올라 앉아 드럼을 치며 놀았다. 히로시마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간에 로스 알라모스 전역은 흥분의 도가니였다."³⁴⁾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 발명가들이 기술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4. 핵무기와 한반도 예외상태의 상례화

핵무기는 절멸이라는 '파국'을 물리적으로 응축하여 수단화시킨 경우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외상태(exceptional status)를 상례화하도록 한다. 이를 아감벤(G. Agamben)은 "핵 시대에 입헌적 비상 권력의 사용은 예외가 아니라 상례가 된다"고 한 로시터(C. L. Rossiter)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암시한 바 있다.³⁵⁾ 따라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파국'의 예고 또는 죽음의 미래를 통해 작동하고 드러나는 한편, 그것은 존재가 인지되거나 의심되는 한 현재를 끊임없이 예외상태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갖는다. 아감벤이 주장하는 '죽음의 정치'를 가장 극적으로,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으로 응축하고 있는 행위자(actor)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는 직접적인 사용 전, 유예된 '사용'을 통해 예외상태를 상례화한다는 점에서 행위성(agency)을 갖는 사물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체제 내부적으로 사회를 예외상태의 극단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상례화하는 하나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이자 통치의 '장치(*dispositif*, device; apparatus)'인 것이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북한의 존재를 알리는 알레고리, 생존을 번역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실험은 일종의 정치적 제의(祭儀)와도 같다. 내외부적인 체제 유지의 위협들을 핵무기로 응축하고 사회질서를 재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핵실험 제의는 선과 악을 가르고 내부의 순수와 외부의 위협을 대비시킴으로써 권력이 의도하는 질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다. 또한 세계의 시선을 핵실험 공간에 주목하게 하고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체제 생존의 논리를 번역해 낸다. 그것은 이 사회가 강고하게 예외상태를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회임을 드러내는 한편 한반도 분단체제가 예외상태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통해 그 예외상태가 보다 확고한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무기'로 표상되는 '핵보유국', '강성대국', '선군' 같은 과장된 근육질의 담론은 역으로 정권의 허약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대주의 담론은 후진성의 열등, 외부로부터

34) 주디 와이즈먼 저·박진희/이현숙 역, 『테크노페미니즘: 여성, 과학기술과 새롭게 만나다』(서울: 궁리, 2009), pp. 151-152,

35) 조르조 아감벤 저·김향 역, 『예외상태』, pp. 27.

의 피포위 의식을 심리적으로 해소하려는 자위의 소산이다. 핵무기가 주술적 힘을 갖는 것은 그것이 사이즈 강박증,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감을 일거에 해소하거나 위로해 주는 대체물로 기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 전반에 전투적인 심성을 고양시키는 한편 인민들에게 핵무기를 다룰 줄 아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주입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핵무기가 이 체제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구실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아야 하고 이것은 곧 분단체제의 예외상태를 통해서이다.

핵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예외상태로 상례화하는 초석으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한다. 핵무기가 절멸과 '파국', 돌이킬 수 없는 예외상태의 전면화를 의미하는 한에서 핵무기의 존재는 한반도를 보다 폭력적인(또는 남성적인 군사주의) 예외상태 속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또 핵무기로부터 남북한 사회는 '안보'라는 프레임을 유지·재생산할 수 있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그것을 통치 장치로 사회에 현실화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과거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대치를 통해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상호 위협과 살상을 명분으로 성립된 예외상태를 보다 더 극단의 예외상태로 몰고 가는 행위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한반도가 핵무기라는 장치를 통해 '파국', 곧바로 파국적 예외상태의 전면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포를 사회 전체에 주입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핵무기는 안보와 사회를 분리하고 안보와 군사를 성역화하는 명분을 마련하는 데 절대적인 상징이자 현실로 등장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안보'는 예외상태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기제였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로 분단-안보 프레임을 재강화하고, 분단의 사회-기술적 연결망을 보다 강고하게 하고 무수한 분단의 잡종들을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분단 '번역의 중심'이자 강력한 행위성을 가진 사물인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렇지 않은 북한, 북한 손아귀에 있는 핵무기와 한미동맹 속에 예비되어 있는 핵무기, 핵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남한사회와 그렇지 않은 남한사회, 핵무기를 사이에 둔 남북관계와 그렇지 않은 남북관계,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와 있는 한반도, 이 두 상황 속에서 분단의 행위자들의 행위성과 목표 번역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된다.

5. 예외상태의 일상화

군대 역시 하나의 예외상태를 일상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군대는 군대라는 공간 안과 밖에서 예외상태의 일상화를 수행한다. 여기서도 내부와 외부의 모호한 경계지대에 '안보'가 자리하고 있다. 군대라는 공간은 사회를 향한 하나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상태를 폐쇄된 특정 공간 - 철책 - 안에 가두고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육체에 각인시키고 사회로 배설해 내는 장치인 것이다. 대부분의 남북한 남성들은 청춘의 특정 시기를 바로 이 예외상태의 '실험실' 속에 고스란히 놓여진다. 군복과 총기(무기), 계급장이 주어지고 명령에 따라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있는 한시적이지만 예외상태의 '호모 사케르'들로 길들여진다. 군복은 분단의 예외상태를 몸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훈련 매뉴얼과

경험적 조직을 통해 총을 쏘고 살인을 하는 기술을 몸에 각인시킨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물(비인간)'들, 그리고 군법과 군사조직체계, 안보교육(정훈교육), 그리고 이들 인간들이 결합하여 '분단-안보-병기'라는 잡종(hybrid)들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대라는 장치를 통해 번역(translation)된 잡종들인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국민의 절반이 호모 사케르를 경험한 이들, 또는 경험하게 될 이들로 구성된다.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외적이다.³⁶⁾

그 예외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사회로 복귀하여, 그 예외의 경험, 육체에 각인된 '예외'를 사회와 연결하는 행위소(actant)들이 된다. 군대를 통해 '예외상태'가 각인된 이들 육체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생산현장, 조직문화 속에서 '성장'이란 이름의 '기계'들로 지속적으로 착취된다. 군과 기업 사이에는 바로 수많은 인간-비인간이 결합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군대 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80%에 가까운 응답은 군대와 사회(기업)가 하나 조직적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⁷⁾ 배우 현빈의 해병대 입대로 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응답(남성 46.3%, 여성 55%)과 함께 그가 등장하는 광고가 쏟아지는 현상, 언제부터인가 연예인들의 입대가 군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체를 장식하면서 자신을 상품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현실을 보면 군대가 분단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잡종 행위자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생활을 통해 이들 몸에 각인된 '예외상태'는 이후에도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호명되고 환기된다. 예비군 제도³⁸⁾는 군조직에 편재돼 있으면서 사회에 있는 남성들을 소집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행위자-네트워크이자, 예외상태를 일상화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북한 역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군을 통한 예외상태의 창출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아예 사회 전체를 '선군사회'로 표명하고 군사화를 공공연한 국가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예비군 제도와 동일하게 북한 역시도 비슷한 시기 노동적위대와 교도대를 창설하여 군과 사회

36) 이런 군대를 통해 예외상태를 극단으로 몰아간 사례로 전두환 시기 진행된 '녹화사업'을 들 수 있다. 녹화사업은 전두환의 집권 초기에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으로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가 마련한 계획이다. 이 사업에 따라 강제징집된 사병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상개조와 학생운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수사가 자행됐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너 하나쯤 죽어도 안전사고로 보고하면 그만이다"라는 협박 속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며 녹화사업 대상이 된 사병들의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되었다. 녹화사업은 군이 국방의 의무를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벌거벗은 생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녹화사업 강제징집에는 보안사만이 아니라 문교부, 병무청, 국방부, 육해군본부, 검찰 등 정부 부처가 종합적으로 공조하여 가능했다. 1981년부터 1984년 11월까지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수는 약 1,100명으로 추산된다.

37) 2011년 3월에 이루어진 <2011년 한국인과 군대문화> 한국켄럴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 82%였고, 이런 응답은 여성이 84.1%로 남성 79.9%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들 응답자들은 군대생활의 장점으로 '인내심을 기른다', '정신력 향상', '단체생활 도움', '철이 든다', '책임감 향상' 등 정신적인 차원의 성숙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38) 예비군 제도는 동원-향토사단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에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예비군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해 근 20개 사단의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5천여 명의 예비역 장교들로 구성된 동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 안보강연 강사들, 전국 수백 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성업 중인 식당과 매점, 예비군들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수송협회'에 속한 차주와 운전기사들, 훈련장 인근의 가게들, 예비군복 등 복장을 판매하는 사람들 등등 예비군 제도의 존폐에 생사를 걸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수많은 비인간들은 셀 수 없이 매우 많다. 안보가 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님은 바로 이런 인간-비인간이 결합된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를 연결하는 장치를 노골화해 왔다.

6. 한국의 핵무기 역사와 무기의 사회기술적 체계

핵무기는 분단 현실을 새롭게 번역하는 중심이 되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기를 원해 왔다. 그들 바람대로 핵무기는 북한 문제를 번역하는 의무통과지점(OPP)이 된 것이다. 핵무기는 분단의 블랙박스 중 하나이다. 분단의 블랙박스는 크고 작은 수많은 블랙박스(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단단한 하나의 실체가 되는데, 이들 블랙박스들은 수많은 표준, 기술, 상식, 제도, 그래프, 통계, 정보, 양식, 규격, 협정문, 군사훈련, 언론, 통신망, 기지, 주둔군, 전함, 전투기, 지뢰, 핵무기 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많은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서로 이질적이지만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분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박스를 세상을 번역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무기와 무기체계를 둘러싼 역사와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소 초점이 다르지만 하나의 사례를 보자. 하루가 다르게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국민 대응 시설을 보자. 우리나라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도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나누어진다. 3~4등급은 실상 '우리집 지하실' 수준에 지나지 않고, 핵전쟁 상황에서 유효한 것은 1등급뿐이다. 그런데 1등급 대피시설은 전국에 총 15곳에 불과하다. 총 수용가능 인원은 1만 2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가까운 곳에 1등급 대피시설이 있다면 그는 '행운아'인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사시설을 제외하면 서울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유일한 1등급 대피시설인 서울시 신청사도 비상 상황 때 행정업무 및 지휘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실제 상황에서 민간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

국방비 규모가 세계 12위, 세계 무기 수입국 4위인 한국이 대체 안보국가는 맞는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정작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국민들의 보호시설이나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역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예외상태의 장치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적 장치, 군사력이라는 전투장비, 그리고 동맹을 물질화하는 장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반도 거주 미국인들의 상황을 보자. 위기 징후 또는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비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한 미군 가족과 외교관 등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백해질 경우, 군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과 오산 기지 등으로 이들을 모은 뒤 군용기로 수송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매년 훈련도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훈련은 작년 5월에 실시했다.³⁹⁾

39)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북한의 침략이나 대형 자연재해 발생시 미군의 가족과 미국 시민 등 민간인등을 일본 등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훈련을 <Courageous Channel exercise> 라고 부른다. 주한미군은 지난 1996년부터는 매년 한차례씩 이같은 훈련을 실시해 왔다. 2010년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시기와 겹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단 올해 훈련을 취소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과 미국시민 등 한국내 민간인을 약 14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시 일부는 배를 타고 일본으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나 각종 재난·재해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 전시와 관련된 훈련만 해도 전시대비훈련, 통합방위 및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화랑 훈련 등으로 다양하다.⁴⁰⁾ 그런데 너무 다양한 것이 오히려 문제다. 훈련별로 주무기관도 안전행정부부터 국방부, 소방방재청까지 다양하고, 전시에 대비한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도 분산되어 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연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하다못해 민방공훈련 때 제대로 참여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이 없다.⁴¹⁾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차적인 피해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물질 인근에 사는 국민들의 피해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위험물질이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서울 시내에만 염소가 0곳(정확한 개수는 보안사항)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은 그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식대로 지하에 대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연일 이어진 미국 최첨단 무기 '공개'의 속내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한반도 핵무장론 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차단하려는 '거대한 연극'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독자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는 한국 보수층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한 것은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4월 1일 정레브리핑에서 '미국의 최근 조치들이 한반도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조치들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독자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에 읽혀진다.⁴²⁾ 진짜 위험은 북한이 한국에 뭔가를 하고 여기에 한국이 대응을 하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고 깊게 연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루의 공포'를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단, 한미동맹, 무기체계의

로, 일부는 항공기를 통해 일본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ourageous Channel exercise> 계획에 따르면 일단 긴급상황 발생시 미군 가족과 미군 군무원, 군무원 가족, 미국 민간인등은 각 지역에 정해진 콘트롤센터(허브기지)로 모이게 된다. 이 센터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엄격한 보안통제 하에 바코드가 내장된 흰색 밴드를 지급받게 되며 자신들이 허브기지로 타고 온 차량은 열쇠를 군인들에게 맡기게 되고 군인들은 이 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긴다. 주한미군은 또 민간인들에게 지급된 바코드 내장 흰색밴드를 통해 그들이 안전하게 철수하고 있는지,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또 이 훈련 중에는 화생방마스크 등이 지급돼 착용훈련을 하게 되며 일부 지원자들은 실제로 오산공군기지에서 수송기를 타고 일본 미군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훈련기간 중 콘트롤센터는 보통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운영되며 민간인 1인당 훈련시간은 약 30분에서 45분정도 걸린다. 지난 1993년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실제로 미국 민간인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소개령이 내려져 대피를 서두르다 취소되는 소동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훈련이 1996년부터 실시된 것은 1994년 북핵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0) 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 등 이들 훈련을 위해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관과 인력,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다. 지역예비군 동대장은 현재 3,800여 명, 직장예비군 중대장 역시 이에 근접한 숫자이다. 예비군 훈련에 초빙되는 안보강연 강사들, 전국 수백 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성업 중인 식당과 매점, 예비군들을 나누는 이른바 '수송협회'에 속한 차주와 운전기사들, 훈련장 인근의 가게들, 예비군복을 공급하는 공장 등이다. 동원예비군까지 폐지할 경우 근 20개 사단의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급 자리가 줄어든다.
- 41) 두 훈련 모두 전시, 사변 등을 대비한 비상대비훈련의 일환이다. 을지연습은 서류 조치 위주의 정부 내부적인 훈련인 반면, 충무훈련은 지역별로 실제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한다.
- 42) 한겨레신문, 2013. 4. 3. 미국 쪽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도발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반도 핵무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과거 한반도의 핵무기는 남한 국민들에 그 "존재 여부"의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역사는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전해지지만 정작 한국에 핵무기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핵무기를 통해 늘 한반도가 예외 상태에 기반 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핵은 그렇게 한반도 예외상태를 정상화하는 사물이다.

한국에 핵무기가 최초로 배치되기 시작한 해는 1958년이다.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60년대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가 필리핀보다는 최대 10배, 미국령 괌보다는 2배 이상 많았으며 태평양연안 국가 중 미국령인 괌을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까지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 미국방부가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배치 역사'라는 일급 비밀문서(TOP SECRET)에 따르면, 1961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는 611기로 필리핀⁴³⁾ 62기보다는 10배, 미국령 괌 255기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즉 미국은 1960년대 사실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이나 괌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다.⁴⁴⁾ 또한 한국은 지난 1958년 초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1964년까지 600기 정도를 유지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약 100기 정도씩 급격히 늘었으며 1967년 949기가 배치돼 최대를 기록했었다.

태평양 연안국가에는 모두 27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됐으며 한국은 이중 11종류의 핵무기가 오산, 군산, 춘천 등에 배치돼 있었고 태평양사령부가 직접 년 1회 이상씩 이들 기지를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에 1958년 첫 전술핵무기 배치 시작 이후 1991년까지 33년간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일본의 오키나와가 1967년 1257기를 정점으로 1973년 완전히 핵무기를 철수했고, 필리핀도 1967년 316기를 최대로 1977년 완전히 철수되었고, 대만도 1975년 철수시켰던 것에 비교한다면 한국은 오키나와보다는 19년, 필리핀보다는 약 14년이나 오래 핵무기가 존재했던 것이다.⁴⁵⁾ 한국이 1960년대 당시 사실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 미군기지나 현재도 미국령인 괌보다 핵무기가 많았고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보다 더 오랫동안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한반도에 핵무기를 통한 분단 예외상태와 사회기술적 체계가 보다 심대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1960년대 940여기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해 1991년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음을 생각해 보자. 분단의 예외상태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지만 이런 사회-기술적 장치를 통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무기를 언제, 어디에 들여오건 나가건, 한국은 한마디 물어볼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동맹의 불평등 구조가 한 나라의 주권을 압도하고 그것이 상시적인 예외상태의

43) 필리핀 수빅만 미군기지는 미국이 지난 1899년부터 지배권을 행사해오다 1992년 반환했으며 1947년 필리핀으로 부터 수빅만 일대를 99년간 조차하는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하며 행정권까지 이양받아 사실상 1960년대 이 기지는 미국령으로 볼 수 있다.

44)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연안에 핵무기를 배치한 곳은 오키나와와 한국, 괌, 필리핀, 타이완등 모두 5개국이었으며 타이완은 핵무기가 가장 많이 배치됐을 때가 56기로 한국보다 크게 적었고 일본의 오키나와만이 한때 한국보다 1.5배정도 많은 핵무기가 배치됐었다.

45) 미국이 핵무기, 이른바 일부 군사목표 등 한정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줄인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과 장거리 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기술이 발달하고 이의 유용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을 전략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다.⁴⁶⁾ 이번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각종 첨단무기가 연일 동원돼 무기쇼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무기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도하며 한반도 예외상태의 공포를 화려한 첨단무기의 환타지로 전시하는 동맹의 섬뜩한 의리를 느끼며 소름이 끼치는 대목이다. 전술 핵폭격기가 배치되고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들어서는데 이것들이 마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마치 큰 형님의 강한 근육과 기술 자랑을 믿고 흡족해 하는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런 1958-1991년까지 400-949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전술핵무기를 33년간 배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파견해 왔다는 점이다. 이들이 필요하다고 본 시점은 주로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한 대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에 개입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가령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지난 1976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래 81년까지 5년간 모두 33차례 한국 진해기지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⁴⁷⁾ 핵추진 잠수함의 1976년 한국기항은 미국 역사상 태평양 연안국가로는 최초이며, 전체 외국국가 기항사례로는 두 번째였다.

미 핵잠수함은 1977년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1978년 2회 기항에 그쳤으나 1979년과 1980년에는 모두 14차례나 진해기지에 들어왔는데, 이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한 1979년 10월과 1980년 광주사태 이후인 그해 6월에는 각각 한 달에 세 차례나 한국에 기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미 핵잠수함은 샘휴스턴호와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해 모두 9척에 달하며 이들 핵잠수함의 한국기항은 1981년 1월과 3월 두 차례나 방문한 뒤 일시 중단됐다.⁴⁸⁾

특히 미 핵잠수함은 한국기항이 정례화되면서 의전상의 절차 등을 밟지 않는 등 한국정부의 정식승인 없이 진해항을 드나들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이 한국정부의 승인 없이 진해항을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 한반도가 핵무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의 배치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69년 4월 EC121기 격추 직후 북한에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북한 도발 대응대책인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계획을 수립, 추진해 한반도가 핵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었다.⁴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4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가맹국들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미국의 핵무기에 관해서 그 수량·종류·위치·성능·교체·명령체계 등의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요청한다. 이런 절차로 인해 반핵 평화시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필리핀조차 상원에서 1988년 6월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통일 전 서독정부는 서독영토에 설치되는 핵무기는 동독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요구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수용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창작과 비평』 통권 제61호(1988), p. 77.

47) 노틸라스 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슨, 로버트 노리스, 매튜 매킨지 박사 등 3명의 핵전문가가 지난 2006년 펴낸 ‘중국 핵전력과 미국의 핵전쟁계획’이란 저서에 따르면 잠수함발사용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 [SSBN] 샘 휴스턴호가 1976년 12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 해군기지인 진해기지에 기항, 4일간 머물다 돌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는 일명 ‘판문점도끼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48) 미 핵잠수함의 한국기항이 1981년 3월이후 중단된 것은 그해 4월 조지 워싱턴호가 한국인근해상에서 일본 화물선 니쇼 마루호와 충돌, 이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9) 미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2010년에 공개한 196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밀문서들에 따르면, 닉슨 전 대통령은

멜빈 레어드 국무장관등과 함께 수립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이같이 전술 핵무기 등을 사용, 북한을 타격할 경우 적게는 백 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닉슨 행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비상대책은 북한의 군사시설 등 엄선된 목표물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작전인 FRESH STORM 작전은 물론 사망자 발생을 염두에 둔 제한적 핵공격을 상정한 일명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 나아가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인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작전은 0.2킬로톤에서 10킬로톤에 이르는 핵을 탑재한 Honest John/Sergeant missiles로 북한의 군사령부, 비행장, 해군기지 등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10킬로톤에서 70킬로톤에 이르는 핵무기로 북한의 공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계획도 담겨있다. 이 비상대책은 1969년 4월 14일 EC121 해군정찰기 격추된 이후 4월 15일부터 수립되기 시작해 약 열흘 뒤인 4월 26일 초안이 만들어졌고 약 한달 뒤인 5월 중순 이같은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비밀해제된 기밀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⁵⁰⁾

워싱턴에서 공격명령이 내려지면 4시간 뒤 한국의 기지와 항공모함 등에서 출격하게 되며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 내 목표물을 타격하고 타격 1시간 내에 기지와 항공모함으로 복귀한다고 돼 있다. 소요시간은 미군전투기가 핵무기를 장착하고 한국기지에서 발진, 북한을 공습할 경우 채 15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명령만 내려지면 짧게는 4시간 15분 만에 북한에 대한 1차 핵공격이 완료되는 것이다. 예상피해 항목에서는 미군 전투기 등의 손실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공격규모에 따라 적게는 백 명에서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⁵¹⁾

한편 한미동맹의 사회기술적 체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자. 미국 레이시온社가 한국이 2008년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2015년부터 부품공급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⁵²⁾ 레이시온社의 오만방자한 요구는 분단의 사회기술적 시스템, 한

1969년 4월 14일 동해상에서 31명의 미 해군 장병이 탑승한 EC121 해군정찰기가 추락한 직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선택적 사용,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북한 도발대응 비상대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0) 'SPECIAL ACTION GROUP의 미국 비상계획 검토'라는 39쪽짜리 이 문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단계별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모두 13개의 작전계획이 제시됐으며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계획은 12번째, <북한에 대한 핵대응 계획- 3옵션-FREEDOM DROP> 이라고 기록된 이 작전은 3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요약돼 있다. 선택1은 북한에 대한 보복적 공격으로 0.2 킬로톤에서 10킬로톤의 핵무기 공격으로 북한의 12개 군사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2는 북한이 공군력을 이용해 남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70킬로톤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공격으로 16개 비행장을 목표로 한다. 선택3은 10킬로톤에서 70킬로톤에 핵무기로 북한의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키는 핵공격으로 22개의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다. 전체적으로 선택 1, 2, 3을 모두 합칠 경우 목표물은 선택 1은 12개, 선택 2는 16개, 선택 3은 22개로 모두 50개 군사시설에 달한다. 특히 3개의 옵션 미공군 전투기는 한국의 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각 옵션별 전투기 등 동원계획은 아래와 같다. 선택1은 최대 12차례 공습을 하게 되며 12대의 미공군 F4 전투기, 12대의 미해군 공격기, 5기의 HONEST JOHN 미사일 선택2는 최대 16차례 공습을 하게 되며 16대의 미공군 F4 전투기, 16대의 미해군 공격기. 선택3은 최대 47차례 공습을 하게 되며 37대의 미공군 F4 전투기, 16대의 미해군 공격기, 9기의 HONEST JOHN 미사일, 2기의 SERGENT 미사일 등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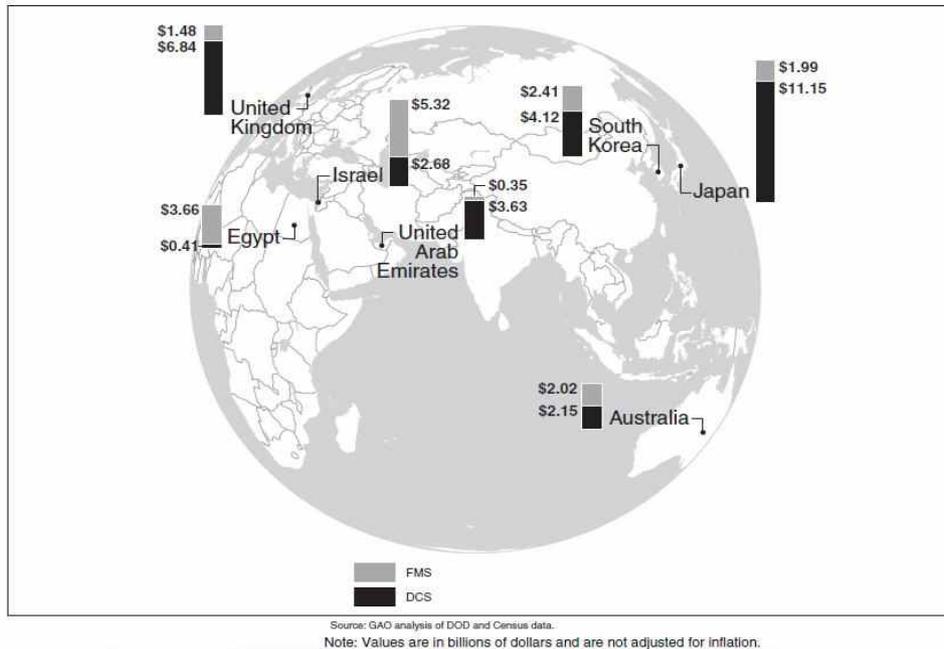
51) 이외에도 '미국의 비상계획검토' 문서에는 비전투요원 소개계획, 북한의 어선조전소 집수작전(FRINGE SWOOP), 대잠수함작전, TALOS 미사일공습, B-52 전투기를 동원한 북한공군기지 공습작전, 창진발전소 공습작전 등 모두 13개의 작전 옵션의 개요, 동원 병력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52) "미업체, 한국군에 미사일 교체 일방통보," <조선일보> 2010. 10. 15.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3 장비 중

미 동맹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드러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미국 무기 수입 4위⁵³⁾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 의존율, 한미동맹과 미국의 무기체계에 들어가 있는 한국은 분단의 사회기술적 체계에서 주도적 행위자가 절대 아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이처럼 이면에 군사기술적 의존체계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

<그림> 한국 최근 5년간 미국 무기 수입(2005-2009)

Figure 3: Top Seven Countries for Exports of Defense Articles, Calendar Years 2005 through 2009



※ 미국 회계감사원의 미하원 외교위원회 제출 무기수출보고서(GAO DEFENSE EXPORTS 2005-2009).

한반도 분단의 사회기술적 체계로서 한미동맹은 순전히 군사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한국이 매년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7천6백 억원이다. 한미동맹의 유지 및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61%가 Conf-3형, 39%가 Conf-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_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Conf-3형 성능개량을 위해서는 행정비용 외에 3억5000만 달러(약 3900억원)가 소요된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가 30년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후속 군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레이시온사는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Conf-2형을 성능 개량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 부담"이라면서 "2020년 한국의 PAC-3 가동률은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53) 한국은 2005-2009년 기간 중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정부 대 정부 간 무기거래] 방식으로 24억1천여만달러, 직접상업판매[DCS ; DIRECT COMMERCIAL SALES/ 군수업체 대 정부 간 거래] 방식으로 41억2천여만달러어치를 각각 수입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서 FMS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 4백8억 달러로 전체의 40.6%를 차지한 반면 DCS 방식으로 수출된 것이 5백98억 달러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가령 SK에너지 등 SK 4개사가 미군 기름공급 등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미국정부로부터 최소 35억 달러, 한화 4조2천 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⁵⁴⁾ 이밖에 쌍용,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외에도 전기는 한국전력, 농산물은 농협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미군기지 경비, 미군 휴양지인 드래곤 힐랏지의 도시가스, 주한미군의 치과 치료 등 모두 한국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정부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 중 계약액수 상위 10건은 모두 미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이다. 2000-2010년 동안 미국정부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은 무려 약 4만6천 여건이었으며, 이 중 97%가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 그야말로 의식주 모두를 한국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전투기정비, 전함정비 등 군수물자관리는 물론이고 전력에서부터 농산물 등 부식납품, 치과 치료비, 더 나아가 '모모' 언론사 정기구독료까지 미국정부의 발주가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한마디로 미군 관련 사업에 큰 이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010 회계연도 한국기업 단일계약 TOP 10

순위	기업	미국발주처	계약일자	계약금액[USD]	상품 및 코드	비고
1	SK ENERGY	국방부	20081209	631,146,119	기름 9130	
2	SK HOLDINGS	국방부	20061213	600,265,320	기름 9130	
3	S-OIL	국방부	20081205	481,968,023	기름 9130	
4	SK ENERGY	국방부	20091106	376,096,088	기름 9130	
5	GS CALTEX	국방부	20061208	371,291,448	기름 9130	
6	GS CALTEX	국방부	20051207	337,411,229	기름 9130	
7	SK HOLDINGS	국방부	20071214	336,576,693	기름 9130	
8	SK CHEMICALS	국방부	20090115	328,170,447	건물유지교체Z149	
9	SK HOLDINGS	국방부	20051202	302,689,313	기름 9130	
10	SSANGYONG USA	국방부	20041214	264,772,295	기름 9130	
계				4,030,386,975		

8. 한반도 핵무기와 수행적 분단

북한 핵실험 이후 정작 왜 핵실험을 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천편일률적이다. 대체로 지도자와 권력엘리트 그룹의 언술과 행위, 상황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핵실험이나 이후 전개된 긴장 고조 언술과 조치들을 체제 지속과 생존 차원에서 비롯된 전략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북한의 의도일 것이라고 본다. 무력시위를 통해 취약한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자원의 확보가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강경노선의 체

54) 지난 2000 회계연도부터 2010 회계연도까지 약 10년간 SK에너지가 12억8천만 달러, SK홀딩스가 14억 달러, SK글로벌 아메리카가 3억1천7백만 달러, SK케미칼이 4억8천만 달러 등의 미국정부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SK 4개사 수주실적 참조) 이들 4개사 수주액을 합하면 약 35억 달러,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할 경우 한화 4조2천 억원에 달한다. 10년 평균을 한다면 연 3억5천만달러정도겠지만 10년 전에는 이에 훨씬 못 미쳤고 최근에는 연간 8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 향후 수주금액은 2000년대 초보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합계액은 해당회사 계약사업 중 액수가 큰 사업만 더한 금액이라서 실제 수주액은 이 합계액보다 조금 커진다.

택을 통해 군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의 강경한 위상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협상 카드화하려는 태도에 대해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한반도 위기는 주로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에 익숙하다. 일단 동기 제공자로서 북한의 위협적 행위가 위기의 시작으로 뉴스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및 분단체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배경을 뒤집는 발상이 필요하다. 일단 기존에 전경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나던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호전적 행태를 잠시 뒤로 물리고, 오히려 그 뒤에 희미했던 배경을 앞으로 zoom-in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라는 '사건' 그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의 행위성을 갖는 '물질적 기호'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물질적 핵실험, 핵실험에 대한 기표화, 핵실험에 대한 의미화 등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들은 분단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분단 현상을 기호화하고 현상화하는 사회기술적 프레임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핵실험)가 한반도 분단사회에서 갖는 물질기호학적 의미를 보는 관점을 통해 핵무기가 분단을 번역하는 사건,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면에 거대한 분단의 사회기술적 연결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단은 고정된 '무엇', 한국전쟁이라는 역사화된 분단, 적대와 대립이라는 사건화된 분단, 위협과 도발이라는 안보·군사화된 분단, 영토적 분단만이 아닌 지금도 여러 분단의 행위자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즉 수행적 분단에 대한 이해이다.

사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위기나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주로 외교적 게임이나 군사적 대치 프레임 속에서 이해해 왔다. 하나의 프레임 또는 분단의 서사(narrative)는 이면에 존재하는 많은 분단의 맥락과 사회-기술적, 사회-물질적 과정을 은폐한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주로 표면화되는 현상적 이미지를 특정 프레임을 통해 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그 배면에 존재하는 사회기술적 시스템 또는 연결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60년이 넘는 분단 역사는 수많은 분단의 사회기술적,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구축과정은 인간과 비인간의 끊임없는 속성 교환을 통해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자 단단한 결합을 통해 분단을 특정 프레임 속에 상식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양하고 무수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인간과 힘겨루기를 하며 또는 서로를 길들이며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고 또한 분단의 수행하는 행위성을 만들어왔다. 이것이 '수행적 분단(performative division)'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무엇'을 전제로 한 동일화가 아니라 '공존의 윤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탈분단과 통일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기초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민족담론에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할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어의 창안을 위한 창조적 해체와 지적 재구성에 대한 말은 소중히 되새겨 보직하다.

제2회의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제1발표

북한 핵개발 현황 분석 - 강정민

제2발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 전략적 핵 균형의 관점에서 - 조성렬

제3발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및 실효성 - 임강택

간지

북한 핵개발 현황 분석

강정민(KAIST 초빙교수)

1. 서론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미관계개선의 협상카드가 아니라 정권존속을 위한 수단이라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일 것이다. 상기 배경아래 필자는 북한 핵개발 현황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2. 북한 핵개발 현황

2.1 기존 핵 시설 (2010년 이전)

2.1.1 우라늄 광산 및 정련시설

1964년 북한은 함경북도 웅기지역에 채굴의 가치가 있는 우라늄광 약 400만톤을 신고하였다한다 (총 원광매장량은 2천6백만톤 이라고도 함).⁵⁵⁾ 북한의 우라늄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평산과 순천의 우라늄 품위에 유추하여 웅기지역의 우라늄 품위를 1%로 가정하면, 우라늄광 약 400만톤은 약 4만톤 천연우라늄에 상응하며, 이는 상용원전 1GWe 경수로가 필요로 하는 연간 우라늄 량 약 200톤의 200년분 또는 1GWe 경수로 5기의 운전 수명기간(40년) 동안 필요한 우라늄 량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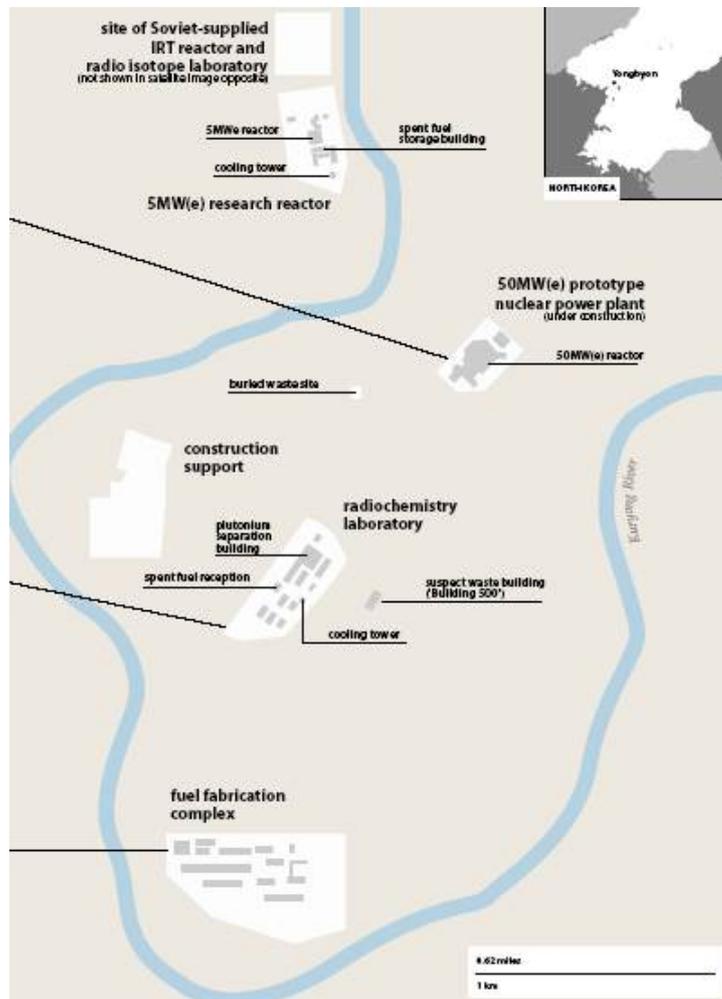
한편, 우라늄 옐로우케익(U3O8)을 생산하는 정련시설은 평산에 있으며 연간 290톤 우라늄 옐로우케익을 생산하고 있다. 박천에도 연간 생산능력 210톤의 정련시설이 있었으나 1992년에 폐쇄되었다.⁵⁶⁾

55) 정진엽 외, *핵활동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 KINAC 보고서, 2008.

2.1.2 영변 주요 핵시설

그림1에 도식적으로 주어져 있듯이, 영변의 주요 핵시설로는 5MWe 흑연로, IRT-2000 연구로, 핵연료제조시설, 재처리시설 그리고 건설 중 동결된 50MWe 흑연로가 있다.

<그림 1> 영변 주요 핵시설⁵⁷⁾



2.1.2.1 핵연료제조시설

평산에서 생산된 엘로우케익(U3O8)은 영변의 핵연료 제조시설(우라늄 정련, 변환 공정 포함)로 수송되어 U3O8 -> UO3 -> UO2 -> UF4 -> 금속 우라늄으로 변환

56) 원자력통제기술센터, *북한 핵 문제와 경수로 사업: 북미 기본합의 5년에 대한 기술평가*, KAERI/AR-552/99, 1999.11.

57)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4.

된 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되어 마그녹스(마그네슘과 지르코늄의 합금) 피복관 속에 넣어져 흑연로 핵연료봉으로 제조된다. 영변 핵연료제조시설은 1994년 동결당시 연간 100 tU의 핵연료봉을 생산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5MWe 흑연로 2기 노심분의 핵연료량에 해당한다.

2.1.2.2 5MWe 흑연로

북한 플루토늄의 생산원은 영변의 5MWe 흑연감속원자로(이하 흑연로)이다. 열 출력 25MWth의 5MWe 흑연로는 매그녹스 피복재로 둘러싸인 천연금속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흑연감속원자로이다. 핵연료봉은 흑연감속재의 채널 속에 수직으로 놓이며 주변을 흐르는 이산화탄소 냉각재에 의해 냉각된다.

1986년 운전 개시한 5MWe 흑연로는 1994년 4월까지 가동되었다. 그 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로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기까지 가동 중단되었다가, 2003년 2월부터 재가동되었다. 이후 2.13합의에 의거 2007년 7월 재중단하기 전까지 가동되었으며 200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재처리를 위해 일시 가동 중단하였다.

지난 4월 2일 북한은 5MWe 흑연로의 재가동을 선언하였다.⁵⁸⁾ 냉각시설 수리 및 신핵연료봉 8,000개를 장전하면 1년 가동 후 핵무기 1기분에 상응하는 플루토늄 약 5-6 kg 생산 가능할 것이다.

5MWe 흑연로가 가동 후 1994년까지 가동한 운전이력에 대해 ISIS의 David Albright 가 정리한 바 있다.⁵⁹⁾ 1994년 5MWe 흑연로의 사용후핵연료의 평균연소도는 600-700 MWd/tHM로 알려져 있다. 5MWe 흑연로 사용후핵연료의 연평균 연소도는 대략 100 MWd/tHM로 가정하고, 2003년 2월 재가동 이후 2007년 7월 재중단하기 전까지 대략 4년 정도 전 출력으로 가동하였다고 가정하면 5MWe 흑연로에서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총량은 평균연소도 약 1,100 MWd/tHM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50t 속에 포함된 플루토늄 량에 해당한다. 상기 운전이력과 원자로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 연소계산을 수행한 결과 5MWe 흑연로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 플루토늄 량은 최대 약 44-50kg으로 추산된다.

5MWe 흑연로에서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Graphite Isotope Ratio Method (GIRM)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MWe 흑연로의 흑연감속재 샘플채취가 필수적이다.

58) “[클로즈업 북한] 영변 원자로 공사 재개 흔적 포착,” KBS 뉴스, 입력시간 2013.04.13 (08:06)

59) David Albright and Kevin O'Neill, Editors,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0, p.119.

2.1.2.3 50MWe 흑연로

열출력 200 MWth의 50MWe 흑연로도 금속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며 노심의 비출력은 1.5MWth/MTU로 알려져 있다. 이 원자로는 완공될 경우 연간 55kg 전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1986년 건설하기 시작한 50 MWe 흑연로는 1995년 완공예정이었으나, 1994년 제네바합의로 건설이 동결된 이후, 현재는 버려진 상태로 복구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2.1.2.4 200MWe 흑연로(태천)

열출력 800 MWth의 200MWe 흑연로도 금속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며 노심의 비출력은 2.6 Wth/MTU로 알려져 있다. 이 원자로는 연간 220kg 전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1989년 태천에서 건설하기 시작한 200MWe 흑연로는 1996년 완공예정이었으나, 1994년 제네바합의로 건설이 동결된 이후, 현재는 버려진 상태로 50MWe 흑연로와 마찬가지로 복구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2.1.2.5 IRT-2000 연구로

1965년 가동 시작한 IRT-2000 연구로는 구소련이 제공한 것으로 초기출력은 2MWth이었으나, 1974년 4MWth, 1987년 8MWth로 출력을 증강시켰다. IRT-2000 연구로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이 주목적이며 고농축우라늄(HEU) 핵연료를 소량 장전하고 있다.

2.1.2.6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로 알려져 있는 영변의 재처리시설은 흑연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7m 폭, 192m 길이, 6층 높이의 크기의 영변 재처리시설은 흑연로 사용후핵연료를 약 110톤에서 재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바합의로 동결될 당시 2번째 공정이 건설 중단되었는데, 이 공정이 완공되면 재처리용량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핵무기용 플루토늄 피트 제조를 위한 금속플루토늄제조공정이 재처리시설 내에 있다.

2.2 신규 핵 시설 (2010년 이후)

2.2.1 100MWth 경수로

2010년11월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및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였다. 표 1은 헤커 박사가 북한 관리들로부터 얻은 북한

경수로 설계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이다.⁶⁰⁾ 북한 관리들은 헤커박사에서 경수로가 열출력 100메가와트로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원자로의 전력생산능력을 공개하기를 꺼려했고 대신 열효율이 약 30 퍼센트 정도라고 했다. 이에 따라 헤커 박사는 경수로의 전력생산 능력이 대략 25에서 30메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⁶¹⁾

헤커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원자로 압력용기, 펌프 등 원자로 관련 부품을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며, 특히 경수로용 핵연료도 직접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한 우라늄 원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산화우라늄(UO₂)형태의 핵연료 제조방법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 지원 없이 곧 자체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핵연료의 피복재(cladding material)를 지르칼로이(zircaloy)로 할지 스테인리스강으로 할지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원자로의 다른 특성들(운전압력 및 온도, 냉각재 유량, 감속재의 종류, 연소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원자로용기와 같은 경수로의 1차 시스템은 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수로 공정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온고압으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은 발전효율을 낮춤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발전효율을 낮춤으로 1차 시스템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영변 100 메가와트(열출력) 실험용 경수로 특성

열 출력	100MWth	
발전효율(열효율)	~ 30%	북한 과학자들의 예상치
발전용량	25~30 MWe	헤커 박사의 추정치
연료유형	UO ₂	2010년 12월 현재 피복관 재질(Cladding material)은 확정되지 않음
핵연료 농축도	평균 3.5% (2.2~4%)	
노심 우라늄 장전량(U base)	4,000kg	

60) Jungmin Kang, Editor, Assessment of the Nuclear Programs of Iran and North Korea, Springer, 2013, p.22.

61)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압력용기 재질	고강도 철강	스테인리스 피복 가능성 있음
격납용기	깊이 22m, 높이 40m, 두께 0.9m	철근콘크리트

2.2.2 우라늄농축시설 및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추정

2010년11월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및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였다. 2010년 11월 12일 북한 관리들이 헤커 박사에게 한 말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시설은 2009년 4월에 착공되었으며 헤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며칠 전인 2010년 11월 초에 가동을 시작했다. 헤커 박사는 이 시설의 제어실의 패널과 LED 디스플레이에서 가동수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⁶²⁾

북한은 이 농축시설이 현재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의 연료 (3.5 퍼센트 수준의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위해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아래에 이 농축시설의 특징을 정리하였다.⁶³⁾

- 위치: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 연대: 착공시기 (2009년 4월), 가동시작 (2010년 11월 초)
- 건물 규모: 120m x 18m (2층 건물)
- 농축용량: 8,000kgSWU/yr (북한의 발표에 근거)
- 수량(원심분리기/cascade/구역): 2,000/6/2
- 원심분리기 세부사항:
 - 종류: P-2 (G-2)
 - Case 외부지름: 약 20cm (8 inch)
 - 높이: 약 1.8m (6 feet)
 - 농축능력: 연간 약 4kgSWU
 - 회전자: 철 합금 (마레이징강일 가능성)
 - 케이스: 알루미늄 (추정)
- 농축도/tail: 평균 3.5%/0.27%
- 농축우라늄생산능력 (추정)
 - 저농축우라늄 (3.5%): 연간 약 1,800 kg
 -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90%): 연간 약 40 kg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는 영변 우라늄농

62)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63) Jin-Soo An, "Verifying the DPRK Nuclear Program," *Assessment of the Nuclear Programs of Iran and North Korea*, Springer, To be published in March 2013.

축시설 및 타 비밀시설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표2 및 표3와 같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표 2> 2011년 말까지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추정치⁶⁴⁾

시나리오	운영시설	E.1 (하한)	E.2 (중한)	E.3 (상한)	WGU 생산량 (범위)	핵무기 수
1	영변우라늄농축공장만 운영 (2000개 P2, 2010년말 운전개시, LEU 생산)	0	0	0	0	0
2	영변우라늄 농축 + Pilot Plant(2009년 이전 운전개시, LEU 및 HEU생산)	kg 단위 생산			kg 단위	0
3 (a),(b)	영변농축공장(LEU생산) + 비밀농축공장(2008년 운전개시, WGU생산)	33	90	136	90 (33-136)	4 (107)
	영변농축공장(LEU생산) + 비밀농축공장(2005년 운전개시, WGU생산)	54	147	221	147 (54-221)	7 (2-11)
4	우라늄농축공장에서 2005~2009사이 WGU생산, 이후 이 공장을 영변에 옮기고 LEU생산	38	102	153	102 (38-153)	5 (1-8)
5 (a),(b)	3,000개 P2 우라늄농축공장을 WGU 생산용으로 가동하고, 2009년에 이중 2,000개 P2를 영변에 옮김					
	2008년 운전개시	50	135	204	135 (50-204)	6 (2-10)
	2005년 운전개시	81	220	332	220 (81-332)	11 (4-17)

64) 박재환, 이정현, “북한의 핵능력 평가 및 전망,” *핵정보분석지*, No.58, 2012.9.

<표 3> 2016년 말까지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추정치 (단위: kg)⁶⁵⁾

시나리오	운영시설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나리오 A	영변농축시설(2,000개 P2)	개수	2,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E.1	8.3	17	29	46	67
	2014년부터 매년 1,000개씩 증설	E.2	23	45	79	124	181
		E.3	34	68	119	187	272
시나리오 B	영변농축시설(2,000개 P2) +비밀농축시설(2,000개 P2)	개수	4,000개	4,000개	5,000개	6,000개	7,000개
		E.1	17	33	54	79	108
	2014년부터 각 시설당 매년 1,000개씩 증설	E.2	45	90	147	214	294
		E.3	68	136	221	323	442

2.3 핵무기 생산능력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위성영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실험용 경수로가 2013년 하반기에 완공되어 2015년 경부터 정상가동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이 경수로가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최적화할 경우 연간 약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계산을 통해 표 4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추정하였다.

<표 4> 2016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누적 수 예상⁶⁶⁾

※ 시나리오 A : 영변 농축시설만 가동 경우

65) Ibid.

66) Ibid. “그러나 올브라이트 박사는 실험용 경수로를 최적화 할 경우, ①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2015년 이후로 상당히 지연된다는 점, ② 구동연료 제작에 필요한 10-20%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 이외에 추가로 1,000개 P-2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③ 경수로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영변 재처리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핵무기 1개당 필요한 핵물질의 양의 기준이 달라질 경우, 핵무기 누적수 추정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첨언하였다. 본 시나리오 계산에서 플루토늄탄 1개당 필요한 핵물질 양(0.375 SQ))의 기준이 우라늄탄(0.8 SQ)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잡힌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플루토늄 탄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인정한 상기의 문제점 이외에도, 실험용 경수로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최적화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량은 최대 상한치인데 비해, 실험용 경수로용 핵연료를 제작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은 중간 추정치에 비교함으로써, 더 높은 이득을 얻는 것처럼 왜곡된 면이 있다. 또한 열출력 100 MW급 경수로에서 구동연료 방식으로 연간 20 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기술로 구동연료 방식의 원자료를 설계·건설·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핵무기 누적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se 1. 추가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시나리오 A	무기급 Pu	12	12	12	12	12	12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0	0	1	1	2
	합계	12~23	12~23	12~23	13~24	13~24	14~25
시나리오 B	무기급 Pu	12	12	12	12	12	12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1	2	5	8	11
	합계	12~23	13~24	14~25	17~28	20~31	23~34
Case 2. 경수로를 최적화 하여 무기급 Pu를 생산하는 경우							
시나리오 A	무기급 Pu	12	12	12	12	19	26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0	0	1	1	2
	합계	12~23	12~23	12~23	13~24	20~31	28~39
시나리오 B	무기급 Pu	12	12	12	12	19	26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1	2	5	8	11
	합계	12~23	13~24	14~25	17~28	27~38	37~48
Case 3. 경수로용 LEU를 생산하지 않고, 무기급 U만을 생산하는 경우							
시나리오 A	무기급 Pu	12	12	12	12	12	12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1	2	4	6	9
	합계	12~23	13~24	14~25	16~27	18~29	21~32
시나리오 B	무기급 Pu	12	12	12	12	12	12
	무기급 U, 2012년 이전	0~11	0~11	0~11	0~11	0~11	0~11
	무기급 U, 2012년 이후	-	2	4	7	10	14
	합계	12~23	14~25	16~27	19~30	22~33	26~37

※ 시나리오 B : 영변 농축시설과 비밀 농축시설을 가동한 경우

※ 핵무기 1 개당 필요한 핵물질의 양을 플루토늄 탄은 3 kg-Pu, 우라늄 탄은 20 kg-U를 기준으로 함

3. 2010년 우라늄탄 핵실험 의혹

뉴2012년 Science & Global Security 저널의 논문에서 Lars-Erik De Geer는 2010년 4월 일본 그리고 2010년 5월 한국, 일본, 러시아의 환경방사선측정소의 측정 자료에 근거하여 비록 지진파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저출력 핵실험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⁷⁾ De Geer는 검출된 방사성 핵종의 분석 결과 북한이 우라늄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우라늄탄을 이용한 저출력 핵실험을 위해 증폭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De Geer는 당시의 핵폭발 규모를 50 tTNT (또는 크게는 200 tTNT) 이하로 보고 있으며, 이 정도의 폭발력은 지하 핵실험의 충격완화효과(decoupling)로 인해 지진파가 검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7) Lars-Erik De Geer, "Radionuclide Evidence for Low-Yield Nuclear Testing in North Korea in April/May 2010," Science & Global Security, Volume 20, No. 1, 2012.

4. 북한 3차 핵실험

북한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지진계로 USGS는 5.1, CTBTO는 4.9로 발표하였다. 지하암반핵실험에 의한 지진강도와 핵폭발력의 관계식⁶⁸⁾에 근거하여, 북한의 1, 2,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추정하면 표5와 같다.

<표 5> 북한 핵실험에 의한 지진강도와 폭발력 추정

	CTBTO 지진강도	USGS 지진강도	CTBTO 근거한 폭발력 (tTNT)	USGS 근거한 폭발력 (tTNT)
1차핵실험 (2006년)	4.0	4.2	0.5	0.8
2차핵실험 (2009년)	4.5	4.7	1.8	2.8
3차핵실험 (2013년)	4.9	5.1	4.5	7.3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이라든지 “다중화된 핵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⁶⁹⁾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여러 핵전문가들도 플루토늄 재고가 많지 않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핵무기의 소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라늄탄인지 플루토늄탄인지 알려면 핵실험 강도에서 빠져 나온 방사성가스, 즉 제논(Xe)을 핵실험 후 빠른 시간 내에 포집하여 그 동위원소를 분석해야 가능한데,⁷⁰⁾ 가스 포집이 쉽지 않아 미국은 지난 1차 핵실험 때는 포집에 성공했지만, 2차 및 이번 3차 핵실험 때는 실패하였다.

68) $M_b = 4.262 + 0.973 \log Y$ (M_b : Richter scale magnitude; Y : Yield in kiloton TNT), Lynn R. Sykes and Goran Ekstrom, “Comparison of seismic and hydrodynamic yield determinations for the Soviet joint verification experiment of 1988,” Proc. Natl. Acad. Sci. USA, Vol.86, pp. 3456-3460, May 1989.

69) 김영권, “북한 3차핵실험, 우라늄 사용 여부 추측,” 미국의 소리, 2013.02.12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01873.html>).

70) 핵실험후 처음 몇 시간 내에 Xe를 포집하여 그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우라늄탄인지 플루토늄탄인지 구분 가능하지만 이들이 지나가면 거의 불가능하다. Jungmin Kang, Frank von Hippel and Hui Zhang, “The North Korean Test and the Limits of Nuclear Forensics,” *Arms Control Today* (Letter to the Editor), Vol. 37, pp. 42-43, January/February 2007.

5. 결론

비록 이번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였는지 검증할 물증은 없지만, 여러 정황적 사실에 근거할 때,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 고농축우라늄 양산체제로 돌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을 이용한 소형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커드, 노동 또는 그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 생산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영변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만큼 핵무장 능력의 양적 증강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3차 북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 : 전략적 핵 균형의 관점에서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I. 문제제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앞선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상당한 규모의 폭발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¹⁾ 특히 이번 핵실험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우주로켓을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뒤여서 더욱 우려와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이 된 것일까?

한 때 핵의 시대(the nuclear age)가 끝난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핵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200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개편을 둘러싼 핵심의제는 핵무기국가 5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거부권이 없는' 비핵무기국가들에게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여러 논란 끝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21세기가 더 이상 20세기 후반기와 같은 '핵 시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구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핵 시대의 종언'이라는 염원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이자 핵보유국인 5개국 대표들은 2013년 4월 19일(현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2일 북한 핵실험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 활동 추구라는 상황을 맞아 P5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⁷²⁾

탈냉전시기 국제사회가 한 때 기대했던 '핵 시대의 종언'이란 것은 사실상 핵무기국가들의 전략적 핵 균형 속에서 주어진 불안정한 평화의 구조였는지 모른다. 일

71) 폭발력은 2006년 1차 핵실험에서 인공지진과 3.9규모로서 1kt로, 2009년 2차 핵실험에선 지진과 4.5규모로서 2~6kt로 추정된 데 비해, 3차 핵실험에서는 4.9~5.2규모로서 10여 kt인 것으로 추정된다.

72) 『연합뉴스』 2013년 4월 20일.

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핵 균형을 변경시키고자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2094호가 채택되자, 북한은 이것을 핵보유국 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면서 자신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기국가가 된 이후, 동북아 안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전략적 핵 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글로벌 차원의 핵실험 및 핵전력 실태를 살펴보고, 동북아의 지역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핵 능력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핵 균형 상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국가화가 기존의 동북아 안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조 속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II. 세계 차원의 핵 균형과 동북아국가들의 핵개발

1. 전 세계의 핵개발 및 핵무기보유 현황

2013년 3월 미국 CNN은 '세계 핵보유국 지도'를 발표하였다.⁷³⁾ 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핵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자위용으로서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역내 균형(inside balance)을 이루고 있다.(<표 1> 참조)

먼저, 맨하탄 계획을 통해 세계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미국은 다른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미국은 실제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해 보았고 현재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중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현역에 2,150발, 예비역으로 2,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150발 중 500발이 지상배치 핵미사일, 1,150발이 SSBN, 300발이 중폭격기에 할당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 밖에 '나토 핵공유 프로그램'에 따라 4개국에 200발의 B61 중력탄이 배치돼 있다. 다음, 러시아는 전신인 옛소련이 스파이를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 1949년에 실시된 옛소련의 첫 핵실험은 1945년에 투하된 미국의 나가사키형 원폭과 유사하였다. 현역에 1,720발, 예비역에 2,70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1,720발 중 지상배치 핵미사일에 1,070발, SSBN에 350발, 중폭격기에 300발이 배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국은 냉전시기 파트너인 러시아와 핵전력의 감축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제1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과 전략공격능력감축조약(Moscow 조약)에 이어

73) CN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이 '세계 핵보유국 지도'는 미 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CIA(CIA World Factbook),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된 것이다.

(<http://edition.cnn.com/interactive/2013/03/world/nuclear-weapon-states/index.html> 검색일 2013.4.5.)

최근에는 10년 시한의 제2차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를 통해 핵전력의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3000발 이상의 핵탄두, 러시아는 4000발이 퇴역 후 폐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⁷⁴⁾

그밖에 영국은 미국, 옛소련에 이어 1952년에 첫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국제 핵군축에 호응하여 1998년에 공중 핵무기 운반수단을 폐기하고 SLBM의 운반수단으로 핵잠수함 4척만을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뒤늦은 1960년에 4번째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역시 1996년에 지상발사 핵무기 운반수단을 폐기하고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핵잠수함 4척과 항공기(함재기 포함)를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공식 핵무기국이 된 중국은 1964년에 첫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SLBM의 개발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ICBM과 중폭격기의 성능을 향상 중이다.

<표 1> 전 세계의 핵실험 실시 및 핵무기 보유 현황

(2013년 3월 현재)

	핵실험			핵탄두 비축량(추정)				
	최초	최근	합계	ICBM	SLBM	Heavy Bomber	보관[퇴출]	합계
미 국	1945	1992	1,054	500	1,150	300+ 200*	2,500 [3,000]	7,650
러시아	1949	1990	715	1,070	350	300	2,700 [4,000]	8,420
영 국	1952	1991	45	없음	160	없음	65	225
프랑스	1960	1996	210	없음	240	50	[10]	300
중 국	1964	1996	45	140	개발중	40	60	240
인 도	1970	1998	6	가능	개발중	가능	80~100	80~100
파키스 탄	1998	1998	6	가능	없음	가능	90~110	90~110
북 한	2006	2013	3	없음	없음	없음	10↓	10↓
이스라엘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가능	가능	가능	80	80
이 란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출전> CN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March 2013.

2. 중국의 핵 개발과 핵 전력

(1) 중국의 핵 개발 경과와 능력

74) 日本外務省 軍縮不擴散・科學部 編集, 『日本の軍縮・不擴散外交』, 2013年 3月, pp. 19~21 참조.

중국은 미국의 대일 핵폭탄 투하와 옛소련의 핵실험 성공을 보고, 1949년 건국 직후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중국이 핵무장을 결심한 것은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초기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암시하고, 실제로 미국이 태평양에 핵자산을 이동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3년 2월 2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반교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⁷⁵⁾

중국은 옛소련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얻고자 요구했지만, 마오쩌둥의 야심을 우려했던 스탈린은 줄곧 이를 거부했다. 1954년과 1958년 두차례에 걸쳐 중국은 타이완 진먼타오를 공격해 타이완해협의 위기가 고조시킴으로써 미·중 대립을 유도하면서 옛소련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고자 했다. 마침내 1957년 10월 중국은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후루시초프파와 스탈린파가 대립하자 후루시초프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제조기술을 옛소련으로부터 이전받는 데 성공했다.⁷⁶⁾

1964년에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32개월 후인 1967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핵보유국 가운데 원자폭탄(핵분열)-수소폭탄(핵융합) 단계를 최단기간에 통과한 기록이다. 뒤이어 중국은 1970년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하여 운반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무기국가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핵실험과 핵탄두 제조에 일부 사용하고 고농축우라늄(HEU) 16,000kg과 무기급 플루토늄(weapon-grade Pu) 1,800kg 정도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표 2> 중국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보유 량(2012)

단위: 톤(추정치)

	총 생산	재 고
고농축우라늄(HEU)	20±4	16±4
무기급 플루토늄	2±0.5	1.8±0.5

<출전> The U.S.-China Economic and Strategic Review Commission, 2012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November 9, 2012, p. 182.

(2) 중국의 핵 전력

미 과학자연맹(FAS)는 2012년 겨울 현재 140발이 지상배치 탄도탄에, 40발이 항

75) Bruce Cumings, "Korea: Forgotten Nuclear Threats", NAPSNet Policy Forum 05-03A, Nautilus Institute, January 11th,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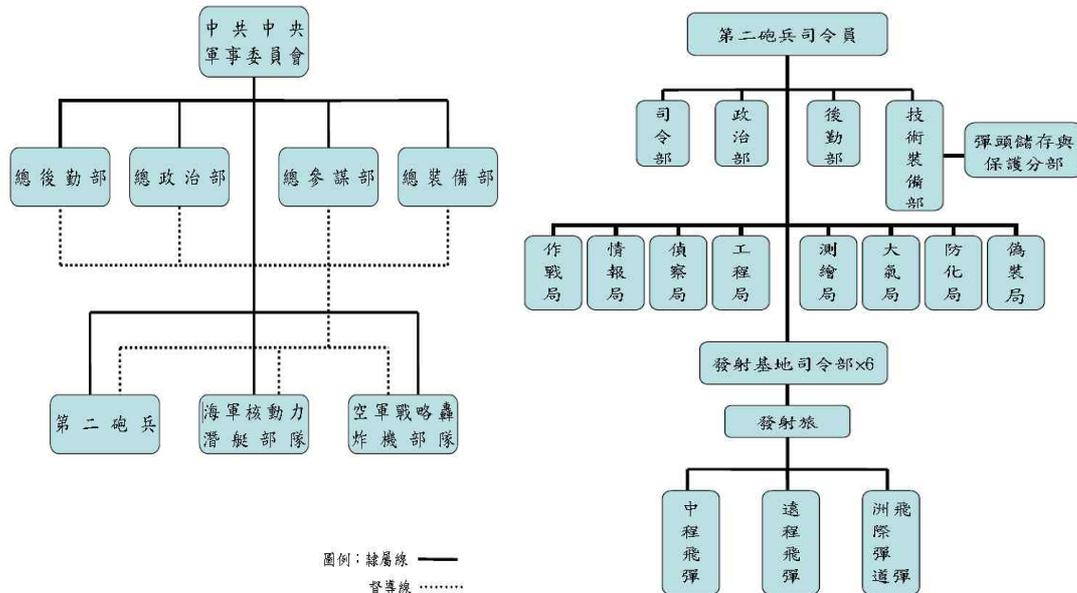
(http://nautilus.org/napsnet/napsnet-policy-forum/0503a_cumings.html 검색일 2013/4/19)

76) ユン·치안; ジョン·ハリ데이(Jung Chang, Jon Halliday, 土屋京子譯), 『マオ: 誰も知らなかった毛沢東』(下巻), 講談社, 2005, p. 119.

공기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⁷⁾ 나머지 60발 가량은 폐기를 위해 대기 중이거나 머지 않아 취역할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제안보평가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발간한 2012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년 안에 신뢰할만한 수중 핵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⁷⁸⁾

중국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지휘 통제하는 제2포병부대(약칭 二炮)를 보유하고 있다. 제2포병부대는 1966년 7월 1일 창건되었으며, 1984년 10월 1일에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제2포병부대의 사령부(사령원 魏凤)는 베이징 인근의 칭허(清河)구역에 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다. 육해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인정하고, 제2포병 사령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공군 사령원과 동급이다.⁷⁹⁾

<그림 1> 중국군 전략타격부대 및 제2포병부대 조직도⁸⁰⁾



중국 제2포병부대는 공군과 독립적으로 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군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니트맨 대륙간탄도탄(ICBM)을 운용하지만, 러시아는 전략로켓군이 공군과 독립적으로 ICBM을 운용한다. 현재 중국 제2포병은 총 7개 지상미사일기지과 1개 지하기지, 24개 여단을 운용하면서 90,000~12,000명의 병력으로 구

77) FAS

78) The U.S.-China Economic and Strategic Review Commission, *2012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November 9, 2012, p. 182.

79) “The Second Artillery Force of the PLA”, 중국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http://eng.mod.gov.cn/ArmedForces/second.htm>)

80) 張錫浩, 「中共核武發展對區域安全影響」(國立政治大學外交學系戰略與國際事務碩士學位論文, 臺灣, 2006), p. 16 및 p. 18. (<http://nccur.lib.nccu.edu.tw/handle/140.119/37044> 검색일 2013.4.6.)

성되어 있으며, 각 부대들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DF-15 (DF-3A, DF-4), 중거리탄도미사일 (DF-10), DF-21 (/21A), 대륙간탄도미사일 DF-5A, DF-31/31A, DF-41 등을 운용하고 있다.⁸¹⁾

제2포병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운반수단 DF-5A(CSS-4)와 DF-31 ICBM은 알래스카까지 사정권 안에 두고 있고, DF-31A(일명 DF-41)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중국 제2포병부대는 타이완 본섬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DF-11, DF-15 1000기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DF-21, DF-25 약 5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제51기지(사령부 선양)이다.

<표 3> 중국 제2포병이 보유한 핵탄두 운반수단

	사거리	구분	Payload/Warhead	비고
DF-21	1,800~2,500km	MRBM	P: 600kg/ W: 250~500kT	-
DF-3A	2,800km	IRBM	P: 2,000kg/ W: 1000~3,000kT	
DF-25	3,200km	IRBM	/ 3 다탄두	
DF-5A	12,000km 13,000km	ICBM	P: 3,200kg W: 3,000~5,000kT (4~6 다탄두, MIRV)	1981년 실전배치 (2단 액체연료)
DF-31/31A	8,000~10,000km	ICBM	P: 1,050~1,750kg W: 1,000kT 또는 3다탄두 20~150kT	-
DF-41	12,000~14,000km	ICBM	P: 2,500kg (6~10 다탄두, MIRV)	2007년 실전배치 이동발사대 (3단 고체연료)
JL-1/1A	2,150~2,500km	SLBM	P: 600~500kg	Xia급 잠수함 (2단 고체연료)
JL-2	8,000km	SLBM	P: 1,050~2,800kg (3~8 다탄두, MIRV)	2009년 실전배치 핵잠수함

<출전>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Matthew G. McKenzie, *Chinese Nuclear Forces and U.S. Nuclear War Planning*, The Federation of America Scientists &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ovember 2006, p. 38.

3. 일본의 핵개발 능력과 핵무장 가능성

(1) 일본의 핵개발 능력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가로서 공식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이 착실하게 핵개발 능력을 정비해 온 것도

81) 미 국방부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SRBM(1,000km 이하), MRBM(1,000~3,000km), IRBM(3,000~5,500 km), ICBM(5,500km 이상)으로 구분한다.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Dictionary of Military Term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London: Greenhill Boks, 1995), pp. 195~6.

사실이다. 일본은 1955년 12월 「원자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핵의 평화적 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1968년 사토 총리가 '핵무기의 제조·보유·도입 금지'를 약속한 '비핵 3원칙'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비핵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일본이 일찍이 핵무장을 금지한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1955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공급받기 위해 「미·일 원자력 연구협정」에 조인하였으며, 이후 「미·일 원자력 일반협정」(1958), 「미·일 新원자력협정」(1968)을 체결했다. 일본원자력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축우라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일본은 농축우라늄의 수입량 확대를 위해 1973년 「미·일 新원자력협정」을 추가로 개정 하였다.

원자력협정의 추가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 아래'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게 플루토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지만, 1977년 카터행정부 때 제정된 「핵 비확산법(NNPA)」(1978)에서 '제3국 위탁 재처리'를 금지하면서 미국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영국·프랑스에 위탁해 오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 도카이무라(東海村)에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처리할 사용후핵연료의 원재료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사전동의 문제가 발생하자 미·일 양국은 1982년부터 16차례의 협상을 거쳐 미국의 인허가 및 통제권을 30년(1988~2018년) 동안 일본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미·일 원자력협정」을 타결 지었다. 그리하여 양국 의회의 소정 절차를 마친 뒤 1988년 7월 발효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본은 농축우라늄용 원심분리기와 연간 8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은 GEKKO-XII라는 핵융합 실험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핵실험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⁸²⁾ 이 때문에 미 합동군사령부는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하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빠르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⁸³⁾

(2)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핵무장 가능성

케네츠 왈츠(Kenneth Waltz) 등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세력균형을 가져와 오히려 핵전쟁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⁴⁾ 왈츠와 같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핵 보유국가가 많아질수록 핵전쟁의 상호파멸위험을 인식한 핵보유국 사이에 '핵억제'가 성립해 전쟁위험이 오히려

82) 신성택, “핵무장 넘보는 일본의 핵능력”, 통일연구원 편 「Online Series」 12-25, 2012.

83) U.S. Joint Forces Command,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10 - Ready for Today, Preparing for Tomorrow*, February 18, 2010, p.45.

84) K.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4, No.3, September, 1990 ; K.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2, Fall, 1993 참조.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일본은 핵무장에 나설 것인가? 이 문제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원자력기본법」과 ‘비핵3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핵능력을 보유한 데 이어,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온 일본 국내의 법제도적 장치들은 하나씩 풀리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비핵3원칙’이 정부의 방침일 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아 원칙적으로 핵무장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78년 3월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 법제국장은 핵무장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전력은...핵무기이든 통상무기이든 이것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⁸⁵⁾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비핵3원칙’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헌법에 따른 금지가 아니라 정책판단에 따라 보유하지 않는다는 해석인 것이다.

다음, 2012년 6월 일본 국회가 “원자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원자력기본법」에는 일본의 원자력개발을 평화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왔으나, 「개정 원자력기본법」의 제11조와 제14조에 ‘안정보장에 이바지’한다고 원자력의 기본방향을 변경함으로써 34년만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핵무장의 법적 제약을 완화했다.

이번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한 의구심은 법안 성립과정에서 드러난다. ‘안정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는 당초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의 법안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의 요구로 추가된 것이다. 또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이후에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등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⁸⁶⁾

이번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본정부와 의회가 끊임없이 군사대국의 지향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1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수출의 길을 텃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우주기본법」(2008.5)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우주의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2012.6)을 통과시켰다. 핵능력을 갖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⁷⁾

85) 조성렬, “일본 핵정책의 이중성과 핵무장 옵션”,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pp. 158~159.

86) 이에 대해 藤村修 관방장관이 “평화이용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으며, 군사전용의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력의 안보 목적 이용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비판하고 있는 반면, 우파 산케이신문은 이를 옹호하고 있다. “「原子力の憲法」こっそり変更”, 『東京新聞』 2012.06.21. “原子力基本法 「安全保障」は不信招く”, 『朝日新聞』 2012.06.22. “原子力基本法 「安全保障目的」は不要”, 『毎日新聞』, 2012. 06.23. “原子力基本法 「安全保障」明記は当然だ”, 『産経新聞』 2012.06.24.

87) 이화영, 「일본의 우경화와 핵무장 가능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실, 2005. 9.; Emma Chanlett-Avery, Mary Beth Nikitin, “Japan’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Ⅲ. 냉전기 동북아 안보구도와 한반도의 핵문제

1. 냉전기 동북아의 안보균형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전략용과 비전략적 전구용(Theater role)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군산기지의 미 공군 제8전술전투비행단(TFW)은 미 태평양공군의 전략(SIOP)신속대응경계 임무를 띠고 390km 서쪽에 있는 중국 내 목표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 장착의 F-4F 팬텀기 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내 목표물을 겨냥한 비전략적 임무(non-SIOP role)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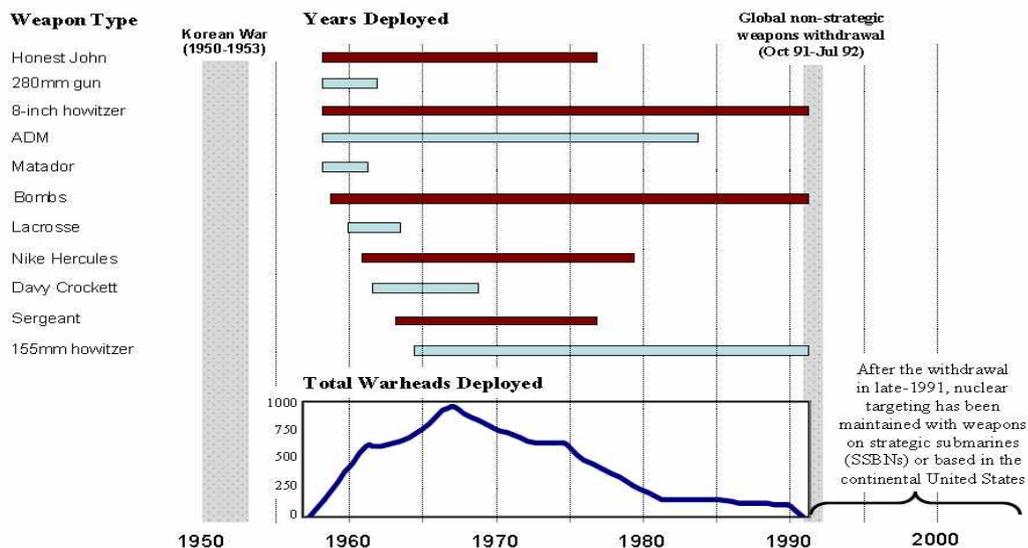
군산기지 외에도 미국은 1974년 당시 중국을 겨냥해 카데나 미 공군기지(일본), 클라크 미 공군기지(필리핀) 세 곳에 중국을 겨냥한 3개의 미공군 전술전투비행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군산기지만이 신속대응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군산·카데나·클라크 3개 공군기지 모두 “주요 전략 비경계(major SIOP non-alert)”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오키나와를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1972년 6월 오키나와 내 핵무기를 완전 철수한 뒤에도, 미 공군 제18전술전투비행단은 카데나기지에서 전략 비경계 역할에 따른 핵타격작전을 계속해 왔다. 이처럼 카데나기지에서 전략적 임무가 지속된 것은 미·일 정부 간에 위기사 핵무기의 재반입을 허용하는 외교협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랜스 지대지 미사일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재래식탄두만 비축하고 있었고 핵탄두는 광에 보관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의 전쟁계획상 이 지역에서 많은 수의 핵탄두가 필요했지만, 이것을 동맹국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7년 미국은 필리핀에 배치한 핵무기 140기를 철수했고, 한국에서도 군산기지와 오산기지에 배치했던 호네스트존, 나이키 허큘러스, 서진트 미사일체계를 철수했다. 그 결과 남한지역 내 배치됐던 미 핵무기의 수는 1976년의 540기에서 1985년에는 150기로 줄어들었다가, 1991년 12월까지 모두 철수됐다.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된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11종류의 핵무기 시스템을 배치했고 주한미군 기지 16곳에 핵무기가 수송 및 배치됐다. 특히 군산 미 공군기지는 1977년까지 최소한 핵탄두 453개, 1983년에는 249개, 1985년에는 151개가 배치되어 있었다.(<그림 2> 참조)

Interest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19, 2009.
88) Hans M. Kristensen,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Nuclear Brief* September 28, 2005. (<http://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검색일 2013년 4월 1일)

<그림 2> 한국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철수⁸⁹⁾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수량은 1960년대 후반에 정점에 이른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고 뒤이은 1967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971년 키신저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으로 시작된 미·중 화해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핵무기만 남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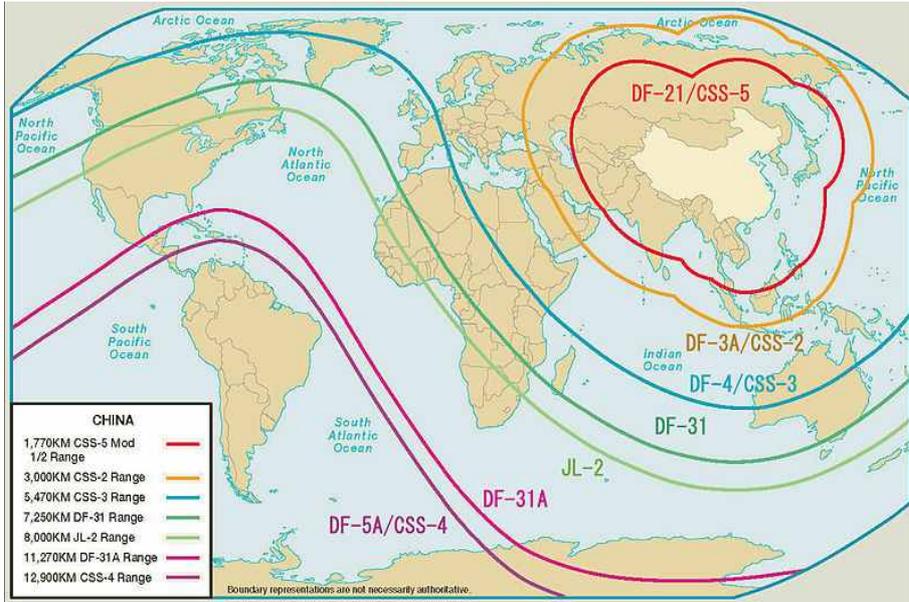
하지만 그 이전에는 중국군이 동북아 미군에 맞설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등에 상당한 수량의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한 철수가 1958년 10월에 완료됐으므로, 한반도 내의 중국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와 소련, 중국이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어 이들과의 군사력 균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⁹⁰⁾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미국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내에 전술핵무기의 배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그림 3> 참조) 그 뒤 미·중 양국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핵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주한미군의 신속배치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89) Hans M. Kristensen, 앞의 글.

90) 조성훈,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도서출판 선인, 2012, p. 175.

<그림 3> 중국인민해방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출전> "PLA ballistic missiles range.jp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2013.4.6.)

2.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국의 핵개발 시도의 연관성⁹¹⁾

(1)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의 안보위기의식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을 당시 남한에는 미군 8개 사단(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약 32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 이듬해인 1954년 3월부터 연말까지 미 제45사단과 제40사단, 제25사단, 제3사단이 잇달아 철수해 1955년에는 8만 5,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추가 감축으로 1957년에는 미 육군 1군단 산하의 2사단과 7사단 병력 7만 명 정도만 남았다. 중국군이 조중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남한에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검토했다. 주한미군은 1958년 남한지역에 소형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280mm 대구경의 원자포(atomic cannon) 6문을 반입했다.⁹²⁾

핵무기가 배치된 뒤 주한미군의 수는 더욱 줄어들어 1959년에는 5만 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1950년대 후반 일본 내에서 전국적인 반핵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점령하고 있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배치해 놓았던 핵무기를 남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한에 새로 배치한 핵무기와 미 7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통해 남한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⁹³⁾

하지만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크게 흔들렸다. 미국은 중국의 핵보유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공산국가들이 미국의 의지를 오판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존슨 미 대통령은 “미국은 핵을 이용한 어떠한 협박에 대해서도 비핵국가들을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공언했다.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은 핵잠수함과 핵무장이 가능한 B-52 폭격기를 꺾에 배치했다. 그리고 남한에는 핵지뢰와 핵탄두를 장착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 포병부대 등을 배치했다.

그 뒤 주한미군의 병력은 줄곧 6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직후인 1971년에 미 7사단을 중심으로 2만 명의 미군이 철수하여 4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카터 미 대통령(1977~1981)이 당선되어 주한미군 6,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안이 발표되었다가, 최종적으로 3,000명이 감축되었다.⁹⁴⁾

(2) 한국의 핵개발 시도

91) 조성렬, 앞의 책, pp. 37~39에서 발췌 요약. 각주는 그대로 두었다.

92) 외교통상부, 「경무대와 주한미대사관 교환문서(1958년)」 2006년 2월 5일 (『연합뉴스』 2006년 2월 5일에서 재인용).

93) 김일영,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p. 109.

94) 주한미군은 미 2사단의 2개 여단과 미 제7공군을 합하여 약 38,000 여명이 주둔해 왔으나,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을 이라크전쟁에 차출하는 등 12,500명을 줄여 27,000명 선에서 유지되었다. 그 뒤 28,500명으로 재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축되자,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론과 비밀리에 이루어진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책을 찾으려고 했다. 베트남이 함락된 직후인 1975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⁹⁵⁾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미 CIA는 박정희 정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의 철수논의를 막고 자주국방을 강조함으로써 남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 때문에 프랑스가 재처리시설을 한국에게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⁹⁶⁾ 핵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⁹⁷⁾ 한국의 핵무기 연구프로그램은 NPT가 발효된 1975년 4월 23일에 사실상 종료되었다. 당시 한국 내에서는 노틸러스 연구소는 “남한이 핵 프로그램을 밀고 나간 것은 당시 미 정부의 대한(對韓) 방위의지가 불충분하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음이 이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⁹⁸⁾

그 뒤 한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의 핵물질 채취실험이 있었다. 1982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연구원들이 몇 m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측에게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 대신 원자로 기술의 이전과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해 주었다. 그 뒤 1983년과 1984년에도 일부 한국 KAERI의 과학자들이 재처리 영역에 해당되는 사용후연료의 조작과 관련된 화학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이 2004년에 드러났다.

이 실험들은 2004년에 돼서야 IAEA에 보고되었다. IAEA는 2004년 11월 11일 한국의 핵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한국정부가 핵활동을 IAEA에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고 규정하였으나, 이 물질들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IAEA이사회는 공식적으로 협정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도 회부하지 않았다.⁹⁹⁾

3. 북방삼각구조의 해체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1)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5) *Washington Post*. 12 June 1975.

96) GlobalSecurity.org, “South Korea Special Weapons.”

(www.globalsecurity.org/wmd/world/rok/index.html 검색일 2013년 4월 19일)

97)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June 1978, declassified for release, October 2005, p. 1.

(http://nautilus.org/publications/essays/napsnet/reports/CIA_ROK_Nuclear_Decision_Making)

98) Peter Hayes and Chung-in Moon, “Park Chung Hee, the CIA, and the Bomb”, September 23, 2011. (<http://nautilus.org/>). (검색일 2011/09/26)

99) 류광철, 이상화, 임갑수,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2005, pp. 369~373.

북한은 1957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배치계획을 감지하고, 이미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 핵을 반입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서한을 남한 국회와 국민들 앞으로 보냈다.¹⁰⁰⁾ 북한외무성은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한반도를 핵 무장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계속 늘어나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000여 개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¹⁾

이처럼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북한은 1957년부터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자 1959년 9월 소련과 「조·소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핵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뒤 1965년 6월 영변지역에서 소련에서 도입한 연구형 원자로(IRT-2000)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뒤 북한은 자체 기술로 1986년 영변 5MW 원자로를 완공하고 재처리시설을 착공하면서 핵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은 미국이 남한 내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지상 및 해상발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11월 5일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명령 64」를 승인함으로써 남한지역에 배치됐던 모든 전술핵무기들이 미국 본토로 철수됐다.¹⁰²⁾ 이에 맞춰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디에도 핵무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를 근거로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 북한 핵 전략노선의 전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배경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냉전종식 이후 북한의 안보우산이 되어주던 북·중·러의 북방삼각구조가 사실상 붕괴한 데 있다. 북한은 1990년과 1992년에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냉전시기의 북방삼각구조가 깨진 반면, 자신들이 추진했던 북·일 수교협상과 대미 협상이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면서도 적대적인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병행했다.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북·미 수교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북·미 공동성명」

100) 『로동신문』 1956년 11월 8일. (김일영,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p. 116에서 재인용).

101) 조선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 『조선중앙통신』 2000년 4월 21일.

102)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실,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 2005년 10월 9일(『연합뉴스』 2005년 10월 9일에서 재인용).

(1993)과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1994),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2000),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 등에 합의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1년 12월 북한을 이란, 이라크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담은 「핵태세보고서 2001 (NPR 2001)」을 발표하자 북한은 크게 반발하면서 핵무기의 개발을 서둘렀다. 2003년 6자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미국측 수석대표 켈리 동아태차관보가 '리비아 해법'을 제시했지만, 선핵포기 방안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 개최도니 4차 6자회담에서 마침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수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교환하는 내용의 「9.19공동성명」(2005)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이후 핵개발을 협상-보유 양면카드에서 보유 쪽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노선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¹⁰³⁾ 특히 2009년 1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이를 운반할 장거리로켓의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4월에 「핵태세보고서 2010(NPR 2010)」를 발표하면서 NPT 탈퇴국가 및 위반국가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외한다는 '제한적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유지한 점도 일정하게 북한의 전략적 노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대북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유지한 데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들어 핵무기 보유를 굳힌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일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과 카다피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예로 들며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이라크, 리비아)에 대량파괴무기가 없음을 확인하자 마음 놓고 침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⁴⁾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IV.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

1. 북한의 핵실험과 '사실상' 핵무기국가화

(1)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핵전력 건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지구궤도 진입 성공으로 세계 10번째로 스페이스 클럽 국가

103) 함형필,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13년 4월 24일.

104) "미제에게 통하는 것", 『조선신보』 2013년 4월 17일.

가 된 데 이어 나가사키급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능력을 가진 북한을 '핵무기국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전인 2009년 2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아브라모위츠 전 미국 동아태차관보는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와 '핵무기를 가진 국가(state with nuclear weapon)'를 구분하면서, 북한을 후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북한을 NPT상의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구분지음으로써, 북한을 핵무기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⁰⁵⁾

북한을 '핵무기국가'가 아닌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규정할 경우, 국제정치적으로는 몰라도 국가안보전략의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일정한 폭발력을 보여준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상, 이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나 핵실험보다 핵전력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핵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함께 북한군의 핵 지휘통제체제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면, 북한은 대륙간 탄도모미사일에 탑재할 만큼의 소형화 핵탄두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와 미 국방정보국(DIA) 사이의 평가가 일치하지 못한다. 그러나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이 ICBM에는 탑재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노동미사일에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⁰⁶⁾

<표 4>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화성5)	SCUD-C (화성6)	노동	무수단 (IRBM)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신형미사일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6,700이상	미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추정)	미상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중	개발중

<출전>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년 12월, p. 292.

다음, 북한군의 핵 지휘통제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북한군사전문가 버뮤데즈(J.S. Bermudez)¹⁰⁷⁾나 국방부의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지도국'이 소개되었고,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와 2012년 3월金正은의 전략로켓사령부 방문 직후 필자가 이를 분석 소개한 글이 있다.¹⁰⁸⁾ 버뮤데즈가 옛소련의 전략로켓군을 모델로

105) 이미숙, “미 민간방북단장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 단독인터뷰”, 『문화일보』 2009년 2월 9일.

106) David Albright,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February 13, 2013.

(<http://38north.org> 검색일 2013.2.13.); 함형필,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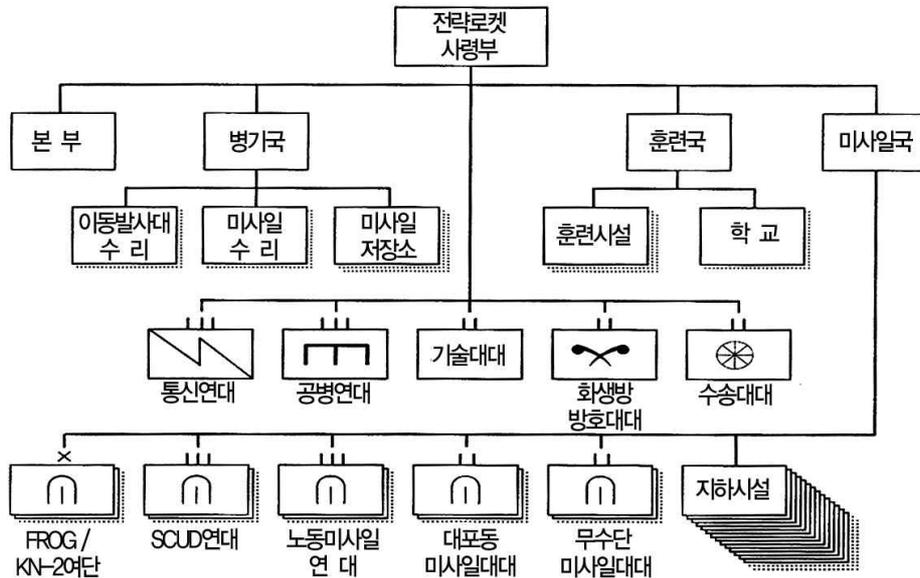
107) Joseph S. Bermudez, "Moving Missiles", *Jane's Defense Weekly*, 3 August, 2005, p. 23.

108) 조성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미사일 지도국”, 10.9 한반도와 핵, 도서출판 이룸, 2006, pp. 27~43 및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pp. 105~108.

추정한 북한군의 전략로켓사령부의 구조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군사전략을 기존의 재래식전력에서 점차적으로 핵전력을 중심으로 재래식전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북한군의 전략로켓사령부는 모든 탄도미사일부대를 지휘·통제할 군단급으로 2004년에 창설된 미사일지도국에서 유래한다.¹⁰⁹⁾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는 핵전략 차원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북한군 전략로켓사령부 조직도¹¹⁰⁾



전략로켓사령부는 미사일의 공급, 운반발사대(TEL), 이동발사대(MEL), 그리고 화기통제장비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부대를 지휘통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무수단리와 깃대령 등 여러 곳에서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전략로켓사령부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략로켓사령부의 지휘·통제체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전략로켓사령부 산하에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사단을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사일 사단은 사거리가 2,500~4,000km가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관리·운영하며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전시 증원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와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¹⁾ 이 신형 중거리미사일은 옛 소련의 해상 발사용 탄도미사일

109)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12년 3월 2일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3일.

110)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p. 105.

111) 『연합뉴스』 2010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년 12월 31일, p. 28.

R-27(SS-N-6)을 개조한 것으로, 잠수함선박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워 사거리 제약을 상당 정도 극복할 수 있어 대포동 2호보다도 미국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¹²⁾

2010년 10월 10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미사일 종합체'라고 명명한 미사일 부대가 등장했다. 특히 2011년 12월 북한은 이 중거리 미사일(IRBM)의 변형인 이동식 미사일로 개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¹³⁾ 2012년 3월 3일 김정은이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한 이후부터 전략로켓사령부의 존재가 공식화되었다. 2013년 3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1호 전투군 무태세'의 돌입을 선언하면서 북한이 대남위협 때는 장거리 포병부대를 언급한 반면, 미국을 위협할 때는 전략로켓군부대의 이름을 내걸고 있어 주목된다.¹¹⁴⁾

(2)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북한은 장거리로켓 은하3호의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나름대로 성공리에 맞춘 뒤, 2013년 3월 31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병진노선'을 내걸었다. 이러한 병진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내걸면서 핵무장이 경제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정은 제1비서는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면서,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북한은 4월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새로운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을 채택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는 것을 법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으로, 헌법에 이어 북한 국내법적으로 자신의 핵전략과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뒤이어 4월 2일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112) Steven A. Hildreth,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January 20, 2009, pp. 4~5.

113)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Issue Brief: An Overview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December 13, 2011. (<http://www.ncnk.org/resources/briefing-papers/all-briefing-papers/an-overview-of-north-korea-s-ballistic-missiles>, 검색일 2011/12/15)

11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데 대한 전략적인 노선에 따라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동을 중지하고 일부 불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 정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냉각시설을 다시 설치한 뒤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므로, 여기서 새로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최근 논설에서 “앞으로 우리와 미국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한 회담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명백한 자신들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¹¹⁵⁾ 이처럼 북한이 대남, 대미 핵위협과 함께 ‘병진노선’을 내건 것으로 볼 때, 적어도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병진노선’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김정은 체제가 표방했던 ‘인민생활의 향상’을 꾀할 수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이 노선이 안고 있는 딜레마 때문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스스로 CNC 산업혁명 등을 통해 자력갱생을 꾀하고자 할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사실상의 핵무기국가 북한’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¹⁶⁾

2.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 변화와 확장억제력 제공

(1) 미국의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북한위협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금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자 1시간 뒤인 새벽 1시 45분(현지시간)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북한은 당초 발표한 대로 2월 22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1, 2차 북핵실험 때와 3차 북핵실험 때의 위협인식이 달리 표현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직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똑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고 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튿날 존 케리 국무장관도 나세르 주대 요르단 외무장관과 회담을

115)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20일.

116) 조성렬(2012), 앞의 책, pp. 112~114.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의 핵무기·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은 이란과의 국제커넥션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인 2월 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북한-이란 커넥션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는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들이 잇달아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 문제를 제기하였다. 2월 12일 오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퇴임사에서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국가와 지속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다.....모두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월 13일 3차 북핵실험과 관련해 “이는 확산에 관한 문제이자 이란과 연관된 문제”라며 “(이란과 북한은) 핵확산 문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으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1기 때의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4월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미국의 대응 확장억제력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에 대해 핵억제력 확보방식으로는 △남한의 핵무기 보유, △미국 전술핵무기의 남한지역 배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¹¹⁷⁾

하지만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존의 국제 핵질서에 대한 전면 도전이 되는 것으로,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다음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핵에 대한 의존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핵태세보고서2010 (NPR 2010)」에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⁸⁾

현재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대북 억지력 제공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MD)에 기초한 확장억제를 추구

117) 조성렬(2012), 앞의 책, p. .

118) DoD,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pp.4-6.

하고 있고, 상황관리 및 통제(escalation control)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는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과 탄도미사일 방어(MD) 능력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협력하기로 하고, 국장급의 '확장억제력 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신설한 상태이다.¹¹⁹⁾

현재 한·미 양국은 대북억제와 제3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 3월 키리졸브 훈련기간에만 세 차례나 B-52 전략핵폭격기를 동원해 투하연습을 실시하였고, B-2스피릿폭격기와 최첨단 F-22스텔스전투기를 한반도로 출격시켰다. 또한 핵잠수함과 첨단 구축함,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SBX-1(해상기반 X-Band 레이더)까지 투입하였다.

<표 5> 핵우산과 확장억제력 개념의 비교

	기본개념	장비·무기
핵우산	3元전략체계(Triad)	전략 핵폭격기(Bombers) 잠수함발사 핵미사일(SLBMs) 대륙간 핵탄도미사일(ICBMs)
확장 억제력	新 3元 전략 체계 (New Triad)	
	△ 공격체계	○ 핵무기: Bombers, SLBMs, ICBMs ○ 재래식:
	△ 적극 및 소극 방어	○ 미사일방어(MD) 체계 ○ 핵시설의 방호체계
	△ 유연한 국방인프라	○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RRW)프로그램, 10여개 주에 산재한 핵무기 공장과 시설들의 리모델링

그밖에도 지난 3월 22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때 한미 연합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과 한국군의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달리, 한미가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없던 것을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는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북한 핵보유의 전략적 의미와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도의 구상

119) 이주형, “북핵 등 대비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 『국방저널』, 2010년 11월, pp.8-9.

(1)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국가화의 전략적 의미

북한은 2013년 1월 24일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이어 2월 12일의 외무성 성명에서도 3차 북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2001년과 2010년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자국을 핵선제타격의 대상명단에 올리는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핵실험이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이 허용하는 정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¹²⁰⁾

최근 북한은 대미, 대남 핵위협을 통해 단지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의지까지도 갖고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고 있다.¹²¹⁾ 최근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벌인 군사적 위협행동들은 스스로를 '사실상' 핵무기국가 지위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가 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될 경우 동북아 안보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냉전시기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옛소련이 전략적 핵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재래식 전력 및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와 중국,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지역적 군사력균형을 이루었다.

냉전이 끝나고 중국의 핵전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한·미·일 남방삼각이 포진해 있고 러시아·중국의 핵우산 속에 북·중·러가 대치하는 탈냉전기 안보구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구도는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지원 없이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을 통해 독자적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장렌구이(張璉瑰)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본토에 미치는 위협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중국에 미치는 위협은 지척에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6자회담 탈퇴 및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은 모두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핵협상을 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¹²²⁾

(2)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도의 구상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 노력은 한계

120)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1) 이 근, “한반도의 세 가지 ‘신뢰 게임’”, 『창비주간논평』, 2013년 3월 20일.

122) 張璉瑰, “朝擁核威脅不到美本土 對中國近在咫尺”, 『環球時報』, 2013年 3月 20日. 이와 관련해 장렌구이 교수는 2010년 북·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비확산을 약속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문제를 묵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0年朝美曾討論過, 在北韓保證不進行核武器擴散, 並銷毀有可能威脅美國本土的遠端導彈的情況下, 美國默認其核國身份問題”.

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12일 한미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9.19공동성명'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뒤늦게나마 한반도평화체제와 북미수교, 동북아다자안보체제와 같은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 수교와 같은 안보와 안보의 거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볼 수 있다.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이다”라고 밝히면서 ‘조건부’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¹²³⁾ 이들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의 3가지 조건은 △대북 제재결의 해제 및 적대시정책의 중단과 사죄, △소극적 안전보장(NSA)의 요구,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 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비핵무기지대화는 “당면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시도를 단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끝으로, 최근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모턴 헬퍼린(Morton Halperin)은 2013년 4월 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위기를 타개하려면 동북아 안보를 위한 포괄적 협정을 국제조약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계정상화, 상시협의회 구성, 북한의 핵불능화와 비핵무기지대 조성, 대북 에너지 원조와 제재해제 등을 담은 ‘국제조약 방식의 동북아 포괄적 안보협정’을 제안했다. 이는 6자회담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선 한·미·일이 합의한 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¹²⁴⁾

1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124) Morton H. Halperin,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repared for the April 3, 2013 conference “South Korea and the U.S. Pivot to Asia” at Wilson Center.

<표 6> 최근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게임 현황

북 한	한국, 미국
12.12. 은하3호 로켓 발사 2.12. 제3차 핵실험 3. 5. 정진협정 백지화 선언, 북한군-유엔사 직통전화 차단 3. 8. 조평통, 남북불가침합의 전면폐기 3.11.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 차단 3.20. 외무성 "B-52 재출격시 군사적 대응할 것" 3.26.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발표 3.27. 서해지구 군 통신선 차단 3.29.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 소집, 전략미사일부대 사격대기 지시 3.30.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개성 공단 폐쇄 가능" 4. 2. 영변원자로 재가동 발표 4. 3. 개성공단 입경금지 조치 4. 4. 최고사령부, 미 핵타격 최종승인,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 동해이동 4. 8. 김양건, 개성공단 잠정중단 발표 4. 9. 아태위, 남한내 외국인 소개 권고 4.16.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발표	1.23.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 3. 1. 한·미연합군 독수리훈련 개시 3. 6. 韓합참, 북한 도발시 지휘세력 응징 3. 8.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 3. 8. 미국 B-52 폭격기 폭격 훈련 3.11. 키 리졸브 훈련 실시(~21) 3.15. 미 국방, 美서부지역 MD시스템 추가배치 발표(30기→44기) 3.19. 미국 B-52 폭격기 폭격 훈련 3.20. 미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샤이엔 부산기지 입항 3.22.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도발원점+지원·지휘세력타격) 3.25. 미국 B-52 폭격기 폭격 훈련 3.28. 美, B-2 스텔스폭격기 한반도 공개 출격 및 폭격훈련 3.31. 미 F-22 전투기 오산기지 배치 4. 3. 미국 언론 SBX-1, 이지스급 구축함 동해 인근 배치 보도 4. 4. 김관진 국방, 北도발시 강력응징 4. 4. 미국, 고고도방어(THAAD)시스템 괌 배치 언급 4.10. 한미연합사, 위치콘 2로 격상

V. 한국의 대응방향

1. 한국의 핵능력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

현재와 같은 동북아 안보질서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핵균형을 이룬 가운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 한국이 전선국가, 일본이 기지국가의 역할을 수

행해 왔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공동의 동맹으로 공유하면서 사실상 전략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라는 심리적 간극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간극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 패권 아래에서 타율적으로 봉합되어 있다.¹²⁵⁾

한국으로서는 핵무기국가 중국의 핵전력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못지않게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의 우려를 내세워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1970년대 핵개발 의혹 때문에 불명예스럽게도 전략적 핵우려국가(Countries of Strategic Nuclear Concern - South Korea)의 명단에 한국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나, 최근 한국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1974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미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한 불평등협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대국일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원전 수출에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 자체에서 만들어진 원전 방사능쓰레기의 처리에서도 곤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핵무기 제조능력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미 합동군사령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책결정만 이루어진다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신속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데서도 미국측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¹²⁶⁾ 하지만 한국의 전력공급수요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6%, 2017년 42%(전망치)로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겨가며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¹²⁷⁾

125) 빅터 차는 이를 가리켜 ‘유사동맹’이라고 부른다. 빅터 D. 차 (김일영, 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p. 21.

126) U.S. Joint Forces Command, *op. cit.*

127) David Adam Scott, “South Korea’s Global Nuclear Ambi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March 22, 2010.

<표 7> 미·일 및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비교¹²⁸⁾

항 목	미·일 원자력협정(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평화목적으로 한정	한정	한정
20%이상의 우라늄 농축(국내생산)	미국 동의 필요(6조) (20%미만의 경우 동의 불필요)	언급 없음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 저장	양국합의 *(3조)	언급 없음
재이전	양국합의 *(4조)	미국 동의 필수
재처리, 형상 및 내용의 변경	양국합의 *(5조)	공동 결정
상기 3항목(*)에 대한 상호 합의요건 규정	장기성, 예견성 및 신뢰성의 기초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높이는 형태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11조)	언급 없음

2. 북핵문제의 대안: '한반도 비핵화'에서 '동북아 제한비핵지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동북아시아나 한반도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12일에 열렸던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9.19공동성명」의 부활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국한된 내용이어서 현재 북한이 내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북아 전략적 핵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서 핵무기국가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잠재적 핵보유국가인 일본의 핵능력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회의(1트랙)나 6자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동북아 비핵지대(NEA-RNFZ) 구상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¹²⁹⁾

지금까지 제안된 방안들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¹³⁰⁾, 미국과 중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

128) 조성렬,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책보고서, 2009년 7월13일.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intr&boardId=7ef89dd7a36ad36474f2e09&pkey=5, 검색일 2013년 4월 1일)

129) Hiromichi Umebayas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NEA-NWFZ)”, April 2004.; Peter Hayes and Richard Tanter, “Key Elements of Northeast Asia Nuclear-Weapons Free Zone (NEA-NWFZ)”, Nautilus Institute, November 13,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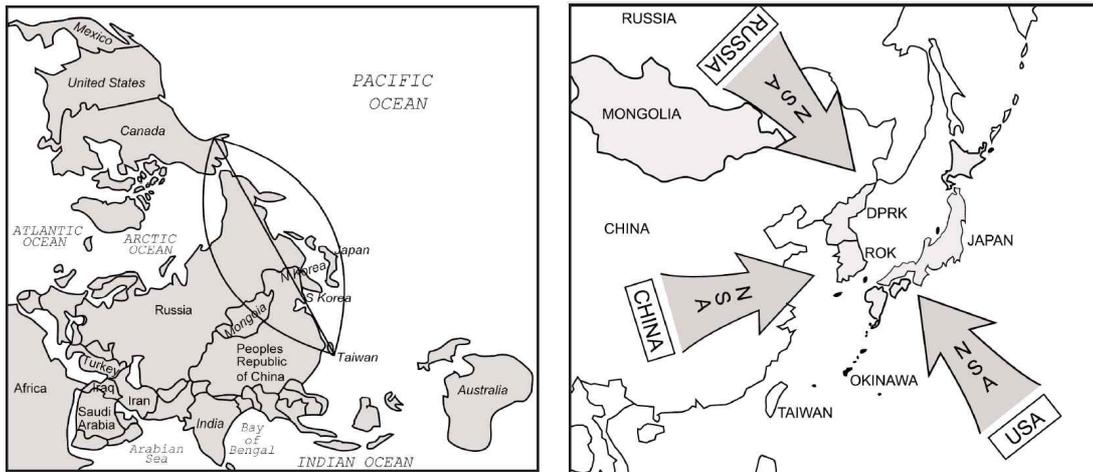
130) 전성훈,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 비핵지대 창설』, 통일연구원, 1999; Hiromichi Umebayas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NEA-NWFZ)”, *Peace Depot &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Briefing Paper*, April, 2004; 이삼성, 우매바야시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출판사, 2005; 김승국,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한국학술정보, 2008; Chung-in Moon, “The Six-Party Talks and building a nuclear-free Northeast Asia”, East Asia Forum, May 20th, 2012; Peter Hayes, Roger Cavazos, “North Korean and US Nuclear Threats: Discerning Signals from

들의 책임도 일정 정도 지우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바로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국과 일본마저 핵무장을 영원히 포기토록 하는 방식이다. 동북아 비핵지대(Limited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 LNWFZ - NEA) 구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구상은 존 엔티콧(John Endicott)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한반도의 DMZ를 중심으로 반경 약 2,000km의 원을 그려 그 속을 비핵지대로 한다는 원형지대 제안이다. 그 뒤 이 제안은 비핵지대 안에 미국영토가 포함되어야 균형이 잡힌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미국의 알래스카 일부가 포함된 타원형지대로 확대한 비핵지대 구상을 발전시켰다.

제2구상은 우메바야시가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과 일본 3개국이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NPT상의 핵무기국가인 미국·러시아·중국이 소극적 안보보장(NSA)을 포함한 비핵지대 존중의 의정서에 참가하여 이를 보장한다는 제안이다. 이 구상은 기존 핵무기국가의 핵군축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NPR에서 제외했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두 가지 구상



(출처) Hiromichi Umebayas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April 2004, pp. 4~5.

핵국가와 비핵국가의 형평성이나 북한의 핵군축 주장을 고려하면 제1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거 1.5트랙의 LNWFZ-NEA 회의에서 보여준 미, 중, 러의 태도를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현실적이다. 당시 제1구상의 초안(원형 비핵지대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였으며 미국도 미 핵전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Noise", The Asia-Pacific Journal, April 09, 2013.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¹³¹⁾

현재 전 세계적으로 「틀라텔로코 조약」(라틴아메리카), 「라로통가 조약」(남태평양), 「방콕 조약」(동남아시아), 「펠린디바 조약」(아프리카) 등 네 개의 비핵지대가 존재한다. 이들 세계 4대 비핵지대의 공통점은 첫째 비핵지대 국가들의 핵무기 부재와 비확산 약속, 둘째 핵무기보유국들의 비핵지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 약속, 셋째 조약준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등 세 가지이다.

최근 피터 헤이즈, 로저 카바조스는 우메바야시가 제안한 제2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LNWFZ - NEA의 성립조건으로 △전쟁상태 종식, △상설 안보위원회 창설, △상호비핵선언, △핵 및 기타 에너지 지원, △대북제재 해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¹³²⁾ 이러한 구상은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4.18)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전쟁상태의 종식, 핵 및 기타 에너지 지원, 대북제재 해제 등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 절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LNWFZ-NEA의 창설을 위한 회담은 큰 틀에서는 6자회담에서 가능하지만, 문제해결의 순서상 새로운 회담의 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러한 방식의 핵군축에 동의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지대에 관한 협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북·미회담과 남북 및 북·일 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 구상은 오랫동안 1.5트랙에서 논의가 축적된 것인 만큼, 북한이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의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1)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LNWFZ-NEA) 구상의 경과에 대한 소개는 다음을 볼 것. 조성렬,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국제문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26호), 2007 여름, pp. 28~30.

132) Peter Hayes, Roger Cavazos, “North Korean and US Nuclear Threats: Discerning Signals from Noise”,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1, Issue No. 14, No. 2, April 8, 2013.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및 실효성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제기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거리 로켓발사('12.12.12)와 3차 핵실험('13.2.12)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87호('13.1.23)와 대북제재 결의 2094호('13.3.8)가 채택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제1차 핵실험('06.10.9)을 계기로 채택된 결의 1718호('06.10.15)와 2차 핵실험('09.6.13)에 따른 결의 1874호를 포함하여 누적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음.
- 유엔의 거듭된 제재조치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강력하게 반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 역시 엇갈리는 상황
 - 새로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 조치' 완화 등 대북경제제재 처리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본 발제문에서는 기존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기초로 대북경제제재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함.

2.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현황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중심으로 추진됨.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안

제재안	년도	배경	주요내용
1718호	2006 (10.14)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무기, WMD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요구 ▪ 6자회담 복귀요구
1874호	2009 (6.1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 10·3합의 이행 촉구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동참요구 ▪ UN 회원국의 1718호 이행 촉구
2087호	2013 (1.22)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2012.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 ▪ 대량의 현금(bulk cash)에 대한 언급 ▪ 무기 개발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의 수출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조항 삽입
2094호	2013 (3.8)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국내 대량의 현금(bulk cash)이 북한으로 유입·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 ▪ 앞서 언급한 조치를 회피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무역 및 공적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말것을 결정. ▪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국 자국 내의 지사, 대표부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

-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는 2006년 시행된 1718호에 구체화됨.
 - 유엔의 재래식무기 등록대상에 포함된 무기 및 미사일 핵 관련 프로그램 일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규제를 권고(제8항).
 - 이러한 제재안은 1874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
 - 2013년에 발효된 두 건의 제재 결의안은 'bulk cash'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의 <표 2>와 같이 구체적인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으로 구체화되었다.

<표 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단체·개인 현황

□ 단체 현황 (19)

지정일	단체명	지정 근거
09.4.24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주요 무기 거래 단체 /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장비 주요 수출업체
	조선용봉총회사(KRGC)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 / 군수관련 판매 지원
	단천상업은행	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주 금융단체
09.7.16	남천강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산하단체 / 핵관련 장비 조달
	Hong Kong Electronics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해 WMD 관련 자금 운용 지원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원자력총국	핵프로그램 주관 부서
	조선단군무역회사	제2과학위원회 산하 / 방산물자·기술 조달
12.5.2	압록강개발은행	단천상업은행과 연계
	청송연합	무기 생산 및 수출 업체
	조선흥진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역활동을 위해 사용·운영하는 회사
13.1.22 (결의 2087호 부속서에 포함)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2012.4.13, 12.12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휘
	동방은행	청송연합의 무기 관련 거래 지원 /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의 자금 이전
	조선금룡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조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별칭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자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리해 수송 지원
13.3.7 (결의 2094호 부속서에 신규 포함)	제2자연과학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기 관련 연구 및 개발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조선용봉총회사(KRGC)의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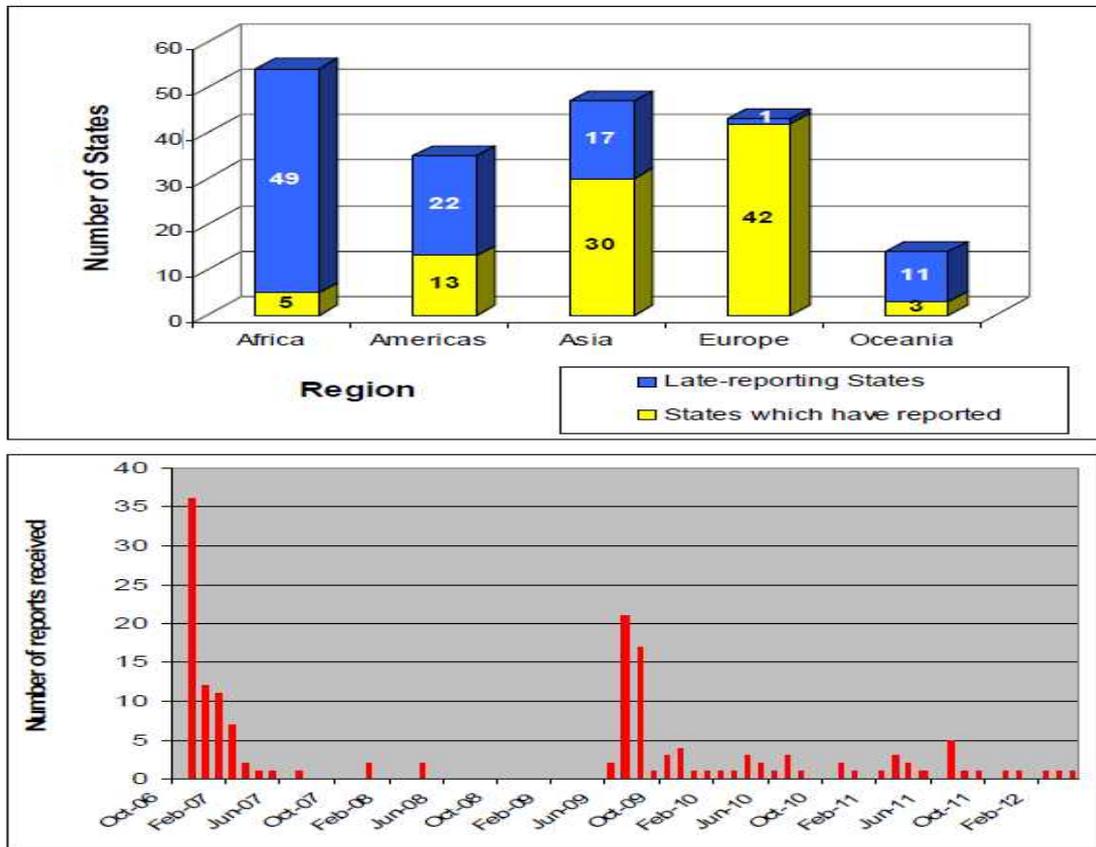
□ 개인 현황 (12)

지정일	성명	소속 및 직책 (제재대상 지정 당시 기준)
09.7.16	윤 호 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 제 선	원자력총국장
	황 석 화	원자력총국 간부
	리 흥 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 유 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조선용봉총회사) 간부
13.1.22 (결의 2087호 부속서에 포함)	백 창 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 명 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2012.4.13, 12.12 발사 당시 발사센터 책임자
	라 경 수	단천상업은행 관리
	김 광 일	단천상업은행 관리
13.3.7 (결의 2094호 부속서에 신규 포함)	연 정 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고 철 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문 정 철	단천상업은행 관리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3. 4. 20)

-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존재함.
 - UN은 '2012년 UN 결의안 1874호에 따른 2012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몇몇 제재 이행국들의 성실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함.
 -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의 비율이 48%에 그치고, 제재안 결의 이후에는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¹³³⁾

<그림 1> 회원국 혹은 지역에서 대북한 제재관련 보고 현황



출처: UNSC, Report of the Panel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of resolution 1874(2009), p. 22.

-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효과가 미흡한 이유는,
 - 첫째, 중국의 비협조로, 이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사치품 교역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133)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p. 160.

- 둘째, 강제력의 부재로, 제재 이행 회원국들에게 강제조항(decide)은 1718호 이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몇몇 부분(특히 미사일, 핵관련 프로그램)에만 있을 뿐임.

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는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립 속에서 제재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됨.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크게 무역제재와 투자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북한과 관련한 무역제재는 수입 제한 조치, 최혜국 대우 금지, 일반특혜관세 제도 적용 금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 제한 조치들은 해제된 상태임.
 - 최혜국대우 금지 조항의 경우에는 북한제품의 대미 수출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함. 미국이 현재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Column 2 관세는 Column 1 관세(WTO가입 국가 또는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보다 최소 2배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수준이고 이는 단가상 30~50% 정도 불리한 상태임.¹³⁴⁾
 - 또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적성국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의 제재를 받고 있음. 이는 미국기업에 대해 북한에 대한 투자나 금융거래를 금지시킴.
 - 또한 수출관리법, 수출관리규정은 대북투자를 위한 설비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함.

134) 무역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를 참조.

<표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관련 법령

년도	제재 원인	제재 관련 법률(근거)	비고
1950. 6.28	한국전쟁	수출통제법	▪ 1969년, 1979년 수출관리법으로 변경
1950.12.17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	적성국교역법	▪ 해외자산통제규정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 제재
1961	공산주의 국가 원조금지	대외원조법	▪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명문화
1986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수출입은행법	▪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보험, 신용 제공을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
1988. 1.20	KAL기 폭파로 인한 테러지원국 명단 등재*	수출관리규정의 교역통제물품목록 (Commerce Control List)	▪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 금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행위에 대한 통제 ▪ CCL 품목은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 ▪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
2005.9 2005.10	2002년 2차 북핵위기	애국법(Patriot Act) 국제비상경계제한법 (IEEPA)	▪ BDA의 북한자금 동결조치 ▪ 8개의 북한기업을 대량살상무기 및 이동수단 확산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간의 거래 금지 및 자산동결
2006.4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의 미국과의 관계 긴장	해외자산통제규정	▪ 미국기업, 미국거주 기업들이 북한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을 소유, 임차, 운영을 금지 및 보험가입 금지
2007.1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수출관리규정(EAR)의 개정	▪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출처: 양문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북한연구학회보』제12권 제2호, 2008, pp. 215~219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법률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2008년 6월 27일에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30일 13551호를 발표함.

<표 4>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한 주요 행정명령*

번호	일시	주요 내용
13382	2005.6.28.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를 위해 관련국가 및 협력자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대상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상
13466	2008.6.26.	▪ 북한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 금지 등
13551	2010.8.30	▪ 행정명령 13466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상황의 범주가 확대.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 ▪ UN 결의안 1718, 1874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목표. 북한의 군수품 밀거래, 사치품, 돈세탁,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의 제재를 목표로 함

주: 자세한 내용은 김상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주요내용," 『북한경제리뷰』(서울: KDI, 2010), 9월호를 참조.

- 이러한 행정명령은 필요시 제재 해제 과정이 단순하며, 법률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미국 법률에 의해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유엔 안보리의 1718호의 발의 이후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근거하는 법률은 거의 없음. 다만 인권관련 법률인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¹³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 또한 행정명령을 통한 북한의 제재도 병행하고 있음. 이는 과거 BDA 경험이 북한의 경제제재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다.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으로 합의한 '북·일 평양 선언'에 납치문제 해결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더불어 북한의 제2차 핵위기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일본이 자국 내 여론의 악화 속에서 추진

135) 국제종교자유법에서는 북한을 2001년부터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제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2003년부터 북한을 가장 심각한 위반그룹(Tier 3)으로 분류하고 해외지원, 문화교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됨.136)

- 이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일체의 무역교역도 허용하지 않음.

○ 주요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무역활동 규제와 투자규제로 나뉘어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무역제재의 근거로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무역거래규제, 무역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또한 투자규제는 송금규제, 자본거래규제, 대외직접투자규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실적으로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표 5> 일본의 대북한 제재 내용과 법률

시기	주요 배경	주요 법률	주요 내용
2003.6	북한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 해결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 PSC)	▪ 니카타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의 감시와 안전검사 강화(2002년 대비 약 4배 증가: 2002, 40회, 2003년 6개월간 78회)
2004.2	납치문제 해결 압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기존 법률은 UN 결의안에 의해서 송금 제한, 하지만 개정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2004.6	//	특정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2005.3	선박자초시 철거비용 회수 명목, 실제로는 납치문제 해결	선박유독손해배상보장법	▪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률이 2.8% 정도: 2002년)
2006.10*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일본상공 통과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모든 북한 물품의 수입금지 ▪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본 물품의 수출금지

주: * 이 제재안은 UN 안보리 결의 1718 발효 3일전에 시행되었다.

출처: 윤석상,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평화학연구』제9권 3호, 2008, pp. 194~199를 참조하여 필자가 제작성.

○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4월에는

136) 진창수·이면우, 『북일정상회담 결과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 10~11.

북한 선박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대북제재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또한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 소재 외국 금융기관들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도 추가함.¹³⁷⁾

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 한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과됨.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함.

<표 6> 금강산 관광 중단 일지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조건 제시
- 2009년 8월17일 현대그룹-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 2010년 2월8일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 합의도출 실패
- 2010년 3월4일 북한 이태위 "금강산 관광 막으면 계약파기 등 '특단의 조치'"
- 2010년 4월8일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소유 부동산 동결 통보
- 2010년 4월13일 북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자산 동결
- 2010년 4월23일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민간기업 자산 동결, 관리인원 추방"

○ 이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함.

<표 7> '5·24조치'의 주요 내용

137)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년 10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했고, 2009년 이후에는 1년으로 조정했으며,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로는 2년으로 연장했다. <연합뉴스> 2013. 4. 5.

<교역·교류 중단>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 금지
- 대북 신규 투자 및 진출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 접촉 제한
-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 정부의 강력한 대북한 제재조치는 교역교류의 중단으로 인한 남한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5.24조치'의 철회 및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3.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¹³⁸⁾ 저자들은 이 작업을 통해서
 - 대외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정치적·경제적 요소를 도출하고,
 -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제재 대상국과 제재국 모두에게 발생)을 규명하며,
 - 기존의 경제제재 경험이 주는 교훈을 파악하고자 함.
- 이 분석 작업은 기존의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대한 경제봉쇄부터 1990년 이라크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에 이르기까지 116건을 검토함.
 - 각 사례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짐.
 - 이들은 경제제재에 대한 정의를, “국가가 주도한 무역거래와 금융관계의 의도적인 중단 또는 중단을 위협하는 조치(the deliberate, government-inspired withdrawal, or threat of withdrawal, of customary trade or financial relations.)”로 규정함.

138)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2nd ed.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 또한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목표를, “제재 대상국의 특정한 정치적 행태의 명시적·의도적 변화(to encompass changes expressly and purportedly sought by the sender state in the political behavior of the target state.)”로 정의함.

- o 위 저서에서는 경제제재가 성공하지 못한 요인으로 4가지를 제시함.¹³⁹⁾
 - 첫째, 추구하는 과업의 부적절성: 목표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동원된 수단이 과할 정도로 온건하거나,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너무 미진함.
 - 둘째, 제재 대상국의 내부통합 촉진 등을 통한 제재에 대한 대응력
 - 셋째, 제재 대상국 주변에 흑기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부유한 동맹국들의 존재
 - 넷째, 해외 동맹국들의 비협조와 국내 경제적 이해관계와의 충돌

가. 경제제재의 종류

- o Hufbauer, Schott and Elliot(1990)은 경제제재의 종류를 제재가 부과 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제한 및 경제적 지원의 축소를 포함한 금융제재 등 3가지로 구분함.¹⁴⁰⁾
 - 무역에 대한 제재는, 수출시장의 상실, 필요한 물품의 수입 거부, 수출금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 여기에서는 제재국은 수입통제 수단을 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제재 대상국이 대체시장을 확보하거나 삼각무역을 통해서 이를 용이하게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국이 수입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됨.
 - 금융제재는 단독으로 부과되거나 무역제재와 연계해서 추진되기도 하는데, 제재 대상국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예상됨.
 - 무역제재와 금융제재의 극단적인 형태로 제재 대상국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있음.

- o Doxey(2005)는 경제제재의 종류를 무역 통제, 원조 및 기술 지원의 중단, 금융 자산의 동결, 거래금지 대상기업의 명단 작성 등 4가지로 분류함.¹⁴¹⁾
 - 첫째는 무역에 대한 통제, 수출입 수량의 제한, 수출입 허가 제한, 수출입

139) 전게서, pp. 12-13.

140) 전게서, pp. 36-38.

141) Margaret P. Doxey,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2nd.(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14-15. Tung, Chen-yuan, *China's Economic Leverage and Taiwan's Security Concerns with respect to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PhD dissertaion in international affair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2002.에서 재인용

에 대한 제약조건 부과 및 전면 금지, 차별적 관세정책, 입어권의 제약이나 취소, 무역협정의 중단이나 취소,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됨.

- 둘째는 원조와 기술지원의 중단으로, 시장 이자율이나 우호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던 신용제공의 감소·중단·취소, 기술지원·군사지원·개발협력·훈련프로그램의 감소·중단·취소,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성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셋째는 금융자산의 동결로, 제재대상 정부나 국민들의 은행자산의 동결이나 몰수, 제재국에 대한 투자액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몰수, 이자 지급이나 송금액의 동결, 부채 상환 일정의 재조정 및 추가 신용제공 거부, 공동 프로젝트의 중단 및 취소 등

- 넷째는 거래금지 대상기업의 명단 작성으로, 제재국과 무역이나 투자활동을 통해서 거래하는 제재국의 기업, 제재 대상국의 기업, 제3국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함.

o Biersteker, Eckert, and Tourinho(2012)은 경제제재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특정 상품에 대한 제재, 수송·운반수단에 대한 제재, 핵심 경제부문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분함.¹⁴²⁾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

- 특정 상품에 대한 제재: 귀금속, 목재, 코코아 등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진

- 수송·운반수단에 대한 제재: 비행과 선박운항의 금지 등

- 원유나 금융부문 등과 같이 핵심 경제부문에 대한 제재

나. 경제제재의 목표

o Hufbauer, Schott and Elliot(1990)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경제제재를 통해서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목표를 5가지로 요약함.¹⁴³⁾

- 제재대상국의 정책이 보다 온건한 형태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 테러, 핵의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책이 주로 포함됨.

- 제재대상국 정권의 불안정성 유발

- 소규모 군사적 모험에 대한 징벌

- 제재대상국의 군사적 잠재능력 훼손

- 영토 분쟁과 같은 제재대상국의 주요 정책 변경

142) Thomas J. Biersteker, Sue E. 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Geneva: the Graduate Institute, 2012) pp. 11-12.

143)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1990), pp. 38-39.

- o Tung, Chen-yuan(2002)은 5가지 영역으로 경제제재의 목표를 제시함.¹⁴⁴⁾
 - 징벌이나 억제(Punishment, Deterrence):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제재국의 보복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순응 유도과 압박(Compliance, Coercion): 제재국이 선호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대상국을 압박하거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요함.
 - 정권의 불안정성 유발이나 전복(Destabilization, Subversion): 대상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신호 전달(Signaling): 강대국이나 유엔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보다 강력한 조치(예를 들면 군사적 행동)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음.
 - 상징성이나 전시효과(Symbolism, Demonstrative effect): 이 경우 제재의 공식적인 목표가 언급되지 않으며, 국내외 청취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킴.

다.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 o Hufbauer, Schott and Elliot(1990)은 경제제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경제적 변수를 제시하고 있음.¹⁴⁵⁾
- o 정치적 변수로는,
 - 제재국의 은밀한 행동이나 준군사적 행동 및 정기적인 군사행동 등과 같이 보조적으로 동반되는 정책(Companion policies)
 - 제재가 부과되는 기간
 - 국제적인 협력의 수준(the ext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적인 지원의 존재(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assistance)
 - 제재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부유함
 - 제재국과 제재대상국 간 기존 관계의 친밀도(the warmth of prior relations)
- o 경제적 변수로는,
 - 제재대상국에 부과되는 비용의 크기: 일인당 규모, GNP 대비 비율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제재국과 제재대상국 간 상업적 관계: 무역거래 규모로 표시
 - 제재대상국의 상대적인 경제규모: GNP의 비율로 측정
 - 제재의 종류: 수출, 수입, 금융에 대한 제재

144) Tung, Chen-yuan, *China's Economic Leverage and Taiwan's Security Concerns with respect to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PhD dissert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2), pp. 100-105.

145)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1990), pp. 39-41.

- 제재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라.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 o Hufbauer, Schott and Elliot(1990)은 기존의 경제제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공 사례의 비율을 살펴보았음.¹⁴⁶⁾
 - 경제제재를 통해서 추구한 정책 목표 중에서 정권의 안정성 위협 (Destabilization)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목표는 군사력 훼손(Impair military)으로 나타남.

Table 1. Summary of Hufbauer, Schott, and Elliot's Findings.

Policy Goal	Successes	Failures	Success Ratio (percentage of total)
Modest policy change	17	34	33%
Destabilization	11	10	52%
Disrupt military adventures	6	12	33%
Impair military in war	2	8	20%
Other major policy changes	5	15	25%
All cases*	41	79	34%

NOTE: *The data set includes 115 cases; however, 5 cases are counted twice. Hufbauer, Schott, and Elliot claim success in 40 distinct cases, but 1 is counted twice.

SOURCE: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2nd ed., Vol. 1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Table 5.1, p. 93.

- o Pape(1997)는 Hufbauer, Schott and Elliot(1990)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¹⁴⁷⁾
 - 성공사례로 분류된 41건 중에서 분명하게 성공적인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제재의 목표가 명료하고 상대국의 양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나머지 36건은 4종류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데, 18건은 경제제재가 아니라 무력 사용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8건은 제재대상국이 제재국의 요구에 명백하게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없고, 6건은 무역 분쟁의 결과이며, 나머지 3건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임.
 - 이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경제제재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o Biersteker, Eckert, and Tourinho(2012)은 지난 20년 동안 단행된 UN의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56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46)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1990), pp. 92-93.

147)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Issue 2(Autumn, 1997), pp. 90-136.

있음.¹⁴⁸⁾

- 전체적으로 31%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압적인(coercing) 제재 보다는 메시지 전달(signaling)이나 제약조건 부과(constraining)가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경험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제재 조치는 다른 제재수단과 혼용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재 대상(표적)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제재 목적이 반영되어야 함.
- UN 체제 내부의 조율은 어려운 과제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킴.
- 제재 대상(표적)이 광범위할 경우 제재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제재의 순서와 시점이 중요함.

4.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검토

가.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검토

- o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주로 1874호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있음.
- 이 결의안은 기존의 1718호에 추가된 제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물검색, 무기 금수 및 수출통제, 금융 및 경제제재가 있고, 사치품에 대한 교역제한이 포함됨.
- o 1874호 제재는 북한의 전체 무역에는 유의미한 제재 효과를 발휘했지만, 북한의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특히 무기 수출에는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⁴⁹⁾
 - 사치품의 경우에는 1874호 이전에 발의된 1718호의 경우에는 제재안 발효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1874호는 제재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o 유엔결의안 1874호에는 회원국들이 1718호를 이행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148) Thomas J. Biersteker, Sue E.Eckert, and Marcos Tourinho (2012) pp. 4-5.

149) 자세한 내용은,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서울: KDI, 2011), p. 75.

-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회원국의 불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원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또한 UN의 대북제재는 일상적인 무역을 허용하는 선별적 제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재대상국의 지배집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 점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⁵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은 영향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무역량, 자본 이동과 같은 양적 자료로만 측정·평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수십 개의 자국 내 법률에 의거하여 제재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형태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주로 무역교역, 투자금지, 무기수출 및 거래 금지 등과 같은 조치들로써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⁵¹⁾

○ 하지만,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사례는 미국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시킴으로써 북한 수뇌부의 자금 운용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2007년 2.13합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구체화된 대상과 목표를 가지고 제재를 진행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다. 일본의 대북제재 효과성 검토

150)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pp. 165~166.

151) 장형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서울: KDI, 2013) 3월호, p. 44.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무역제한과 송금금지 그리고 선박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으로 구성됨.

□ 무역 제한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특히 무역제재의 결과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남.¹⁵²⁾
 -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해서 북·일무역은 현저히 감소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하지만, 이러한 무역 감소분은 한국, 중국, 태국 등의 국가들과의 교역 증대를 통해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교역품목에 대한 무역제한은 일정정도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음.¹⁵³⁾
- 북한과의 교역감소 혹은 중단으로 일본 내부의 경제적 손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로 어패류를 가공 판매하는 산업 및 의류 등 위탁가공을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일본 어선의 어획량 증가로 상쇄되었으며, 일본내의 '납치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북한산 원자재의 수요 감소되는 등의 결과로 점차 해소됨.¹⁵⁴⁾

□ 송금 금지

-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가운데서 송금금지는 제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일본의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대북 송금의 규모는 199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600억~800억 엔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함.
 - 이후 2003년 일본내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으로의 송금 규모는 1억 1000만 엔이고 만경봉호 승객을 통한 반출을 포함하면 약 26억 엔 정도로 추정됨.¹⁵⁵⁾
 - 일본에서는 법률상 국외에서의 송금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

152) 이석은 북한의 대외교역이 일반적으로 무역분석에서 활용되는 중력모델(Gravity Model)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북일간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면서 이 모델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을 참조.

153) 구체적 인 수산물은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63~65.

154)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66~68.

155) 미무라 미쯔히로(2005), p. 72.

한에 대규모로 제공되는 해외의 송금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 선박출입 제한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가운데서 선박출입 제한은 국제해사국(IMO)의 안전기준 미충족 선박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와 특정 선박(만경봉-92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로 나뉘어져서 시행됨.
 - 선박의 출입제한 조치로 인하여 각종 '사치소비재'의 수출입과 관련한 적발이 증가했으며,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제품들의 교역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됨.

라. 한국의 대북제재 효과성 검토

- 한국의 경제제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역은 북한의 대외무역으로, 남한과의 교역 감소와 중국과의 무역 급증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개성공단의 유지를 통해서 남북교역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음.¹⁵⁶⁾
 - 또한, 한국의 대북경제제재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외화수입 감소와 '5.24조치'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를 초래함.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 관광 중단 그리고 '5.24조치'로 인한 남북 교역 및 교류의 축소 및 단절로 인한 남북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표 9> 한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남북한 경제손실 추정치¹⁵⁷⁾

(단위: 백만 달러)

	북한	남한
금강산 관광	176	1,039
개성 관광	39	33
개성 공단	95	4,099
남북 교역	1,310	3,038
항공기 우회운항	18	61
합 계	1,638	8,270

156)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서울: 수출입은행, 2012) 여름호, p. 54.

157) 이는 2008~2011년까지의 누적 추정치이며, 원자료는 홍순직, “남북 경색의 경제적 손실 추정과 돌파구 모색,”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제2호의 내용을 참조.

-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남한이 북한의 약 5배 정도로 나타남.
 -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규모를 놓고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¹⁵⁸⁾
- 그러나 '5.24조치'로 대표되는 대북경제제재는 제3국 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됨.¹⁵⁹⁾
 - 남한과의 교역 감소가 중국과의 무역증가로 전환된 것임.

마. 효과성 검토 결과의 시사점: 문제점과 과제

- 대북경제제재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시점을 전후한 무역과 자본거래 등과 같은 교역자료, 제재 방안의 변화과정 및 제재안 의결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그러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효과성 검토 결과는 단순한 교역량의 변화추이를 통한 당사자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분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재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역통제, 원조 및 기술지원 금지, 금융자산 동결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같은 경제제재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제제재의 목표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¹⁶⁰⁾
- 또한 경제제재의 유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치·경제적 적응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 경제제재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제재대상국의 능력과 대체수단의 확보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임.¹⁶¹⁾
 - 이와 함께 제재대상국이 경제제재를 경제문제의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¹⁶²⁾
 - 따라서 제재대상국의 정치적취약성 분석을 위해 내부결속 정도와 체제 내 반대세력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158) 남북한의 GNI는 약 39배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북한이 약 8배의 경제제재 피해를 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중호(2012), p. 58.

159) 장형수(2013), p. 42.

160) Tung, Chen-yuan, "China's economic leverage and taiwan's security concerns with respect to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대만국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00~105.

161) 윤석상,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2009, p. 189.

162) 윤석상(2009), p. 190.

5. 대북경제제재 실효성/적실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대북경제제재가 추구한 핵개발로 대표되는 국제규범 위반과 같은 잘못된 행태를 억제 또는 변화시킨다는 정치·외교적 목표의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대북경제제재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대북경제제재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경제제재를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제재를 통한 명확한 메시지의 전달과 '상징성'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을 채택함.
 - 둘째,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재의 목표와 대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제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 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함.
 - 셋째, 대북경제제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 넷째, 경제제재를 단행하면서 제재의 시행기간과 연장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출구전략을 사전적으로 수립함.

-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매뉴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⁶³⁾
 - 여기에는 목표와 대상, 제재의 종류, 정책 수단, 실행 방안, 효과 분석, 종료 조건 등을 포함.

단계	주요 체크 항목
목표(Purpose)	■ 제재의 목표는 무엇인가?

163) Thomas J. Biersteker, Sue E.Eckert, and Marcos Tourinho(2012) pp. 2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coerce) : 강압적 방식으로 제재 대상국의 행동 변화 유도 - 제한(constrain) : 핵심적 자원(예를 들면, 금융조달, 무기, 재화/기술, 전문화된 기술)에 대한 접근권 제한 - 신호(signali) : 국제적 규범의 침해 활동에 대한 비난 혹은 고립화 및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사전 경고 ■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무엇인가?
<p>목적과 규범 (Objective and Nor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것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군사적 분쟁, 인권 침해, 인도주의적 위기, 시민권 보호 등 ■ 어떤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이용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확산, 대테러리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보호(인권침해 예방, 대량학살 성적·성별 혹은 이동에 대한 폭력 등)
<p>대상(Targ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된 제재 대상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혹은 지도자, 정권 지지세력, 반군세력, 테러리스트 그룹, 금지된 행동 유발자, 주목하는 정책의 책임자(인권 침해와 폭력에 대한), 제재대상의 가족 구성원, 지원자(금전적 혹은 물질적), 유엔제재 위반자들 ■ 제재 대상들은 어떻게 위협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을 촉진시키는지? ■ 제재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획득 가능한가? 그리고 제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제재 대상국의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가? ■ 제재 대상의 명단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 제재 대상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가?
<p>제재 유형 (type of San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대상이 제재 받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무기, 확산과 관련 이중 요도의 재화나 기술 등)이 필요한가? ■ 어떤 자연 자원(다이아 목든, 목재, 오일, 금 등)이 제재 받을만한 행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요를 보장하는가? ■ 제재 대상의 경제적 특징(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 경제통합의 정도, 대출, 보험 서비스에 대한 의지 등)은 무엇이며, 다른 금융제재가 가능한가? ■ 비행 금지가 목적 달성을 촉진할 것인가? ■ 외교적 제재(여행 제한, 대사관 폐쇄, 외교관 수 감소, 비자 발행의 제한 등)가 바람직한가? ■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 금융기관에 맡긴 자산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가? 국제 여행을 자주 다니는가?
<p>지역 기구와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어떠한 조직과 연계되었나? ■ 만약의 지역차원의 제재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유엔 제재가 그들과 어떻게 조율하는가?

다른 정책수단/ 조율 혹은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다른 정책 수단들(외교적 협상, 유엔 평화유지군, 무력 사용,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재를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 제재가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 제재가 다른 노력과는 어떻게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보완적일까 아니면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 ■ 제재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다른 조직(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국제경찰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제재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유엔안보리 결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위원회, 이행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패널, 유엔안보리에 의한 지명, 강압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위반이나 불응에 대한 대처방안, 사용 가능한 자원 등 ■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지원이나 훈련이 필요한가? ■ 어떤 강제 사항이 요구되는가? ■ 어떤 사적 부문들이 포함되며, 어떻게 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효과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제재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제재 대상국이 어떤 보복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또는 어떻게 제재의 충격을 비껴가거나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치력의 강화 또는 정치적 분열, 내부 단합력 증가, 부패와 범죄의 증가, 자원의 유용, 이웃국가에 부담 증대, 인도주의적 충격, 인권 침해, 규제와 강제력의 증강, 유엔의 신뢰도 훼손 등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으로의 무역선 전환, 정체성의 위장, 유령회사 설립, 사적 계약(암시장), 안전한 피난처, 대체 자원(예, 다이아몬드), 가족 구성원, 물자의 비축, 위장 선박 사용 등 ■ 회피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제재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의 종료와 중지를 위한 특별한 요건은 무엇인가? ■ 제재의 중단을 포함한 조정작업을 위하여 어떤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까?
현재 남아있는 제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제재를 위한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레짐에 추가하는 형식을 택하는 대신에 제재 레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Thomas J. Biersteker, Sue E.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Geneva: the Graduate Institute, 2012) pp. 24-28.

- 마지막으로, 향후 현재의 대결국면이 남북 당국간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정부가 대북경제제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 무조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서울: 수출입은행. 2012.
- 미무라 미쓰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윤석상.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평화학연구』제9권 3호. 2009.
- 양문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과정과 해제의 경제적 효과,"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 2008.
-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서울: 2010. 11호.
-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서울: KDI. 2011.
- 장형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서울: KDI. 2013년 3월호.
- 진창수·이면우. 『북일정상회담 결과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성남: 세종연구소. 2002.
- 홍순직. "남북 경색의 경제적 손실 추정과 돌파구 모색."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제2호.
-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2nd ed.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 Margaret P. Doxey,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2nd.(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Issue 2(Autumn, 1997).
- Tung, Chen-yuan, *China's Economic Leverage and Taiwan's Security Concerns with respect to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PhD dissertaion in international affair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2002.
- Thomas J. Biersteker, Sue E.Eckert, and Marcos Tourinho, *Designing UN Targeted Sanctions* (Geneva: the Graduate Institute, 2012)
- Thomas J. Biersteker, Sue E.Eckert, and Marcos Tourinho(2012)

<연합뉴스>

제4회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식량문제

제1발표

김정은체제의 대남전략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전망 - 안성호

제2발표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의 개념적 재검토: 신정경분리 모델을 중심으로 - 성기영

제3발표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 분석: 북한 경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문경연

간지

김정은체제의 대남전략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전망

안성호(충북대 정치외교학과)

I. 문제제기

그동안의 북한의 핵 도발을 보면 2006 1차핵실험 (1718호), 2009 2차핵실험 (1874호), 2010.3.26 천안함폭침, 2010.11.23 연평도포격, 2011.12.17 김정일사망, 2012.4.13 로켓발사실패, 2012.12.12 로켓발사성공(2087호) 등이다. 지난 1월 23일 새벽 5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87호 찬성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재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고 중국도 찬성하였다.¹⁶⁴⁾ 그리고 북한은 이를 핑계로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박대통령취임식날 북한은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조선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열강의 각축장으로 짓밟히던 어제의 약소국이 전략로켓이든 소형화된 원자탄이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미제와 추종국들을 복수의 불벼락으로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이다.”¹⁶⁵⁾ “조선이 국제사회 압력이나 제공되는 원조의 결과로 핵계획을 단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하며 조선이 핵강국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¹⁶⁶⁾ 등의 공갈과 협박수위를 나날이 높였다. 그러더니 지난 3월 9일 3차핵실험이후 핵보유국과 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¹⁶⁷⁾

북한은 또한 지난 3월 30일 정부정당 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¹⁶⁸⁾ 그리고 지난 4월 8일 결국 북한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5만 여 명을 철수했다.¹⁶⁹⁾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를 갖고 놀았으며 위협-도발-협상-보상에 재미가 든 것 같다. 결국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164) 미국의 압박으로 다음 달 한국의 안보리참여 등으로 중국은 강한제재 반대, 낮은 수위제재 찬성 등으로 중국이 북한의 극단적인 반발을 막는데 42일이나 걸렸다.

165) 「노동신문」, 2013.2.25.

166) 「러시아소리」, 2013.2.25.

167) 북한외무성대변인 성명, 2013.3.9.

168) 「조선중앙통신」, 2013.3.30.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가리 결전의 최후시각은 왔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69) 「중앙일보」, 2013.4.9.

이러한 논조는 김정은 후계체제구축과 연관되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군보인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등 3대 유력지(당보, 청년보, 군보)에 동시 게재된 2012년 신년사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영도체제를 강조했다.¹⁷⁰⁾ 그리고 2013년 신년사는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김일성·김정일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로 규정하였고,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역사적 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적 군사장비 보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 생활향상 진전, 인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사회주의 교육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¹⁷¹⁾

신년사를 보면 북한핵실험이 UN 결의안에 대한 북한반발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단순히 핑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비핵화포기, 6자 회담사멸, 2005년 919공동성명 사멸-자주적 군사물리적 조치강화-위성 로켓발사 등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신년사에도 우주를 정복한 로켓 발사성공 등을 언급하였다. 선민정치, 선경정치 표방하나 가능성 낮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북한은 김정은 세습체제 몰락하거나 붕괴하기전에는 절대로 핵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¹⁷²⁾ 일부탈북자들은 2013년 "신년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다" 강성대국대신-경제강국, 선군정치, 부강조국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북한 당국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은 그 비용면에서 볼 때 할 짓이 아니다. 그럼 왜하느냐, 그것이 북한의 유별난 체제를 유지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실체:김정은시대의 대남전략기조

1. 김일성-김정일찬양

지난 1960년대 초에 김일성 유일체제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본질적인 변동 없이 수령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요인으로서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가 중심이된 정치체제의 성격이 북한의 정당

170) 「노동신문」, 2012.1.1. 2012년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171) 「노동신문」, 2013.1.1.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김 주석 사망 이듬해부터는 사실 형태로 발표해 왔었다. 2013년을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하였다.

172) 「중앙일보」, 2013.2.16.

성을 심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이 전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은 북한민족적 체제의 지속성을 뒷받침하였다. 수령-당-인민의 일심단결과 집단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간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생활양식과 조직적 교양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한없이 증대시켰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 거셀수록 지도자의 구심적 역할은 오히려 증대되었다.¹⁷³⁾ 1974년 김정일후계체제가 시작되었을 때도 이러한 북한의 김일성과 연계된 민족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보면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그리고 며칠후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선언했다.¹⁷⁴⁾

한마디로 북한체제는 김일성개인우상숭배를 기초로 하는 김일성주의에 근거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당규약과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김일성주의와 관계되는 10대원칙을 몰라서는 북한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예컨대 “1원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한다,” “9원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한다.” 등이다. 이러한 김일성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 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체사상이다.¹⁷⁵⁾ 김일성민족과 마찬가지로 수령중심사상의 한 표현으로 김정일주의가 있다.¹⁷⁶⁾

<표 1>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의 직위와 상징조작 비교

173) 김성보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서울:웅진씽크빅,2009),pp.203-210.북한사회는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묘사되며 혁명의 수령은 대가정의 아버지로서 지칭된다.

174)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역사,이념,권력체계』 (과주:도서출판한울,2011),pp.101-102. 김정일은 온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할 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여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사상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강조하였다.

175) 상계서,103-110. 주체사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전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②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론, ③인간개조이론, ④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⑤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등이 혁명이론에 속한다.

176) 조순래외, 『북한용어소사전』 (서울: 연합뉴스,2003),p.98.북한체제의 중심인 김정일주의는 1993년 12월 5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김정일주의 연구센터로 개칭하고 김정일주의의 사상과 이론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편지를 채택하면서 개념화되기 시작했다.

성명 / 항목	호칭	중심 이념	상징 조각	민족명	당	군	정
김일성 1912.4.15	위대한 수령; 아버지 수령; 인류의 태양	김일성주의, 김일성헌법	김일성동상, 배지, 꽃	김일성민족, 태양상, 태양상	당주석	조선인민군대원수	국가주석
김정일 1942.2.16	위대한 영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헌법	김정일동상, 배지, 꽃	김정일민족	당총비서(사후 영원한 총비서), 당중앙 군사위원회위원장	조선인민군원수(사후 대원수)-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은 1983.1.8	공화국최고수위	유훈통지	부인대동, 최전방방문		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당중앙위원회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조선인민군대장-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 「세계일보」, 2012.2.15; 「한국일보」2012.4.14; 「중앙일보」, 2012.4.14-15

<표 1>에서 보듯이 북한 김일성족의 전 인민적 확산을 위해 김주석의 사진 가운데 가장 환하게 웃는 사진을 뽑아 초상화로 제작한 후 이를 태양상으로 부르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만인평등의 민주적 법적통치와 이념을 마다하는 아프리카추장을 연상케하는 야만적인 1인 승배에 기초하고 있다.¹⁷⁷⁾ 수령중시사상의 한 표현으로 94년 11월 전후 김일성민족이 나왔고 북한매체들은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사망이후 개념화되었고 1996년 7월 8일 2주기 때는 김정일 민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¹⁷⁸⁾ 평양방송은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권위와 존엄을 더욱 빛내이고 있고 조국통일이 이뤄진 때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자주성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¹⁷⁹⁾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첫째, 김정은은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

177) 상계서, p.333, pp.87-88.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광명성절, 4월15일 김일성 태양절, 9월 9일 국가창건일, 10월 10일 당창당일 등이 중요한 날이다. 1985년 서해감문 준공식때 촬영된 것이고, 태양상 초상화는 김주석이 사망한 3일후 1994년 7월 11일 만수대 예술단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것은 바로 북한민족주의가 개인우상화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한 단적인 사례이다. 지속적으로 정치적 상징조각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을 상징하는 난초과에 속하는 붉은 자주색 열대식물인 김일성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기위해 만든 김정일화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세계 유일하게 현직정치지도자사진을 배지로 도안해서 달고 다니는 유일한 국가인 북한에서의 김일성-김정일 배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도안한 것으로 김주석과 김위원장의 개인 우상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데 초상휘장이라고 부른다

178) 조순래외, p.90.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은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며 세계에는 자기 민족의 건국시조를 숭상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민족의 아버지를 모신 인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179) 평양방송, 1995.1.18. 조순래외, p.90, p.332. 1997년 7월 8일 김주석 2주기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내각 등 5개 기관의 공동결정으로 추체연호와 함께 태양절이 제정되

를 줄라매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인민경제 개선과 향상을 강조하지만 현재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경제조치는 극히 한정적이다. 북한의 대외 경제의존도 가운데 중국에 약 90%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와 정파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제규약과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난다. 셋째, 개인의 자유의사부재, 수령의신격화, 극단적 경직성 등 주체사상의 본질적 결함이 있다.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비주체적 피동성을 강조하는 유일영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사회는 개인의 자유의사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일화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가 원천봉쇄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¹⁸⁰⁾

북한 최대의 명절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과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다. 북한은 이 날 당원에게 포상을 하고, 쌀 배급량을 늘려 내부결속을 다진다.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탄생을 신화화, 설화화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전인민에게 유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폐쇄적인 독재정치의 전형이다. 김정은의 지난해 생일에도 국가 권력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축하행사 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북한 달력엔 일요일이라 붉은 색으로 표시돼있지만 김정은 생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¹⁸¹⁾ 그러나 3대 세습 정당성을 바탕으로 김정은 생일을 새 지도자로 부각시킬 수 기회로 삼지는 못했다.¹⁸²⁾

북한은 김정은의 영도를 받들 것을 맹세하였다. 북한당국은 이미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져온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지체 없이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사망소식과 함께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며 사실상 김정은 영도체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마약밀매밀수국가, 부자 세습체제국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은 불량국가, 약의 축 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다. 결국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통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¹⁸³⁾ 지난 2005년 1월 23일 <조선신보>

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 우상화 차원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일컫는 말이다

180) 김명배, 『주체의 봄은 오는가』 (서울:수서원,2012),p.272.수령지시에 대한 건설적 반대의견을 허용치 않고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시행착오의 반성에 의한 개선의 여지가 없고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령지시의 완전성, 무조건복종, 대를 이은 충성 등 유일사상 10대강령은 수령신격화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181)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생일 전후에 충성맹세 모임과 우상화 영화 상영, 노래경연 대회 등으로 축제분위기도 유도한다.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된 휴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이렇게 이를 뿐이다. 이 날엔 주민에게 나눠주는 쌀 배급량을 늘리고, 당원에게는 포상을, 군인에게는 승진 잔치를 벌이며 축제분위기를 연출한다.

182) opennews@mbn.co.kr 2012.1.10. 생일 전후엔 토론회와 충성맹세 모임, 체육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충성심을 유도하고 내부결속을 다진다. 특히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은 태양절로 불리며 중요시되는데, 올해 4월 15일엔 강성대국 선포가 예정돼 있다.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 내정 1년만인 1975년 생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에 내정됐음에도 3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 아직 어린데다 우상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여기에 김정일의 49세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떠들썩한 행사를 벌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하지만 3대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새 지도자를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김정은 띄우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83) *Chicago Tribune*, January 21, 2005, p.1 & 5; *TIME*, April30,2012,p.101.

는 부시가 북한을 종식되어야 할 폭정의 전초기지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새로운 주적개념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다.¹⁸⁴⁾ 지난 3월 27일 노동신문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자들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라면서 26일 평양에서 작성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조선일보> 3월 25일부를 인용하면서 "괴뢰군부깡패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우리의 최고존엄의 상징인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천벌을 받을 악귀들의 천인공노할 흥계"라면서 "남조선의 새 정권이 리명박역적패당과 다름없이 동족대결의 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¹⁸⁵⁾

북한은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에서 이제는 <태양족>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절, 태양족, 김일성족 등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민족주의와는 다른 폐쇄적이고 왜곡된 개인우상화에 기초한 전대미문의 광적인 쇼비니즘이 공공연히 강조되고 있다.

2. 우상화를 위한 헌법 활용

199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신헌법안인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신헌법에는 새로이 서문이 붙어 김일성의 헌법적 지위를 규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로 시작된다. 주체사상에 의한 국가창건, 사회주의건설, 관리체계, 인덕정치, 민족통일 업적, 대외정책, 비동맹운동, 영도예술 등이 서술되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¹⁸⁶⁾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 사상과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기초해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신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에서 제시되었다. 여기 5대 방침중 하나로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184) 「조선선보」, 2005.1.23. 당시 쿠바, 벨로루시, 짐바브웨, 이란의 반발도 거세였었다.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로루시대통령은 "피흘리고 석유냄새나는 자유는 필요없다"고 하였고, 쿠바공산당 후벤투드 레 벨데 청년기관지는 "부시는 황제이고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짐바브웨 무타사(Mutasha) 반부패장관은 "과시스트의 말이라 무시하겠다"고 하였고, 이란의 카말 카라지(Kamal Karagi) 외무장관은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85) 「노동신문」, 2013.3.27.

186) 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역,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과주:돌베개, 2009), pp.319-322. 그리고 1998년 9월 9일 노동신문의 사실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가자에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바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 건설이다. 이말은 8월 22일자 노동신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되었다.¹⁸⁷⁾ 북한의 폐쇄적 김일성민족은 체제단속을 위하여 적대적 대상을 묘사하는 미제국주의, 반제국주의전선전략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김정은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물질문명의 변화속도에 매우 더디게 적응하고 있다. 북한내에는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개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인민들을 일개인의 우상화와 김일성주의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폐쇄적, 군부중심적이며 과두적 유일지배체제 국가로 전략하였다.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북한의 시대착오적 리더십은 반민족적이며 시대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헌법은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노동당 규약 다음으로 중요한 통치지침을 담고 있는데 2012년 4월 13일 헌법개정시 헌법 서문에 북한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신은 핵이고 핵은 곧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인 것이다. 북한에서 핵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헌법에다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북한이 헌법에다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자기만족일 뿐이다.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후견 국가인 중국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원한다면 핵을 갖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려는 시도는 북중관계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김정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마커스 놀랜드가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군력장악을 과시하기위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중하였다.¹⁸⁸⁾ 이러한 북한 권력구도의 움직임은 북한주민의 측면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평등이나 민주적 헌법보다는 선군정치, 정치수용소, 인민재판, 공개처형 등 총칼이 앞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은 상실되었다. 게다가 굶주림마저 확산되어 인간의 먹고사는 가장 초보적인 것마저 마련되지 않은 최악의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상황이나 진정한 모습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¹⁸⁹⁾ 그래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호촉진, 북한난민문제에 대한 인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추진, 대북인도적 원조제공과 감독, 투명성 증대촉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등을 핵심으로한 북한 인권법이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¹⁹⁰⁾

187) 조순래외, 『북한용어소사전』 (서울: 연합뉴스,2003),pp.153-154.

188) 「중앙일보」,2012.2.13. 마커스놀랜드는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189) Henriette Sinding Aasen,Uichol Kim, Geir Helgesen(eds.),Democracy,Human Rights,and Peace in Korea(Seoul:Kyoyook KwahakSa,2001),pp.35-36.

190) 서보혁,이유진,“미북간 인권분쟁의 이념적 기초: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 연구,제2집1호 (2006.6),pp.108-109; U.S. House of Representatives,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P.L.108-333) (www.house.gov/international 2012.2.7)

북한에서 남은 방법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 억압, 공포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바로 선군정치가 그것이다. 그럴수록 인민은 처벌이 두려워 복종하는 시늉만 낼 뿐 사회전체가 위선과 기만이 가득 찬 비정상적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¹⁹¹⁾

헌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를 실시하고 당규약도 준수해서 수령을 그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총비서면 당규약에 제정된 때에 선출하고 국가주석이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인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로 뽑아야한다. 대를 이어 수령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고 법에 따라 임기동안 재임하는 지도자로서 북한을 법치국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¹⁹²⁾ 지난 2012년 5월 30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4차 개정안에 개정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시하면서 특히 핵보유와 관련한 김정일의 위업을 강조했다.

3. 김정은 통치전략

김정은은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을 흉내내고 있으며 김정일처럼 당-군-정에 배치한 측근들을 활용해 막후 통치를 하기보다는 김일성처럼 당정치국 등 공식 정책결정기구를 활용해 전면에 나서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¹⁹³⁾ 북한은 김정은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 수령이란 점을 부각하면서 김일성향수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후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려한다.¹⁹⁴⁾ 이와 같은 할아버지 닮기의 인기전술로 주민의 환심을 산다고 해서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북한이 본질적인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비핵정책을 하게 되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¹⁹⁵⁾ 29세의 나이로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독재국가에서 군권을 장악해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¹⁹⁶⁾ 여기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이상화와 김일성민족이 뒷받침하고 있다면 더욱 체제단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북한주민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7세에 쿠데타로 집권해 42년 동안 철권통치를 휘둘렀다가 결국 시민군에게 총살당한 교훈을 인식해야한다. 김정남이 해외로 떠도는 동안 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권력기관을 이용하고 측근들을 조종하는 제왕학을 집중적으로 전수받았을 것이다.¹⁹⁷⁾ 이러한 여러 권력구도의 변화 상황에서도 대부분

191) 김명배, 『주체의 봄은 오는가』 (서울:수서원,2012),pp.268-269.

192)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 (서울:을유문화사,2000),p.294.

193) 한기범, "김정은의 허장성세," 『중앙일보』, 2012.1.10.

194)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쉽변화: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5집 5호(2011 겨울),p.190.

195) 『중앙일보』, 2012.2.3-4.

196)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늘품플러스,2010);하라이히사시,백계문·이용빈 역, 『김정일체제』 (서울:한울아카데미,2012).북한은 김정은의 나이를 30세라고 알고 있으나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83년생(돼지띠)이다.

197) <http://www.news.donga.com> (황호택,2012.1.29).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도

은 북한의 안정과 불안정 등 상층부권력구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북한주민의 인권, 생존, 자유, 민주화 등에 초점을 둔 분석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대북소식통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전·현직 고위간부 자제들이 당·군·국가기구의 핵심 요직에 이어 차세대 실무 책임자층에도 다수 포진했다”며 “특히 현직 간부들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선호도가 높은 외교나 무역 분야 보직을 받거나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 대표자회 때 항일빨치산 자녀 등 전 고위층 2세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중심’으로의 정책 운영 강조 및 경제 부흥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는 등 김정은으로의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본다.¹⁹⁸⁾ 첫 멘트도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로 시작했다. 김일성민족하에 김정은은 김정일이고 김일성인 것만큼 더한 우상화전략은 없을 것이다. 외모나 모습조차 김일성이 환상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상징조작을 통해 북한주민을 김일성민족에 묶어 두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맹목적인 충효를 강요하지 말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도자가 취해야할 지도방법이며, 인덕정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나라로,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¹⁹⁹⁾ 서면 사령관은 지난 2012년 10월 2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 육군협회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권력승계 후 정권을 공고하게 장악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그는 예측 불가능한 통치자로 아버지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독단적(assertive)”이라고 말했다.²⁰⁰⁾ 오늘날 김일성훈장에 이어 김정일훈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여전히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굳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정일사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독재자 김정은의 우상화와 신격화의식의 확산이 충격적이다.

이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민주화인식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 암시장은 정보유통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중국과 무역하는 업자들을 통해 중동민주화 등 외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중봉기보다는 권력엘리트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본다.²⁰¹⁾

교신문의 고미 요지 편집위원과 100여 회 e메일 대화를 주고받았다.

198) 「조선중앙통신」(2012.12.19). ① 김일성 주석과 절친했던 항일빨치산 출신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룡해 당비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임명. 군 대장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국방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오백룡 아들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당 중앙위원. ② 당 중앙위 전문부서 부부장급과 내각 부상(차관)급-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 최 휘, 최고 핵심부서인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국태 당중앙검열위원장의 딸 김문경, 외교관을 거쳐 당 국제부 부부장. 전 김정일 주치의 리영구의 아들, 무역상을 역임한 리광근 통일전선부 부부장, 최근 합영투자위원회 리철 위원장의 후임임명. ③ 외교나 무역 분야 근무여건이 좋는데 배치(보직 특혜)- 군 수뇌부인 리영호 총참모장의 아들 리선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사위 차동섭, 리철호.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들 오세현 등 무역회사 책임자로서 외화벌이나 투자유치 같은 활동에 종사(고위간부 자녀 또한 상당수).

199) 상계서,p.294.

200) <http://www.chosun.com> (2012.10.25)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제임스 서면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부친인 김정일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1) 「중앙일보」,2012.2.13. 마커스 놀랜드의 전망.

남북한간의 정통성문제는 현실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면서 체제경쟁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체제경쟁에서의 우열은 어느 체제가 보다 열린 민족의인가, 민주적인가, 의회민주주의체제 지향적인가, 복지국가 지향적인가, 체제성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혀 주느냐하는 문제에서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인식된다.²⁰²⁾

4. 대남 이중전략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북한 3차 핵실험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핵도발할 것이다. 북한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거나, 3대세습 독재가 무너지거나, 김정은 스스로가 고르바초프처럼되거나 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내적 북한체제 단속, 김정은 신격화, 그리고 유물사관이 핵사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남한의 국민단합과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탄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악이고 우리는 선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은 갖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비록 우리는 핵은 없으나 따사로운 국제사회의 전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듬북 받겠지만 반대로 북한은 핵하고만 친해지게 되니 결국은 핵을 사랑하고 핵을 먹고 핵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인식된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등 적대국의 정치적 일정과 연관해서 그들의 도발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니 대체로 로켓발사나 핵실험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는 타임잉을 정한다. 북한은 김일성유훈, 김정일유훈이 헌법보다도 앞선다. 그러니 김정은은 자기권력의 구축과 영웅화와 신격화를 위해서도 유훈을 받아들여야한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자기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핵과 로켓트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1718, 1875, 2087, 2094 등 UN 결의안이 중요하다. 아무리 북한이 이를 어기더라도 UN은 일관되게 북한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일관되게 구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자기들의 도발을 인정한다거나 북한에 대하여 겁을 먹었거나 아마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한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UN과의 공조,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모든 제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핵 억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우리 혼자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전략이라고 본다.

북한체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양심이 없는 아주 사악한 존재다. 부시말대로 악의 축이 맞다. 한미가 보복할 빌미 주지마라 김정은 최전선부대에 비밀명령을 내리면서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²⁰³⁾ 북한 김정은집

202) 김용욱, 전계서, p.65.

203) 「중앙일보」, 2013.4.1

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다. 광기, 분노, 살인, 투쟁, 파괴본능이 주류를 이룬다. 북한 김정은집단은 국제사회의 관리대상국가가 되어야한다. 북한의 이중성은 강폭한 권력자행-평화공세, 선전선동전략, 체제단속전략 등 대내용과 대외용이 구사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저강도 전략과 고강도 전략이다. 남한의 정부특성과 연계(남한의 정당교체악용)-그러나 핵에 있어서만은 남한 정권 상관없이 무조건 고강도이다. 둘째, 북한의 이중성중 북한의 조국통일, 민족통일은 김일성민족 통일을 말한다. 셋째, 북한의 쇼맨쉽 - 리더쉽은 솔직히 남한과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진정성이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다. 북한의 인권탄압-인권유린은 도를 넘었다. 세습우상화 사관을 위해 전쟁과 공포정치를 활용-선군정치, 정치범수용소, 최악의 빈곤조차도 악용한다.

북한은 시기가 문제지 추가적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핵에 맞들었다고 본다. 지난 2월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와 9월 9일 정부수립일 등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정하고 군사력 강화계기로 삼고 있다. 또 지난 12일 길주군 풍계리 만탄산 서쪽2번 갭도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남쪽 3번 갭도도 준비를 동시에 해서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다. 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핵탄두 실전 배치선언 등으로 지속적인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또 전처럼 NLL 인근 해상에서의 무력도발등도 예상할 수 있다.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수직 발사대(TEL)로 여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 가능하다. 반복되는 핵실험은 작고 가볍지만 파괴력이 큰 핵탄두 경량화를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경량화가 되면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진다.²⁰⁴⁾

이처럼 핵실험이 김정은체제를 더욱 안정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김정일 유훈과 유산 계승발전, 미국과 국제 자주성과시, 군사적 핵무기 개량발전, 군사력자체증가 등이다. 1차핵실험 3.58, 2차핵실험 4.52 그리고 이번 3차핵실험에는 4.9의 지진파가 발생하여 폭발력이 점점 더 강력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은에게 강성대국, 군사강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의 중심에서 영웅화, 우상화, 신격화, 3대세습체제 등에 핵실험과 로켓발사, 미사일발사실험 등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계급사관, 유물사관, 전쟁사관이 핵사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여전히 제국주의전쟁중이고 사상에서도 1930년대 항일무장 빨찌산투쟁, 1950민족해방전쟁이 지속, 북한은 여전히 나홀로 전쟁중이다. 우상화와 신격화의 중심적인 상징은 핵이다. 반미투쟁, 반제국주의투쟁, 민족해방전쟁, 남한당국에 대한 불인정 등이 핵심 대남전략이다. 그래서 남한당국을 웃습게 보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제국주의와 남한의 역적패당, 괴뢰정부는 타도의 대상이다. 공공연

204) 10,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500kg 급은 아직 개발못했지만 스커드 미사일 장착의 1톤 급은 개발하지 않았나 본다. 그리고 폴루토늄은 고풍기술이 필요하고 우라늄은 탬퍼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욱 정교한 경량화된 탄두 개발이 가능하다. 핵탄두 경량화는 주로 적은량으로 최대 폭발력을 기대하면서 핵탄두소형화를 하는데 주로 1톤이하 직경 90cm 이내를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은 110kg, 중국은 600kg, 인도는 500kg 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2차대전 때는 4톤으로 폭격기로 싣고 가서 투하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타겟트가 되어 요격하기가 쉽다.

한 공적인 논평이나 방송에서 극심한 막말 욕설 등 도저히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깡패집단같은 행동이다. 물론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 등이 실제 공격용이 아니고 대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공갈협박패턴에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정상국가로서는 생각못할 가공할 난폭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남한내 종북, 친북세력을 통해 남남분열 등 이간질전략을 구사한다. 진영논리, 간첩 침투 등 이중적 전략으로 대남분열책동에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노크귀순도 우리의 자중지란만 일고 있다. 일개사병이 장성별 15개를 떨어트렸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Ⅲ.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략방향

1.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전략

1)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략은 한반도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뢰정책은 일조의 균형정책이다. 우선 남북간 안보와 협력의 균형, 남북한 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 그리고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의 균형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균형정책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유화적일 때는 유화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가 직면한 대외적 위기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구축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²⁰⁵⁾

우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도록하겠다. 첫째, 분단의 평화적 관리: 대북 억제력 및 안보태세 강화, 둘째,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의 추진, 셋째,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비핵화 방안 등이 핵심이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정책 쟁점으로는 ▲ 차기정부 5년의 임기 중에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가,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신뢰정책의 방법론으로는 글로벌 규범에 의거해서 남북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상호적인 차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준수를 검증하고 상호이익이 확인된 후에 다음단계로 전이한다고 되어있다.²⁰⁶⁾

2)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5년간 북핵 정책의 목표는 크게 완전한 비핵화(플루토늄 원자로 관련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제한적 비핵화(플루토늄 원자로 관련시설), 비확산(수평적, 수직적)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한반도비핵화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비확산'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려면 대화, 압박,

205) 민주평통, 「박근혜 정부 출범과 민주평통의 역할」 (청주시 협의회, 2013.4.17), p.3.

206) 민주평통, p.3.

대화·압박 혼용 등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북한이 기존합의들을 지키도록 한·중·일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⁰⁷⁾ 특히 한국이 금년부터 2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협상 틀(6자회담과 남북회담, 5자회담, 4자회담 병행 등)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을 기본적인 회담 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여 6자회담 등 비핵화협상에 동력을 주입한다는 구상이다.²⁰⁸⁾

4) 박근혜정부의 핵심전략중하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고 본다.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그러한 지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혈맹으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지역에서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하였다(조성렬,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킨다고 밝히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말로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과제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중국 동북3성과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중 3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약했다.²⁰⁹⁾

5) 문제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한 김정운이 아니라 북한주민에 두어야 한다. 철저히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축해 가야 한다. 대북정책에는 사안별로 항상 조건을 걸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주민의 삶의 질 등이다. 시간도 걸리고 생색도 안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업적이나 일회성의 이벤트 성공 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변화시킬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진정성을 얻고 북한은 나쁜 데 우리는 좋다는 평가가 날 것이다. 이는 국제공조의 기초이다. 고도의 전략을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북한주민을 목표로 두고 남북한간 경쟁해 가야한다. 이것이 앞으로 박근혜정부

207)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문」 (2012.11.5.)

208) 조성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 남북경협」 (2013.2.28), pp.8-11.

209) 조성렬.

의 대북정책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근혜정부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안보 면에서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외교적으로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달성하고, 유라시아 협력 및 지구촌에 대한 기여 등 외교지평의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하였다.²¹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동서진영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동서독 통일을 이룩했던 유럽의 헬싱키프로세스와 유사점이 있다는데 동감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서울프로세스’라고 불렀다. 이를 정전 60주년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전략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표-2>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까지했는데 일주일만에 폐쇄걱정하는 뒤통수를 맞고있다는데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기시작한 것이다. ²¹¹⁾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보다더 유연한 창조적 적용이 필요한 대목이다.

<표-2 > 박근혜정부 통일부 중점 국정과제 및 추진과제

국정과제	중점과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정상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기여
실질적 통일준비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자료) 통일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2013.3.27)

6) 마지막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놓았다. 이것은 남북한이 신뢰가 있어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정책구상이다. 이와 같은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다.²¹²⁾ 이와 같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크게 진전되고, 동북아

210) 박근혜2012.

211) 「중앙일보」,2013.4.5

212) 민주평통,p.2.

평화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서해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NLL을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 위에서 조건부로 공동어로수역의 설치를 지지했다. 소위 제3단계: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²¹³⁾ 이 프로젝트에 따라 ▲북한경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통신·교통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중 및 남·북·러 3각 협력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핵과 경제협력이라는 정경분리원칙과 대북한 정책이 투트랙전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실천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접근방안으로 보인다.

2.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대북정책의 전략적 기초

1)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및 3차 핵실험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국제문제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 기초의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햇볕정책 확대전략: 한반도 교류협력 + 경제-안보교환, ▲화해·상생 정책구상: 한반도 교류협력 + 안보-안보교환, ▲동북아 지경전략: 동북아 평화협력 + 경제-안보교환,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 안보-안보교환 등의 시나리오 아이디어 좋다고 본다.²¹⁴⁾ 다양한 측면을 설정하고, 이중적 전략이 필요하다.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도자특성과 연계해야한다. 북한은 1당제니까, 어쩔 수 없다거나 아니면 말고 식이면 곤란하다. 북한 권력층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찌르고 들어갈 틈새이며 북한변화유도의 하나의 기준을 삼을 만하다. 핵무장보다 남북한 모두 북한의 민주화유도, 북한주민의 변화유도 북한주민의 굶주림해방, 북주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최종단계에서 이를 거부하고 1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를 교훈해서 신뢰와 균형정책은 좋은 출발이라 본다.

첫째, 신뢰외교는 외교 전반에 대한 철학이고, 이를 적용하는 실천전략이 균형정책이다. 신뢰외교의 2대 원칙은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북한의 평화파괴의 행동에 대해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균형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안에서 잘못된 것을 조정하고 바로잡자는 의미이다.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입장을 취하는 것

213) 조성렬2013.

214) 조성렬,2013.

이 아니라 남북간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의 균형을 뜻한다.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에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할 때에는 매우 개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신뢰할만한 억제, 끊임없는 설득, 보다 효율적 협상전략의 적절한 조합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²¹⁵⁾

3)탈북 여자군 중대장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북한이 천문학적인 수십억 달러가 드는 핵개발에 집착하는 데 대해 그는 외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체제를 결속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여자군 중대장은 핵실험을 하면 조국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다고 홍보하는데 군인과 인민이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면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맞아서 전면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들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다.²¹⁶⁾ 그리고 제재 국면 이후 대화가 재개돼 서방과 한국 등이 북에 원조를 시작하게 되면 위대한 장군님의 전술적 지략에 의해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다는 집단적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의도발- 국제사회 제재논의- 북미대화 국면- 서방의 대북원조의 반복되는 과정이 취약한 내부를 단속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수단인 셈이다.²¹⁷⁾ 인권탄압이나 군사적 대립이 있을 경우는 대북지원 온건 부분을 약하게 하되 지속한다. 인권탄압이나 군사적 대립이 없을 경우는 대북지원 온건부분을 강하게 지속한다. 예컨대 박근혜당선이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대북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두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행하겠다고 하였다.²¹⁸⁾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외교안보적으로 선도적 주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는 201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해이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이 됐지만 아직 남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전쟁상태(state of war)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별도의 구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유럽이 공유하고 있는 화해의 경험이 아시아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소위 헬싱키프로세스(CSCE→OSCE)의 동북아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²¹⁹⁾중심적으로 언급한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 안보-안보교환 틀이라 본다. 동북아 평화협력 대화의 착수한다는 것이다. 동북아협력안보기구 구축을 통해 북한이 변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이

215) 조성렬,2013.

216) 「동아일보」,2013.2.25.

217) 「동아일보」,2013.2.25.

218) 「중앙일보」,2013.1.17.

219) 조성렬,2013.

다. 이 전략구상은 유럽의 동서냉전을 완화하고 동서독 통일의 국제환경을 만들어 준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동북아지역에 적용하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²²⁰⁾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의 이해관계국들과 신뢰구축,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서울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²²¹⁾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이 일단락되면, 북핵상황의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를 모색한다. 역내 해상영토분쟁과 과거사문제 등의 갈등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대화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과 더불어 ASEAN(남아시아 포함) 및 EU(중양아포함)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3각협력 구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EU 정례 정상회담, 한·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SAARC) 외교장관회의, 한·중양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하고 한·중양아 정상회의의 개최를 추진한다.²²²⁾ 국내외 안보환경의 현주소와 변화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을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하였다.²²³⁾ 그러나 정치군사적 대치국면속에서 교류협력확대되는 절충적 국면(남북관계개선/군사적 긴장완화, 북한비핵화/한반도평화체제추진, 경협확대/인도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나 북한이 핵실험으로 이것도 쉽지 않다.²²⁴⁾ 더욱이 미국이나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마지막에는 북한의 핵보유국을 묵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핵포기가 아니라 핵확산방지에 주안점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IV.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전망

1. 한미관계

외교부는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구현'을 외교비전으로 삼아,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을 핵심목표로 제시하였다. ▲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220) 조성렬, 2013.6자회담을 토대로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E-NEA)를 수립하여 탈냉전기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의 대립구도를 완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안보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221) 조성렬, 2013.

222) 조성렬, 2013.

223) 박근혜대통령당선인, 2013.1.18 중국특사 보내면서.

224) 박근혜대통령당선인 커트캠벨 국무부차관보 등 미국 정부 합동 대표단 만나면서(2013.1.16)

중견국 실현, ▲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²²⁵⁾

금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 정상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 양국 간 북핵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정책적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 60년의 연륜을 쌓은 한·미동맹의 미래발전·강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양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 글로벌 이슈영역에서의 양국 간의 파트너십도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이다.²²⁶⁾

그동안 미국주도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안보리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북핵 제재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UN 제재 반발하면 북한은 또 핵실험하고 여전히 북핵문제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에는 반드시 누적되어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주도의 UN 결의안의 의의라고 본다. 만약 UN 이 제재결의안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불법핵실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UN 은 심판자로서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있은 후 5일후에 1718 결의안이 선포되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후 18일만에 1874 결의안이 나왔고 2012년 12월 로켓발사후 40일 만에 2087결의안이 나왔다. 이번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후에도 마찬가지로 UN 결의안을 3월8일 2094호로 만들어 냈다.

이번 결의안은 '캐치-올'(Catch All: 저인망식 압박)과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영리하고 치밀하게)가 특징이다. '캐치-올'은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검문·검색·회항 조치를 취하라는 뜻과 민수용 물자이지만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스마트-제재'라는 것은 제재방법을 영리하고 치밀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²²⁷⁾ ▲유엔 193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거래, 은행계좌개설 등 금융현상을 포착하여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탑재한 선박을 검색하고,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의 입항을 거부한다.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 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각국에 나와 있는 북한외교관들이 벌일 수 있는 외교행랑 등을 통한 자금 수송,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 북한으로의 무기수출금지에 관련 부품도 제재한다(catch all). ▲북한 고

225) 외교부, 「2013 업무계획보고」.

226) 외교부, 「2013 업무계획보고」.

227) <http://www.newstown.co.kr> (2013.3.9)

위층을 겨냥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각종 보석류, 희귀 금속 등의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북한유입을 차단한다. ▲ 북한 단체 19개 및 개인 12명에 관련된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금지시킨다. 이번에 단체 2개와 개인 3명이 더 추가됐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 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나서겠다는 조향도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트리거'(trigger·자동 방아쇠) 조향으로 해석할 하는 모양이다.²²⁸⁾UN 이 강대 강 대치구도를 조성했지만 강도 높은 북한의 도발위험성의 가능성은 높다. 최근 북한은 다종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HEU) 등이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인정 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표 3> 유엔안보리 결의안 비교

228) <http://www.newstown.co.kr> (2013.3.9)

	결의1718호(2006년10월14일)	결의1874호(2009년6월12일)	결의2087호(2013년1월22일)	결의2094(2013년3월8일)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 전차-장갑차-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사치품 등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 *북한은 위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만이 이 품목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는 물론 무기 제조나 유지를 위한 금융거래, 기술훈련 및 자문 등도 금지한다. *북한은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는 물론 무기 제조나 유지를 위한 금융거래, 기술훈련 및 자문등을 중단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이와 관련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 안 보 리 는 1718,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2012년 12월12일 미사일발사를 규탄. *북한이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핵 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도발도 하지말 것을 요구. *제재대상인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발원자,의도된 수령인 또는 조력자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그 물품의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제재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1718,1874호상의 조치 위반을 개탄하며 결의에 의한 금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관련국들의 적절한 조치의 수용성을 강조.*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회담의 재개를 촉구.*북한의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	1. 유엔 193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거래, 은행계좌개설 등 금융현상을 포착하여 의 목적으로 차단. 2.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탑재한 선박을 검색하고,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의 입항을 거부. 3.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 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 4. 북한외교관들이 벌일 수 있는 외교행방 등을 통한 자금수송,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 불법행위 차단. 5. 북한으로의 무기수출금지에 관련 부품도 제재. 6.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 차, 각종 보석류, 희귀 금속 등의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북한유입을 차단. 7. 북한 단체 19개 및 개인 12명에 관련된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금지. 8.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
화물 검색	*모든 회원국은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운반수단 등을 막기 위해 북한발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한다.	* 모든 회원국은 위에 언급한 항목에서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행 혹은 북한발 화물을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와 공해상에서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경제 제재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금융자산을 즉각 동결한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자 료) 「동아일보」,2013.1.24;3.9; <http://www.newstown.co.kr> (2013.3.9)

북한은 이것으로 군축협의를 시도할 것이고 한반도비핵화대가로 북한 경제지원 방안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과는 핵확산이 뻥하다.

유엔 차원 제재와 별도로 한미일 양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은 단호한 대응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은 더욱 고립시킬 전략을 갖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핵실험규탄을 하였다. 동맹국들을 핵우산으로 더욱 강하게 연계할 것

이다. 미국중심으로 미사일방어강화, 금융제재, 금융기관 제재 등이 가해질 것이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오바마, 시진핑, 푸틴, 아베, 그리고 박근혜 5인이 북한의 제재에 공조하여 북한이 핵개발로 더 이상 얻을게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2월 12일 핵실험으로 남한과의 비대칭 전력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핵억제력을 위해 일각에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개발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도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우리도 핵개발 핵개발을 외쳐서 미국이나 중국에게서 더 얻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평화의 협력을 얻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성공이다. 한미동맹-한미일동맹-UN공조체제가 최선이다. 평화와 전쟁국가, 선과 악이 선명해졌다. 핵무장으로 북한은 더욱 고립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정과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변경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대통령도 유화정책이 아니고 강력한 억제정책이라고 하였다. 북한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지만 강온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처럼 우리도 이중전략을 병행해야한다. 대상, 주체, 전략이다. 대상은 북한당국과 주민을 구분하고 주체는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를 구분하고 전략은 고강도와 저강도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규모를 조정하면서 지렛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핵억지력강화와 식량경제 지원은 다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한중관계

중국은 지난 2월 12일 핵실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추가제재결의안에도 적극 동참하여 3월 8일 2094호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 억지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이어 중국이 UN 안보리 2094 제재안에 대해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힘들다. 다만 중국이 꺼리는 것은 북한의 불안정이기 때문에 협력모양새를 갖추고 북한 끌어 안기를 하고 최소한의 제재를 요구를 실천할 것으로 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냉정하게 대응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 중국 지식인들은 북한에 석유나 공산품 등 원조중단을 요구했다. 중국도 경제원조규모를 축소하거나 핵확산이용 운송수단 제재에 참여할 것이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 다양한 수준의 전략대화 채널을 심화·확충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 양국민간 유대감 및 신뢰증진을 위해 인문유대의 강화, IT 등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확대, 양국 간 교역 3,000억불 조기 달성 등 경제·통상 관계발전 및 지방과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 발전비전을 정립하여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으로 나아가

한다.

지난 2월 12일 3차핵실험 이후 최근 중국인이나 중국정부의 대북한정책에 변화 모습이 보여진다. 앞으로 중국인 북한핵실험반대시위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만의하나 백두산화산폭발과 핵재앙이 발생하면 3억의 동북3성 중국인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중국당국은 아니더라도 동북삼성의 중국인들이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 중국 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하한 사이의 강남스타일 말춤 추는 동영상 광고까지 등장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인터넷 기업 진산(金山)이 자사가 새로 출시한 웹브라우저 레바오(獵豹:치타)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 광고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²²⁹⁾ 중국에서 김정은을 풍자하는 노래에 이어 광고까지 나온 것은 일반 여론이 북한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일부 중국인은 북한이 625전쟁 때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운 혈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수는 중국 발전의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⁰⁾

어쨌든 본질적으로 북한 핵개발의 지속적인 실험은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전략으로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2013 외교부업무계획보고).

3. 남북한 미스매치해소

문제는 남북한의 본질적으로 미스매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핵문제(북한은 지속적으로 개발), ▲통일문제(북한중심의 통일), ▲민족문제(김일성족통일을 의미) 등 남북한이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남북상호간 정책목표가 상이하고 상호관심이 불균형을 이루어 획기적인 국면 전환은 어렵다.²³¹⁾

만약에 중국의 흥과 전처럼 군사노선과 실용노선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3가지 측면에서 이중전략을 구축해야한다고 본다. 첫째, 주체측면이다. 정부와 민간. 대화주체- 당국과 비당국, 정부와 민간- 둘로 나누어 활용하자. 북한은 민간이 없어도 그것이 민간인 것 처럼 교류나 접근 필요하다. 예컨대 정명훈 방북 문화교류, 정대세 한국프로팀참가, 금강산은 폐쇄하나 개성공단 지속(524조치 처리문제 쟁점) 등이다.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과 입주기업확대 추진전망 등이다. 우리 정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쇼맨쉽에는 쇼맨쉽으로 대응하자. 알면서도 주는 것 없이 속아만 주자. 무리한 요구는 못들은 척하자. 앞으로 대북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할 것이다. 둘째, 대상측면이다. 북한 김정은과 북한주민을 구별하여 정책을 세운다. 셋째, 전략(유연성, 강도)측면이다. 강 온 전략 대비 구분하여 준비한다. 예컨대, 군사적 대립의 경우는 군사적 대립으로, 비군사적 대립인 경우는 비군사적 대립으로 구

229) <http://v.youku.com/v-show/id-XNTE1Njk4NTky.html>. 「동아일보」, 2013.2.25.

230) *Washington Post*, February 23, 2013.

231)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1.4.

분하여 교류, 접촉 등이다. 또한 정치와 경제, 다자와 양자 등이다. 군사도발, 인권문제, 주민식량문제 구별하여 접근한다(분배투명성, 이산가족 상봉확대...). 북한전략에 말려들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군사도발이나 인권문제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북한은 북한 내부정치를 위한 종속변수로 대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어 항상 남북관계는 수박 겉핥기처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부터 시정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아마도 매번 정권마다 이문제가 해결안되니 그저 생색내기 1회성 업적쌓기에 머물다가 실패하곤 했다고 본다. 결국 북한의 전략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 그리고 북한의 자멸을 위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상대며 오래 버틸 것이다.

1) 남한내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한목소리 단합, 북한내부의 민주화, 북한내부의 주민의 저항,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의 중국인들의 반복한 시위, 5자회담, 국제공조 등 북한 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통일, 민족, 핵실험, 미국 등에 대한 인식에서 그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전쟁중이고 1930년대 항일빨치산 투쟁시기에 머물러있다. 우선 북한 스스로가 세계변화를 인식하고 북한 스스로가 미스매치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대할 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강력한 제재해야 되며 여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에는 국제사회가 제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사관-핵보유국 헌법에 명시- 북한은 나홀로 전쟁중인 국가이다. 3대세습 정당성에는 수단으로 핵개발이 활용된다. 김정일유훈이기도 하다. 우주화신격화, 영웅화 수단도 핵과 로켓트이다.

2) 만약에 남북한 당국의 만남 또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북정책 실효성 기준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주민이 좀 나졌다는, 행복해졌다는 컨텐츠나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미래 통일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탈북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배려와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표 4> 통일부와 각 부처간 협업과제

각 부처간 과제	협업과제	주관부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적립	탈북민 정책총괄	통일부
	일자리마련	고용부/중기청
	통일인재육성	교육부
	해외탈북민 보호	외교부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정비	통일교육방향설정 및 지원	통일부
	정규교육과정 강화	교육부/교육청
	통일인식제고	일선학교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협의	FTA 환경조성 및 협상방향 결정	통일부
	FTA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FTA 국내 이행법제정	기재부
	FTA 관련 법제 집행	관세청

(자료)(자료) 통일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2013.3.27)

남들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정상회담 할 수 있었다. “한국의 12월 대선전 만나자 남북접촉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테니 남측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선이 끝난 시점에도 북한으로부터 접촉제의가 있었으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만나주는 것 자체를 시혜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 결국 회담 불발의 본질적 이유라고 MB 정부 천영우 수석은 말한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2009년 가을 정상회담을 타진해왔고 정상회담 대가로 5-6억 달러규모의 현물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됐다는 것이다.²³²⁾

“2012년 10월 사소한 뼈라(전단)살포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다.”²³³⁾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북한 당국이 관찮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야, 김정은이 부인을 대동했다고 해야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복과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정상적인 변화의 진전이 없었다. 매번 대통령의 정치적 이슈로 정권의 한탕주의에 머물렀다. 무슨 선언이니 무슨 협상이니 오랫동안 끌어 뉴스거리나 만들었지만 결국 북한주민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3) 더 이상 북한에 속지 말자. 헛되게 주지는 말아야 한다. 대화와 비핵화 투트랙을 전개하려 한다면 차라리 속아주는 척하고 협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북한처럼 이중성 전략의 투트랙전략을 구사해야한다. 북한에 작은 것을 주고도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생색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협력전략도 역발상으로 활용하자.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온정적으로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정교하고도 철저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편 2.28 북핵합의(2012년)재건 노력, 919 6자 공동성명(2005),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미북관계개선, 동북아평화협력 추진 등등이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의 핵무장고수와 위협적인 군사적 태세유지로 평화체제구축 진전은 어렵다고 본다.²³⁴⁾

232) 「동아일보」, 2013.2.26.

233) 「동아일보」, 2013.2.27.

4) 박근혜정부는 다방면에서 다양한 지렛대를 만들어야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렛대를 만들어야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프리카, EU, 아세안, UN, 국제기구 등 북한이 교류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의제나 주도권 선점등의 조건을 통해 우리말을 들어야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도 지혜롭고도 명철한 철저한 봉쇄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핵포탄은 국제공조탄, 국민단합탄 우리의 핵폭탄, 북한인권탄, 심리전(정보주입, 선전, 빼라)탄, 천지폭발탄, 정체성(헌법)강화탄 등이 되어야한다. 특히 라디오, TV, MP3, USB, CD, 전단지(빠라)등을 통해 북한내부에 외부정보를 유입 유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²³⁵⁾ 2400만명 북한주민이 인질이라면 김정은 노동당 권력집단은 인질범이다. 설사 인질범에게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일정부분 보상의 대가가 있어야한다. 바로 인질인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공급, 삶의 질 증대나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라 본다. 이것을 분명한 이득이라 인식하고 대북대외나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부터 논의된 북한인권법은 18대에서도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19대 국회출범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촉진되고 인도적 지원이 체계화되며, 북한 스스로 인권침해행위를 억제하도록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²³⁶⁾

오히려 북한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남남분열탄이다.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월등한 연합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 내구성을 이완시키는 레이건 방법론을 박근혜-오바마행정부에서 더욱 강화하겠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3차 핵실험직후인 2월 15일 '공세적 봉쇄정책'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²³⁷⁾ 2013년 2월 21-22일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국 주도 연합방위 태세로의 전환,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연합군사능력 증강 등 대한 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을 집중논의 했다.²³⁸⁾

5) 한국의 독자핵무장은 대안이 아닌 것 같다(전 세계국가가 대부분 핵무장을 한다면 몰라도).우선 선제타격(킬체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자.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KAMD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이것이 어려우면 결국 미국의 MD와 핵우산강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른 한편 과연 중국과 친해지는 것과 핵무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비핵화를 깨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 일본이나 대만이 핵보유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 한번 핵개발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도 더 이상 건설하지 말라면서 가공할 비용의 핵개발을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기조

234)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2013.1.4

235) 보훈교육연구원, 『호국과 보훈』(2011),p.87.

236) 통일부, 『통일백서』(2013),pp.30-31.

237) 「동아일보」,2013.2.25.

238) 「동아일보」,2013.2.25.

의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을 의미한다. 한미동맹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문제에서 차별화도 없어지고 경제문제에도 부담이 있음을 각오해야한다.

6) 문제는 친북세력은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전쟁도발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주장에 동조한다면 이는 반평화주의자에 불과하다. 전쟁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은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당한 국제공조에 하나이다. 이것이 마치 북한 김정은의 전쟁도발을 유도하는 것처럼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북한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전쟁도발의 협박공갈을 자행해도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북한문제에 있어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야한다. 오히려 대남도발협박에 대하여 언제나 북한권력층이 결과적으로는 곤욕을 치루도록 고생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가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평화적인 국가이고 친한 국가라는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이 속이 시원해지고 대북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지혜롭고도 통쾌한 대북전략이 박근혜정부에서 중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평화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은 동북아정신을 구축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하루속히 열린민족주의, 개방개혁추진, 인권신장, 민주화추진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논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이중적, 호전적, 이기적, 폐쇄적, 국수적인 국가로는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왜 북한만 정상국가나 민주화, 그리고 개방개혁의 변화의 바람이 비껴가야 하는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주장에 의하면 김정은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북한붕괴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변화의 많은 시나리오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독처럼 탈출-반정부저항-통일합의로 갈 때에만 좋은 의미의 북한붕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탈북자가 증가되는 것도 북한 민주화변화의 아주 작은 실천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향후 자유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북한주민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변화없이 북한은 절대로 발전이 없다. 위에서 변하든, 아래서 변하든 반드시 북한은 탈김일성주의, 탈태양족, 탈전체주의, 탈독재정권의 변화로 가야하며 민주화방향이 북한의 살 길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신의 아들이 아니며 신이 아니다. 인간을 신의 경지로 올려놓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야만시대이나 존재했던 제왕적 권력독점을 북한식으로 포장하여 인민을 억압하는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의 다른 방식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3대세습의 독재체제구축 중단, 폐쇄적 민족주의 탈피,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실험을 포기하고, 한국, 미국과의 평화적 대화에 나서야한다. 중국은 이러한 진정성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유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 길드림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길드려야 국제사회나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한발짝이라도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사일과 핵포기인데 3대 세습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은 불가능(전쟁 방법 외에는)하다. 그저 일상적인 교류, 부분 교류, 작은 교류에서 전면교류, 개방 교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중국과의 교류정도면 전면교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궁극적인 통일대비는 해야한다.

북한의 3대세습독재체제, 김정은 영웅화, 이상화, 신격화 중심에는 핵이 있다. 계급사관-유물사관-전쟁사관-핵사관 으로 바뀐 것이 북한이다. 물론 전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항상 북한은 도발적 공격적인 공갈협박을 서슴없이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에서 핵은 곧 김일성이고 김정일며 김정은이다. 핵이 없으면 김정은도 없다.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돌아버리거나, 북한의 주민이 민주화혁명을 일으키거나 하기전에는 북한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 박근혜정부, 반기문UN사무총장, 그리고 오바마 미국대통령 등이 일련에 대화제의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활한 술책이라고하며 대화제의를 거부하고있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철수와 함께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극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이중적, 호전적, 이기적, 폐쇄적, 국수적인 국가로는 선진국가와 지도자국가 민주주의모범국가가 될 수 없다. 남북한 국가간, 기업간, 시민단체간 그리고 대학간 협력체계구축, 역사정리, 문화교류 등을 통해서 김정일사후 북한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력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경제와 교류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 모든 국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UN과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북한보다는 한국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이기는 마지막 수단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제공조 외교전략에 자신이 있다면 6자회담보다는 5자회담도 추진해 봄직 하다. 북한은 핵이고 한국은 국제공조다. 북한은 테러국이고 한국은 평화애호국이다. 북한은 인권탄압과 굶주림의 국가이고 한국은 삶의 질이 높고 자유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가야만 북한을 이기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나가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북한핵폭탄에 대해서는 오천만이 하나가 되는 국민단합만이 북한을 이기는 우리의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1. 국문단행본

- 김명배, 『주체의 봄은 오는가』(서울:수서원,2012)
김성보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서울:웅진씽크빅,2009)
김창희, 『김정일의 딜레마』(서울:인물과사상사,2004)
백학순, 『북한군력의 역사-사상·정체성·구조』(파주:한울,2010)
벤자민바아버, 박재주역, 『강한민주주의Strong Democracy』(서울:인간사랑,1992)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서울:을유문화사,2000)
송호근, 『한국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3)
안성호, 『북한의 위기, 기회 그리고 선택』(파주:한국학술정보,2009)
_____, 「청소년 안보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콘텐츠개발」(행정안전부 정책용역,2010)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서울:늘품플러스,2010)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한울,2011)
정영훈,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2005, 공저.
조순래외, 『북한용어소사전』(서울: 연합뉴스,2003)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서울:휴머니타스,2002)
최진욱외,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서울:통일연구원,2012)

2. 논 문

-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쉽변화: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5집 5호(2011 겨울)
김영호,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화방안,”미래기획위원회·한국국방연구원, 『미래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2009)
김흥규, “북중 관계 전망과 과제”한반도 포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박명림, “남북관계: 거시와 미시, 구조와 정책의 한 융합 접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박영호,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포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방현섭, “대북 인도주의 정책,”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서보혁, 이유진, “미북간 인권분쟁의 이념적 기초: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제2집1호 (2006.6)
신상진, “김정일 방중의 영향과 대책,”민주평통 「제14차 월례정책포럼」(2010.5.12)
안성호, “민족주의관점에서 본 김정은체제전망,” 충북대,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

2호(2012.12)

- ____, "김정은체제와 북한의 대내정책전망,"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2012.6)
- ____, "북한위기에 따른 국가위기관리방안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2호(2009.6.15)
- 양문수, "대북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 양우석, 김태건, 『스틸레인』 (서울:자음과모음,2012).
- 유호열, "김정은의 세습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한반도 포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공동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 윤덕민, "2013년 북한정세전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2013.1.30)
- 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프로세스」(2013.2.28)
- 이상복,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전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2012.12.11)
- 이정철, "북한경제: 개혁개방의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포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 임혁백, "김정일 이후 시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회의, 「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2012.2.2)
- 전봉근, "3차 북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2013.3.6)
- 조성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추진전략,"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 남북경협」(2013.2.28)
- 평화문제연구소,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연구:발생론적 민족관과 발전론적 민족관," 「통일문제연구」(2010)

3.기타자료

- 민주평통, 「박근혜 정부 출범과 민주평통의 역할」(청주시 협의회,2013.4.17)
- 보훈교육연구원, 『호국과보훈』(2011)
- 외교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2013.3.27)
- 외교통상부, 『2011외교백서』(2012)
- 외교통상부, 「2012-2013년 정책과제 보고서」(2012).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주요국제문제분석』(2013)
- 통일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2013.3.27)
- 통일부, 『통일백서』(2013)
- 통일부, 『신년공동사설분석자료』(2012/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13)

통일연구원,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보고서」(2013)
 하라이히사시, 백계문·이용빈 역, 『김정일체제』(서울:한울아카데미,2012)
 아시오 나오히로 역음:이계황 외 역, 『새로쓴 일본사』(서울:창비,2003)
 와다하루키,서동만 남기정역,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파주:돌베개,2009)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시사저널」
 「뉴스시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2012-2013)
 「자유북한방송」 (한국 2012-2013)
 「노동신문」, 「2012-13년 신년공동사설」
 「조선신보」2013.
 『環球時報』(2012-2013)
 OECD통계연보 (2005-2013)
 Park Geun-hye,"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Oct,2011.
TIME, April30,2012
TIME Almanac 2012
Washington Post, February 23,2013.

4.인터넷자료

<http://news1.kr/articles> (2013.3.15)
<http://www.edaily.co.kr> (2013.1.18)
<http://www.org/aboutun> (2013.2.8 검색)
<http://www.asiafoundation.org> (2013.2.12검색)
<http://www.oecd.org> (2013.3.10검색)
<http://www.org/aboutun> (2013.3.19 검색)
<http://www.asiafoundation.org> (2013.3.13검색)
http://www.eiu.com/public/democracy_index (2013.3.23)
<http://www.newfocus.co.kr/>(2013.3.9)
www.house.gov/international (2013.3.20)
<http://news.hankooki.com> (2013.2.28),
<http://www.chosun.com> (2013.2.15 검색)

<http://v.youku.com/v-show/id-XNTE1Njk4NTky.html> (2013.2.28검색)

<http://www.newstown.co.kr> (2013.3.9 검색)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의 개념적 재검토: 신정경분리 모델을 중심으로

성기영(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3. 적대국 외교에서 정경분리의 사례 검토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정경분리: 신정경분리 모델
5. 맺음말

논문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은 박 대통령이 표방했던 '북핵 불용'과 '경제 교류 재개'가 공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차대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정경연계' 원칙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경분리' 원칙으로 복귀할 것인지를 놓고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정경분리와 정경연계를 놓고 벌어졌던 대북정책의 논쟁점을 국제정치이론적 맥락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비교사례연구적 맥락에서 검토한 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조응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신정경분리'라는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정경분리'는 정부 주도의 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을 분리하여 전자의 경우 안보 및 북핵 문제와의 탄력적 연계를 제안하고 후자의 경우 민간사업에 대한 능동적 방관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후반 정경분리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 명시되었던 두 가지 원칙, 즉 정치상황과 불연계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 자율추진 중 후자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정경분리' 원칙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남북경협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업적 교역의 상대적 비중이 아닌 절대적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신정경분리, 탄력적 연계, 능동적 방관, 상업적 교역

1. 들어가는 말

'정경분리' 개념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관리해왔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험과 '정경연계'를 수단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왔던 김영삼·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일정한 수렴 과정을 거쳐 남북경협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통해 남북경협사무소 개설과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유엔 제재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공약의 전면적 이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대북 경협 확대 약속과 핵위기와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인을 어떻게 양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중차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립되었던 '정경분리' 노선은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정경분리 노선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는 주로 대만-중국간 양안관계나 동서독간 내독 교역의 사례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채택했던 외교정책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교류의 주체가 되는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인식 및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양적으로도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비상업적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남북 경제교류에서 상업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 교류가 상업적 이익의 추구를 넘어서 남북관계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등한시되어 왔다. 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기대감에 근거한 경제평화론은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한반도에서조차 제대로 입증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반복해 왔다. 반면 '대북 퍼주기 비판론'으로 표현되는 강압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정경연계'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의문만을 불러일으켰을 뿐 타당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입지를 굳히지 못했다.

한편 민간 경협의 확대를 위한 북한 측 여건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일방적 조치로 인해 외부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개성공단 국제화와 경협 사무소 개설 같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몇 걸음 후퇴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엄혹할수록 '정경분리'나 '정경연계'냐에 대한 본질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 또는 안보와 경제 중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한 쪽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접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국가 간 군사적 대결과 교역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기존 연구 결과는 군사적 대결 또는 불안정 상태가 해당 국가 간 교역 관계에 결정적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²³⁹⁾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간 갈등이 교역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증대시킴으로써 교역 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교역량을 줄어든다고 한다는 주장을 폈다.²⁴⁰⁾ 반면 현실주의 진영에서는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이 표면화할 경우 교역으로 인한 적대국의 상대적 이익 (relative gain)을 우려해 적어도 양국 중 한 나라가 교역량을 줄이려 하는 유인이 생긴다는 이론을 전개해 왔다.²⁴¹⁾ 국가간 교역이 평화 구축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벌어진 논쟁은 군사적 갈등이 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교역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정치사상에서부터 노먼 앤젤(Norman Angell)의 교역만능론, 로버트 커헤인(Robert Keohane)의 '상업적 자유주의론' 등이 자유주의적 흐름을 대표한다면 엘리 헤셔(Eli F. Heckscher)나 제이콥 비너(Jacob Viner)가 보여준 중상주의적 정치사상에 기반한 경제적 의존의 갈등 유발효과는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와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와 같은 현실주의 이론가들로 이어지면서 교역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명제의 탄생으로 이어져왔다.

결국 경제적 상호의존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조차 국제정치학의 양대 이론 모두 교역 종사자들이 상품의 가격과 품질 뿐 아니라 해당 국가 간 정치적 대결이나 외교적 노선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결론을 내려온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에 있는 국가들은 정치군사적 갈등이 생겨날 경우 발생하게 될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간 교역이 정치군사적 갈등의 억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이러한 이론적 전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책적 선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239) Katherine Barbieri and Jack S. Levy, "Sleeping with the Enemy: The Impact of War on Trad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6 no.4 (July 1999).

240) Brian M. Pollins, Conflict, Cooperation, and Commerce :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on Bilateral Trade Flo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Summer 1989) pp. 737-761; P.A.G. Bergeijk, *Economic Diplomacy, Trade, and Commercial Policy : Positive and Negative Sanctions in a New World Order*. (Vermont: Edward Elgar, 1994).

241) J.M. Grieco,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로 작용해 왔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중요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경협 규모의 문제, 경협을 통해 북한의 태도가 어느 시점에서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것이냐와 관련한 이른바, '임계점'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와 구두 비난으로부터 전면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빚어질 수 있는 정치군사적 갈등의 정도를 또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경제평화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²⁴²⁾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교역의 증대로 인한 이익이 정치적 적대국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대결 상태를 강화하고 외부 요인이 작동하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마저 높일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기존의 교역 중단을 통해 상대국의 정치적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정경연계' 전략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최근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춰보면 현실주의의 예상은 빗나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 이후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경연계'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효과를 통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남북교역액이 급증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경연계' 전략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연계 정책의 '특정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경제와 안보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슈 영역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폐쇄시켜 버렸다는 점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셋째, 대중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연계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뛰어넘는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으므로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²⁴³⁾

경제행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이슈 연계 전술은 그 특성상 정치군사적 외교 수단에 비해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직접적이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식적이기 보다는 무의식적인 결과의 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²⁴⁴⁾ 문제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아래 추진되는 연계 전략이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한국 정부구조의 특성 아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었던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들, 즉, 연계 정책의 전략적 목표 합의 부재, 다양한 이슈 공존 전략 미흡, 그리고 장기적 일관성에 기초한 대북 접근

242) 김용호, '대북정책과 국제관계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002, pp.135-153.

243) 성기영,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 '교환 모델'과 '축매 모델',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pp.269-294

244) Ernst B. Haas, "Why 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vol.32, no.3 (Autumn 1980); Robert Randle, *Issu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87).

한계 노정과 같은 문제점들을 남기며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있어서 강경이나 온건이나, 포용이나 강압이나는 정치적 구분을 넘어서 남북 교역에 관한 남북관계는 이미 역진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듯 보수적 정치 세력과 여론의 지지 기반 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남북관계 개선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정경분리를 통한 적극적 개입 정책과 정경연계를 통한 소극적 개입 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일정한 수렴 과정을 거쳐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연계 과정에서 드러났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방식에 기반한 대북 개입 정책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되는 한 북핵위기는 물론 남북간의 소규모 군사적 행동들에 의해 그동안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추진되어 온 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마저도 암초에 부딪치거나 좌초해 버리는 사례를 앞으로도 수없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정경분리나 정경연계나 하는 정책 논쟁은 자유주의-현실주의를 가르는 이론적 논의처럼 교역이 안보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역이 상대국가에 미치는 정치군사적 구체적 '효과'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경연계론자들의 주장의 기저에는 교역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상대국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비경제 (external diseconomy) 효과가 생겨난다는 전제가 담겨있다. 그러나 정경분리론자들은 교역으로 인한 이익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를 부인하며 화폐는 어느 경우에서든 대체성(fungibility)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⁴⁵⁾

다시 말해 상대국과의 사이에 안보 위기가 증대될 경우 교역의 단절을 통해 상대국의 안보 자원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교역은 지속하면서 안보 위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적대국 외교에서 정경분리의 사례 검토

중국과 대만은 정부 당국간 접촉과 대화 없이도 민간기업 및 단체 간 교류를 통해 정경분리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사실상의 경제통합 단계에 들어선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중국과 대만 양국의 정치 군사적 분쟁은 1967년 무력 충돌 중단 이후 최근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대만은 중국

245) Lim Won Hyuk,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a crossroads' IFES Forum, 06-11-15-1.

에 937억 달러를 수출하고 중국은 대만에 437억 달러를 수출하는 실적을 보여 1979년 최초 교역이 시작되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대(對)중국 수출은 4,260배, 대(對)대만 수출은 781배가 늘어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양안 교역에서 주목할 것은 양국 기업간 협의 채널을 담당해 온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대만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해협회(海協會)와 같은 조직들의 역할이다. 대만에서 민간 경협을 담당하는 중개기구로서 1990년말 해기회가 설립되자 1년 후 중국이 해협회를 결성해 양안간 교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해기회와 해협회는 이후 양안간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장천(江陳)회담에서는 '양보와 실용의 원칙'을 내세워 경제와 무역 분야의 협상에 집중함으로써 2010년 양안경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을 이끌어내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²⁴⁶⁾

중국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일본이 중국과 벌여왔던 교역 형태에서도 민간 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형 무역통제 시스템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이끄는 전후 내각은 당시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직접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대만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심각한 대미의존도를 드러냈다.²⁴⁷⁾ 그러나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요시다 독트린에 근거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이러한 중일교역을 뒷받침하는 배경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역을 이끌어 간 것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었다. 중일교역의 주 행위자를 살펴보면 남북교역에 비해 훨씬 제도화된 형태의 민간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역 초기에는 공산주의 계열의 일본 기업인과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 반대해 온 지식인들이 공산화된 중국과 교역 관계를 트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의회 주요 인사들과 진보적 정치단체들, 재계와 중소기업 지도자들까지도 중일교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중국 교역 증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다시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세이게이(政經) 분리'에 대한 합의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누렸던 특수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수출진흥이 불가피하다는 국내 여론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차원에서 조직된 일중무역진흥협회(JCPTA)나 국제무역진흥일본협회(JAPIT)와 같은 단체들은 공산주의화 직후인 당시 중국과의 교역 흐름을 주도하

246)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제505호, 2012. 9. 14.

247)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역사" (서울: Humanitas, 2012).

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행위자가 아닌 이들 민간단체들과 이해관계자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복층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군사적 대결상태하의 중일교역을 사실상 주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적어도 1950년대 초중반 다양한 형태의 중일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영향 아래서 대중 금수품목 완화 조치가 취해졌다. 당연히 교역량도 최소한 1958년 나가사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⁴⁸⁾

독일의 경우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아데나워는 내독교역을 냉전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동독이 베를린으로의 통행을 봉쇄할 때마다 내독교역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서독 정부는 내독교역이 동독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상황을 우려하였고 정치적 긴장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내독교역을 규제하였다. 동독 역시 자국의 경제건설을 위해 내독교역을 활용하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서독 정부의 무역 규제를 비난하면서 규제대상 목록 완화, 인허가 절차 완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패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내독교역은 서독 정부의 정경연계 정책과 미국의 대공산권 무역규제 조치의 영향 아래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동독의 국가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은 내독교역 관련 협상에서조차 동독 정부와 직접적 교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교역 관련 협상은 경제성 산하 상공회의소 내의 내독무역 신탁사무소 (Treuhandstelle für Interzonenhandel)가 관장하였고 동독 측에서는 대내외 무역성(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이 교역 협상을 담당했다.

내독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초의 베를린 장벽 설치, 1960년대 후반의 수에즈운하 봉쇄 및 소련군의 체코 침공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내독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내독교역이 정경분리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사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의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 사민당 당수가 신동방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브란트 정부는 1972년말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해 무력 포기, 민족문제 접근에 있어 상이한 견해 인정, 대내외적 주권 존중에 합의함으로써 내독교역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²⁴⁹⁾ 이후 내독교역은 양독간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각종 정책적 배려에 의해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이르렀다.²⁵⁰⁾

248) Soeya, Yoshihide. *Japan's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1945-1978*.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9) 한편 요한 갈통과 같은 평화학자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평화정책이 아닌 동독 식민지화 정책에 다름 아니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기술과 원자재를 교환하는 것은 새로운 예측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다』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pp.138-139을 참고할 것.

250) 정지용. “정경분리 정책과 남북관계, 그 의의와 한계: 독일 사례와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2호 (1999), pp.97-124.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정경분리: 신정경분리 모델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로 인한 위협과 합의 국면이 반복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 정부가 보여온 대북정책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분석함에 있어 대북강경책이 추진될 때에는 경협이 정체 국면에 처하고 대북온건책이 추진될 때에는 경협이 활성화된다는 양분법적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²⁵¹⁾ 이러한 구조적 인식은 2차 핵위기가 북한의 최초 핵실험을 향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동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착공에 나서고 북한이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정경분리 방침을 표방하면서 경협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고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4대 경협 합의서 등으로 나타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지난 4월9일부터 북한의 잠정 중단 발표와 함께 조업 중단에 들어가면서 또다른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재확인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착공 이후 10년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측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로 인해 입주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 공단의 존폐 문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단 철수'로 비칠 만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나아가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인식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정부 측의 태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입주 기업들의 입장에서 조업 중단이라는 사태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의 생산 설비를 인접국의 저임금 조건을 찾아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입주 기업들로서는 사업을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기민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한 상호의존에서 민감성 요소 뿐만 아니라 취약성 요소가 크게 증가되었음을 방증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취약성 요소에서도 북한 측 생산 요소에 의존해 온 생산 방식이 관계 단절에 따르는 기회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기회 비용의 증가는 보통 잠재적 협상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잠재적' 협상력이란 보

251) 김용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와 경협의 상호연관성 고찰: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1집 2호 (1995) pp.84-87.

통 '행사할 수 있으나 행사하지 않고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²⁵²⁾

남북경협을 통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의 문제를 논의할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남과 북의 비용 부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한 측에서는 이러한 기회 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는 관계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데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단기적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서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 역할의 구성적 분리와 내용적 부담은 필수적인 요인으로 떠오르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10년전 이맘때에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신정경분리' 구상이 일부에서 제안되었었다는 사실이다.²⁵³⁾ 이러한 구상은 당시 대북 화해협력 정책 지속을 공약했던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핵위기 국면에서 경협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당시 '신정경분리' 구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정치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핵 위기 국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기반 위에서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추가 핵 실험을 거치며 핵 능력을 신장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 프로젝트의 규모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경협과 관련한 한국 측 거버넌스 구조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경분리의 새로운 개념과 형태를 정립하는 것은 현실적 의미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제시된 '정경분리'는 당시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신정경분리'의 현실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남북교역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대북 경제 교류에 대한 시장적 수요가 존재하는 한 남북간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교류가 중단되거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자율'에 입각한 정경분리 정책이 '신정경분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신정경분리'는 이렇게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협 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을 분리하여 정책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또한

252) Baldwin, David A. "Interdependence and Power: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4, no.4 (Autumn 1980), pp.471-506

253) 조동호, '신정경분리' 원칙을 통한 활성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통일경제, 통권 제83호, (2003년 봄), pp.20-27.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인프라 개선 사업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은 안보 및 북핵 문제와의 연계가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때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비탄력적 연계가 보여준 실패 사례 중의 하나가 5.24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⁵⁴⁾ 특히 탄력적 연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이슈 영역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른 이슈 영역의 작동 불능 상태가 야기되는 '부정적 스펀오버 (spillover)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⁵⁵⁾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대해 탄력적 연계가 불가피한 반면 민간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신정경분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 위기 상황과 민간 경협을 연계시키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한 기존의 경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능동적 방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년대 후반 정경분리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 두 가지 원칙이 명시되었던 바 있다. 첫 번째 원칙이 정치상황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두 번째 기업자율 원칙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신정경분리' 원칙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남북경협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업적 교역의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남북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어온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찰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변수는 매년 선거에서 이른바 쟁점 투표 (issue voting)의 양상을 보여주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총풍 사건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쟁점 투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과거 대통령 선거와 달리 양대 후보간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기 경제교류와 안보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생겨난 남북관계의 퇴화 현상에 대해 한목소리에 가깝게 비판하는

254) 성기영,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축매 모델,'"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pp.269-294.

255) Haas and O'Sullivan, "Terms of Engagement: Alternatives to Punitive Policies," *Survival*, vol.42, no.42 (Summer 2000).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더욱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서울-평양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공약하는 등 북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정경분리의 새로운 모멘텀이 열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어떠한 면에서 보자면 한반도적 상황에서 안보 위기와 경제 교류가 교차 공존하는 현실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적어도 남북관계 전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동시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민간 채널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이러한 동시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신정경분리'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와 경험의 상호연관성 고찰: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1권 2집, 1995.
-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다』,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정지웅. "정경분리 정책과 남북관계, 그 의의와 한계: 독일 사례와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3권2호 (1999).
- 조동호. "신정경분리 원칙을 통한 경험 활성화 :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통일경제』통권 제 83 호 (2003년 봄).
-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 협력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98-17,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Baldwin, David A. "Interdependence and Power: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4, no.4 (Autumn 1980), pp.471-506.
- Barbieri, Katherine and Jack S. Levy, "Sleeping with the Enemy: The Impact of War on Trad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6 no.4 (July 1999).
- Bergeijk P.A.G. *Economic Diplomacy, Trade, and Commercial Policy : Positive and Negative Sanctions in a New World Order*. (Vermont: Edward Elgar, 1994).
- Grieco J.M.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Haas, Ernst B. "Why 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vol.32, no.3 (Autumn 1980).
- Haas and O'Sullivan, "Terms of Engagement: Alternatives to Punitive Policies," *Survival*, vol.42, no.42 (Summer 2000).
- Kokubun, Ryosei, "The Politics of Foreign Economy Policy-making in China: The Case of Plant Cancellations with Japan," *The China Quarterly* 105 (March 1986). pp.19-44.
- Randle, Robert, *Issu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87)
- Rose, Caroline. *Sino-Japanese Relations: Facing the Past, Looking to the Future*. (Routledge: Curzon, 2005).
- Soeya, Yoshihide. *Japan's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1945-1978*.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Pollins B.M. (1989) Conflict, Cooperation, and Commerce :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on Bilateral Trade Flo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Lim, Won Hyuk,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a crossroads' IFES
Forum, 06-11-15-1.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 분석: 북한 경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문경연(세종연구소)

목 차

- I. 서론
- II.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 III. 인구학적 변화 추적을 위한 생애주기 접근법
- IV. 생애주기 접근법의 북한에의 적용
- V. 인구학적 변화와 북한 경제에의 함의
- VI. 결론

I. 서론

1995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연구들은 북한 경제난이 야기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정작 북한의 경제난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것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학제간 연구는 많지 않다. 1995년 이래로 지금까지 17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 개개인은 물론이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즉, 1995년 이래로 지속된 식량 부족 사태에 노출된 5~15세 유소년 계층이 18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3~33세로 사회의 실질적 경제활동인구를 형성하는데, 영양학에서 생애주기별 분석들은 유소년이 성장기에 영양부족을 경험할 경우 그 부정적 증상(impact)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당연히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다른 맥락에서 세종연구소가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북한 통계자료집'상의 2003년 북한의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²⁵⁶⁾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 북

256) 2003년 북한의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의 11,797,000명과 69.7%에서 10,340,000명과 61.8%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 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2);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0』 (서울: 통계청, 2010)

한이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한다.²⁵⁷⁾ 하지만 본 논문의 맥락에서 필자의 관점은 1993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이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하나의 설명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한 것은 1995년이나 실제로 1993년부터 식량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난은 199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1993년 이후 지속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영양 부족에 노출된 당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집단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10년 후는 2003년이며,²⁵⁸⁾ 2003년 이 시점에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도 대비 8만명 감소하였으며 북한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된 성장발달 장애와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 저하 혹은 사망으로 인해 급감하였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²⁵⁹⁾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난이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본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인구학적 관점이란 기존의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출생률, 사망률 변화, 기아 사망률 예측 또는 북한 전체 인구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지속된 경제난이 북한 주민들의 성장발달 장애, 체력저하, 지적능력 저하 등의 문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즉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인구수의 증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 때로는 갑자기 혹은 서서히 변화를 초래하며 수십 년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된 경제난이 북한의 인구학적 특성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 유추가 가능하다. 즉 경제난으로 인한 아사자의 증가 및 성장발육 장애 혹은 체력저하는 군 복무기간, 입대시기, 입대조건 및 군사정책 상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감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음으로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침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설명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술적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학제간 영역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북한 경제난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북한 주민들의 성장과 발육에 미친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 융복합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북

청, 2010).

257) 이러한 추정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8) 1993년 당시 5세 유아의 영양실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8년 EU의 영양실태 조사시 1993년에 1~2세였을 유아들의 영양상태가 1998년 조사 당시 만성영양결핍(남: 76.4%, 여:73.4%), 급성영양결핍(남:11.7, 여 4.2%)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5세 미만 영유아의 1993년 영양상태 역시 심각하였을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출처: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259)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필자가 여기서 언급한 2003년의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03년 경제활동 관련 수치에 대한 언급은 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하나의 동기에 해당할 뿐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한 영양상태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학적 영향(demographic impact)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활동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북한 개발협력 정책 모색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량난의 영향력의 분석은 남한 정부 및 시민 사회의 북한 경제난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유엔의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Sub-Committee on Nutrition (ACC/SCN)이 도입한 'Chronic Undernutrition through the Lifecycle' 설명 기법, 즉 '생애주기 접근법'을 바탕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영양결핍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에 근거하여 북한의 영양실태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는 1998년 이래로 UNICEF와 WFP 등이 북한 당국과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북한 영양조사 자료²⁶⁰⁾를 사용할 것이다. 이들 자료는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아닌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 자료로 '생애주기 접근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 영양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1998년 이후 이들 조사 집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영양조사 역시 조사 실시 당해 연도 7세 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분석 대상을 1998년 첫 영양조사 대상이었던 7세 미만의 영유아에 맞추고,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이후 수행된 영양실태조사 자료와 가장 최근의 2009년 자료조사 역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8년 조사 당시 영양부족 상황에 직면하였던 영유아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결과로 인해 초래될 성장발달 장애, 체력저하, 지적능력 저하 등과 같은 인구학적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생애주기 접근법'에 근거한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 분석을 위해 ACC/SCN이 주창한 '생애주기 접근법'의 이론적 맥락을 살펴본 후, 이 접근법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후 이러한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북한 경제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260) 북한의 영양조사 자료로 다음의 자료가 있다: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UNICEF and 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세 부류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율, 사망률, 이동 동태율 추적 등을 바탕으로 기아로 인한 아사자 규모의 추정 혹은 북한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로 이석, Goodkind & West, 좋은벗들, 박경숙의 연구가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는 북한과 국제기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북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이금순·임순희, 황나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본 논문의 목적과 분석 주제를 같이 하는 연구로 특정 시기에 영양결핍 상태에 노출된 특정 집단이 이후에 어떠한 인구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박순영의 연구가 있다.

먼저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지배적인 연구는 아사자 규모 추정을 통한 인구학적 변화 추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약된 가운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아사자 규모의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석은 1993년 센서스와 1998년과 2002년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00년 까지의 기아로 인한 사망자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통계를 이용한 아사자 추정치는 58~69만에 달하며,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수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발육부진 어린이 비중과 조사사망률간 관계 공식에 대입하여 추정한 수치는 63~112만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²⁶¹⁾ 이석의 아사자 추정 연구와 함께 Goodkind & West의 연구는 중국기근시 사망률 및 1998년 북한 영유아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0~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²⁶²⁾ 이 수치는 이석의 63~112만과 겹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치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대북지원 운동에서 시작하여 평화인권운동 단체로 전환한 좋은 벗들이 북중 국경변의 식량난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아사자 규모는 약 300만명으로²⁶³⁾ 이는 아사자 추정치의 최대 수치를 기록하나 연구 방법론상의 비과학성으로 인해 학계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반면에 이들 선행연구가 2000년까지의 아사자 규모 추정에 그치는 한계를 갖는다면 가장 최근 발표된 박경숙의 북한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는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 새터민 증언, 공식통계 등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다양 추정자료와 실제로 북한 경제난이 시작된 1993년부터 2008년까지를 연구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경숙의 연구는 기존의 출산율과 사망자수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이주 인구 규모를 포함함으로써 북한 경제난이 야기한 총체적 인구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동 연구에서 박경숙은 출산, 사망 및 이주로 인한 북한의 인구 손실을 88만명으로 추정하

261)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76.

262) Goodkind, Daniel and West Lorraine,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263) 좋은벗들, 『북한식량난』 (서울: 불교정토회, 1998).

고 있다.²⁶⁴⁾

둘째는 북한과 국제기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북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이금순·임순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이금순, 임순희의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은 국제기구가 북한당국의 협조하에 추진해온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조사 결과 중 2004년 결과를 이전의 영양실태 지표들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의 변화를 추적하였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대북지원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²⁶⁵⁾ 이금순·임순희의 연구가 2004년 한해에 국한된 연구라면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결과를 꾸준히 분석·추적해온 연구로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2002년부터 북한 경제난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및 어린이 건강 그리고 북한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여 왔다. 특히 2012년 발간된 '2012년도 북한 보건의료 연차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국제기구가 실시한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²⁶⁶⁾

하지만 앞의 두 부류의 연구는 북한 경제난이 당시 북한 사회에 초래한 인구학적 충격과 축적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연구이나, 이들 연구의 한계는 북한 경제난이 연구자들이 동 주제 연구 당시 초래된 인구학적 변화를 미래적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아사자 및 인구변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인구학적 변화에서 1차적 차원, 즉 인구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의 영양상태 변화와 이로 인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부류인 영양실태 조사 결과 해석 및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는 이들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원래 자료가 그 생성 방식의 한계상 인구학적 영향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지표들의 수치 자체가 조사 시기마다 새로운 조사대상을 상대로 도출된 수치라는 점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영양상태 지표가 얼마이며 이는 과거에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감한 수치라는 단면적 평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북한 경제난에 노출된 대상이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간이 흐른 뒤 당시 과거 조사 대상이었던 집단을 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는 특정 세대나 계층의 인구학적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번째 부류는 본 논문의 목적과 분석 주제를 같이 하는 연구로 특정 시기에 영양결핍 상태에 노출된 특정 집단이 이후 어떠한 인구학적 특징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박순영은 '영양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신장

264)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 21권 1호 (2012), 150.

265) 이금순, 임순희,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6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북한 연구자료로 다음의 것이 있다: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2002); 『북한 보건의료 실태 보고서』 (2003);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2004); 『북한 여성이 임신 및 출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2005);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 보고서』 (2012).

성적이형성의 변화: 탈북자 자료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해 영양 수준의 변화가 신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해방 이후 남북한간 경제 수준이 비슷했던 시기에 태어난 1955~59년 세대들에서는 남북한간 신장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남북한 경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난 1980~85년 출생 세대의 경우 남한 남녀의 평균신장이 북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⁶⁷⁾ 하지만 이 연구는 단순히 경제난이 신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명쾌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본 논문의 목적과 분석 주제를 같이 하는 연구로 '북한 식량위기의 장기적 영향 평가: 인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연구가 있다.²⁶⁸⁾ 이 연구는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영양부족에 노출된 아이들은 향후 어떠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을 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동 연구가 수행된 시기는 북한 경제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기 어려웠던 2000년에 수행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즉, 지속된 북한 경제난이 북한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2000년 당시 북한 영양상태에 대한 보고서인 EU, UNICEF, WFP의 1998년 영양실태조사자료(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와 탈북 소아과 의사 면담,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전신)의 1998년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영유아들이 미래 처할 수 있는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의 본 논문과 박순영의 연구와의 차이점은 첫째, 본 논문은 2012년 현재까지 축적된 북한의 영양실태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순영의 논의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2000년 당시 박순영이 예측한 인구학적 변화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 '생애주기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특정시기, 특정집단의 영양결핍이 이후 어떠한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며, 이것의 북한 경제에 지니는 함의 도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박순영의 연구와 차이를 가질 것이다.

III. 인구학적 변화 추적을 위한 생애주기 접근법

본 논문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생애주기 접근법'은 영양학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시에 적당한 영양소를 섭취하여야 신체 각기관이 제기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영양관리

267) 박순영, "영양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신장 성적이형성의 변화: 탈북자 자료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44, no. 2 (2011).

268) 박순영, "북한 식량위기의 장기적 영향 평가: 인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2000), pp. 207-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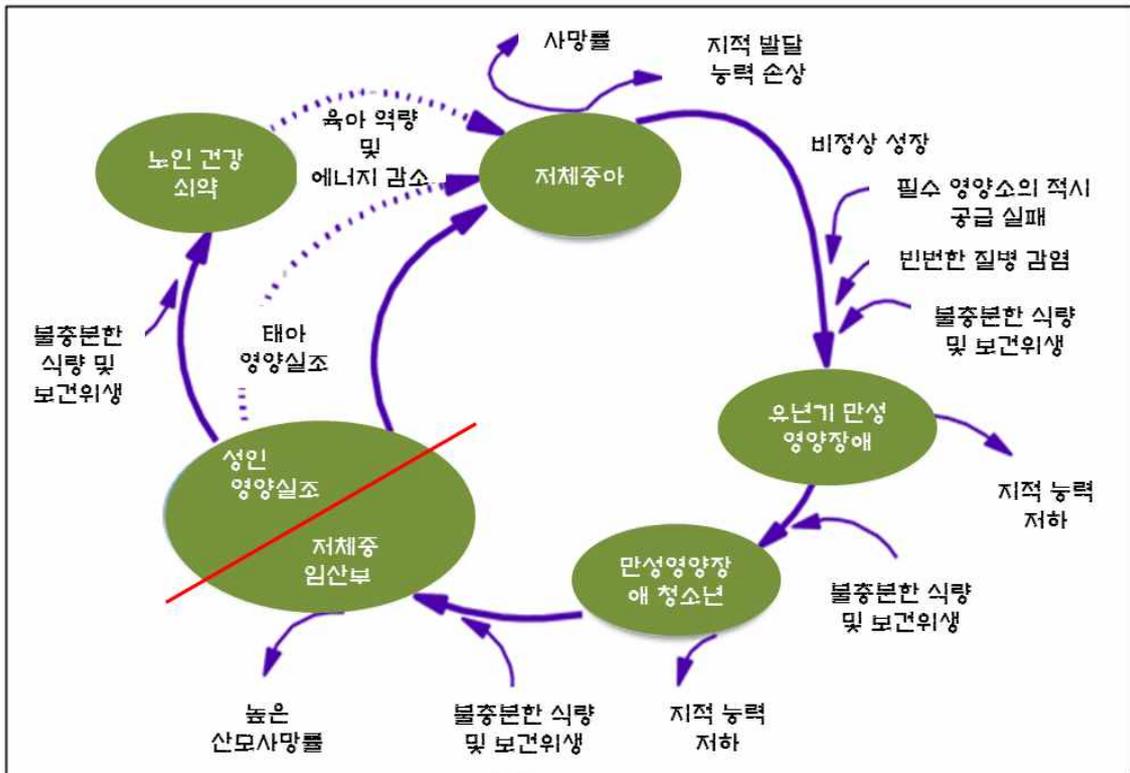
기법을 활용한 접근법이다.²⁶⁹⁾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UN의 ACC/SCN은 빈곤문제가 인간의 생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전지구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응 과정에서 한정된 개발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인간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적시에 그리고 적당한 영양소를 공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 ACC/SCN은 인간이 생애주기에 따라 해당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되지 못하거나, 이후 예전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따라잡기(catch-up)'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경우 인간 생체에 어떠한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부정적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Chronic Undernutrition throughout the Lifecycle (생애주기에 걸친 만성적 영양결핍, 이하 '생애주기 접근법')' 고안하였다.²⁷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개별국가로 하여금 빈곤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본 논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생애주기 접근법'이다.

생애주기 접근법에서 기본 전제는 상황 개선이 없다면 부정적인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세대에도 반복·순환한다는 점이고, 또 분석 대상에 따라 위기가 발생한 시점에 각기 다른 생애주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접근법 상의 분석 시작 시기를 임신 시기로 하여 동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1> 영양결핍의 생애주기별 영향

269) Judith E. Brown, et al., *Nutrition through the Life Cycle*, Fourth Edition. (Belmont, US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270)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출처: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생애주기 접근법은 영양결핍은 태아기부터 시작하여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고난기를 겪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²⁷¹⁾ 즉, 영양결핍은 임신기,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누적된 부정적 영향(impact)은 미래에 태어날 유아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모가 영양섭취 부족 상황에 처하면 태아 역시 태아발육지체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증상을 겪게 되고, 이후 태어난 영아는 높은 유아 사망률의 대상이 된다. 이후 살아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농친 성장발달을 유의미하게 따라잡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발달장애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임신기 미량영양소(micronutrient)의 부족은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요오드의 결핍은 태아의 두뇌 발달 장애나 심할 경우 사산으로 이어진다. 엽산 부족은 신경계 발달 장애나 출산 장애, 조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비타민 A의 결핍은 태아의 출산 후 건강상태, 사망 위험, 시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역학(疫學) 연구는 임신부 혹은 영아기의 영양결핍이 성인시기에 만성적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영유아 시기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감

271)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염 혹은 탄수화물, 철, 단백질, 비타민 A, 아연 등과 같은 중요 영양소의 결핍은 보통 태아기 때 시작된 태아발육지체 증상과 더해져서 유아의 만성영양결핍 (high-for-age: stunting) 증상이나 저체중(underweight)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대개 영양소의 결핍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아능력 (care)의 저하 혹은 보건의료(health) 서비스의 붕괴 등, 세 요소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실패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장발달 장애(growth failure)는 출생 이전시기 부터 2~3살 사이에 나타나며, 5세 이전에 만성영양결핍을 보인 아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신장발달 장애(stunted)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²⁷²⁾

제한적이기는 하나 청소년기는 영유아 시기 신장발달 지체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신장발달 지체를 만회할 수는 있으나 영유아 시기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인지능력 및 행동발달 장애는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만성영양결핍으로 신장발달 장애를 경험한 여자 영유아는 청소년기에도 신장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작은 신장을 가진 성인이 된다. 그리고 성인 여성의 신장발달 장애와 저체중은 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을 높이며, 이 아이는 다시 전(全)생애주기에 성장발달 장애, 인지 및 지적 능력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생애주기 접근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위의 생애주기 접근법의 바탕으로 UNICEF, WFP 등의 국제기구가 북한 정부의 협력 하에 1998년 이래로 2~3년 주기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수치를 이용하여 성장발달 시기에 심각한 영양결핍을 경험한 북한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인구학적 특징을 가지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가 북한 경제에 지니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IV. 생애주기 접근법의 북한에의 적용

1.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과 회복환경의 부재

북한 식량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1993년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1995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처음으로 1998년 EU, UNICEF, WFP는 북한 당국의 협조 하에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²⁷³⁾ 북한 전역의 212개 군 중 접근이 허용된 130개 군에서 30개 군을 추출하여 이 지역의 6~84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 1,88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급성영양장애(신장 대비 체중: wasting)

272) '연령 대비 신장'로 나타내는 스텐팅(stunting)은 나이에 따른 적절한 키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이는 지속적인 영양 부족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여 '만성영양결핍'의 지표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만성영양결핍은 외형적 특징은 짧은 신장을 의미한다.

273)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15.6%, 만성영양장애(연령 대비 신장: stunting) 62.3%, 저체중(연령 대비 체중: underweight) 60.6%으로 나타났다.²⁷⁴⁾ 이 영양실태 조사 결과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가 1998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영양결핍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의 급성영양장애 18%)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²⁷⁵⁾ WHO가 제시하고 있는 각 영양장애 유병율의 중증도에 대한 분류체계에 근거했을 때도 당시 1998년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결과는 매우 심각(very high)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5세 미만 영유아의 영양장애 유병율의 중증도 분류

지표	유병율 중증도 분류(%)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	매우높음(very high)
만성영양장애	<20	20-29	30-39	>=40
급성영양장애	<10	10-19	20-29	>=30
저체중	<5	5-9	10-14	>=15

출처: WWW.who.int.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추적을 위해서는 장기적 영향 평가를 필요로 하며 포괄적인 지표 조사가 가능하여야 하지만 북한은 내부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어렵다. 더불어 2~3년 주기로 실시된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존재하나, 이 역시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6~84개월의 영유아를 새로이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과거 조사 대상이었던 영유아들이 이후 어떠한 영양상태에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대신 이들 주기적 영양실태 조사 자료는 인구학적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 북한의 식량 수급현황, 북한 거시경제지표 등과 함께 '회복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 북한의 경제난과 이것의 인구학적 영향력을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영양학에서 '회복환경'은 특정 성장기에 영양결핍을 경험한 대상이 이후 완화된 환경에 들어서면 과거의 성장장애를 어느 정도 회복(recovery)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⁷⁶⁾

274) Ibid.

275) 박순영, "북한 식량위기의 장기적 영향 평가: 인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2000), p. 212.

276) '회복환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박순영의 논문 217 페이지를 참조. 원출처: J. M. Tanner, "Growth as a Target-seeking Function: Catch-up and Catch-down Growth in Man," in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1 (New York Plenum Press, 1986, pp. 167-180); Martorell R., "Genetics, Environment and Growth: Issues in the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in A. Velaquez ed., *Genetic Factors in Nutr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pp. 373-392); W.A. Marshall and J.M. Tanner, "Puberty," in F. Falker and J.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2 (New York: Plenum Press, 1986, pp. 171-209).

하지만 문제는 1998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첫 영양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됨으로써 북한 영유아들이 회복환경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1998년 영양실태 조사에 참가하였던 당시 6~84개월의 영유아들은 국제사회가 가장 최근 영양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경제난 실태 파악이 가능한 2009년까지 약 11년간 계속해서 영양결핍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영유아(보통 1~7세)들의 회복환경에 해당하는 어린이시기(보통 8~13세)와 청소년기(13~18세)는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신장'따라잡기(catch-up)'나 기타 신체기능 장애의 회복(recovery)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난의 회복 지표로서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은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마저도 WHO가 중급수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열량으로 규정한 2,080kcal로 현실화하여 재산출하면 1995년 이래로 지속적인 식량부족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단위: 만톤)

	식량 소요량		부족량 ¹⁾ (1,630kcal 기준)	국제사회의 지원 ²⁾	수입량	절대 부족량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995/96	598	670	191	54	65 ³⁾	72	144
1996/97	535	599	248	50	75	123	187
1997/98	461	516	177	90	80	7	62
1998/99	483	541	105	79	25	1	58
1999/00	476	533	134	100	17	17	57
2000/01	478	535	221	123	20	78	135
2001/02	495	554	130	150	10	30(초과)	29
2002/03	492	551	96	117	10	32(초과)	27
2003/04	510	571	102	94	10	2(초과)	59
2004/05	513	574	89	84	10	5(초과)	56
2005/06 ³⁾	518	580	64	109	-	45(초과)	17
2006/07	521	583	73	30	26 ³⁾	17	79
2007/08	523	586	122	72	23	27	90
2008/09	526	589	96	37	15	43	106
2009/10	512	573	178	29	20	129	190
2010/11	535	599	86	9	31	46	110
2011/12	539	604	73	4	37	32	97

주: 1) FAO의 북한의 식량 필요량과 생산량을 바탕으로 작성한 수치로 '최소 소요량'에서 '북한 생산량'을 뺀 값; 2) "Quantity Reporting: Food Aid Delivery to North Korea from 1985 to 2011," 『WFP』 (온라인), 2012년 8월 8일; <<http://www.wfp.org/fais/reports/quantities-delivered-two-dimensional-report>>
* 중국으로부터 공여 포함; 3) 2005/06~2007/08의 부족량(최소 필요량-북한 식량생산량) 수치는 농촌진흥청 자료, 기타 부족량 수치는 FAO/WFP자료, 이외의 수치는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1995년부터 자료를 필자가 종합 정리; 4) 1995/96~2004/05까지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 42.에서 재인용; 5)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량," 『무역협회』 (온라인), 2012년 8월 9일; <<http://db.kita.net>>.

출처: 문경연,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북한연구학회보』, 제 16권 2호 (2012), p. 302.

이처럼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수급 부족은 1998년 이래로 국제사회가 실시해온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보통 국제기구의 영양실태 조사는 사회내 가장 취약계층인 0~84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들이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는 국가가 우선적 대상으로 보호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양 실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런 추론이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북한의 영양장애 유병률 변화 추이

지표	만성영양장애 (Stunting) 연령 대비 신장 <-2SD					급성영양장애 (Wasting) 신장 대비 체중 <-2SD					저체중 (Underweight) 연령 대비 체중 <-2SD				
	조사연도	1998	2000	2002	2004	2009	1998	2000	2002	2004	2009	1998	2000	2002	2004
연령 개월	0~5	-	21.9	17.3	19.4	12.5	-	7.8	5.3	6.0	1.8			14.1	5.6
	6~11	14.5	31.9	22.7		23.6	17.6	10.4	6.7		4.8	17.4			
	12~23	48.4	50.2	41.6	27.1	23.9	30.9	11.9	11.9	8.7	5.7			20.5	16.2
	24~35	62.2	47.5	45.6	34.7	32.1	20.5	9.7	8.4	7.3	6.2			27.3	21.7
	36~47	75.1	58.6	47.6	46.7	39.5	13.4	10.2	7.4	7.5	5.0			26.3	21.7
	48~59	77.5	60.3	47.5	50.8	46.5	8.9	11.9	6.3	6.2	5.2			26.6	21.3
	60~84	74.8	-	44.2	46.8		7.8	-	5.6	5.3				22.5	
평균	62.3	45.2	39.2	37.0	32.4	15.6	10.4	8.1	7.0	5.2	60.6	27.9	21.2	23.4	18.8

주: 1998년은 6개월 미만 어린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4년에는 0~11개월로 묶었고, 60~72개월로 조사대상을 줄였음.

출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국제기구의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자료를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 보고서』에서 재작성 (p. 129). 원출처: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UNICEF and 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위의 1995년 이래 북한 식량수급 현황 자료와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누적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EU, UNICEF, WFP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 대상이었던 당시 6~84개월의 영유아들은 이후 지속해서 열악한 식량부족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경제난에 노출된 1998년 당시 1~7세의 영유아들은 2013년 현재까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외부의 완화된 회복환경에서 '회복(recovery)' 가능성이나 '따라잡기(catch-up)'가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 2013년 현재 북한 내부에는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 생애주기 접근법에 기반한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변화 추정

- 출산을 감소 및 기피현상, 유아 사망률 증가와 인구수 감소
- 면역력 저하, 질병이환율 증가 및 예방체계의 붕괴로 인한 질병의 증가
- 신장발달 장애 및 체력저하(심혈관계, 호흡계, 순환계 장애)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

V. 인구학적 변화와 북한 경제에의 함의

-북한 경제난이 생애주기 접근법의 관점에서 초래한 북한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내용을 살펴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임

VI. 결론

-본 연구는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을 생애주기 접근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동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2000년 박순영이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여 영양학에서 논의되고 있는“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친 한계를 가짐

-조동호는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 식량난 실태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1999년에 실시된 연구로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두 변수간 상관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가짐

-이에 동 연구는 1998년부터 2~3년 주기로 2008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를 박순영의 연구와 조동호의 연구에 다시 대입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에 지니는 함을 분석하였음

-결과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에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제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 실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

-이러한 동 연구의 분석 하에 아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북한 주민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할 것임: 영유아와 임산부 및 임신 가능 여성에 대한 선택적 식량 지원이 재개되어야 함, 이는 인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난의 참상이 생애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에서 민족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재개하여야 함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영양학의 여러 연구는 회복 환경 여건에 따라 영양결핍을 경험한 대상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영양 공급(food)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육아 능력(care)과 보건의료 서비스(health) 등과 같이 이들 세 요소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이 재개되어야 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속적 북한 영양실태 조사를 위한 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함: 국제기구는 1998년 첫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를 한 이래로 2009년까지 2~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 자료는 북한의 경제난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며 중요한 자료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대북지원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국제기구들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를 위한 남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태를 파악하는 행위라도 지속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 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2.
-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 21권 1호 (2012).
- 박순영. "영양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신장 성적이형성의 변화: 탈북자 자료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44, no. 2 (2011).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2002.
- _____. 『북한 보건의료 실태 보고서』, 2003.
- _____.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2004.
- _____. 『북한 여성이 임신 및 출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2005.
- _____.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 보고서』, 2012.
- 이금순, 임순희.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조동호. "북한 식량난에 따른 에너지 섭취량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국제 회의자료, 『Nutritional Problems of North Korean Children: Current Status and Possible Solutions』. KDI School, 1999.
- 좋은벗들. 『북한식량난』, 서울: 불교정토회, 1998.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0』, 서울: 통계청, 2010.

[영문자료]

-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 Brown, Judith E, et al. *Nutrition through the Life Cycle*, Fourth Edition. Belmont, US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 _____.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 Goodkind, Daniel and West Lorraine.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Marshall, W. A. and J. M. Tanner, "Puberty," in F. Falkner and J.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2. New York: Plenum Press, 1986.

Martorell, R. "Genetics, Environment and Growth: Issues in the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in A. Velaquez ed. *Genetic Factors in Nutr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Tanner, J. M. "Growth as a Target-seeking Function: Catch-up and Catch-Down Growth in Man," in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1. New York Plenum Press, 1986.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_____.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제5회의
김정은 권력승계와 북한문화

제1발표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 비교분석 - 서유석

제2발표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 강동환

제3발표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읽기 :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 전영선

간지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 비교분석

서유석(북한연구소)

- 목 차 -

1. 서론
2. 권력승계의 성격과 세분화
3. 북한 권력승계의 8단계 프로세스
4. 김정은 권력승계과정 평가

1. 서론

지난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후계자 김정은이 체계적인 후계 과정을 거칠 겨를도 없이 전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북한체제를 평가하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김정은의 등장이 던져준 혼란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김정일이 1970년대부터 후계자로서 꾸준한 경험을 쌓아왔다면 김정은의 그 과정은 일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았는지,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일반적인 권위주의적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북한체제에 대입해 본다면, 첫째 북한체제 수립당시 지도(자)기구의 기능적 필요성 유지여부, 둘째 정통성의 유지여부 셋째 지배블력의 공고성, 넷째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 여부에 따라 체제안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체제는 모든 부분에서 시험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사례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비교대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 권력승계방식의 원형을 김정일 권력승계과정으로 가정하고 김정은 권력승계과정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김정은체제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후계체제에서 김정은 지도체제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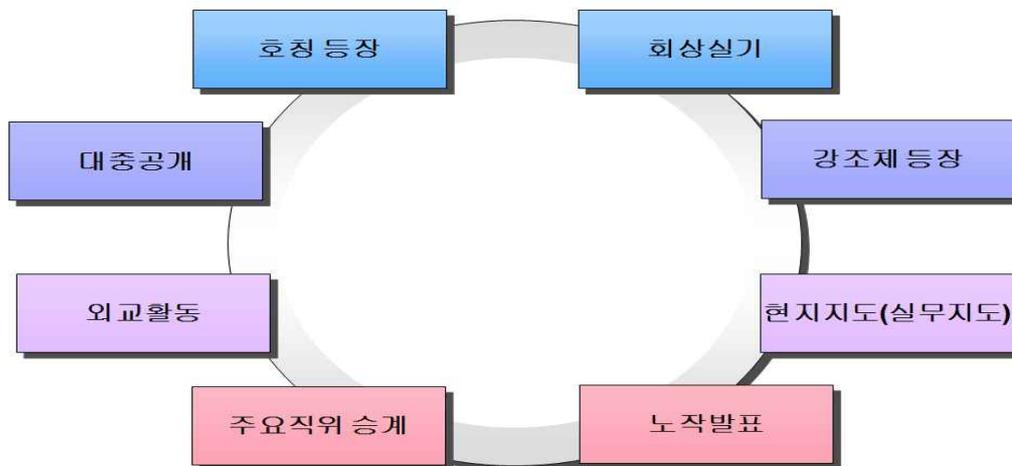
에 김정은체제의 객관적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향후 북한체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권력승계의 성격과 세분화

김정일-김정은의 권력승계 성격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과 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권력승계의 계기를 기준으로 자연적 승계와 인위적 승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이전의 정도에 따라 완전승계, 부분승계, 단독승계, 집단승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개념규정과 함께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을 기준으로 큰 틀에서 '권한승계기'와 '직위승계기'로 구분하고 다시 이것을 8단계의 절차로 세분화하였다.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긴 역사적 과정을 코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8단계로 단순화시켰다.

권력승계과정의 주요 지표



8단계는 '호칭 등장'-'회상실기'-'공식활동'²⁷⁷⁾-'외교무대 등장'-'현지도(실무지도)'-'진한 글씨체'-'노작 발표'-'당정군 직위승계'로 구분했다. 여기서 직위승계기는 당정군 최고직책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정치국 위원이나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의 직책을 부여받았을 때와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위에 오른 것은 제외했다. 직위승계는 당정군 최고직책인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세 직책만 포함했다.²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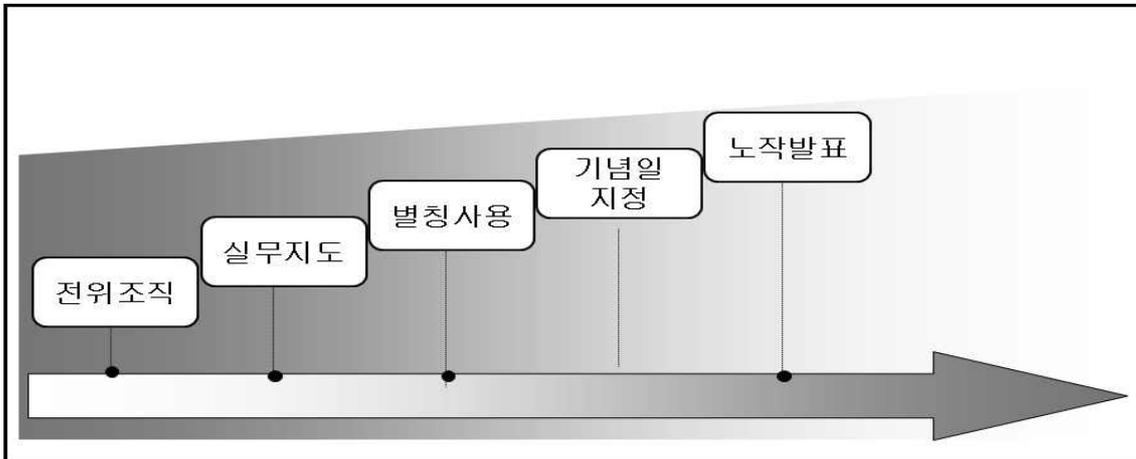
277) 여기서 '공식활동'란 일반적 의미에서 간접적이거나 간헐적인 정보의 유출이나 은유적 방법에 따라 소극적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열병식'이나 '군중행사' 등 대규모의 공식적 행사를 통한 등장을 기준으로 삼았다.

278)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권초기를 제외하고 1972년 주석제의 등장 이후 권력분점형 지도체제를 경험하지 못했

김정일의 경우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기 이전까지의 시기가 권한승계기에 해당하고 1991년 이후는 '직위승계기'로 구분했다. 김정일은 1991년 이후 군의 직위를 물려받고 김일성 사망이후 1997년 당총비서와 1998년 국방위원장의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직위승계를 마치고 지도자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김정일 권력승계과정과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은 권력승계의 계기와 권력이전의 정도에 따른 정의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양자 모두 선임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자연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권력이전의 정도로 판단할 때 단독승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김정일은 선대지도자 사망이전에 직위승계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완전승계로,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이후 직위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분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권력승계의 8단계 프로세스



1) 권한승계기

(1) 후계자의 비공식 추인

김정일의 공직진출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출발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지고 이끌면서 동년 9월 당중앙위 비서로 선출되는데 이어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에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결정되기까

기 때문에 지도자는 당연히 당정군 최고직위를 갖고 당 조직지도부나 당중앙군사위원회같은 특수 직위는 공식적으로 남겨두고 제1부부장 직제를 유지함으로써 지도자 중심의 독점적 지도체제를 구축해 왔다.

지의 10년 동안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문화예술부장, 당 조직담당 비서 등 당의 실세부서에서 기반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에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²⁷⁹⁾을 주도한 사실은 앞으로의 정치행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먼저 지방의 하급기관과 중앙의 초급 간부들부터 김정일의 인적기반을 치밀하게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김정일은 이 운동을 현장감독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중하급 당간부들과 직접 접촉,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3대혁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9월의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부터이며²⁸⁰⁾ 이 운동의 전개는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60년대 천리마 운동의 뒤를 잇는 노력경쟁운동으로 채택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²⁸¹⁾을 통해 대중장악력을 검증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5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그 해 12월 1일 함남 단천시 검덕광산에서 궐기모임을 통해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으로 확산시킬 것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운동을 통해 기술관료들로 주축이 된 신진세대를 당으로 끌어들이었다. 세대교체를 통한 자기사람 심기에 주력하는 한편 구세대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타파한다는 목적으로 각 단위에 이들 소조원을 파견했다.

이어 김정일은 1973년 9월 비공개리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내 실세 중 실세인 조직담당비서 자리에 올라 김일성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서 권력승계 경쟁자로 알려져 왔던 삼촌 김영주를 밀어내고 김정일이 조직담당 비서직을 거머쥔 것은 후계자 경쟁에서 김정일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²⁸²⁾.

(2) 권력승계 7단계 프로세스²⁸³⁾

279)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김일성 저작집 35권 p. 295)

이 3대혁명소조는 3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발기된 조직이다. 3대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이란 기존의 틀을 타파하고 새로운 진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일이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것과 맥락상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280) 당시 대회에서 “당 제5차 대회가 제기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상황에 관하여”라는 의제가 상정되면서 시작됐으며, 2년 후인 1975년 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소조의 활동에 대한 총화 및 새로운 과업이 발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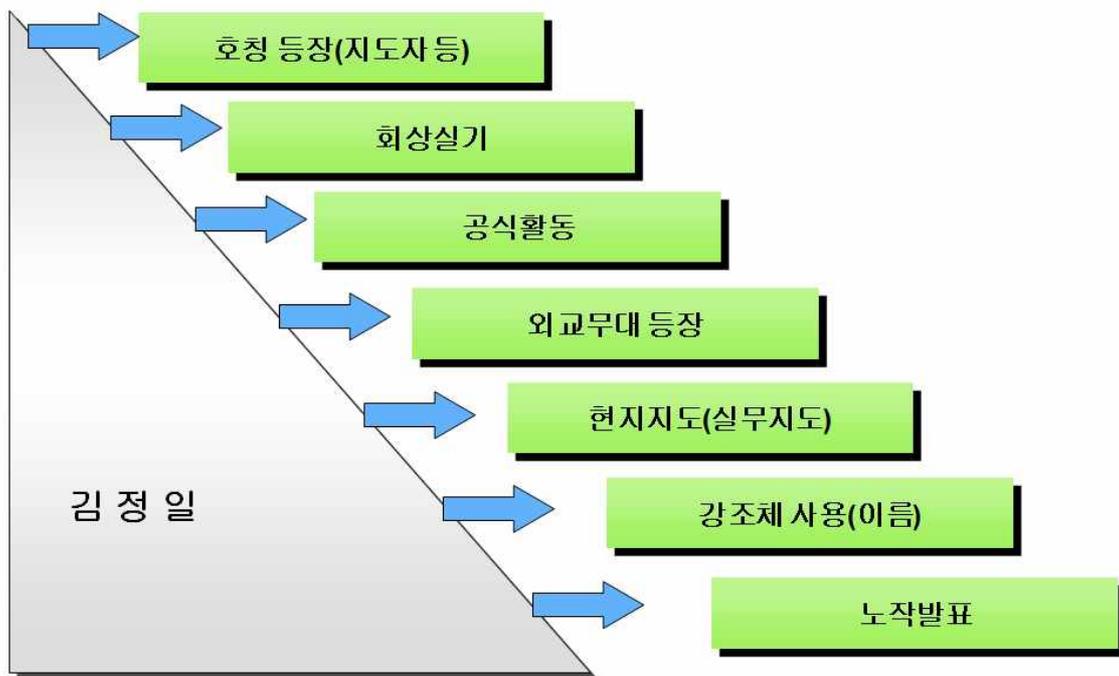
281)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 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김일성 저작집 33권, p. 417)

282) 한 고위직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영주는 김정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삼촌은 몸이 안 좋으니 쉬는 것이 좋겠다”는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 중앙에서 밀려났으며 이에 김영주는 중앙당에 자신의 심복인 김치구(전 중앙당 제1부부장)를 심어놓고 재기를 노렸으나 김치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재기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283) 권력승계과정에서 생일명절 지정은 제외했다. 김정일의 경우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이듬해인 1975년부터 생일이 기념일로 지정됐으나 공휴일 지정은 1982년 40살 생일 이후부터 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김정은 생일의 공식 공휴일 지정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의 경우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후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건 1980년대였다. 후계자 지명후 6년후에 공식적으로 얼굴이 인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공식화됐고, 김정은의 모습은 그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 노동신문 1면에 공개됐다. 김정일 권력승계 프로세스에서 처음 단계는 '지도자 동지' '경애하는' '당중앙' 등 은유적 호칭의 사용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군님'이란 호칭이 1960년대까지는 김일성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남일이나 현 총정치국장인 최룡해의 부친인 전인민무력부장 최현, 오백룡 전 노동당 군사부장 등에게 장군이란 호칭이 붙었다. 그러나 장군이라는 보통명사는 1970년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고유명사화되어 김일성만 독점하는 명칭이 되었다.

권한승계기의 프로세스



김정일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시점은 1973년 후계 공식화 1년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호칭, '당중앙'이라는 호칭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장군 호칭을 등장한다. 1980년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1982년부터 군대내부에서 '김정일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인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부터다. 이후 일반주민들도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게 되었다.²⁸⁴⁾

김정일에게 수여된 최초의 호칭은 1974년 “지도자”, “당중앙”이란 호칭이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 ‘김대장’ 칭호에 이어 잠시 김정은 ‘장군’ 칭호가 사용됐고 이어 현재는 ‘원수’칭호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에게 2008년부터 당 내부 문건에 ‘젊으신 청년대장’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2010년부터 군부대를 중심으로 ‘존경하는 대장 동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²⁸⁵⁾

둘째, 회상실기집의 발행이다. 회상실기집의 발행은 『저작집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회상실기집은 대체로 김일성, 김정일과의 사업경험의 위대성이 ‘인민의 입’을 통해 표출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회상실기집에 실린 내용은 지도자가 인민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한 ‘반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회상실기집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김일성의 <인민들속에서>는 196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101권이 발간되고 있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인민들속에서>(1-100)에는 회상서술자만 1,500여명에 이르고 회상내용도 1,810여건에 이른다.²⁸⁶⁾

김정일의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는 김일성의 <인민들속에서>100권이 발행되는 해인 2012년에 70권이 출판되었다. 김정일의 회상실기는 1976년 8월 10일 1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2012년 70권까지 회상자 1,143명 1,126건의 회상내용이 담겨 있다.²⁸⁷⁾

김일성과 김정일이 일인지도체제의 지도자로, 혹은 후계자로 확실히 자리잡은 해에 이와 같은 회상실기를 발간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경우 2012년 11월에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라는 제목의 회상실기 발행을 시작했다. 김정은 회상실기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품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회상실기의 제목 그대로 ‘군사영도술의 달인’으로서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습 위주로 묘사되었다.²⁸⁸⁾

셋째, 전면적으로 대중앞에 나서는 단계다. 김정일의 대중공개는 후계자 추인이후 ‘비공식활동’기를 거쳐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대회를 통해 김정일의 이름이 공간문헌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중 스킨십은 1992년에 진행되었다.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설 기념행사는 1991년 12월에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물려받고 공식적으로 군 최고통수권자임을 알린 직후에 열린 행사였다. 특히, 행사에서는 김정일의 육성이 최초로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열병식 개막식에 참여한 김정일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말한 것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김정일은 1992년 인민군 창건 기념행사를 통해 내외

284) 김정일에게 호칭이 붙은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군 출신 탈북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

285) 「데일리NK」 2011년 12월 2일.

286)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6일.

287) 「로동신문」 2012년 2월 15일.

288) 「로동신문」 2012년 11월 13일.

에 지도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림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 최고통수권자의 자격으로 북한군의 사열을 받았다.

반면 김정은의 공식 등장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2009년 후계자에 지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다음해인 2010년 10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열병식에서 육성연설을 통해 지도자로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넷째,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하는 단계다. 김정일은 1983년 6월에는 중국 호요방(胡耀邦)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으며 이후 김일성이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냄²⁸⁹⁾으로서 대외관계와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 받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김일성과 함께 외국을 순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정일의 북한내 지위가 확고부동하며 다음으로 김일성의 '직위'를 물려받을 시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었다.

김정은 역시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등장한 이후 이듬해인 2011년 10월 25일 김정일-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면담석상에 배석자로 등장하면서 '대장동지'로 소개되었다. 그동안 '청년대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던 것을 김정은을 이상화해온 것과 달리 좀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후계자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김정은의 외교무대 등장은 공식 등장이후 1년을 갓 넘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당시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주요 일정을 거의 수행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을 기점으로 김정은의 달라진 위상은 현지도도 동행이나 공연관람, 외교행사 등의 수행자의 호명 순서의 변화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섯째, 북한의 독특한 통치방식의 하나인 현지도(실무지도)의 실행단계다. 김정일은 후계자 공식화 단계 직후인 1981년 5월 18일 묘향산지구 '실무시찰'을 시작했고 1981년 8월 9일 평양교예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에서 '실무지도'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이후 김정일의 독자활동은 북한의 보도매체에서 '실무지도'란 명칭으로 비중있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현지도'라는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4월 5일 체신 및 방송사업장 방문부터다. 이후 현지도란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지도의 경우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이전까지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보다는 지도자수업 차원에서 당군정 주요 부문에 김정일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은 최초의 기록영화인《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²⁹⁰⁾에는 그간 감추어졌었던 김정은의 김정일 현지도 수행과정이 공개되었다. 이 기록영화에서 확인되는 점은 김정은의 현지도 수행이 주로 군부대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89) 「연합뉴스」 1994년 7월 9일.

290) 「조선중앙TV」 2013년 1월 8일.

여섯째, 후계자의 징표로 중요한 것이 공식문건에 나타난 진한 글씨체의 이름이다. '강조체' 단계는 지도자로서 다른 존재와 뚜렷한 차이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김정일의 경우는 1981년부터 '강조체' 사용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김정일의 실무지도가 개시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즉 대중공개행사에 실명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른 인물들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방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경우는 공식등장이후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가 김정일 사망 애도식에서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2011년 12월 25일 김정일 시신에 대한 애도식에서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처음으로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일곱째, 북한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권능 가운데 하나가 이데올로기의 창조 및 재해석권이다.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생전에 무수히 많은 노작을 발표했는데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최초 노작은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했고 연이어 1986년 7월 15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1974년에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그 이전부터 노작을 창작했다는 부분은 후계체제완성이후 지도자의 치적을 확대하기 위한 소급변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노작발표'는 후계자로서 지도자의 사상업적을 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해석권의 획득을 의미하고 이는 곧 '권한승계기'의 마무리와 함께 다음 단계인 '직위승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의 경우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시작으로 노작이 발표되었다. 당시 이 담화문은 몇 일후인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문이 공개되었는데 김일성-김정일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제시를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급조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읽힌다. 전 시대 지도자들의 사상을 새롭게 창조한 부분은 없고 '계승'에 방점이 찍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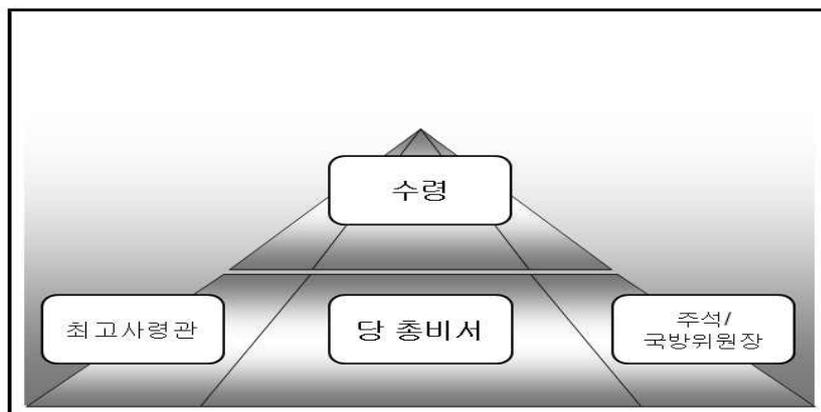
2) 직위승계기: 당정군 직위승계

본 글에서 언급하는 직위승계의 개념은 당정군 최고직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조직지도부 부장이나 당중앙 정치국원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당을 대표하는 총비서와 정무부문을 대표하는 주석이나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위승계기에는 선대수령이 갖고 있는 당정군 최고직위를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말한다.

'직위승계기'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가장 먼저 이양한 직위는 '군'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김정일은 이전 1980년대에 이미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며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더불어 '실무지도'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행태를 보여주었지만 직위를 갖고 공식적으로 북한인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등극식'을 갖는 행사를 미루어 오다가 1992년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야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본격적인 직위승계의 과정을 밟았다.

북한 지도자의 직책 구성



김정일은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직위승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군 최고통수권을 차지하였고 이 같은 일련의 군 '직위승계' 과정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고사령관의 추대는 1991년 12월 24일 열린 노동당 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당·정·군의 직위중에 군 통수권을 김정일에게 넘겨 준 것으로서 '직위승계' 과정의 첫 관문이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비서의 직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당을 장악한데 이어 '최고사령관'의 자리까지 물려받음으로써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분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에 오진우, 이종욱 등 혁명 1세대들은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하는²⁹¹⁾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명세를 잇달아 발표하였다.²⁹²⁾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1992년 4월 9일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방위원장에게 군사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권한 조정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해인 1993년 4월 곧바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취임시켰다. 이처럼 북한은 1992년을

291) 「노동신문」 1992년 4월 5일.

29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 당시 상황에 대해 김일성은 80회생일 기념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정일 조직비서가 많은 일을 대신해 줘 어느 정도 짊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4월 중순 명예직 성격이 짙은 '대원수'로 현직에서 물러나고 실권자인 '원수'직은 김정일에게 물려주면서 사실상 제2선으로 물러났다.

기점으로 군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력의 제도적 분립을 진행하였고 '직위승계' 중 '당 총비서'직과 '주석'직만 남겨놓고 있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오른 1993년에는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 주요간부의 임명 및 해임,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러한 흐름을 두고 권력승계 단계가 안정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머지않아 국가 주석직과 당 총비서직 마저 김정일이 물려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3년 뒤인 1997년 10월 노동당 총 비서에 추대됨으로서 북한 최고직에 오르게 되었다.²⁹³⁾ 이것은 군 최고사령관직에 오르고 나서 6년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직위승계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주석직을 곧 이어받을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국가기구개편과 함께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확장시키고 그 자리에 재선임되는 방법을 택했다.

북한은 1998년 9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성스러운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재추대하고 '직위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과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이전의 정도에서 나타난다. 권력승계의 방식은 양자 모두 자연적 승계에 해당하며 권력이전의 수준으로 봤을 때 단독승계로 동일하다. 다만 김정일은 전임 수령의 사망이전에 직위승계의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완전승계의 형태를 띠다면 김정은은 공식적 최고직책을 물려받지 않은 부분승계로 볼 수 있다.

4. 김정은 권력승계과정 평가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 고영희(高英姬)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²⁹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와 리베펠트-슈타인 훔츨리 공립학교에서 '박운(또는 박은)'이란 가명으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귀국하여 북한의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특설반에서 군사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창기에는 이복형인 김정남과 친형인 김정철에 가려져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

293) 「로동신문」 1997년 10월 8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의 발표문을 통해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직할시)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천명하면서 김정일을 노동당의 ‘총비서’로 정식 추대하였다.

294) 김정은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김일성 100회 생일과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에 30세 나이를 맞추기 위해 1982년생으로 조정했다는 설이 있다.

았으나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결부되어 후계 구도가 주목을 받으며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09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으며, 다음날 열린 제3차 노동자 대표자회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를 굳혔다.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았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부위원장직은 그를 위해 신설된 자리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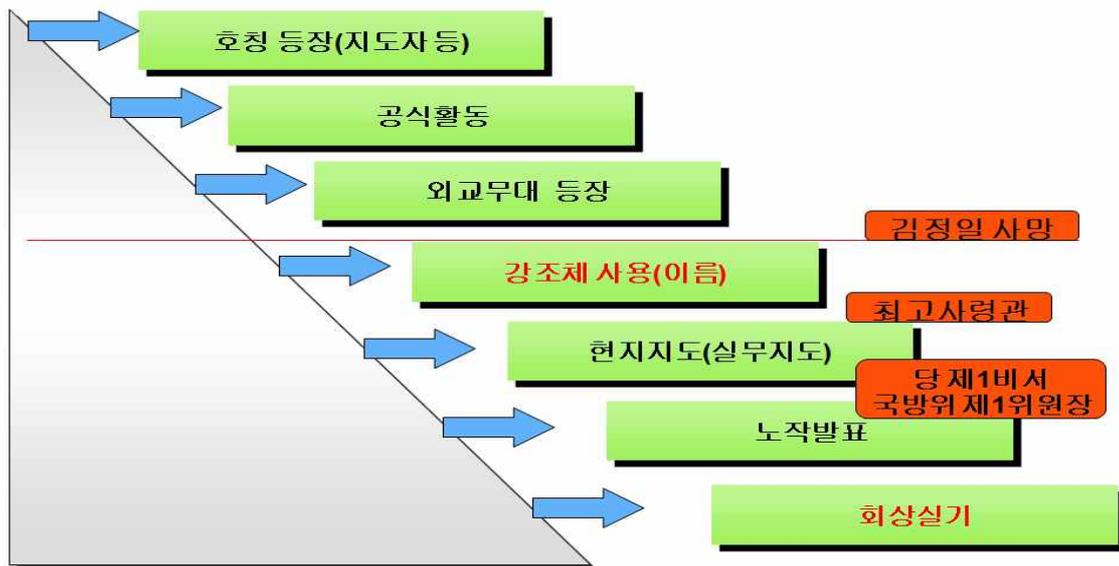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김정일 권력승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앞서 살펴봤듯이 김정일의 경우는 권한승계기에 호칭등장-회상실기-공식활동-외교무대등장-현지지도-강조체사용-노작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직위승계기에 최고사령관-당총비서-국방위원장 순의 직위승계가 이루어졌다.

김정일의 경우 비공식적인 익명의 후계자로 활동을 시작하다 공식적으로 실명이 공간문헌에 등장하고 얼굴을 공개하면서 현지지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강조체가 사용된다. 강조체의 등장이 외적인 의전의 완결이라면 노작의 발표는 이데올로기적 권위를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작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최고사령관 등 직위승계기에 접어들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김정은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 분류에 따라 구분하자면 비공식적인 후계자로 지정된 시기부터 김정일 사망직전시기를 권한승계기, 2011년 12월 김정일사망 이후를 권한 및 직위승계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김정일 권력승계 프로세스와 비교했을 때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전임 지도자인 김정일의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정은 권력승계 프로세스의 중요한 수정을 가져왔다.

김정은 권력승계 프로세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은이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까지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과 동일했다. 김정일의 경우 이후 현지지도-강조체-노작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강조체가 먼저 등장하고 현지지도와 노작발표가 이루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회상실기가 발표되었다.

김정일 권력승계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다섯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한승계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권한승계기와 직위승계기가 중첩되거나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의 사망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외교무대의 공식등장까지는 동일한 절차를 밟지만 김정일의 사망으로 다음 단계인 현지지도가 아니라 강조체의 사용과 최고사령관 추대가 먼저 진행되었다.

둘째, '노작발표' 즉,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사령관,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등 직위 승계가 진행되었다.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체제안정을 위한 방어적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가장 시급한 '군권'의 안정을 위해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획득하고 이어 군부대 현지지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직위의 승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노작발표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식' 통치방식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리를 급하게 시도하면서 기존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서둘러 통합했다는 점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적 측면에서의 체계화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넷째, 직위승계과정에서 김정일의 경우 최고사령관 승계이후 공화국 원수 계급을 부여받았으나 김정은의 경우 인민군 대장 칭호에 이어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사계급에 있어서도 '대장'의 칭호로 차수들을 거느리는 '최고사령관'의 직책에 있는 것은 구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2012년 7월 17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다섯째,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상실기'가 제작되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가 1976년부터 발간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책자들의 연도를 보면 이 역시 북한이 발행연도를 소급했을 개연성이 있다. 회상실기는 그 내용상 '지도자-인민'관계를 선전하기 위해 편집된 에피소드집이고 지도자의 '인민성'과 선대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인민들에게 알리는데 1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난 순서상의 차이점은 표면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알맹이 없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서둘러 공표한 함으로써 향후 김정은체제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모호성과 기존 지도체제와의 차별성

부재를 낳았다.

현재의 김정은 후계체계의 완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 체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김정일의 후계과정과 단순비교하기에도 시공간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판단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은 여러 가지 복잡한 명제의 섞여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간명한 이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발제에서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그 단계를 단순화하여 제시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비교했을 때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은 시간적으로 매우 압축된 형태로 진행되고 김정은체제는 당·정·군 어느 부문에서도 최고직위를 넘겨받지 못한 '부분승계'의 상태에서 출범했다. 김정일 사망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에서도 김정은은 새로운 직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무색하게 아무런 직위승계 조치가 나오지 않았었다. 즉, 당시 김정일의 판단에 김정은이 아직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 연속선상에서 김정일의 생존시에 거행된 2010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공개가 전격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후계선전 제스처도 나오지 않았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단독승계'와 '부분승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권력승계의 시계는 김정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던 후계자는 선대 지도자의 유훈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회상실기의 주제도 김일성의〈인민들속에서〉가 수령과 인민간의 친밀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김정일의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는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김정은의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는 제목에서 풍겨지듯이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영도와 관련된 군부대 방문기 위주로 편집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김정은 자신이 비추어지고자 하는 목적이 '군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도발위협이나 대화의 지 부족과 관련하여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의 불완전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은의 “문화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²⁹⁵⁾

강동완(동아대), 박정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의 북한체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당과 군의 조직 및 인물 변화, 김정은의 현지도 과정, 정책노선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의중과 정책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소위 음악정치로 대변되는 문화 부분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란봉악단이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되어 2012년 7월 시범공연을 가진 이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에는 반드시 모란봉 악단의 기념공연이 있었다. 7.27전승절(6.25전쟁 휴전일), 로동당 창건 기념일, 김일성 군사대학설립기념일, 김정은의 군대 현지도 시 화선공연, 광명성 3호 발사 성공 축하 기념, 2013년 신년축하공연, 630대연합부대 방문 화선공연 등이 이루어졌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녹화실황으로 중계까지 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리설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모란봉악단 공연이 주목을 받는 것은 기존의 북한식 공연과는 구분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 모습은 한마디로 ‘파격’이라 표현할 수 있다. 화려한 조명, 현대적 전자악기, 단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기존의 북한 공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시범공연 때는 ‘원수의 나라’로 선전하는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을 무대배경으로 삽입하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캐릭터까지 등장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의 향방 및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의 불확실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주도로 만들어진 악단이 기존의 북한 공연예술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악단조직 및 공연

295) 이 글은 2012년 7월 시범공연 이후 2013년 4월 현재 총 9회에 걸쳐 공연된 모란봉악단의 내용 분석을 기초로 한 것으로, 현재 모든 회차의 공연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힙니다.

구성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바, 공연에서 발표된 노래 가사, 내용, 공연 순서 배치 등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모란봉악단 공연 내용, 형식 등에 대한 분석은 김정은의 권력공고화 및 향후 북한정세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란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내용 및 형식을 분석하여 김정은의 대내외 정책 메시지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분석과 더불어 모란봉악단의 2012년 7월 시범공연 이후부터 2013년 4월 11일 630대연합부대 방문 화선공연 까지 총 9회에 걸친 공연 내용을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공연은 모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녹화실황으로 보도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란봉악단 공연 일시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모란봉악단 공연 일시 및 내용

공연일시	제목	주요 참석자
1회 (2012.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시범공연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현철해,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최부일, 김명국, 김영철, 조정철, 문학예술, 출판보도, 예술교육기관의 일군들 과 창작가 예술인들, 작가, 기자
2회 (2012.7.27)	전승철 경축 모란봉 악단 공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당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평해, 광범기, 문경덕 당 비서, 전쟁 노병, 예술인, 평양시내대학생들
3회 (2012.8.2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 지를 모시고 진행한 8.25경축 모 란봉악단 화선공연 중에서	최룡해(군 총정치국장), 현영철(군총참 모장), 김경희(당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현 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 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창 섭(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4회 (2012.10.10)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 고 진행한 조선로동당창건 67돌 경축 모란봉악단 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김기남, 현철 해, 김원홍, 김평해, 문경덕, 조연준, 평양시내 주요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당세포 비서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

		을 비롯한 각계 층 시민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무관부부들과 대사관 성원들, 외국손님
5회 (2012.10.2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 모란봉악단 공연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리용무,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주규창, 려춘석, 장동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 일군들
6회 (2012.12.23)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를 축하하는 모란봉악단 공연	
7회 (2013.1.1)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8회 (2013.2.1)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어머니의 목소리>	
9회 (2013.4.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이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를 축하 방문한 화선공연	

Ⅱ. 모란봉 악단의 일반 현황: 배경, 의미, 공연내용

1. 창단배경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음악정치와 구별해 김정은 제1비서의 '열린 음악정치'라고 명명했다.²⁹⁶⁾ 북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해에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했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의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혁명.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 악단을 친히 조직"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3.8 국제부녀절 기념 공연에서 은하수악단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역시 2009년 김정은의 지시로 조직된 음악단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 제1비서의 발전전략은 김정일 위원장의 친필명제 관철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조선에서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처럼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분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

296) 정창현, "여기는 평양: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민족 21』 2012년 8월호, p. 27.

장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보라는 명제”에 사상이 집약된 것으로 김정은의 모란봉악단 조직 및 공연은 기존의 북한 문화예술 공연과 비교할 때 형식과 내용 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2. 모란봉 악단 구성 및 특징

모란봉악단은 총 18명의 여성 연주자와 가수로 구성되어 있다. 4회차 공연에서 자막으로 단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담당악기와 이름을 소개하였다. 주요 단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선우향희, 전자바이올린: 홍수경, 차영미, 전자첼로: 유은정, 키보드: 김향순, 리희경, 피아노: 김영미, 색소폰: 최경임, 드럼: 리윤희, 전자기타: 리설란, 강령희, 보컬: 김유경, 김설미, 류진아, 박미경, 박선향, 정수향, 리명희>

3. 각회별 곡명 분석과 차이

북한의 음악은 송가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 이상화를 위한 것과 당의 유일사상을 찬양하는 정책가요, 신성한 노동을 찬미하는 노동가요 자연을 노래한 서정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요는 결국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체제유지와 당의 노선을 홍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음악은 사상적 무장을 위한 매체이다.²⁹⁷⁾

모란봉악단의 총 9회에 걸친 공연에서 불러진 노래를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9회 공연의 노래를 이상화, 당의 유일사상 강조, 군대 강조, 서정가요 등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전회 공연과 다른 곡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공연의 메시지를 파악한다.

공연	구성형식			전회 공연과 같은 곡	전회 공연과 다른 곡
	경음악	독창	중창		
1회차 공연	그 품 떠나 못 살아 외국곡인 차르다쉬 짜바의 녀왕 별의 쎄레나데		아리랑 그대는 어머니 내 마음 별에 담아 배우자 이 강산 높은	차르다쉬 짜바의 녀왕 메뉴에뜨 집씨의 노래 그대는 어머니 내 마음 별에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백설공주' '미인과의 야수' 별의 쎄레나데

297) 정창현, 『북한의 문화정책』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08), p. 162.

	<p>결투 승리 빼넬로빼 이제 곧 날아 오르리 장밋빛을 띤 메뉴에뜨 나의 길 집씨의 노래 달라스 중국노래'붉은 기 펄펄'</p>		<p>령 험한 길우에 예쁜이 녕변의 비단처 녀 이땅의 주인들 은 말하네 들꽃 세송이 <세계동화>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백설공주' '미인과 야수'</p>	<p>답아 배우자 이 강산 높은 령 험한 길우 에 예쁜이 녕변의 비단처 녀 이땅의 주인들 은 말하네 그 품 떠나 못 살아</p>	<p>결투, 승리 빼넬로빼 이제 곧 날아 오르리 달라스 중국노래'붉 은기 펄펄' 들꽃 세송이 아리랑 나의 길</p>
2 회 공연	<p>장군별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 군기와 함께 그때처럼 우리 가 살고있는가 우리의 7.27 문경고개 진군 또 진군 조국보위의 노 래 해안포병의 노 래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아 오라 내 고향의 정 든 집 우리 님 영웅 되셨네 우리는 승리했 네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7.27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승리자들 예쁜이</p>	전사의 노래	<p>나의 한생 내 삶과 조국 전승의 메아리 중국인민지원군 전가 '마오안잉(모안 영) 주제가' 우리의 7.27 녕변의 비단처 녀 이 땅의 주인들 은 말하네 내 마음 별에 답아 배우자 당을 노래하노 라 인민이 사랑하 는 우리 령도자 (현악 4중주)그 품 떠나 못살아</p>	<p>예쁜이 차르다쉬 메뉴에뜨 싸바의 여왕 집씨의 노래 배우자 내 마음 별에 답아 그 품 떠나 못 살아 녕변의 비단처 녀 이 땅의 주인 들은 말하네</p>	<p>장군별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 군기와 함께 그때처럼 우 리가 살고있 는가 문경고개 조국보위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 아오라 내 고향의 정 든 집 우리 님 영웅 되셨네 우리는 승리 했네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7.27 조국은 영원 히 기억하리 라 승리자들 우리를 보라</p>

	차르다쉬(외국 곡) 장밋빛을 띤 메뉴에뜨(외국 곡) 싸바의 여왕 (외국곡) 모차르트 40번 (외국곡) 집씨의 노래 (외국곡) 우리를 보라				모차르트 40 번 전사의 노래 나의 한생 내 삶과 조국 전승의 메아 리 중국인민지원 군전가 ‘마오안잉(모 안영) 주제가’ 당을 노래하 노라 인민이 사랑 하는 우리 령 도자 중국노래'붉 은기 펄펄' 들꽃 세송이
3회 , , ,					

Ⅲ. 모란봉 악단 공연의 특징 및 의미: 공연 형식과 선곡을 중심으로

1. 1회차 시범공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평양만수대 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했다. 7월 13일에는 공연 실황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녹화중계까지 했다. 북한 언론매체는 김정은이 이 공연을 감람한 후,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요소들을 기성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였다” 고 보도했다. 공연의 내용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은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 있는 공연”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단 시범공연인 만큼 이 공연에서 보이고 있는 대내, 대미, 대남 메시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내 측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양 및 이상화, 체제결속 내용

이 공연의 첫 곡으로 연주된 아리랑은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다. 아리랑을 전자바이올린과 드럼 등 현대적 악기를 통해 편곡, 연주한 것은 김정은이 주장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게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연주 전반부에는 기존 아리랑의 음을 그대로 살려 연주하지만, 후반부에는 빠른 비트의 박자로 편곡하여 전통음악이 대중음악으로 재해석된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 음악에서 랩이나 락버전의 노래를 들어 본 적은 없다. 북한 음악이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된 것은 민족문화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의 전통 위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인데 이 문화정책의 원리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²⁹⁸⁾

공연 마지막 곡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라는 제목의 곡으로 결국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고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목: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1절 온나라 대가정을 보살펴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기여주시네
2절 아버지 정에 끌려 운명을 맡기고 그 뜻에 매혹되어 심장을 바치네.
(후렴)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그이는 친근한 김정은 동지

결국 공연의 처음과 마지막은 김정은이 지시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사회주의를 지키되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김정은에 대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문화예술은 음악정치로 표현될 만큼 체제선전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노래인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등이 연주되었다. 이 곡들은 모두 김정은의 권력승계 정당화와 이상화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우월함과 ‘인민이 사랑하는 친근한 령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번 공연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통치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김정일 사후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²⁹⁹⁾

한편, 최근 북한 내부로 확산되고 있는 남한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의 확산은 엘리트뿐만 아니라 권력상층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298) 전영선, 『북한의 대중문화』 (서울: 글누림, 2007), p. 182.

299) 강동완, “모란봉악단과 새세계의 요구,” 『북한』 2012.7월호.

있다. “북한노래나 영화는 사상만 있고, 남한 노래와 드라마는 사랑을 이야기 한다”는 표현처럼 북한 주민들은 남한 대중문화를 통해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 인간의 기본적 생활과 자유, 경제적 가치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³⁰⁰⁾

즉,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영상물을 비롯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대중적 문화 욕구에 어느정도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주도해야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¹⁾

사람의 생활은 자신의 생활 결과 만들어진 특정한 정치, 경제구조 ‘위’에서, 또는 특정한 정치, 경제구조의 끊임없는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회의 지배집단은 어떠한 정치, 경제구조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문화’를 침투시키는데 유리한지, 그러한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정치, 경제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³⁰²⁾



<그림> 모란봉악단 공연 중 미인과 야수의 한 장면(유튜브 캡처화면)

나. 대외 측면

이번 공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북한 형법 194조에 명시된 “퇴폐적이고 색정적인 자본주의 영화”의 한 장면을 직접 공연 배경으로 삽입했다는 사실이다.

300)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에의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강동완, 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참조.

301) 박정란, “모란봉악단 공연과 김정은식 사회주의 통제,” 『북한』 2012.8월호. p. 28.

302)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문화분단』(서울: 선인, 2012), pp. 238-239.

영화 주제곡인 “이제 곧 날아오르리”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영화 록키는 실베스터 스탤론이 각본을 쓰고 동시에 주연을 한 영화로서 북서 로키 발보아의 삶을 그린, 로키의 네 번째 시리즈이다. 그 영화에서 로키의 로우드워크(Roadwork)와 그가 소련 선수를 때려눕히는 장면 등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키 영화의 등장 인물에 관한 해석은 이 곡이 연주된 앞뒤 곡들과의 맥락적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로키의 주제곡인 “이제 곧 날아오르리” 연주는 북한 노래 “승리자들”과 중국의 오성홍기를 찬양하는 붉은 오성홍기 라는 노래 뒤에 배치되었다. 삽입된 장면은 미국의 주인공이 구소련 선수를 때려눕히는 장면으로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용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로키 주제곡을 전후로 한 노래 배치

붉은 오성홍기--- 승리자들---이제 곧 날아오르리(로키 주제곡)---장밋빛을 띤 메뉴에뜨(경음악)- -- 녁변의 비단처녀

위의 맥락적 분석을 좀 더 확장하면 “녕변의 비단처녀”라는 곡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 로키의 주제곡 연주가 미국에 대한 대화의 메시지나 북한의 유화제스처라고 한다면 이후 연주된 “녕변의 비단처녀” 연주 역시 대미메시지로 의미가 있는 곡이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아리랑 공연을 “평안북도 녁변군을 무대로 한 작품”을 삽입하여 재구성한 적이 있다. 이 시기 아리랑에 등장한 영변이 핵시설 장소로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유명한 비단 생산지로서 묘사되었다. 2008년 시기는 당시 북미간 핵신고 문제 타결과 영변 냉각탑의 공개 폭파 합의 등으로 핵문제와 북미관계가 급진전 양상을 보이던 때이다. 당시 아리랑 공연에 영변을 ‘핵 생산지’가 아닌 ‘비단 생산지’로서 부각시킨 것은 북미관계 개선 및 그에 따른 경제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앞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당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원래 <아리랑> 공연을 통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위용을 보이려 했으나 북미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만큼 영변이 핵시설보다는 비단지 더 유명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³⁰³⁾

따라서 이번 모란봉 악단 공연 시 미국 영화 장면 삽입 이후 녁변의 비단처녀를 배치한 것은 2008년 당시의 상황에서 녁변의 비단처녀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번에도 역시 전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있다.

한편, 이 공연에서는 ‘세계동화명곡뭉침’이라는 주제로 톰과제리, 곰아저씨 뷁, 미키마우스, 미인과 야수 등의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연주되었다. 노래 연주 시 곰돌이푸의 호랑이캐릭터 티거, 뉴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초록색공룡 요시, 미키마우스

303) 김영희, "대집단체제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나타난 정책적 함의," 『한국예술연구』 제5호(2012), p. 152.

등의 캐릭터들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였다. 미국 애니메이션을 직접 무대배경으로 삽입하고 주인공 캐릭터들이 등장했다는 점은 이전의 북한 공연과 가장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는 김정은이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를 문화부분에도 적용한 것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적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대미 메시지를 영화 로키를 통해 보여주듯이 이 부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대화제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2회차 공연

2회차 공연은 전승절 기념 공연으로서 조선중앙방송은 보도를 통해 “음악형상과 무대장치 조명이 조화를 이룬 새롭고 특색있는 공연은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 비범한 영군술이 안아온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뒤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통일의 단결력과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스런 승리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고 전한다. 이번 공연에서 특징은 휴전 협정 체결 당시 전승열병식 현장에서 연설하는 김일성의 모습과 육성녹음을 직접 들려주었다는 점이다.

3. 3회차

3회차 공연은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전선동부시찰의 길에서 8.25경축 52주년 기념을 맞아 이루어졌다. 조선중앙방송은 보도를 통해 이번 공연에서 특히 《녀성해안포병의 노래》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전 공연과 달리 단원들의 옷은 여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옷으로 대체되었다.

“여성 6 중창 《녀성해안포병의 노래》가 울리자 감나무중대 군인들이 저저마다 무대로 올라가 출연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전쟁연습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릴 떨적의 기상을 힘 있게 과시했다”(조선중앙방송 보도 중에서)

한편, 이시기 한국 언론에서 김경희가 공식 행사에 등장하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 공연에서 김정은과 함께 공연을 관란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4. 4회차 공연

4회차 공연은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맞아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공연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기리고, 김정은을 찬양

하는 노래들로 채워졌다. 공연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당비서 등 주요 간부들과 주민들이 함께 관람했다.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는 이번 공연을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회차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막으로 단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북한 국가로 시작한 것에 비해 악단의 전 단원을 영상을 통해 이름과 얼굴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당창건 기념 공연이라는 행사라는 점 때문인지 이전 공연까지 마지막 부분에 부르던 “내운명 당이여”라는 곡이 공연 서두에서 불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이전 공연에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불리던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영도자” 곡을 부르지 않았다. 당을 중심으로 한 대가정론을 강조한 곡이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불리어졌다.

-하나의 대가정

인민은 한가정 사랑은 넘치네.
사람들 모두다 하나로 뭉치자. 우리의 장군님 모시고 따르리.
행복한 내 나라 하나의 대가정

5. 5회차

5회차 공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기념하여 이루어졌고 김정은과 리설주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에서의 특징은 지난 9월 8일 김 제1비서와 함께 평양 민속공원과 통일거리 운동센터를 공식 방문한 이후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50일 만에 공개 행사장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한편, 배경화면에는 북한 예술영화 ‘명령 027호’ 장면과 함께 주제가가 불려졌다.

6. 6회차 공연

6회차 공연은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루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하여 평양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고 이후 김정은이 함께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 은하3호라고 명기된 미사일 모형이 설치되었으며,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하여 발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단숨에> 구호”를 제시한 바 있다. ‘단숨에’는 북한이 그동안 강조해 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단번도약을

이루겠다는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김정은이 제시한 구호이다. 이 단숨에라는 구호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결국 김정은의 령도로 우주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7. 7회차 공연³⁰⁴⁾

7회차 공연은 2013년 1월 1일 신년축하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년 여섯 번의 공연과는 달리 '통일'이 핵심주제로 등장했다. "백두와 한라가 손을 잡으면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하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잘 부르지 않는 노래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까지 불렀다. 무엇보다 배경화면으로 남북정상회담 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악수 장면과 함께 "통일 615"라는 제목의 곡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전 공연에서는 전혀 부르지 않던 곡들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유독 강조되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번 신년공연에서 무대배경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광명성3호 성공발사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12월 광명성 발사 성공 축하기념 모란봉악단 공연에서는 무대설치로 은하 3호 모형이 등장하였었다. 이번 신년축하 공연에서도 역시 은하3호 모형이 무대 위에 곧게 세워졌으며 노래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최근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외 매체를 통해 광명성 3호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우주정복이라는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며 체제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김정은의 육성으로 공개된 신년사에서 최대의 성과와 업적은 단연 광명성 3호의 성공적 발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은 이전의 공연 때와는 달리 객석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공연을 즐긴다는 의미보다 광명성3호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공연에서 통일이 강조되는 것은 광명성 3호의 성공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이다.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 통일을 주장할 만큼의 우월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연의 무대 배경화면 중에는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평양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 1년을 평가할 때 광명성3호의 성공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과 충성도를 고양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 강조하는 통일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주장해 온 '자주통일'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자주, 꿈에도 소원은

304) 이 부분은 강동원, "모란봉 악단, 김정은 시대를 말한다." 『북한』 2013.2월호 참조 .

자주"로 개사되었다. 북한이 이번 신년공연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통일 메시지를 단순히 남북화해의 제스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1시간 10여분에 달하는 이번 공연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김정일, 김정은의 성과와 업적, 당에 대한 찬양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강조 부분이다. 이번 공연에서 강조되고 있는 '통일'은 남한에 대한 대화 메시지와 동시에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력을 도모하고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보다 10년이나 앞섰다고 평가되는 우주정복이 김정은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자심감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대내 선전용 메시지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다.

8. 8회차 공연

8회차 공연은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축하하는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특징은 모란봉악단 단독 공연이 아니라 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이었다는 점이다. 당 세포비서이기 때문에 곡선곡이 주로 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곡들로 이루어졌는데 합동공연을 한 조직이 인민군 소속 합창단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미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모든 공연단원들의 헤어스타일이 단발머리로 맞추어 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시범 공연에서 단원들의 헤어스타일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공연에서 모두 단발머리로 맞추어져서 군복과 함께 여군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연의 제목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으며 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등 노동당을 찬양한 가요들이 불렸다. 어머니 당이여는 당세포비서대회 둘째 날인 지난달 29일 김 제1위원장은 세포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 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이라며 "모든 세포비서들은 이 노래에 자신을 비춰보며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즉, 최고지도자의 언급이 있고 나서 북한 매체는 매일같이 이 노래를 소개하며 '노동당은 어머니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⁰⁵⁾

9. 9회차 공연

9회차 공연은 모란봉악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화선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모란봉악단은 인민군 제630대 연합부대를 방문해 김정은 국

305) <연합뉴스>, 2013년 2월 5일.

방위위원회 제1위원장의 추대 1주년을 경축하는 공연을 했다.

제630대 연합부대는 평안남도에 위치한 11군단 산하의 특수부대로 추정된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부대를 방문해 "싸움이 터지면 군사대상물과 괴뢰 반 동통치기관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소멸해야 한다"고 말했다.³⁰⁶⁾

9회차 공연의 의미는 현재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으로 북한 당국이 전시상황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화선공연은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위"로서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한 부대에서 화선공연을 했다는 점은 이번 남북관계에서의 대결 구도를 북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식 통치를 확고히 다지려고 하는 선전의 극대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공연을 마치고 관람자의 인터뷰를 통해 "최후결전의 시각이 오면 원수들의 아성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적들의 심장부에 멸적의 비수를 꽂고 연속타격으로 가증스러운 놈들의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사정없이 죽탕 쳐 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군사적 대치 상황의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본 김정은 체제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은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악단이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아 내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져 대내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이 생전에 마련해 둔 권력이양은 어느정도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김정일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며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이 공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란봉 악단 공연 이후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김정은 원수 추대 등의 일련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김정은 방식의 통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김정은은 정치, 경제적 부분의 개혁에 앞서 기존 권력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 분야에서 자신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정은 공연 관람 후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예술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언급하였다. 김정일 사후 탈북자 단속을 위한 국경경비 강화와 내부결속을 위해 재입북한 탈북자를 통해 남한을 비난하는 일련의 행보는 한류를 비롯한 외부정보 유입이 분명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억압과 통제 우선의 통치가 아니라 이미 북한 상류층을 비

306) <연합뉴스>, 2013년 4월 13일.

롯데 하층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문화에 대한 동경을 북한식 문화로 해석하여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대중적 무대에서는 파격적 형식을 이어 가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단속과 통제를 펼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양면의 괴리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허용과 은둔의 통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괴리감에서 오는 피로와 불만족 상황이 북한 사회 내 축적되어가고 갈등으로 증폭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 효과 이론에 저장선반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갈 때까지는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나 축적되어 가던 어느 순간 폭발적인 인식전환의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 내부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누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⁰⁷⁾

“김정은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라는 북한 당국의 명제가 대외적 메시지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기존의 통제와 억압, 그리고 인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선군정치만으로는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동시에 외부정보와 문화, 그리고 의식을 축적해 가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 요구에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북한체제의 향방이 결정되어 질 것이다.

307) 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현황과 전망,” <북한>, 2012.8월호, p. 30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읽기 :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³⁰⁸⁾**

전영선(동국대학교)

I. 문제제기

이 글은 집단적 치유로서 북한영화 읽기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하고, 2001년에 개봉되었고, 5월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방영되었다. <자강도사람들>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주제로 한 영화이다.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강도 사람들이 겪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을 다룬 영화이면서도 정만호의 죽음을 비롯한 자강도 사람들의 고달픈 행군기를 직접 다루었다. 북한당국으로서는 드러내기 싫어하는 ‘고난의 행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강도사람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위기는 북한 사회 전체가 겪어야 했던 집단적 위기 상황이었다. 식량난, 자원난, 외화난으로 규정된 고난의 행군은 수만에서 수십만의 죽음을 낳은 북한 체제 전체가 겪어야 했던 상처였다. 영화 <자강도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1998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00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먹을 것을 찾아 눈덮힌 벌판을 헤매다 죽은 정만호는 <자강도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중심 소재이다. 북한 영화에서 먹을 것이 없어 눈 밭을 헤매다 죽는 영화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자강도사람들>에서는 왜 죽음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정면으로 드러내고자 했을까? 하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 전체에게 각인된 고통이었지만 고난의 행군을 소재로 한 영화는 찾기 어렵다. 고난의 행군을 소재로 한 영화로는 <자강도사람들> 이외에 <추억의 노래>,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등이 고난의 행군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고난의 행군을 공결한 이후 몇 편의 영화가 나왔지만 <자강도사람들>만큼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

308)※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군 문제를 다룬 영화는 없다.³⁰⁹⁾

북한에서는 왜 이 영화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드러내는 것일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문학예술 창작의 유일한 원칙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영화는 마땅히 1990년대에 나와야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 영화 중에서 고난의 행군 문제를 다룬 작품은 없다. 제작의 시간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북한 영화 창작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영화의 창작 시기는 당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술적 완성도나 영화시장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문화의 관제적 특성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북한 체제의 제도권 하에서 용인되는 창작방식이기에 북한 체제의 위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승리를 선언한 직후 고난의 행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영화를 제작하였을까. 북한은 왜 다시 이 문제를 다시 고집어냈을까.³¹⁰⁾

이 글에서 주요한 문제로 삼는 것은 북한이 '왜 고난의 행군을 호명(呼名)해야 했을까'하는 점이다. 문화예술 창작과 배포의 모든 행위가 국가를 주체로 이루어지는 북한에서 구태어 고난의 행군을 호명하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자강도 사람들>의 창작은 곧 북한 당국이 시도한 집단적 치유의 과정이며, 국가의 의도가 작동된 문화적 제의 의식으로서 제작하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자강도사람들>을 집단적 치유의 관점과 집단제의적 특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 스스로 규정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제의적 필요에 의해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을 집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창작하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³¹¹⁾ 이는 북한의 문화예술이 곧 체제의 선전이나 선동의 산물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나아가 문화적 치유, 집단적 제의, 집단적 기억의 공유라는 과정으로서 북한 문화를 해석하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³¹²⁾

309) 이명자,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민속원, 2009), 90-91쪽 : “북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권 붕괴, 김주석의 사망, 잇달은 자연재해,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으로 극도의 경제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의 행군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 가시화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01년 고난의 행군이 공식 종결됨으로서 오히려 영화적으로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310) <자강도사람들>과 관련한 글로는 한호준, 「시대정신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시각화한 촬영형상」, 『조선예술』 (2002년 5호), 22-24쪽; 리추명, 「강계정신에 대한 서사적화폭」 『조선예술』 (2001년 11호), 14-15쪽; 문학예술부문사업 현지지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자강도 사람들>의 창작 성과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선문학예술연감(2002)』, 53-54쪽. 문학예술부문사업 현지지도, 「조선예술영화 <자강도 사람들>과 <대흥단책임비서> 창작에서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문학예술연감(2002)』, 76쪽 등이 있다.

311)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온 어려움은 예술영화 <자강도사람들>, <대흥단책임비서> 등의 작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영화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본격적인 영화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가장 힘들게 보냈다는 자강도의 현실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강도사람들>은 조선예술영화 촬영소가 제작, 2001년 개봉되었으며, 2001년 5월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방영되었다. <자강도사람들>은 2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전편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어려웠던 현실을, 후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12) 북한 영화를 단순한 체제의 선전이나 선동의 차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티모스적 욕망과 선군정치를 분석한 김선아, 「북한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에 나타난 티모스의 영화미학」 (『영

Ⅱ. 고난의 행군 트라우마와 <자강도 사람들>

1. <자강도사람들>로 호명(呼名)되는 '고난의 행군'

영화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를 배경으로 한 2000년 조선에
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겪은 식량난의
현실을 생생히 담은 거의 유일한 영화이다. 영화는 전력난과 식량난이 극도로 심각
한 자강도의 한 건설돌격대 여단장 강호성이 '전기는 나라의 신경'이라고 했다는 김
일성교시를 받들어 19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자강도사람들>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호명이다. <자강
도사람들>의 주제는 이 고난의 행군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
한 충성심이다. 그러나 표면에 드러난 주제와 달리 이면에 흐르는 주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종식 선언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또
어느 공장이 멋어버렸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라
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폭풍한설이 몰아치는 영상 위로 흐르면서 영화가 전개된
다. 북한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을 상징한다.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북한은
천국이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고 공언해 왔던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고, 처참한
현실을 솔직히 드러냈다.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드
러낸 영화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기 어렵다.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과
'강성대국 건설'의 경계에 선 작품이다.

<자강도사람들>의 배경이 된 곳은 자강도이다.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자강도
는 살기가 척박해 주민들 사이에서 '자갈도'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1998년 김정일
현지도 이후 '자강도를 본받자'는 구호와 함께 이른바 '강계정신'의 근원지가 되면서
'고난'의 극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모범으로 부각된 곳이다.³¹³⁾ 영화의 배경
으로 선택한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혹
심한 시련과 난관을 겪은 곳이라는 상징적인 곳이다.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혹
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15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

상예술연구』 21집(영상예술학회, 2012)은 북한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13) 강계정신 : 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일이 자강도를 방문한 뒤 같은 해 2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제일 처음 제시된 정신. 자강도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추진해 온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가장 모범
을 보인 지역으로 강계정신은 자강도의 도청소재지이자 도를 대표하는 상징도시인 강계시와 이 곳 주민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후 강계정신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체제
를 유지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 겸 경제 희생의 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주요 내용은 ① 자기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수령 절대숭배의 정신 ② 영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
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③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가는 자
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정신 ④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잃지 않는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등이다.
북한에서는 이 강계정신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것을 비롯하여 고난의 행군을 지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강도 사람들>에서는 한 줌의 강냉이 죽을 나누어 먹고, 먹을 것이 없어 니탄을 캐러나갔다가 죽음까지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강도사람들>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주인공 강호성은 당의 방침을 받들어 자강도에 9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한다. 북한 전체가 건디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자재 부족과 극심한 식량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은 점심으로 국과 옥수수 40알이 배급되는 장면은 고난의 행군 당시의 식량난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발전소 건설대장 강호성의 아내는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다 폐병으로 죽고, 후방참모 송만호는 눈보라 속에서 대용식량을 구하다 얼어 죽는다. 병들고 쓰러진 이들의 모습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기에 충분하였다.³¹⁴⁾

2. <자강도 사람들>과 집단적 트라우마

<자강도 사람들>이 다른 영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죽음'에 있다. <자강도사람들>의 중심 이야기는 송만호의 죽음이다. 송만호는 영예군인 출신으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돌격대에 지원한 인물이다. 정직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대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송만호는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후방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후방사업을 책임진 송만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눈보라 치는 추위 속에 극심한 식량난까지 겹치자 돌격대원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 강냉이대와 버뿌리 등으로 대용식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송만호는 대용식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눈 덮힌 벌판을 찾아 나선다. 언 땅을 헤치며 버 뿌리와 니탄을 캐면서 눈보라 치는 황량한 산길을 헤매다 결국 산비탈에 쓰러져 숨을 거둔다. 송만호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당의 모습을 반영한다. 당은 최선을 다했지만 죽음을 맞이한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죽음은 어렵지 않게 보인다.³¹⁵⁾ 그러나 이런 인물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 대부분이다. 국가적 의무, 당의 명령을 수호하기 위한 장엄미로 승화된 죽음이다.

하지만 송만호의 죽음은 성격이 다르다. 송만호의 죽음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죽음, 당이 책임져야 할 후방사업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체제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상징한다. 송만호의 죽음은 개인적인 끝나지 않는다. 죽

314) 이명자,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민속원, 2009), 92쪽 : “북녘 사회가 공식적으로 아사자와 식량문제를 통계화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고통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315) 함경남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금골광산에서 동료를 위해 숨진 채광공 '금골광부', 2012년 6월 11일 함경남도 신흥군 인풍중학교 4학년인 14살의 소녀가 폭우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옮기려다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한 '인풍골 소녀' 등이 있다.

음은 개인의 죽음이나 죽음에 이르게 한 동기가 문제가 된다. 송만호가 맡은 역할은 후방사업이었다. 후방사업을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송만호의 죽음은 곧 사회주의 국가계획체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국가에서 가진 자원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송만호의 죽음은 곧 개인의 죽음이자 사회의 죽음, 사회주의 체제의 죽음으로 은유된다. 송만호의 죽음은 개인적 문제를 떠나 집단성이 드러난다. 송만호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죽는 영화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나레이션은 고난의 행군 트라우마의 집단성을 각인시켜 준다. 영화 초기에 나온 “자강도의 어느 한”에서 ‘어느’는 집단 속에 속한 누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 피할 수 있는 문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땅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북한이면 어디서나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죽음이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체제 속의 한 개인인 것이다.³¹⁶⁾

송만호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워진 집단적 트라우마였다. <자강도사람들>에는 송만호 뿐만 아니라 시대가 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휩쓸려간 인물들이 등장한다. 발전소 건설단의 여단장인 강호성은 아내 리선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 강호성의 아내 리선희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선희가 육아원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돌보면서도 발전소 건설을 위해 몸을 바친 여인으로 도인민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 중이다.

1990년대 중반의 위기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됨으로써 북한 체제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름으로 포섭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트라우마를 가하는 주체가 외세로 대체된다. 북한 전체가 피해자인 집단적 피해자가 되고, ‘미제’가 가해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가해자는 국가이기 쉽다. 정당을 명분으로 가해진 국가의 폭력이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는다.

Ⅲ. 집단적 치유와 국가적 제의로서 <자강도 사람들>

1. <자강도사람들>과 집단 치유

1) <자강도사람들>과 집단적 정서 회복

트라우마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욕망이 불일치 할 때 발생한다.³¹⁷⁾ 개인이 꿈

316) 트라우마의 유형은 개인적 트라우마와 집단적 트라우마로 구분된다. 혹은 거시적 트라우마, 미시적 트라우마로 구분하기도 한다.

317)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18쪽 : “대중들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얇이 오래가는 일은 드물다. 부정,

꾸는 자기 서사가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충격으로 흔들리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고난의 행군'의 위기는 북한 체제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사회는 북한 체제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렇게 집단적 트라우마는 정서적 감염을 막고 동일구조로부터 탈피할 때 극복 가능하다. <자강도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적 감염을 막는 것이었다. 고난의 행군 슬픔은 정서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 요소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한 것은 이러한 체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집단적 정서적 감염은 사회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집단적 차원의 치유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이다. <자강도사람들>에서는 자강도 사람들은 송만호의 죽음 앞에 결연히 일어난다. 송만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찬옥이 나선다. 찬옥은 대용식품 품평회를 여는 것이 송만호의 죽음을 의미 있게 살리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우리 지금 희생된 동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시작한 이 고난한 행군이 이처럼 가슴 아픈 희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고,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풀뿌리 나무뿌리 이탄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는 절규는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탄식이었다.

송만호의 죽음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였다. 송만호를 제외한 생존자들의 선택은 건강한 애도 과정이었다. 마침내 대용식품 품평회가 열린다. 대용식품 품평회가 열리는 날 호성을 비롯한 자강도 사람들은 쌀보다 더 소중한 대용식품을 애써 달게 먹으며, 험난한 길을 웃으며 가는 정신을 잊지 말자고 결의한다. 송만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송만호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한 북한 체제의 목소리이다. 그 목소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로써 송만호의 죽음에 대한 건강한 애도과정이 완성되었다.³¹⁸⁾

송만호의 죽음에 대한 건강한 애도과정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상반응은 영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일상의 회복은 어려워진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일상적인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일상적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집단적 치유의 핵심이다. 감당하기 힘든 압도적 힘에 의한 피해에서 개인은 무기력해지고,

억압, 해리는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심리적 외상에 대한 연구에는 '숨은' 역사가 있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단절되어 있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외상을 이해하는 일은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318)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플래닛, 2009), 127쪽 : "생존자는 상실감을 애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외상 사건을 해결하는데 애도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고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외상 반응은 영속된다."

일상이 파괴된다. 북한이 <자강도사람들>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일상을 압도하는 고통에 맞서서 일상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³¹⁹⁾

2) <자강도사람들>과 집단적 자기 서사의 재구성

집단적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 동일성이 깨져야 한다. 구조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온전한 치유에 이를 수 없다.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구조적 동일성을 깨트린다고 해서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위안으로서 구조적 동일성이 타파될 때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치유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치유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 원천적으로 트라우마 자체에 대한 치유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다. 치유는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받는 자에게도 수용되어야 한다. 프로이트와 도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치료 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치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³²⁰⁾

트라우마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는 것이다. 극복을 통해 일상을 왜곡시킨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회피하고 왜곡되었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 아픈 상처와 마주하고, 과거를 수용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극복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 '고난의 행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서사로 제시된 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극복의 원형 서사는 '고난의 행군'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위기 상황을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하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이 혁명 역사에서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90년대 중반, 이 땅에는 준엄한 시련의 날과 날들이 끝없이 흘러갔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은 1990년대 북한 체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명의 이면에는 '이미 극복했던 역사'로 규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19)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67쪽 : "심리적 외상은 무력한 이들의 고통이다.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는 압도적 세력에 의해 무기력해지고 만다. 그 세력이 자연에 의한 것일 때, 우리는 재해라고 말한다. 그 세력이 다른 인간에 의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잔학 행위라고 말한다. 외상 사건은 사람들에게 통제감, 연결감, 그리고 의미를 제공해 주는 일상적인 보살핌의 체계를 압도한다."

320)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하여 상처입은 내면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도라(Dara)의 사례에서 멈추어 버렸다. 도라는 어려서 아버지의 술책에 의해 친구들에게 성적 장난감으로 제공된 여인이었다. 프로이트는 도라의 분노와 모욕감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착취 상황이 그녀의 상황이 그녀의 욕망의 충족인 것처럼, 그녀의 에로틱한 흥분을 탐색하려고 하였다. 프로이트가 어떤 행위를 복수로 해석하자, 도라는 치료를 그만두었다.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37쪽.

주지하다시피 고난의 행군은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흑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1차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으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명방식은 곧 상황적 어려움에 대한 유사성을 근거로 한 명명인 동시에 경과성 곧 극복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명명방식인 것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강계'의 모범사례를 본받자는 '강계정신'으로 승리로 기억되도록 하였다.³²¹⁾

'고난의 행군'이 집단적 트라우마의 출발이라면 종결되는 것 역시 '고난의 행군'이어야 했다. 다시는 고난의 행군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파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토대,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물질 토대를 강화하여 온전한 사회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고난의 행군 승리'와 같은 선언, 강성대국 건설 같은 정치구호로 제시되었다.

문제는 문화적 방식의 돌파가 필요하였다. 문화적인 방식의 집단적 치유는 집단적 자기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 서사'란 인류가 생성한 모든 작품의 서사를 통해 재생산하고자 하는 서사를 말한다. 개인이나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인류가 생성한 모든 형태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서사를 그릴 수 있다. 자기 서사는 현실적 가능성과 극복가능성이 높은 원형 서사일수록 자기 서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앞서 1990년대 중반의 어려움을 '고난의 행군'으로 선언한 것 자체가 승리에 대한 기억의 호명이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명은 '극복된 어려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승리한 기억,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승리의 기억이다. 승리의 기억이 중요한 것은 과거 상처를 마주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강한 과거의 충격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과거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직시할 수 있는 자기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 충격을 집단적 자기 서사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단적 기억의 조정을 통해 집단적 수용의 장을 열어 가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사실로서 고난의 행군(A) → 집단적 트라우마와 상처 →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집단적 자기서사로서 재구성(영화) → 집단적 기억의 교정 → 집단적 기억으로 재

321)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자강도는 살기가 척박해 주민들 사이에서 '자갈도'라고도 불리는데 1998년 1월 김정일 현지도 이후 '자강도를 본받자'는 구호와 함께 이른바 '강계정신'의 근원지가 되면서 '고난'의 극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모범으로 부각돼 왔다. 강계정신의 핵심은 국가의 지원 없이 모든 것을 자급하여 해결한, 북한 공업부문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자강도의 중심 도시 강계시에서 따온 말이다. 강계정신이란 모든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신을 의미한다.

조정된 고난의 행군(A')

<자강도사람들>은 현실에 기초하였지만 집단적 자기 서사에 의해 재구성된 영화이다. 집단적 자기 서사는 사실적 재현이 아니다. 개인이 되든 집단이 되든 과거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역사는 서사의 방식으로 기술된다. 우리가 접하는 역사는 서사의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이다.

국가의 기록은 국가가 개입된 서사이다.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필요에 따라 서사의 해석이 길어지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한다. 국가는 필요한 과거의 사건을 호명하고, 국가의 서사에 맞추어 사건을 재구성한다. 북한에서 <자강도사람들>을 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난의 행군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을 찾아내고, 북한 체제의 목소리에 맞게 인과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영화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실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만으로 트라우마가 극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기억이 필요하다. “비판적 기억의 형성을 위해서는 목격담의 공유와 상이한 증언들의 대조, 상충하는 주장들의 검증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생존자의 죄책감에 대처할 수 있지만, 기억은 모리스 홀바크스(Maurice Halbwachs)가 지적했듯이 하나의 사회적 과정”³²²⁾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비판적 기억은 불가능하다. 체제에 대한 원천적인 비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경우, 치유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북한은 자신의 상처를 직시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 미약하다. 상처를 직시하게 하는 것, 상처의 원인을 직시하는 역할 역시 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강도사람들>은 북한이 불행한 역사를 당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방식을 제공한 것이다. 집단적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일차적 의미가 있다.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조차 알 수 없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해석의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원인을 밝혀줌으로써 ‘해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심리치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³²³⁾

2. <자강도사람들>과 국가 제의(祭儀)

‘집단적 치유로서 성공했을까’에 대한 물음은 무의미하다. 개인적 치유가 아닌

322) 콘라드 야라우쉬, 「과거사 직면과 카타르시스 : 독일의 이중 독재 부담이 주는 교훈」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2012, 세계인문학포럼), 34쪽.

323) 콘라드 야라우쉬, 「과거사 직면과 카타르시스 : 독일의 이중 독재 부담이 주는 교훈」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2012, 세계인문학포럼), 33쪽 : “역사가들은 억압이나 대량학살의 범죄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지적으로 명쾌히 밝힘으로써 해로운 감정들을 억제하는 심리치료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집단적 치유에서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없고,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집단적 치유 방식을 도입한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에 대한 호명은 국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에 대한 종식이라는 집단적 제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당한 의미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나 극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비판적 기억이 공유되어야 한다. 비판적 기억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에 대한 상이한 여러 증언들을 대조하고, 상충하는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이러한 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집단적 출구로서 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자강도사람들>은 집단적 제의적 성격을 갖는다.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행군 서사가 재구성되어야 했다. 고난의 행군의 서사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지도력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³²⁴⁾ 그리고 이를 통해 전사회적 차원에서 명명되었던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예술화 작업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관제 예술 창작의 환경 속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예술형상화가 불가능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종식되었다는 대한 공식적인 선언 이후에야 비로소 지난 시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설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자강도사람들>이다.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것은 '고난의 행군'이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었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하는 제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이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증언이 있어야 한다. 집단적 신원이 있어야 한다. 집단적 문학 행위를 통해 집단적 자기서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서사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다.

집단적 자기 서사의 목표는 집단의 목표를 자기 목표로 수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트라우마는 개인적 서사와 집단 서사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개인과 집단의 서사적 불일치는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국가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국가 사회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 국가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는 재해석을 통해 집단서사를 회복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를 새로운 세기로 규정하고 새로운 세기의 국가서사를 '강성대국 건설'에 두었다. 이러한 집단적 목표는 국가 서사에 대한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상처로부터 집단적으로 회복하는 제의적 과정이

324)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늘(天)과 인간(人間)이 유기적인 감응관계를 맺고 있어서 군주의 실정이 음양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이것으로 인해 재(災異)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되풀이 되면 하늘에 재를 올려, 재난을 막으려 하였다.

필요한 것이다.

2000년부터 북한체제가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 문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구조적 동일성을 깨기 위해 제시한 가시적 목표였다.³²⁵⁾ 2000년에 최근까지 매년 공동사설을 통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³²⁶⁾ 이처럼 인민생활 문제가 강조되는 것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 해결 없이는 체제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이후에도 고난의 행군에 대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른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다른 서사경험을 통해 극복의 동인을 유추한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다기성'의 개념을 활용한다. '서사의 다기성'이란 서사가 고정된 흐름으로 벗어나가지 않고 다양한 갈림길로 각기 다른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열리고, 각기 다른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북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삶은 이러한 다기적인 서사 방식을 채용하여 삶의 궤적을 보여줌으로써 선택지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다. 즉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자기 서사를 제시한다. 선택의 기점,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분기점에서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이 극한에 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좌절 혹은 극복의 두 가지이다. 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 경희극 <철령>,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의 등장인물들은 어려운 시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³²⁷⁾

긍정적 주인공의 삶을 통해 국가가 원하는 서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북한 예술의 관제적 특성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선택에 대한 문제, 즉 <자강도사람들>에서

325) 김정일은 2000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를 통해 경제정책을 ‘혁명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 관철을 강조하였다. 이어 2000년 7월 4일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였고, 2000년 8월 1일 당창건 55돌을 즈음하여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도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를 채택하는 등 인민생활 경제 문제를 본격화 하였다.

326) 북한에서 경제문제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일차적 과제이다. 2001년 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적 시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거나 2002년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야 한다”, 2003년에는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경제건설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2007년, 2008년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다”, ‘오늘의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문제’, ‘인민생활 제일주의’ 등의 표현을 통해 인민생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327) 문학치료학에서는 자기서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사의 다기성’에 주목한다. 서사의 다기성이란 서사가 하나의 고정된 흐름으로 뻗어가지 않고 다양한 갈림길로 각기 다른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건강한 자기 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담자에게 여러 서사를 제시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절실한 관점이나 통로를 선택하도록 한다. 인간관계가 선택의 길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겨나듯이 서사 역시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때 건강성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건강한 서사를 통해 새로운 자기 서사를 만들어 내는 힘이 생긴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정운재,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강미정, 「서사의 다기성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문학치료연구』 제13집(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참고.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²⁸⁾ 이러한 장치는 2000년 이후 북한 영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성의 강화와 관련된다. 2000년 이후 북한 영화는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주제와 관련된 보도자료, 기사자료, 실사 사진 등을 동원한다. 현장취재 화면이나 노동신문 기사, 최고지도자 방문 사전 등이 필수적으로 동원된다. <봄향기>, <기다리는 처녀>, <축산반장의 교훈>, <그들은 제대병사였다> 등에서는 주인공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장면과 실제 기사 사진, 최고지도자의 글이 스틸사진, 실사사진이 나온다.³²⁹⁾ 영화를 통해 예술적 형상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사실성을 드러내는 장치를 통해 다큐를 지향한다. 다큐적인 장치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국가서사의 방향으로 유도한다.

IV. 결론

<자강도사람들>의 배경이 된 자강도는 곧 고난의 행군 시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북한의 어느 한 지역을 상징한다. 가장 힘들었던 과거를 영화로 호명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경험한 외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 과정이다. 북한 사회 전체가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겪었던 과거의 기억을 호명하고 역사를 재발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인류에게 객관적인 역사는 없다. 역사는 관통하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적 관점에 의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재구성된 서사화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현실은 오히려 드러낼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다. 고난의 행군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소설로 형상하고 영화로 형상하는 것은 본격적인 경험담과 승리로 기억되는 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강도사람들>의 주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나도 쉬지 못하고 인민들을 이끌고 있을 운몽으로 고난의 행군을 견디고 있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다. 주제는 여전히 정치적이다. 그러나 표현방식은 달라졌다. 드러내기 어려웠던

328) 이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1부-5부)가 있다. 2001년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은 '민족과 운명' 48부터 52부로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인 세 여성의 각기 다른 인생행로를 통하여 혁명적 신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인 차경심과 송숙, 분희 세 여인은 20년 만에 모교에서 뜻 깊은 상봉을 한다. 오래간만에 만난 40대의 여인들인 그들은 대학시절 즐겨 다니던 빵집에 모여앉아 지난날의 정다운 추억을 더듬으며 만남의 기쁨을 나눈다. 화기에애하던 분위기는 대학 때 간부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을 꿈꾸던 분희가 이제는 시집에서 영영 나와야겠다고 말하면서 냉랭해진다. 이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가 회고적으로 이어진다. 경심과 송숙, 분희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순결한 충성의 신념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주제를 말한다.

329) 이러한 결말은 관제문학으로 북한 문학예술이 갖는 클리셰(Cliche)로 볼 수 있다. 클리셰(Cliche)는 사전적 의미로 '(진부한) 관에 박은 문구'나 '진부한 표현이나 생각, 행동'을 의미한다. 통속극이나 통속드라마, 장르영화에서 보이는 뻔한 구조와 뻔한 스토리 등을 의미한다.

현실을 솔직히 드러낸다. 그렇게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지긋지긋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과거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은 돌파했고, 승리를 선언했다. 승리의식은 미래를 향한 동력과 희망을 주었다. '강계정신'은 고난을 극복한 자강도의 정신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북한 문학예술에서 회고담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정작 북한경제가 어려웠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언급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문학예술이 즐겨 다룬 소재는 꽃이나 사랑이었다. 너무도 어려웠던 현재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와 위안으로 삼았다. 과거보다 못한 현재를 통해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북한 예술은 관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고난의 행군'은 아프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당시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현실을 통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은 체제의 이름으로 명명된 트라우마였기에 정치적 선언과 함께 체제의 이름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화적 의식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은 고난의 행군을 호명하여, 원인과 결과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집단적인 기억을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승리한 과거의 사건이 되었고, 2000년 이후 북한 체제가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서사로의 편입이 가능해 졌다. 이를 통해 '고난의 행군'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비판적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사건을 선택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체제의 이름으로 선포된 고난의 행군을 종식하는 의식적 행위,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제의가 된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업의 집단적 재구성은 북한 체제의 집단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일체의 다른 감정과 기억을 허용하지 않은 집단적 기억의 공유, 그 기억의 공유를 위해 영화가 활용된 것이다. 이런 기억의 공유과정은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아리랑,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장편역사소설 시리즈 '불멸의 역사'총서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학예술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 이명자,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민속원, 2009.
- 한호준, 「시대정신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시각화한 촬영형상」, 『조선예술』(2002년 5호).
- 리추명, 「강계정신에 대한 서사적화폭」, 『조선예술』(2001년 11호).
-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 콘라드 야라우쉬, 「과거사 직면과 카타르시스 : 독일의 이중 독재 부담이 주는 교훈」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2012, 세계인문학포럼).
-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강미정, 「서사의 다기성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문학치료연구』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제6회의
[대학원생 패널]

제1발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 임석훈

제2발표

북한의 약탈국가화: 축적체제의 위기와 대응 - 이재경

제3발표

북한 문화외교의 태동(광복 이후부터~1950년 6·25전쟁이전까지) - 모순영

간지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임 석 훈(동국대 박사과정)*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
| II.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분단연구 | V. 결론 |
| III. 풍선날리기의 행위자-네트워크:
북민련의 사례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탈북자단체인 북한 민주화연합회가 2012년 10월 22일 (10:00~11:00/임진각 망배단) 시도하고자 했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조성되었던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주목하여, 이 ‘짧지만 강렬했던’ 사건 속에 숨겨진 분단 번역의 정치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사례 연구이다.

ANT에 입각해 보았을 때,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대북전단 살포(풍선 날리기)는 분단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번역해 내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행하는 분단 번역의 정치로 볼 수 있다. 전단(빠라)은 남북 간 심리전 및 선전의 도구부터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까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온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가 압축되어 있는 행위자이자 블랙박스로 볼 수 있다. 2012년 10월의 사건에서 보듯, ‘풍선 날리기’는 전단, 풍선, 라디오, 달리, 바람, 기후, 화성기, 탈북단체, 남북한 군 당국, 국가위기관리

구, 동향보고서, 언론, 임진각, 지역경찰, 지자체, 성명서, 바리케이트, 정전협정, 법조문, 안보담론, 위기 매뉴얼 등등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된 분단의 혼종물(hybrid)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10월에 있었던 ‘풍선 날리기’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풍선이라는 사물의 기본 속성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대북심리전에 이용되고 있는 이유, 탈북단체를 포함하여 ‘풍선 날리기’와 관련된 수많은 행위자들에게 ‘풍선 날리기’가 갖는 의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를 방지하려는 국가위기관리기구의 노력 등을 ANT에 입각하여 추적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2012년 10월 22일 북민련의 ‘풍선 날리기’가 안보위기로 가게 된 과정과 배경, 이를 둘러싼 행위자-네트워크, 그리고 블랙박스화를 역동적으로 파악해 보는 사례연구이다.

* **주제어:**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전단, 북민련, ANT: actor-network theory

* 이메일: lsh9650@gmail.com

I. 문제제기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연합회(이하 북민련)³³¹⁾는 10월 22일 10:00에서 11:00까지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에 풍선을 이용한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고, 임진각 관할지역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허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장을 획득하였다.³³²⁾ 이어서 10월 19일 오후 2시경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빠라³³³⁾살포시 임진각과 그 주변을 직접 조준 격파하겠다”라고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통고장’을 공개하였다.³³⁴⁾ 북한은 탈북자단체가 풍선을 이용한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행위를 적대행위로 판단하여 이를 공격하겠다는 일종의 블랙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 보도를 접수한 김관진 국방부장은 10월 19일 16:00경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전단 살포지점에 포격한다면 원점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국방위원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10월 22일 월요일 임진각을 중심으로 남북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었다.

풍선(風船)은 기구(氣球)란 뜻으로 ‘고무풍선·종이풍선’의 준말이다.³³⁵⁾ “내 마음은 빨간 풍선”이라는 노래가사도 있지만 풍선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에서의 풍선과 다르게 매우 평화적인 이미지이면서 상업적인 선전의 도구로도 널리 쓰이는 도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풍선이 높이 떠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이미지의 풍선이 한반도에서 분단을 번역하는 사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자의 상호 속성 교환과 결합을 통해 안보위기를 만들어 내는 행위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풍선이 가지는 최초의 속성들이 사람 또는 바람, 그리고 사람이 만든 매체(전단)등과 결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강력한 선전도구로 변모하고 이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안보위기의 근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홍민은 “분단 내부의 일상적 풍경은 지극히 평온해 보이나, 분단의 실존적 위기는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함 자체에 내재해 있어서 분단의 권력은 위기를 통해서만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일상에 숨어서 분단의 혼종물(hybrid)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³³⁶⁾고 주장한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민간단체 풍선날

331) 이후 북민련은 당일 경찰의 통제로 인해 임진각에서 풍선을 날리지 못하고 18:00경 강화도 지역에서 집회 없이 풍선만 날리고 해산하였다. 「연합뉴스」(온라인), 2012년 10월 22일.

332) 현재 집회 및 시위법에는 집회 개최 전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 접보과에 접수 후 집회신고 접수증을 수령을 하면 집회 개최가 가능함.

333) 빠라는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bill로 표현.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word/view>. 빠라의 어원은 영수증, 전단, 벽보 등의 뜻을 가진 빌(bill)을 기원으로 한 것으로 비라(ピラ)가 우리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빠라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박양호, 『한국전쟁과 시詩, 군가軍歌, 빠라』(서울: 도서출판 화남, 2010), p. 238.

334) 「연합뉴스」(온라인), 2012년 10월 19일.

335) 민중서림, 『민중국어사전』, 2011, p. 1219.

336)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제83호,

리기는 남과 북의 안보를 위해하는 사물이자 행위로서 분단이라는 현실을 번역하는 하나의 혼종물(hybrid) 또는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라는 블랙박스 속에는 이와 같은 대북 심리전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도와 속성이 결합된 네트워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 동심을 자극하는 풍선과 풍선날리기가 심리전 차원의 무기로 변질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풍선의 사물적 속성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심리전에 이용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탈북단체를 포함하여 풍선을 날리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풍선날리기가 갖는 의미, 풍선날리기가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안보위기를 촉발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가위기관리기구의 노력을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통해 분석 한다. 이를 통해 풍선과 이를 이용한 전단 살포 그리고 이것을 총칭하는 '심리전'이 남북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생산된 결과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민간단체라는 조직과 인간 행위자들, 풍선, 전단, 국가위기관리기구, 언론, 북한 매체, 임진각 등의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서 풍선날리기라는 혼종물(hybrid)이 어떻게 탄생하여 분단을 새롭게 번역해 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 이 풍선날리기에 대해 격한 반응을 하게 된 배경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선전·선동이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풍선날리기가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안보위기의 행위로 간주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민련의 2012년 10월 22일 풍선날리기가 전형적인 안보위기로까지 가게 된 과정을 사실(facts)의 차원에서 기술(description)하고, 이를 둘러싼 행위자-네트워크, 그리고 풍선날리기가 하나의 블랙박스화(black boxing)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³³⁷⁾

<그림 #1> 임진각에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장면

(2010), p. 48.

337) 다만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에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매우 많은 부분이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밀문서로 구분되어 있어 행위자로서의 군의 역할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다룬다.



*출처 : newsis, 2012. 5. 12.

II.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분단연구

그간 분단을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학술적 연구는 많은 방법론과 이론적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고 지금의 '북한학'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분단 이해와 극복이라는 대전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북한 및 통일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로 볼 수 있다.³³⁸⁾ 따라서 북한학의 존재는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의 방법을 찾기 위한 태생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구상 최후의 냉전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한국전쟁에 이어 수없이 많은 분단 상황이 빚어내는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남북한 간의 위기고조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효과' 등으로 여겨지는 것은 남북분단 상황이 재생산 해낸 또 다른 상황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빈번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홍민은 "북한은 우리와 분단모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부정되어야 할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성찰되어야 할 우리의 내부"이며 "분단모순으로부터 현실과 통일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³³⁹⁾하다고 보고 분단의 모순을 통해서 통일을 꿈꾸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분단 극복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나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고 살아왔던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단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nonhuman)도 행위자로 간주하고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비인간의 집합체(collective)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³⁴⁰⁾ 따라서 ANT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다양한 인간-비인간의 이종적 결합의 과정과 결과로 파악한다. 즉 사회란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 속성을 주고받으며 행위성을 갖게 되고 수많은 이질적 결합을 통해 수행되는 네트워크의 세계인 것이다. 가령 인간이 총, 칼 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맨손일 때를 각각 가정해 보자! 그 인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의 행위와 목표를 번역하는 방식,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간과 사물(총)은 상호 속성을 교환함으로써 행위를 변화시키고 목표를 번역하는 새로운 행위성을 만들어 낸다.³⁴¹⁾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을 통해 그 존재

338)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2009), p. 32.

339)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p. 48.

340) 홍성욱역,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부르노 라트루외, 『인간·동맹·사물-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서울: 도서출판 이음, 2010), p. 21.

341) Bruno Latour, *Pandora's Hope: Essay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1999), pp. 176~180.

를 드러내고 하나의 매끄러운 제도, 사물, 표준, 기술, 경관 등으로 상식화된다.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축된 제도, 사물, 표준, 기술, 경관 등이 하나의 평범한 상식이나 단일체(一者)로 일상세계에서 인식되는 것은 단순화(simplification)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화를 ANT에서는 '결절(punctualization)'이라고 부르며 이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사물이나 상식으로 응축되어 세상의 질서를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³⁴²⁾ 그 단순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 보도록 일종의 번역을 행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복잡한 네트워크로 보지 않고 단일한 사건, 상식, 사물 등으로 인식하도록 '단순화'하는 번역들이 행해지는 세계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분단을 단순화하여 번역하는 블랙박스(black box)들이 세상을 대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그 네트워크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가 그 추적을 포기하고 단순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ANT는 어떻게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확장되는지가 이론의 핵심적 관심사이고 그런 네트워크가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어 세상을 대변하게 되는 번역(translation)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³⁴³⁾ 번역이란 다른 행위자들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 즉 어떤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치환(displacement)하는 능력이며, 이는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대신해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협상, 음모, 계산, 폭력 등을 지칭하며, 권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³⁴⁴⁾ 번역의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게끔 하는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T)'를 만든다.³⁴⁵⁾ 이 의무통과지점이야말로 번역이 권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하고 의무통과지점을 통과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비인간 행위자 연결망의 결합은 번역의 형태로 이해되고 이러한 번역이 권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공고해지면 블랙박스가 되는 것이다. 블랙박스는 곧 번역이며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한 번역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분단 번역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기술(description)해 봄으로써 어떻게 풍선날리기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는지 추적하고 그 행위자 네트워크가 분단세계에서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안보위협으로 극적으로 이슈화되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2012년 10월 22일 북민련 풍선날리기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42)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pp. 50~51.

343)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p. 25.

344)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pp. 25~26.

345)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p. 26.

Ⅲ. '풍선 날리기'의 행위자-네트워크: 북민련의 사례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입시키기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분단 상황이나 분단 상황이 빚어낸 풍선날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남과 북 또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양상은 바로 2012년 10월 22일 북민련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실시될 때 각기 풍선을 날리려는 민간단체와 통제하려는 정부 그리고 포격을 준비하고 있던 북한 등의 행위로 극명하게 표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의 번역과 블랙박스화 등이 총 망라된 사례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먼저 2012년 10월 19일 북민련은 22일 월요일 10:00~12:00 사이에 임진각에서 북한에 풍선을 이용한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공표하였고 북한은 같은 날 14:00경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하여 "빠라살포시 임진각과 그 주변을 직접 조준 격파하겠다"고 서부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통고장을 방송하였다. 이어 16:00경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전단 살포지점에 포격한다면 원점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국방위원 질의에 답변하였다. 이 상황까지는 기존의 풍선날리기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의해 블랙박스화된 손쉬운 심리전 수단, 안보위협으로서의 결절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번역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내는 한 사례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동일 17:00경에는 한국군의 대북화력도발태세가 격상되었고 10월 21일 일요일에는 파주시에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임진각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민관군 합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는 집회를 사전 신고하였고 경찰이 발부한 신고장을 발부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북민련을 통제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집행이 곤란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을 포함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였다. 10월 22일 월요일 07:30경에는 북한의 서부전선 소속으로 판단되는 포병들이 포문을 개방하여 지하 갱도에서 나와서 사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전투기 4대가 전술조치선(TAL: Tactical Action Line)을 넘어 개성 상공 인근까지 남하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군단이 최고조의 화력 대비태세를 갖추었다.³⁴⁶⁾

해당지역 지자체인 파주시에서는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사태시 발령하는 통합방위사태를 발령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개소하였다. 특히 모든 공무원이 대기하면서 상황진전을 예의주시면서 임진각과 민통선 이북의 민간인 거주시설에는 대피를 알리는 경보시스템과 대피시설을 재점검하임진각 주변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과 함께 119 구급대

346) 전술조치선(TAL)은 군사분계선 20~50km 북쪽 상공의 가상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선을 넘으면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하여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조선일보」(온라인), 2012년 11월 5일.

를 대기시켜서 적의 화력도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 후송을 준비하고있었다. 아울러 청와대를 비롯한 행안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위기관리실을 점령하고 상황체제를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³⁴⁷⁾

07:30경 북민련은 그동안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풍선날리기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 당시 기상은 가랑비로 인해 풍선날리기에 적합하지는 않아서 풍선을 위로 띄우기 위해서는 가스를 2배 주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층기류는 남서풍이 불고 있어서 북한지역으로의 풍선과 전단을 보내기에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민련이 풍선날리기를 강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지 30분 뒤인 08:00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은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풍선날리기 단체인 북민련의 임진각 출입통제를 결정하였고 즉각 관련 정부부처에 지시하였다.³⁴⁸⁾ 08:20경 경찰은 총 6개소에 8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북민련이 임진각으로 이동하는데 거쳐가리라 예상되는 지점에 검문소를 운영하였고 아울러 북민련이 강동대교를 건너기 시작한 시점부터 추적조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09:00경 북민련은 YTN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다시한번 "기상과 관계없이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자유로를 따라서 임진각으로 이동하였다. 북민련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날려보내기 위해 대표 박상학을 중심으로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인민해방전선 등의 3개 단체 40여명으로 구성된 임시 단체이다. 북민련 일행이 자유로를 통해 순조롭게 이동하는 도중인 10:00경 자유로상 임진각으로 빠져나가는 당동 IC 주변의 임시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해 국도로의 이동이 차단되었다. 북민련 소속 풍선날리기 인원들은 경찰의 통제에 저항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약 20여분 후인 10:20경 통합진보당 파주시부 인원으로 밝힌 약 30여명이 풍선날리기와 북한의 화력도발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 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북민련 소속의 풍선날리기 인원을 향해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양측간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북민련 일행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 보다 북민련 일행과 풍선날리기를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파주시부 인원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 간 분리하는데 주력하였다. 10:38경 경찰을 사이에 두고 통진당 파주시부 인원과 마주한 북민련의 대표 박상학이 가지고 있던 전단 일부를 손으로 살포하였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의 조치를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임을 강변하였다.

347) 「연합뉴스」(온라인), 2012년 10월 22일. 통일부에서는 담당국장을 임진각으로 급파하기도 하였고 청와대에서 오전 8시쯤 전단 살포를 막기로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온라인), 2012년 10월 23일.

348) 「조선일보」(온라인), 2012년 10월 23일.

<그림 #2> 자유로 당동 IC에서 대치



<그림 #3> 대치 중 북민련 관련자의 시위



* 출처 : 연합뉴스, 2012. 10. 22

임진각에서 풍선을 날리려는 시도가 자유로상에서 좌절된 북민련은 11:50경에 해산하고 소수 인원만 강화도로 이동하여 18:00경 준비한 풍선을 날리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임진각에서의 북민련의 풍선날리기는 사실상 12:00까지로 예정된 집회여서 당동 IC에서 11:50에 상황은 종료된 것이다.

북민련의 풍선날리기 시도와 좌절은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심리전으로 또는 안보위협으로 블랙박스화된 현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풍선을 날리고자 하는 민간단체와 북한의 포격 위협 및 준비,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분단 상황에 놓여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분단 상황을 잊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즉 40여명의 민간단체가 간단한 장비로 빗속에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북한에게는 체제위협으로 번역되고 한국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 기구를 동원해야 했으며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서 수천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상황이 바로 우리의 분단 상황이 번역해 낸 또 다른 상황인 것이다.

IV. '풍선 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1. 대북 심리전으로 번역된 풍선날리기

가. 빠라(전단)의 속성

한반도에서 속칭 '빠라'라고 부르는 전단 사용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빠라 역시 Bill의 일본어식 발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면서 굳어진 것이다. 김진송은 전단의 사용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가 조선인의 통치방식을 무단

통치가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고 이에 따라 계몽이라는 명분으로 선전·선동을 위해 전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³⁴⁹⁾ 한반도에서 심리전으로서의 전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6.25전쟁으로 심리전의 중요성을 간파한 미국에 의해 전쟁기간동안 많게는 40억장³⁵⁰⁾ 적게는 25억장³⁵¹⁾이 살포되었고 북한도 3억장을 살포하였다. 심리전용 전단은 “적을 뼈라로 물어라”라는 명령을 하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당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빨치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포함하여 전후방 각지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살포되었다. 이후 전단은 남북한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남한은 물포(物布)작전³⁵²⁾이라는 명칭으로 전방에서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³⁵³⁾ 즉 전단은 일본 제국주의시대부터 심리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번역된 것이다.

나.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둘러싼 논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6월 12일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및 군차원의 심리전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되었다.³⁵⁴⁾ 그러나 민간차원의 전단살포(민간단체 풍선날리기³⁵⁵⁾)는 계속되고 있어서 2010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북측으로부터 전단살포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었다.³⁵⁶⁾ 따라서 정부차원의 전단살포는 중지하였으나 민간차원의 전단살포는 지속되었던 것이다.

최초, 정부는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를 통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검토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관련 법조문을 모두 망라하여 검토하였으나, 군사기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전 신고를 한 집회를 통해 풍선으로 전단을 북한지역에 살포하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근원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간단체들에게 가급적 자제를 요청해 왔다.³⁵⁷⁾ 즉 현재의 실정법을 통해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349) 김진송, “전쟁 뼈라와 슬로건 사회(뼈라는 아직도 살포되고 있다),” 현실문화연구, 『뼈라에서 싸이버문화까지』 (서울: 현실문화기획, 2000), pp. 120~125.

350)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 영화, 2012), p. 12.

351) 『SBS 뉴스』, 2010년 6월 21일.

352) 물포작전은 물자살포작전의 약칭이다. 박승춘, “북한의 예상위협과 우리의 대북정책,” (서울: 보훈처, 2008), p. 2.

353) 『중앙일보』, 2010년 10월 6일.

354)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진(webmaster@president.go.kr),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의 의의”, 『청와대 메일매거진』 90호, 2004년 06월 06일.

355) 전단살포라는 용어는 2012년 10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주관 정부합동회의에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로 통일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심리전과 민간차원의 대북 선전활동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356) 전통문 항의 14회, 군사회담시 항의 7회 : 2010년(2), 2009년(1), 2008년(4), 2007년(3), 2006년(7회), 2005년(3). 2011년이후는 연평도 포격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됨으로써 군사회담이나 전통문을 주고 받는 행위도 매우 제한되었다. 경찰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참고보고”, 2010. 3. 15.

357) 경찰청, “대북 전단살포 제재관련 현행법 검토”, 2005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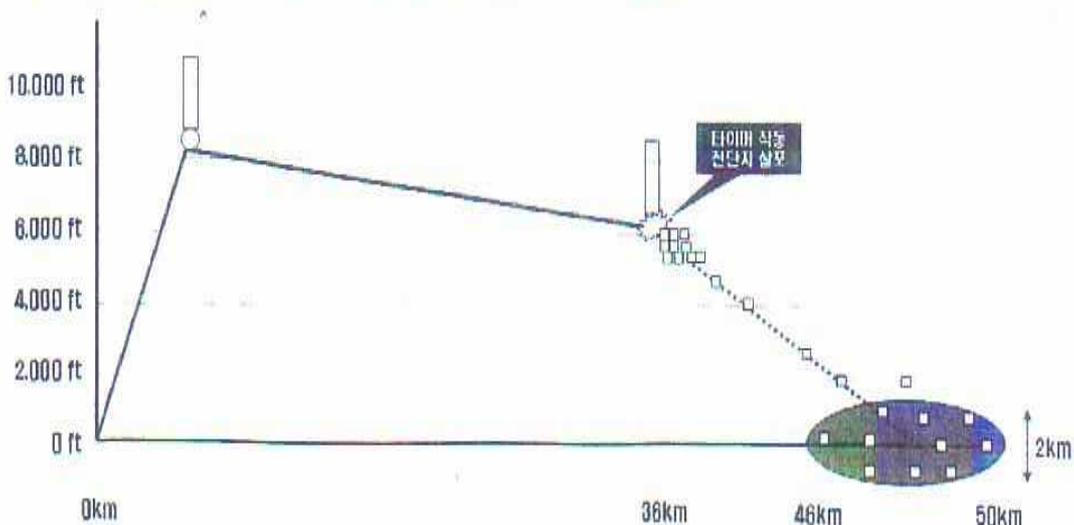
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변종으로서의 풍선과 전단의 결합

풍선은 1개에 약 6만장까지 전단을 살포할 수 있고 풍속 10m/s로 1시간 이후에 타이머가 작동되어 끈이 끊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했을 경우, 풍선은 약 8,000ft까지 상승하여 46km까지 날아가서 전단이 2km범위로 확산되게 된다. 풍선에 사용하는 가스는 주로 수소가스로서 1개의 통을 가지면 풍선 1개를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통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틀만 갖춘 2.5t트럭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소규모 전단살포시에는 봉고차 또는 승용차를 활용하여 이동함으로써 은밀한 기동도 가능하다.

년간 풍선을 날리는 수는 총 70여회에서 90여회 정도이며 전단이 북한지역에 떨어지는 확률은 2011년에는 34.7%, 2012년에는 43%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풍선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서에서 북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휴전선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휴전선 인근에서 풍선을 날리더라도 남풍이 불지 않으면 북한쪽으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휴전선 남쪽에서 상층기류가 남풍일 경우 북한 지역에 전단을 손쉽게 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풍선과 전단, 그리고 바람은 상호간 속성을 주고받고 결합하여 풍선날기기를 시도하는 민간단체들에 의해 손쉬운 선전 수단으로서의 변역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풍선 비행 및 전단지 살포범위(기준 : 풍속 10m/s, 타이머 1H)



* 연합뉴스, 2012. 10. 18.

풍선에 달려있는 전단의 주요 내용은 북한체제 비판 및 남한체제의 우월성, 북

한 인권실태, 김정일 가계와 김정은 3대 세습 비판, 김정일 건강문제, 대청해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 등에 대한 실상을 소개하는 것이었다.³⁵⁸⁾ 따라서 전단이 북한에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강력한 심리전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전단을 들고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도 발생하였다.³⁵⁹⁾

라. 탈북자 중심의 민간단체와 풍선날리기의 결합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관련 주요 단체들은 총 8개로서 이중 자유북한연합 등 탈북자단체가 4개, 납북자 가족모임 및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같은 보수 민간단체가 4개 등이며 그 이외에 종교단체까지 합치면 총 20여개가 넘는다.³⁶⁰⁾ 이중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에 아주 적극적인 단체는 주로 탈북자단체와 종교단체이다. 종교단체는 북한체제 비난보다는 북한지역에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조선어 성경 등 전도 목적으로 풍선날리기를 이용하고 있고 탈북자단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각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북한체제 비난 내용을 포함한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서 북한의 항의에 주로 예시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보수를 표방하는 민간단체들로서 날리는 물품은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포함하여 단파라디오, DVD, 소책자, 달러, 일용품, 초코파이 등 과자류, 양말 등 옷가지, 성경책 등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는 것이다.³⁶¹⁾

풍선을 날리는 장소는 대부분 서부전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선의 특성으로 인해 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홍보하고 집회 등을 통해 풍선을 날리는 장소는 주로 임진각과 통일동산으로서 북한이 서부전선사령부 명의로 공개통고장을 보내면서 격파하겠다는 장소가 임진각이다. 즉, 풍선날리기는 민간단체와 풍선 및 전단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선전수단으로서의 한국 언론의 결합도 행위자들에게 풍선의 효과를 과장되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북한이 풍선날리기를 심리전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마. 손쉬운 심리전의 의무통과지점으로서의 풍선날리기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비교적 단체 운용을 위한 재원이 상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력으로 지속적인 풍선날리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358) 국방부, “민간단체 전단살포 관련 보고,” 2011년 3월 11일.

359) 「연합뉴스」(온라인), 2010년 7월 8일.

360)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단체가 많은 이유는 풍선을 통한 대북 전단살포가 매우 손쉽기 때문으로 단체 구성원이 1명 또는 2~3명 정도의 단체들도 많고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풍선을 날리기 때문이다. 경찰청, “대북 전단살포 관련 단체 현황,” 2012년 10월 18일.

361) 국방부, “민간단체 전단살포 관련 보고,” 2011년 3월 11일.

통일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풍선날리기 단체는 없기 때문에 기타 보수단체의 지원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³⁶²⁾

특히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서 연간 200만\$의 자금이 지원되어 라디오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운용되고 있고 이외에 연간 2,000만\$의 자금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운용³⁶³⁾되고 있어서 정부는 이중 상당한 금액이 탈북자 단체의 풍선날리기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⁶⁴⁾

또한 2006년에는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와 탈북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이용하여 일본인 납치에 대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기 위한 전단을 살포하기도 하였다.³⁶⁵⁾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탈북단체 들은 자신의 활동을 언론을 통한 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금지원의 근간에 자신들의 활동을 인지시키고 추가 지원에 대한 간접적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자제 및 비공개 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활용이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교단체에서는 순수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중 서울 USA기독교 단체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지부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풍부한 자금 동원력을 이용하여 선교 목적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⁶⁶⁾

바. 결절로서의 손쉬운 대북심리전(풍선날리기)

이렇게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번역하게 만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도입한 부르노의 설명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⁶⁷⁾ 우선 민간단체는 북한에 직접적인 심리전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북한에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는 북한의 공식적인 항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된다. 미국과 일본 또는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시도하던 중에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인 장점에 주목하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북한인권 개선이나 북한의 민주화 지원 같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손쉬운 수단임을 인지하였다. 즉 “민간단체+풍선

362) 민주통합당 청정래의원은 2012년 10월 24일 통일부 감사에서 2011년부터 2년간 통일부가 ‘민간통일운동 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5곳이 대북 전단살포를 주도한 북한인권 소속 및 관련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온라인), 2010년 10월 24일.

363) 임상순, “미국 북한인권법 전문(북한인권과 여성 학습자료),” 2012, p. 1~2.

364) 경찰청,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관련 정부 합동 대비방안,” 2012년 9월 10일.

365) 「연합뉴스」(온라인), 2010년 6월 22일.

366) 이 단체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모금활동을 통해 라디오 등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북한에 보내고 있으며 서울 지부는 한국인 목사부인이 지부장으로 있다. www.seoulusa.org 2010년 12월 4일.

367) Bruno Latour, *Pandora's Hope :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Cambridge-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1999), pp. 176~180. 참조

+전단=손쉬운 심리전"이라는 형태로 번역되었고 이는 다시 미국과 일본 또는 보수 단체의 지원과 결합하면서 북한 인권 및 민주화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로서 풍선날리기로 번역되었다.

일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풍선날리기를 홍보하여 관심을 끌어서 더욱 풍선날리기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풍선날리기가 단지 전단만 살포하는 것이 아닌 심리전의 또 다른 매체인 라디오나 달리 등을 살포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풍선날리기는 민간단체의 대북심리전을 위한 의무통과지점이 된 것이다. 아울러 풍선은 탈북자 단체 등 일부 민간단체, 미국과 일본 및 국내 보수단체, 언론, 북한의 대응 등과 함께 접힘(folding)으로서 손쉬운 심리전 수단으로서의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라는 블랙박스화되고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정부통제가 어려운 장점을 보유한 손쉬운 심리전이라고 결절(punctualization)된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북한 인권 및 체제 비난, 북한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각인된 것이다.

2. 안보위협으로 번역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가. 풍선날리기에 대한 북한의 번역

북한 김정일은 1972년 경, 당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전선동부장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김일성 사후 1999년까지 조직비서와 함께 선선동부장직도 겸직하였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강제적인 조직통제력과 함께 선전선동의 유일적 지도체제구축으로 완벽한 독재 권력을 창출하였는데 김정일은 사회를 담당한 당선전부와 군선전부를 모두 겸직하면서 사회, 군 담당부서들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그 하부조직들은 충성심 경쟁을 벌리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³⁶⁸⁾

이처럼 북한의 선전·선동은 대내 결속과 대외 체제 홍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북한이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시 남북관계를 담보하는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상호간 선전활동의 중지를 우선적인 의제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거치면서 체제경쟁에서 현저하게 뒤져 있는 북한은 남한의 전단살포, 방송, 확성기 방송, 전광판 등의 방송으로 인해 북한군 및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북한에게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이후 활성화되는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체제에서 새로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10년 6월 12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전쟁수행을 위한 기본작전형식(심리전)의 하나로 지목하며 무력대응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하였다.³⁶⁹⁾ 아

368) 자유북한방송, “북한의 제2권력 선전선동,” 『10년후 북한』 제22호, 2012년 12월 4일

369) 「조선일보」, 2010년 6월 13일,

올러 2012년 10월 22일 북민련의 풍선날리기를 실시하는 임진각을 격파하겠다는 공개통고장은 북한측 논리에서 보면 풍선날리기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도발 및 전쟁행위이고 격파는 도발 및 전쟁행위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현실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선동, 선전·선동에 대한 그 동안의 경험,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손쉬운 심리전 수단으로서의 풍선날리기가 결합함으로써 체제를 위협하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로 번역되었던 것이다.³⁷⁰⁾

나. 결절된 풍선날리기와 정부의 결합(안보위협으로 발전)

북한이 2005년 전화통지문과 군사회담 등을 통해서 실시한 민간단체 빠라(전단) 살포의 항의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정부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법에서는 전단살포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함으로써 정부는 관련단체에 대한 자제요청 및 설득 위주로 풍선날리기를 통제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묵인하였다.

실제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행위 규탄과 체제 비난 등과 결부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정부가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킨 이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크게 증가하였다.³⁷¹⁾ 따라서 정부의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묵인은 민간단체 등 손쉬운 대북 심리전이 풍선날리기라는 의무통과지점이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후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심리전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북한의 격파라는 공개통고장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안보위협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응책에는 민간단체에 대해 풍선날리기를 비공개 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면서 언론의 보도를 자제하고 유사시 관계부처와 통합된 대응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³⁷²⁾ 특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대북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인 심리전 차원의 행위와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를 원천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였

370) 북한은 6.25전쟁간 3억장의 빠라, 즉 전단을 살포하였고 2012년 월간조선이 입수한 조선인민군출판사판 『북한군 대남심리전 학습제강』에 의하면 남한 민간단체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보내기에 의한 북한군 사상 동요 차단을 목적으로 이 책이 발간되었고 2012년 7월과 8월에 16,000여 장의 대남전단 살포를 실시하였으며 공산당식 선전·선동 방식에 의존한 함화·빠라 등 전투방식을 강조하였다. 백승구·김정우, “김정은이 ‘대남심리전 전개하라’며 직접 지시”,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371) 「연합뉴스」(온라인), 2012년 10월 23일.

372) 「중앙일보」(온라인), 2012년 9월 7일.

다. 또한 풍선날리기와 함께 공개집회가 개최되는 임진각과 주변의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주민 대피시설과 경고 방송 시설을 확충하고 일단 유사시 북한의 포격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軍·경찰·국정원·지자체 등과 함께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행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軍은 2011년 풍선날리기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방부는 2011년 8월 29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을 포함해 적의 도발시 제대별 타격계획을 최신화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 계획은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 풍선을 겨냥해 방사포 및 자주포를 발사할 경우에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식하여 원점을 격멸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의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지자체는 주민대피시설의 확충 및 세부적인 주민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다. 결절로서의 안보위협(풍선날리기)

이렇게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안보위협으로 번역하게 만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매개(mediation)의 개념³⁷³⁾을 도입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쉬운 심리전으로서의 결절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북한에게 고립과 저발전,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선동과 그 동안의 경험,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풍선날리기가 결합함으로써 체제를 위협하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로 번역되었다. 남북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시절에는 북한도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체제위협으로까지 해석하지 않았으나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묵인한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체제위협 요소로 번역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위협의 수단인 풍선날리기를 대상으로 한 화력도발을 공언하게 되고 이러한 북한의 번역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풍선날리기가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안보위협으로 번역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풍선날리기가 안보위협의 결절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북한과 남한은 풍선날리기에 대비하는 각종 계획과 문서 그리고 대피시설의 신축과 군사적 타격 수단의 훈련을 통해 상호 대비하면서 풍선날리기는 더욱 안보위협으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발생시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를 암묵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이는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심리전 수단으로서 결절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시 북한의 위협이 가해지면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가 안보위협으로 결절되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373) Bruno Latour, Bruno Latour, *Pandora's Hope :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Cambridge: Messachusetts-London; Harvard University, 1999), pp. 176~180. 참조

심리전 수단으로서 그리고 안보위협으로서 결정되는데 각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V. 결론

한반도에서 뼈라(전단)의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현대전으로서의 심리전이 매우 강력하게 수행되었던 6.25전쟁은 그것이 냉전체제의 체제우위 경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심리전으로 번역된 것은 바로 전단의 속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된 것이다. 아울러 세계 최후의 냉전분단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의 분단이 번역해 내고 다시 재생산한 혼종(Hybrid)의 하나가 바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인 것이다.

풍선날리기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심리전 수단으로서 전단이 얼마나 북한지역으로 살포되었고 그것을 읽은 북한 주민이 얼마나 많이 탈북을 시도했는지, 또는 전단을 보고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의 여건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³⁷⁴⁾ 그러나 최소한 전단이 북한지역으로 살포된 비율만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풍선날리기를 통해서 북한지역에 전단이 안착할 확률은 2011년이 34.7%, 2012년 43% 정도이다. 나머지는 남한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령 북한지역에 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에 떨어짐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전단이 전달될 확률은 훨씬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날리기가 손쉬운 심리전이나 안보위협으로 변질된 것은 행위자간의 결합을 통해서 과장되게 번역된 면이 크다. 사실상 풍선의 북한지역 안착률만 따지고 보면 풍선날리기가 안보위협까지 번역되는 것이 지나친 것이다. 그러나 풍선날리기를 선호하는 민간단체 등 행위자나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 등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속성을 주고받으면서 과장된 번역이 행해지고 이는 다시 상호 에스컬레이트된 번역을 통해서 풍선날리기가 체제 및 안보위협으로까지 결정된 것이다.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결정로서의 손쉬운 심리전 수단으로서 현실적인 여건 즉, 법리적으로 정부에 의한 차단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중지되기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다. 아니 더욱 더 많은 단체에 의해 풍선날리기가 시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북한이 풍선날리기를 체제 불안요소로 계속 번역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풍선날리기를 안보위협으로 계속 번역할 것이다. 분단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풍선날리기는 이와

374) 조선일보 강철환기자는 북한군은 전단이 날라오는 경우 군인의 외출을 통제하고 전단을 다 회수한 이후 군인들을 외출을 시키고 있고 지속된 전단살포로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노출로 인해 북한군의 충성심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도 상당수가 전단내용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일보」(온라인), 2010년 1월 30일.

같이 2가지의 결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손쉬운 심리전 수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체제나 현 상황에 위기를 조장하는 안보위협이다. 이렇듯 아직까지 냉전 분단국으로서 살아오는 우리는 풍선날리기를 각기 번역하고 이를 공고한 블랙박스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결절의 분석이 때론 분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만들고 다시 한번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분단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013년 4월 14일 보수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이달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계획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14일 낸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지지하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³⁷⁵⁾ 사실 이 보수단체들은 4월 12일 풍선날리기에 따른 임진각에서의 집회를 신고하였고 13일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괴뢰들이 반공화국 뼈라 살포 놀음을 벌려 놓게 한다면 끔찍한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되어온 위기 상황에서도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손쉬운 심리전을 넘어서 북한에게 체제위협으로 한국정부에게는 안보위협으로 다시 번역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풍선날리기에 대한 보수와 진보단체와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블랙박스화 되고 결절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블랙박스를 재생산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단체 풍선날리기는 분단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결절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혼종(Hybrid)들이 재생산 될 것이다.

375) 「연합뉴스」(온라인), 2013년 4월 14일.

참고문헌

- 경찰청. "대북 전단살포 관련 단체 현황." 2012년 10월 18일.
_____. "대북 전단살포 제재관련 현행법 검토." 2005년 11월 1일.
_____.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참고보고." 2010년 3월 15일.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2009.
국방부. "민간단체 전단살포 관련 보고." 2011년 3월 11일.
김진송. "전쟁 뼈라와 슬로건 사회(뼈라는 아직도 살포되고 있다). 『뼈라에서 싸이버 문화까지』. 서울: 현실문화기획, 2000.
민중서림, 『민중국어사전』. 2011.
박양호, 『한국전쟁과 시詩, 군가軍歌, 뼈라』.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10.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제14권 7호, 2010.
박승춘. "북한의 예상위협과 우리의 대북정책." 서울: 보훈처, 2008.
브르노 라투르著. 홍성욱譯.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서울: 도서출판 이음, 2010.
_____. 홍철기譯.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2009.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 영희, 2012.
임상순. "미국 북한인권법 전문(북한인권과 여성 학습자료)." 2012.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분단 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제83호, 2010.
- Bruno Latour, *Pandora's Hope :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Messachusetts·London; Harvard University, 1999.

- 「연합뉴스」(온라인), 2010년 6월 22일.
_____. 2010년 7월 8일.
_____. 2012년 10월 19일.
_____. 2012년 10월 22일.년
「조선일보」(온라인). 2010년 6월 13일.
_____. 2012년 10월 23일.
_____. 2012년 11월 5일.
「중앙일보」(온라인). 2012년 9월 7일.
_____. 2012년 10월 6일.

「SBS 뉴스」, 2010년 6월 21일.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word/view>(검색일 : 2012년 11월 4일)

서울USA 홈페이지, www.seoulusa.org(검색일 : 2012년 11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진(webmaster@president.go.kr),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의 의의”, 『청와대 메일매거진』 90호, 2004년 6월 6일.

북한의 약탈국가화: 축적체제의 위기와 대응

이재경(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I. 문제제기

1990년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에 체제위기를 야기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체제수준으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의 위기는 구조적인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체제위기는 북한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쿠바) 역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상당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했다. 중국의 천안문 사건과 쿠바 난민의 대규모 미국행은 위기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즉,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체제의 압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구조적 압력에 국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었다.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는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시장의 도입과 국제경제의 편입이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북한은 대규모 기아와 아사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와 "핵"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독특한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축적체제의 특징과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북한 축적체제의 형성과 전개가 구조적 위기를 야기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축적체제에 의해 형성된 이익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인민 대중에 약탈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핵을 통해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의 시장화의 흐름은 시장의 도입이 정치적 변동을 야기한 동유럽모델과는 다르며 시장화가 일정한 정치적 통제 속에 진행된 중국과도 상이하다. 북한의 시장은 국가의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회피의 상징이며 또한 체제유지를 위한 약탈의 공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는 인민 대중의 삶의 질을 보장, 개선하겠다는 이상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탈피하고 극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그들과 비호관계로 연결된 소수 특권대중들의 이익을 반영

하며 다수의 인민 대중을 착취하는 일종의 제3세계 국가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II. 중공업우선전략과 약탈국가의 친화성

1.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 논리

북한의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근거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의지의 결합을 통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은 소비억제를 통한 고도축적과 농업, 경공업에 대비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비해 낮은 발전단계에 있었던 사회주의의 추격발전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확대재생산은 경제를 I 부문(생산재)과 II 부문(소비재)으로 나누고 생산재부문의 축적을 통해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또한,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즉, 생산을 강조하고 생산재부문의 확대와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한다. 즉, 이런 논리 속에서 소비는 축적(축적은 다시 미래의 더 나은 소비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을 위해 억제되어야 하고 생산재, 즉 중공업은 우선 발전되어야 한다.

니키티친(P.I Nikitin)은 사회적 재생산을 “물질적 부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반복”이라고 정의하면서 생산 이후에 분배가 가능하므로 생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³⁷⁶⁾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는 다른데 그것은 생산이 “사전에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재생산표식을 통한 확대재생산의 설명에서 니키티친은 I 부문에 우선성을 주장하면서 II 부문에 비교하여 I 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I 부문 즉, 중공업의 발전이 경공업과 농업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산업 간의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변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열망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경험은 실제로 식민지의 경제적 성격과 관계없이 대외적 배타성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은 무제한적이지 않았고 일관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주변부 사회주의의 국내정치적 갈등에 대한 소련의 개입은 자립경제의 수립이 경제적 열망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게 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⁷⁷⁾ 첫째, 생산자립, 국가 경제 자체로 완결된 산업구조를 형성을 추구한다. 즉, 중공업과 경공업이 모두 발전하여

376) Nikitin, P. I., 오영수 역, 『정치경제학 입문II』, (서울: 동녘, 1990) 144-150쪽

377) 자립적 민족경제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서울: 산업연구원, 2005) 28-29쪽

축적을 위한 생산재와 소비재의 원활한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기술자립,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생산의 증대를 추구하고 국내 기술자를 육성한다. 셋째, 자립자립, 국내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외국의존을 줄인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 이상의 자립적 민족경제론과 결합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농업사회에서 농업원료를 기반으로 한 경공업의 발전은 초기에는 높은 기술 수준과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생산, 기술, 자원의 자립요구는 결국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중공업우선 전략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이런 친화성은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과 같은 주변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공업우선전략을 채택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 약탈적 성격

사회주의체제에서 축적은 국민 경제단위의 계획, 산업단위의 중공업발전전략, 기업단위의 연성예산제약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인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계획경제를 전제로 한다.³⁷⁸⁾ 양자는 분리되어 사고할 수 없으며 당-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계획경제가 존재한다. 일당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당-국가체제는 사회(세력)에 대한 억압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을 계획경제의 틀에 묶어두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계획경제는 중앙기관(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경제를 의미하며 여기서 개인의 역할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만이 모든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으로서 국민경제의 생산과 분배, 소비를 결정하며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인 생산의 무정부 성을 극복하고 불균형을 교정하여 불황의 가능성을 봉쇄한다. 계획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정책이다. 마르크스의 확대재생산 표식을 통해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에 대한 선행발전이 정당화된다.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산업정책은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의 체제경쟁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공업 부문이 적절한 생산재, 즉 더욱 생산성 높은 생산재를 다른 부문에 제공할 수 있다면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공통적 현상인 부족문제(shortage)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은 계획이지만 축적과정 전반의 핵심단위는 기업이다. 기업은 위로부터의 작용(계획)과 아래로부터의 반작용(대중)이 조우하는 공간으로서

378) 이무철(2008),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157쪽

계획목표의 달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노동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 압력에 놓인다. 이런 압력에서 연성예산제약은 기업에 재생산요소(자본, 자원, 노동 등)의 극대화에 유인으로 작동하여 낭비를 야기한다. 또한, 사회주의 가계의 경성예산제약은 기업의 연성예산제약과 결합하여 부족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사회주의 축적체제의 이런 세 가지 요소는 국가재정을 통해 상호연결되어 있다. 계획의 수립은 재정규모, 즉 세입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계획의 달성은 다른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즉, 사회주의 축적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에 있다.³⁷⁹⁾

중공업우선전략의 경제적 의미는 재정의 확보와 분배가 중공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상대적 저임금과 저소비를 통해 1차적으로 확보되고 경공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를 통해 2차적으로 얻게 된다. 가계와 경공업을 통해 조성된 재정수입은 이 부문들에 과소투자되고 중공업부문에 과잉투자된다. 그 결과 중공업 부문의 기업들은 강력한 연성예산제약에 놓이게 되지만 경공업은 경성예산제약에 놓이게 된다.

연성예산제약에 놓인 중공업 부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유인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생산재를 다른 부문에 제공하지 못한다. 즉, 일종의 생산재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업에 대한 양적 평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와 반대로, 경성예산제약에 놓인 경공업 부문은 재정의 저투자 때문에 자본과 자원이 부족하고 국민경제에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지 못한다. 효율적인 생산재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공업의 저발전은 더욱 악화된다.

경공업은 사회주의 재정구조의 특성상 핵심적인 납세자(taxpayer)이다. 즉, 경공업의 저발전은 계획의 핵심인 재정을 약화시킨다. 이에 반해 중공업은 재정기여도가 낮지만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게다가 연성예산제약에 놓인 중공업 부문의 기업들은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한다. 즉, 세입은 줄어들지만, 세출은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계획경제는 악화된다.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합리적인 대응은 경공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시행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단단한 국가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국가 내부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³⁸⁰⁾

3. 약탈국가론

약탈국가(Predatory State)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반(反)테제로 성립된 개념이다.³⁸¹⁾ 약탈국가는 “자율성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체로서 기득권을 가진 세

379) 사회주의에서 축적은 서구의 투자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이영훈(2000),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통일정책연구 8권 2호 3쪽

380) 중국의 개혁정책을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은 이런 정치적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중공업은 강력한 반개혁적 성격을 나타냈다. Susan Shirk, 최완규 역, 『중국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9)

력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약탈국가는 국가가 전체 구성원/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수의 사적인 이익에 포획된 상태를 의미한다. 약탈은 표면적으로 국가에 의해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국가와 사회 모두가 약탈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³⁸²⁾ 즉, 약탈국가는 특정집단의 렌트추구(rent-seeking)의 도구로 전략한 국가를 의미한다.³⁸³⁾ 국가-사회 스펙트럼에서 이것은 약한 국가(weak state)³⁸⁴⁾와 약한 사회(weak society)³⁸⁵⁾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사회의 특정집단의 이익에 포획되어 자율적인 정책 과정을 수행할 수 없으며 역으로 사회는 국가의 약탈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³⁸⁶⁾

결론적으로, 약탈의 과정은 국가 내부의 이익연합이 국가를, 국가가 다시 사회를 약탈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국가와 사회는 특정한 세력으로 이루어진 이익연합의 약탈을 막지 못하는가? 국가의 경우, 이익연합의 구성원에 국가관료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료들이 이들과 일종의 비호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경우는 시장의 저발전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국가성에 있다.³⁸⁷⁾ 즉, 시민사회는 비국가적 공간으로서 국가개입으로부터

381) 약탈국가론은 신고전파와 신제도주의 양 진영에서 모두 제기되는데 전자는 지배엘리트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그리고 후자는 사회와 국가의 관계(“배태된 자율성”)에서 원인을 찾는다. 양자는 약탈국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약탈행위에 대한 설명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김시윤(2004), “국가와 경제발전: 약탈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8권 2호

382) 국가의 약탈적 성격은 공공재의 공급여부에 달려있다.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민사회의 조제와 국가의 공공재가 교환되는 계약관계에 있는데 만약 국가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공공재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고 사회의 자원을 조제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거둬간다면 이것은 약탈행위로 볼 수 있다. 에반스(Peter Evans)는 자이레를 약탈국가의 전형으로 설명하면서 산업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집합재(collective goods)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 가능한 경제잉여만 추출하는 양상을 약탈적 성격으로 설명했다. Peter B. Evans(1989),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the Third World State”, Sociological Forum v.4 n.4

383) 장준영(2012), “황금에서 다이아몬드로”, 국제정치논집 52집 4호

384) 약탈국가에서 약한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정의된다. 여기서 국가의 자율성은 특정한 사회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관한 것이고 국가의 능력은 “시민사회에 침투하여 영토 전체에 걸쳐 병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만(M. Mann)의 하부구조권력(infrastructural power)이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약탈국가론의 약한국가의 개념은 다음을 참조. Linda Weiss, 박형준 역, 『국가몰락의 신화』, (서울: 일신사, 2002) 48-50쪽; 한병진(2006), “사유화와 러시아 국가하부구조의 쇠퇴”, 국제지역연구 15권 1호

385) 연구가 주로 시민사회가 저(미)발전 되어있는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일련의 논의가 가진 국가중심적 성격은 그들이 전제한 국가-사회관계라는 분석 틀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회(weak society), 즉 시민사회의 저발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은홍,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서울: 아르케, 2008) 29쪽

386) 다른 주제의 북한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시민사회론은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시민사회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우영, “북한에서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홍철(2003),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 최용환(2005), “세계화시대 북한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13집 2호

387) 시민사회의 개념에 관해서는 세 가지 전통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조직화된 공화정 사회”라는 개념으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시민사회를 의미하며 해겔적 전통으로 이어졌다. 둘째, “문명사회”라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문명화가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중간조직”이라는 개념으로서 국가에 맞서는 비(非)국가공간을 의미하며 토크빌의 전통과 일치한다. 이 글에서는 2, 3번째 개념을 시민사회의 정의로 사용한다. 존 에렌버그, 김유남·주미영·이상환 역(2002),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아르케 pp.14-15

자율성을 가진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이런 자율성은 결국 시장을 통해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에 가능한 것이다.³⁸⁸⁾ 역으로 시장의 저발전은 사회의 저발전을 야기한다. 이것은 유럽의 근대사를 통해 증명된다.³⁸⁹⁾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약탈국가화는 중공업우선전략의 약탈적 성격과 함께 중공업우선전략의 정치적 결과로 나타난 이익연합에 의해 전개되었다. 북한 강한국가는 중공업우선전략의 전개를 통해 약화되었고 중공업이익연합에게 포획되었다. 북한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 시장화를 통해 맹아적 형태로 등장했지만 국가의 약탈행위를 통해 왜곡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체제의 헤게모니는 중공업이익연합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북한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4. 누가 약탈하는가?

북한의 중공업 우선전략은 민족적 자립경제와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이론적 기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에 소련파, 연안파의 숙청에서 나타나듯이 정책토론을 넘어서 정치적 투쟁의 문제가 되었고 더욱이 반복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중공업 부문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변화임에도 지속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제도의 형성과 유지는 이익(interest)을 둘러싼 세력 간의 갈등과 타협으로 진행되며 아울러 경로 의존성을 통해 앞으로 정치적 과정을 규정하게 된다.³⁹⁰⁾ 즉, 정책에서 제도로 진화한 중공업 우선전략은 하나의 정치적 장으로서 기능하며 승자와 패자 사이에 다양한 층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³⁹¹⁾

중공업 우선전략의 정치적 효과는 예산배분을 통해 확인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연성예산제약은 전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문의 경성예산제약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³⁹²⁾ 즉, 연성예산제약에 놓이는 부문 자체가 정치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경제에 일반적 속성으로 중공업 부문의 연

388) 이것은 근대 서구의 경험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모든 시민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최소한 국가로 표현되는 정치권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물질적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동지역의 경험은 만약 시민사회가 국가를 통해 재생산을 위한 물적기반(렌트를 통해)을 얻는다면 만성적인 시민사회의 저발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Oliver Schlumberger, "Rent, Reform and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http://eadi.org/gc2005/confweb/papersps/Oliver_Schlumberger.pdf

389) 성공적인 근대로의 이행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비교적 동시에 일어난 국가에서 가능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즉, 시민사회가 저발전되어 있는 경우 파시즘과 같은 군국주의적 방향으로 왜곡되었고 반대의 경우 약소국으로 주변화되었다.

390) 역사적 제도주의자인 홀(Hall)은 제도를 "행위자들의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형성하고 갈등 및 협력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인과요인"으로 정의한다. 구현우(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권 2호, 39쪽에서 재인용

391) 홍민(2006),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5쪽

392) 예산의 배분은 타협의 산물로서 각 부문의 책임자들은 더 많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싸우게 된다. Janos Kornai(1986),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los* v.39 p.24

성예산제약을 설명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내부에 정치적 지형에 따라 연성에 예산제약에 놓이는 부문과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예산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부문이 승자로 그렇지 못한 부문을 패자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이런 정치적 과정은 중공업(특히, 군수산업)과 비중공업(농업, 경공업)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특권경제(당경제, 군수 경제)와 비특권경제(내각경제), 중앙(중공업)과 지방(경공업), 계획(중공업)과 시장(경공업)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한다. 이런 광범위한 영역은 단순히 군부의 위상변화로 설명하지 못하는 보다 넓은 정치적 승자와 패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공업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은 단순히 군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국가기구 내부에 중공업 지지세력, 중공업에 종사하는 특권노동을 포괄하는 일종의 이익연합(interest coali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⁹³⁾

특히 1990년대의 “선군정치”와 “북핵”은 이들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선군정치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북한의 군사국가화 경향에 초점을 맞춰 군부의 위상에 집중하면서 북핵의 원인을 군부에 돌린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북한에서 당의 우위는 선군정치 시기에도 유지되었으며 체제위기가 완화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⁹⁴⁾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은 단순히 군부에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핵을 매개로 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에 이익을 얻는 군부 이상의 광범위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³⁹⁵⁾

북한의 지배계급 내부에서 중공업분파의 형성과 정치적 영향력은 북한정치의 전체주의적 특성, 즉 유일 체제의 시각에서는 매우 제한된다.³⁹⁶⁾ 그러나 제도와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파벌정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1인 독재체제에서 파벌은 공식적으로 금지되며 비공식적 차원에서도 행위자들에 의해 은폐된다.³⁹⁷⁾ 그러므로 공식적인 파벌정치의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지배자 1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의제설정과 결정 이전의 정책과정에서 파벌정치가 작동할 공간은 남아있다.³⁹⁸⁾ 1970년대 유일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공식적인 파벌은 일련의 숙청과정을 통해 제거되었지만, 파벌(faction) 내부에 분파(clique) 사이에 갈등 가능성은 열려있다. 즉, 지배권력을 목표로 하는 노골적인 투쟁은 제거되어도 지배권력 내부에서 더 많은 권력자원의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속되는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기관본위주의” 비판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은

393) 예를 들어, 1998년 국방위원회에는 군부출신 이외에 전병호 등의 군수산업 관련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양현수(1999),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14쪽

394) 고유환(2011),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45집 5호

395) 군부를 무조건 호전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강경한 대외정책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양현수, 위의 논문 15-17쪽

396) 북한에서 파벌정치는 하나의 가설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류길재(2009),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98쪽

397) 북한에서 파벌을 “중파”로 명명하고 “반당적”, “반국가적”, “반혁명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공식적 차원에서 파벌이 억압되는 것을 보여준다. 백준기(2006), “‘8월 종파’ 문제 재론: 종파, 분파 그리고 당내경쟁”,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398) 한기범(2010),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 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³⁹⁹⁾ 또한, 1970년대 특권경제의 등장과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은 비철금속을 비롯한 수출로부터 얻는 일종의 자원렌트(resource rent)가 중공업을 비롯한 특권적 부분에 배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고지도자의 판단 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⁴⁰⁰⁾

중공업 우선전략의 이익구조는 지배집단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에도 확산된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전략은 중공업과 경공업 노동자들의 차별임금으로 나타났다.⁴⁰¹⁾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임금의 차별적 기능이 완화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동질성이 비교적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약화되고 배급제가 무너지면 노동계급의 분절화가 가속화된다.⁴⁰²⁾

현재 북한의 노동계급은 산업구조와 비공식부문에 참여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⁰³⁾ 첫째,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이들은 군수산업의 자체의 특성 때문에 특권적 지위를 차지한다.⁴⁰⁴⁾ 이들은 생산성은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공식부문의 소득(임금)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노동이다.⁴⁰⁵⁾ 둘째, 중공업과 경공업에 존재하는 핵심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계획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공장관리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은 비공식부문에 참여하며 비공식부문에서도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중공업과 경공업에 종사하지만,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이다. 계획이 정상적일 때 연성예산제약의 조건에서 고용되었다. 생산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특성상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생산성이 낮더라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획이 약화되고 기업이 경성예산제약에 놓이면서 이들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비공식부문으로 밀려났다.⁴⁰⁶⁾ 적절한 관계망이 없다면 이들은 비공식부문에 참가해도 높은 소득을 올리기 어렵고 주변계층(marginality)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⁴⁰⁷⁾ 공식부문의 임금을 통해

399) 박상익(2009), “선군시대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400) 2000년대 박봉주 총리의 건의로 당경제를 축소하고 내각에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북한의 군수경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서울: 선인, 2007) 314-316쪽

401) 1960년대 중공업과 경공업의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3-4배에 달했다. 남근우(2008),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쪽

402)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상승의 가능성에서도 산업부문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간부충원원칙에서 노동계급을 강조하면서 “특히, 기간공업부문의 핵심 노동자”를 간부로 많이 충원할 것을 주장했다. 현성일, 위의 책 177쪽

403) 한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평균출근을 20%에 기초해서 20%의 공식노동과 80%의 비공식노동으로 구분한다. 박영자(2009),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43집3호 161-162쪽

404)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군수공장 300-500개가 있고 50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광민, 위의 책 66쪽

405)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에서 군수산업이 밀집된 자강도와 양강도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나았던 것도 이들의 노동계급 내부의 지위를 반영한다. 정광민, 위의 책 192쪽

406) 북한에서 1993년에 1차 산업의 비중이 30.7%, 2차 산업이 41.6%, 3차 산업이 18.2%였는데 2008년에 1차 산업 36%, 2차 산업 32.6%, 3차 산업 33.6%로 변동했다. 즉, 2차 산업의 잉여노동이 3차 산업으로 대거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상업관련 제반지식, 인맥이 부족한 이들이 주변노동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박영자(2012),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179-180쪽

생활이 가능한 특권노동은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보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얻는 이익은 북한국가 자체가 아니라 특권적 부문을 통해 얻는 것이다. 즉, 이들의 충성은 무의식적으로 중공업의 이익구조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자강도 지역에서 “강계정신”과 “희천발전소”로 나타나는 비호관계는 중공업 부문의 정치적 우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공업을 매개로 하는 이익연합(이하, 중공업 연합)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세력이 동시에 기존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다.⁴⁰⁸⁾ 북한에서 중공업 연합의 렌트추구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국가재정의 잠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역으로 이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약화시켜 계획경제를 침식시켰다. 1990년대 이후 이들의 렌트추구는 계획을 넘어 시장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계획과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공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획의 시장에 대한 기생을 특징으로 하는데 북한의 중공업 연합은 계획을 통해 시장을 약탈하는 한편 직접 시장활동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다. 사회주의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내각이 시장에 우호적인 개혁파로, 당과 군이 시장에 반대하는 보수파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내각이 시장을 체제의 틀로 포섭하려고 시도하는 데 반해 당과 국가는 불법적 공간으로 두면서 잉여를 탈취한다. 즉, 이들의 보수적 성향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은 사라지고 주변부 국가형태, 특히 그중에서도 약탈국가(predatory state)의 모습만 남는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약탈 국가화는 중공업 우선전략을 통해 형성된 중공업 연합이 국가를 사적으로 포획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이 특정세력에 장악된 상황에서 국가정책은 이들의 이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사적이익에 의해 제한, 변형, 왜곡된다.⁴⁰⁹⁾ 북한에서 중공업 우선전략의 승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유지를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데 이익을 가지며 개혁에 저항한다. 만약 중공업 부문이 경제영역에서 생산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들의 이익추구가 북한을 약탈국가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중공업 부문은 계획을 침식하고 다른 산업부문을 약화시키며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중공업 부문은 구조조정(restructuring)

407)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산업에는 언제나 잠재적 잉여노동(“노동예비대”)이 존재한다. “물자부족”으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경제위기는 계획경제 자체의 다양한 모순의 결과지만 또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받는 임금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는 잉여노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계층으로 전락한다.

408)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군수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부문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보다는 군수산업을 매개로 한 이익연합이 의미 있는 분석틀일 수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이 결국 중공업에 기초하며 북한이 해외에서 군수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중공업을 연결고리로 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군수산업의 기초로서 중공업을 강조했다. 다음을 참조.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28-34쪽

409) Joel Hellman(1998),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 World Politics 50:2 pp. 203-234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공업 우선전략을 통해 형성된 이익집단은 개혁에 반대하고 렌트의 확보와 분배를 지속한다. 아울러 이들의 렌트추구는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북핵 위기”로 표현되는 이들의 안보화전략은 이들에게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렌트추구의 공간을 제공했다. 북한 핵 문제의 반복적인 패턴은 이것이 결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권력승계의 여부, 당-정-군의 관계변화 양상에 상관없이 중공업 연합 헤게모니가 지속해서 유지,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북한의 약탈국가화 과정

북한의 중공업우선전략의 반계획적 성격은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즉, 북한의 중공업 부문은 재정수입을 축소시키고 지출은 확대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재정수입은 주로 경공업 부문에서 추출된다.⁴¹⁰⁾ 그러나 재정투자는 중공업우선전략에 따라 주로 중공업 부문에 향한다. 시장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생산유인인 재정투자가 중공업에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 경공업의 저발전을 초래한다.

1. 중공업우선전략의 도입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은 그 자체로 약탈의 성격을 지니며 또한 향후 약탈의 확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북한은 다른 주변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한 초기 조건이 열악했다. 특히, 투자를 위한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대외원조가 초기 축적에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원조는 무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없었고 결국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야 했다. 북한은 협상가격차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의 잉여를 국가가 수취하여 중공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진행했다. 이런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산업의 불균등한 발전을 야기했는데 이것은 투자(축적)를 위해 소비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즉, 인민 대중의 착취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현물(즉, 생산량)로 평가하는 계획경제의 기준과 연성예산제약은 중공업 부문이 경공업과 농업이 필요로 하는 고생산성의 생산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혁신의 유인이 적

410) 북한의 재정수입은 거래세, 이익세, 근로소득세의 형태로 수취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이상인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근로소득세는 사라지거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대부분은 소비재에 대한 거래세와 국영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이익세로 재정이 충당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격차를 통한 간접세로 대부분의 재정을 조달했고 직접세의 비중은 극히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산물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와 곡물의 수매가와 판매가의 차이(이른바, 협상가격차)를 통해 조세를 거둔다. 즉, 사회주의의 재정은 주로 개인들의 소비재 구매와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고일동·연하청(2008),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오름) 43-46쪽

었다. 실제로 북한의 중공업 부문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생산재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업에 대한 계속된 지원은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 소비를 지속해서 약탈하는 것이다.

1950-60년대 북한은 김일성을 핵심으로 하는 만주파가 경쟁파벌은 제거하고 중공업우선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시기 북한의 재정은 외국원조와 국가경리수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원조는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이었고 국가경리수입이 예산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⁴¹¹⁾ 국가경리수입에서 소비재 거래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수입금과 기업이윤 일부를 수취하는 국가기업이익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특히 전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경공업의 중요성이 커졌다.⁴¹²⁾ 그러나 실제로 경공업의 투자비중은 언제나 중공업의 그것보다 작았다.

<표 1> 북한의 중공업, 경공업 투자비중

(단위: %)

	1956	1961	1965	1970
중공업	83.3%	69.6%	87.3%	88.8%
경공업	16.7%	30.4%	12.7%	11.2%

출처: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44쪽 <표2-4> 부분인용

경공업 저발전의 원인은 결국 경공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국가재정 이외에 투자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공업에 대한 집중투자의 당연한 결과였다. 소비재 거래에 부과하는 거래수입금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공업의 저발전은 세입증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표 2> 공업부문예산수입에서 경공업의 비중

(단위: %)

1953	1954	1955	1956
81.6	65.7	75.6	65.7

출처: 박정동(2000), "자본축적구조로 본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북한연구학회보 4권 1호 170쪽 <표 II-2> 부분인용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소비를 억제하여 투자를 증대하거나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재정투자를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전자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고 후자는 파벌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기

411) 해외원조의 비중은 1954년 34%에서 1960년 2%로 급감했다.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2009) 18쪽

412) 사회주의 경리수입에서 거래수입금은 약 60%를 차지한다.

어려웠다. 물질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결국 “천리마운동”으로 표현되는 대중동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런 노력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능하게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했다.

2. 중공업우선전략의 제도화

지속적인 투자에도 생산재를 담당하는 중공업 부문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저발전이 계속되면서 사회주의 축적체제는 위기에 빠진다. “부족경제”(Shortage Econom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사회주의 경제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⁴¹³⁾ 경제위기의 형태에 따라 다른 정책 처방이 가능하겠지만, 물자부족 특히 대중소비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욱 효율적인 생산재의 생산을 위한 중공업 부문의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반복적인 경제위기에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책변화는 단기적으로만 진행되었고 곧 과거의 중공업 우선전략으로 회귀했다.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수립과 1970년대 “제2경제위원회”의 등장은 중공업 부문이 국민 경제차원의 조정 기제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작동은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독자적인 재정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개입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중공업 부문 내에서 군수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군수산업의 발전은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면서 경제성장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유일한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저투자를 야기하게 된다.⁴¹⁴⁾ 결론적으로, 경공업과 농업의 저발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공업 내부에 군수산업과 비군수산업의 분화는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축적에 기여하는 생산적 부문(생산재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이 주변화되고 낭비적인 비생산부문(군수산업)이 특권화되면서 재정으로 표현되는 국가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인민 대중의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게 된다.

1970년대 북한의 유일체제의 확립은 만주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며 중공업 우선 전략이 정책에서 제도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채택을 통해 중공업을 경제부문의 하위영역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⁴¹⁵⁾ 여기에 1960년대 중소분쟁과 베트남전쟁 등의 대외적 조건의 변화는 1970년대 북한의 재생산구조를 “자립경제”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413) 이것은 동유럽의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4) 군수산업의 발전이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 북한이 인공위성은 만들지만, 가전제품은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석기, 위의 책 44-66쪽

415) 이것은 만주파의 파벌투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며 재생산의 물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2003),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192쪽

라는 군수 공업화의 형태로 귀결시켰다.⁴¹⁶⁾

이 시기 북한의 재정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첫째,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따라 국방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예산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인민경제비는 1960년에 비교해서 약 20% 이상 감소했고 국방비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3> 북한의 연도별 세출구조 (단위: %)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국방비	국가기관비
1953	63.9%	11.3%	15.2%	9.7%
1960	69.1%	24.6%	3.1%	3.2%
1970	47%	19.9%	31.3%	1.8%

출처: 김정완(2008), “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권 1호 p.106 <표 6> 부분인용

둘째,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민경제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공업의 비중은 1965년 51.2%에서 1970년 66%로 증가했고 역으로 경공업은 그만큼 감소했다.⁴¹⁷⁾

<표 4> 북한의 공업구조변화

(단위: %)

	1960	1965	1970	1975
중공업	53	51.2	66	66
경공업	47	48.8	34	34

출처: 홍철(2003),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 12쪽 <표 2> 부분인용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제도화는 특권경제의 출현을 통해 실현되었다.⁴¹⁸⁾ 아울러 특권경제의 등장은 국가에 귀속될 재원을 특권층의 낭비(당경제)와 경제적 효과가 작은 군수산업(군수 경제)에 돌리면서 산업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1970년대 제2경제위원회가 부족한 외화를 당경제에 소속된 대성은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사실은 군수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부문의 경제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⁴¹⁹⁾

416) 북한의 군수공업의 전개과정은 다음을 참조. 성채기(2006),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과주: 한울아카데미) 221-337쪽

417)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산업에서 공업비중이 줄어들어도 중공업비중은 1970년대 수준을 유지한다.

418) 북한의 특권경제는 당경제(39호실)와 군수경제(제2경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경제(인민경제+시장)의 잉여를 착취하여 유지된다. 차문석(2009), “북한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51호

중공업의 제도화와 특권경제의 출현은 북한의 재정과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첫째, 특권경제의 출현을 통해 국가재정이 축소된다.⁴²⁰⁾ 둘째,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경제부문에 투자를 담당하는 인민경제비가 축소된다. 셋째, 지방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중요한 세입원천인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제한된다.⁴²¹⁾

<표 5> 북한 공식군사비의 재정부담률

(단위: %)

	1960	1964	1966	1967	1968	1969	1970
국방비/예산	3.1	5.8	10	30.4	32.4	31	31.3

출처: 임수호, 위의 책 48쪽 <표2-6> 부분인용

결론적으로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화가 더욱 심화된 시기로서 이것은 재정자원의 초 집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를 북한경제의 구획화를 통해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결국 중공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3. 중공업우선전략의 정치구조화: 약탈국가의 등장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는 상품의 과잉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회주의의 위기는 상품의 부족(물자부족)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물자부족현상은 화폐가 넘치지만, 상품은 부족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산업구조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자부족이 계속되고 가계의 경성예산제약에 따른 전략적 행위는 시장을 생성·확대시킨다. 즉, 북한의 시장화는 분명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위로부터의 억압(투자를 위한 소비억제)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민 대중은 생필품의 구매를 위해 시장에서 국정 가격보다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한다. 공식부문의 임금도 공식부문의 상품가격과 연결되므로 비공식적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 국가는 “채찍과 당근”으로 대응하는데 즉, 시장화를 억제하거나 임금인상을 시행한다. 이렇게 다른 성격의 정책을 실시하지만, 시장은 계속 팽창하며 생필품 공급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도 지속된다.

중공업 우선전략의 지속은 북한의 산업부문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419) 김일성은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2의 정무원”, “한개 나라의 경제”로 지칭했다. 정광민(2009), “김일성 유일체제와 경제시스템 변동”, 국방정책연구 25권 4호

420)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서울: 시대정신, 2005) 67쪽

421) 1973년 지방예산제의 핵심은 지방예산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을 축소하고 오히려 지방예산에서 남는 재원을 중앙에 돌리는 것이었다. 이무철(2004), “북한의 지역자립구조와 행정적 분권화의 한계”, 통일문제연구 41호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내수공업과 같은 원공업화 과정이 일어나지만, 사회통제가 강하게 유지되는 북한사회에서 생산활동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억제된다. 결국,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외부(주로, 중국)를 통해 유입된다. 이러한 상품거래 즉, 무역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국가를 매개로 하는 합법적 무역과 밀수, 밀무역으로 불리는 불법적 거래가 그것이다. 합법적 거래를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차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부분적으로 부패로 유출된다. 불법적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에서 이런 부는 불안하고 심지어 위험하다. 공식부문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특권층은 불법적인 무역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 밀무역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비특권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지위는 불안정하며 생존을 위해 특권층과의 비호관계를 수립하려 할 것이다.⁴²²⁾ 인민 대중의 임금과 시장소득은 일부는 생존을 위해 지출되지만, 나머지는 북한의 정치화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국가로 귀속되고 지배계급과 군수산업을 포함한 중공업에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국가가 인민 대중의 생활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로 표현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재건을 포기한 상태에서 대중의 생존전략으로 나타난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약탈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를 통해 지배를 유지하는 특권층의 생존수단으로 변질된다.

동유럽의 경험에서 시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점진적으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⁴²³⁾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시장은 후자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자본주의적 방향의 체제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시장을 인식해야 한다.⁴²⁴⁾ 즉, 지배계급 스스로 국가를 포기하고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이런 조건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지배계급에 국가는 이익추구 최적의 수단이다.⁴²⁵⁾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공식부문이 등장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비호관계를 통해 분열되어 있고 개인들은 원자화되어 사적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국가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는 등장했지만, 국가권력의 개입을 막는 동유럽과 같은 조직도 구성원 사이의 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위기의 심각성은 식량배급체계와 국가상업유통망의 붕괴와 “장마당”(농민시장)으로 불리는 시장의 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²⁶⁾ 또한, 수십만에서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422) 직접적으로 검열을 담당하는 중하위관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역시 중요할 것이다.

423) 김명수(1996),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민족과 문화 제4집

424) Victor Nee and Peng Lian(1994), “Sleeping with the Enemy: A Dynamic Model of Declining Political Commitment in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No.2 pp.253-296

425) 한병진(2006),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국제지역연구 15권 4호

426) 이 시기 등장한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는 원래 “농민시장”이라 불리는 초보적인 형태

대규모 아사는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 북한경제의 몰락은 국가재정의 축소와 공장 가동률의 하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재정규모는 이전의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인 재정의 축소는 계획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운영을 위축시켜 인민 대중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게다가 과거에는 부족한 자본과 자원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지만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북한에 불리한 국제적 환경은 외부적 지원도 어렵게 했다.

<표 6> 1990년대 북한재정규모의 변화

(단위: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예산	171	185	187	192	n.a.	n.a.	91	91	92	96

출처: 이일영 외(2003), 『북한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동향자료 61쪽 <표Ⅲ-3> 부분 인용

재정규모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을 축소시킨다. 이것은 다른 산업보다 재정투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북한의 공업을 파괴했다. 주요 산업의 공장가동률 20~30%로 떨어졌고 비(非) 군수 중공업 부문이 심각하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공업의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생산재를 공급하는 역할이 약화되어 북한의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표 7> 1990년대 북한 주요산업의 가동률

	강철	시멘트	비료
1992	30	39.5	29.7
1994	28.9	36	28.3
1996	20.2	31.5	20.5
1998	15.8	26.2	15
2000	18.2	38.3	15.3

출처: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9쪽 <표 2.9> 부분 인용

북한의 급격한 탈산업화는 산업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했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일부는 농업으로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이동(이른바, 시장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인구구조는 2차 산업이 축소되고 1, 3차 산업이 커지는(특히, 3차 산업이 비대해지는) 제3세계 주변부 국가의 형태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의 시장이 존재했다.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통해 농민시장을 억압했지만 계속적으로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영훈(2005), 『농민시장』, 『북한의 경제』,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159-166쪽

<표 8> 직업별 인구구조의 추이

(단위: 천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농업	2,823	2,973	2,986	3,259	3,146	3,206	3,206	3,316	3,569
광공업	3,821	3,525	3,522	3,469	3,477	2,211	2,828	2,910	2,910
서비스업	3,438	3,972	4,196	4,319	4,765	4,754	5,047	5,030	4,888

출처: 정진상(2003), "북한의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33쪽 <표-10> 부분 인용

사회주의에서 재정과 계획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북한처럼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동조화 현상이 특히 강력하게 나타난다.⁴²⁷⁾ 그런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복원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것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이른바, 7.1조치)는 일종의 재정개혁정책이며 아울러 중공업우선전략의 우위를 재확인한 것이다.⁴²⁸⁾ 7.1조치를 통해 북한정부는 시장을 통해 만들어진 경제적 잉여를 재정으로 흡수하고 인민에 대한 복지지출을 축소했다.⁴²⁹⁾ 아울러,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을 전략산업으로서 계획을 유지하는 반면에 경공업은 비(非) 전략산업으로서 지방행정기관과 개별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생존하도록 했다.

체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지속된 중공업 우선전략은 유지되었다. 중공업 우선전략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되었지만 이후에 개별국가의 조건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험은 중공업 우선전략이 정책에서 제도로 전환되었고 반복된 위기에도 강력한 경로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선군정치, 시장, 핵의 공존은 제도화된 중공업 우선전략이 북한의 정치경제를 구조화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4. 약탈국가의 팽창: 분권적 약탈국가

북한의 약탈 국가화 경향의 심각성은 특정분파가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

427) GNP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은 북한(1990) 71.9%, 헝가리(1989) 64%, 체코(1989) 61%, 폴란드(1989) 47%로 특히 북한에서 재정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광낙(1997), "북한재정체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9집 26쪽

428) 북한의 7.1조치를 시장사회주의의 개혁적 흐름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정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정영철(2004),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

429) 7.1조치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복지체계는 해체되고 개인복지로 전환되었다. 정우곤(2006), "북한 사회 복지체도와 사회경제적 계층구조 변화",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익을 추구하는 제도주의적 약탈국가의 형태에서 국가권력 자체가 약탈의 도구가 되는 신고전파 약탈국가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약탈국가는 중공업 부문이 국가정책의 우선권을 독점하면서 재정을 흡혈하는 형태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탈의 형태와 공간이 확대되면서 중하위 관료들까지 부패의 형태로 약탈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국가권력의 소유 자체가 약탈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의 자급자족을 강조했다.⁴³⁰⁾ 이것은 지역별 방위체계의 건설이라는 안보적 측면과 지방인구의 생활을 지방이 담당하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치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1990년대 체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2002년 지방예산제의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조세징수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지방산업 역시 철저히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일종의 분권화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중앙정부의 통제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권화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⁴³¹⁾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중·하위관료들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어 북한의 약탈국가가 분권적 약탈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²⁾ 일반적으로 중하위 관료의 부패로 설명되는 이런 분권적 약탈은 암묵적 형태의 정치적 보호/특혜와 경제적 보답(뇌물)의 비호관계뿐만 아니라 몰수, 강탈 등의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중앙권력의 집권적 약탈이 재정과 시장을 통해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는 데 반해 분권적 약탈은 인민 대중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출된 형태로 전개되어 체제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또한, 북한 약탈국가의 심각성은 집권적 약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권적 약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방정부는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저항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중하위 관료들은 여전히 중앙권력에 종속적이다.⁴³³⁾ 북한의 지방예산은 세입과 세출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예산에 일정 부분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통로(예를 들어, 무역)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능력은 과거의 계획경제를 복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지방정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중하위 관료들의 렌트추구는 계속된다.

430) 김병로(2012),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102-106쪽

431)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과정은 다음을 참조. 이무철(2005), “북한의 중앙·지방관계: 중국과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5집 4호

432) 분권적 약탈국가는 원래 중국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가 지방수준에서 대중에 대한 국가의 약탈을 야기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이기현(2010), “중국 전환기 국가성격에 대한 재고찰-분권화된 약탈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34권 3호

433)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127-128쪽

IV. 결론

체제 위기 이후 북한의 변화양상에 관한 논의는 정치영역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변화양상을 둘러싼 논쟁과 경제영역에서 시장화의 성격에 관한 논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체제의 유지와 변화, 그리고 붕괴에 관한 이행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³⁴⁾ 이런 논의 틀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관한 합의에 기초한다. 즉, 북한은 변형, 왜곡된 형태이지만 분명 사회주의 국가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점차 잃어가면서 주변부 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계체제론자들은 사회주의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주변부 국가들의 추격전략인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위기(이른바, 주변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을 차용하면 주변부 국가였던 북한은 사회주의를 통해 1970년대까지 반주변부(semi-periphery)로 진입했지만 중공업우선전략의 한계와 실패로 인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에 놓여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전형적인 제3세계 주변부 국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⁴³⁵⁾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1,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3차 산업이 비대해졌다. 또한 산업 간의 전·후방연관 효과가 사라졌다.⁴³⁶⁾ 정상적인 국민경제는 농업-경공업-중공업의 순환을 통해 작동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경제는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농업, 국내소비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공업, 농업과 경공업에 생산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중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산업 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넘어서 총체적인 저발전을 의미한다. 게다가 주변부적 무역구조가 고착되고 있다.⁴³⁷⁾ 현재 북한의 무역구조는 원료를 포함하는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생산재와 소비재를 포함하는 공산품을 수입하는 형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⁴³⁸⁾ 만약 수출을 통한 외화가 북한의 산업에 적절히 투자된다면 북한경제의 주변화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수입규모는 핵실험의 여파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한 상당 부분이 특권층의 소비와 군수산업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낭비된다는 점에서 평가절하된다.

이런 주변화의 압력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화 전략으로 대

434) 북한체제의 이행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35-96쪽

435)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양문수(2007), “2000년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19-21쪽

436) 생하스(Dieter Senghaas)에 따르면 제3세계는 ①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② 낙후된 대중소비재와 중간재 생산수준 ③ 독립적인 생산재 생산능력의 결여 ④ 불균등한 발전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3세계의 정치와 경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5) 71-74쪽

437) 과거 중속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을 주변부 국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438) 2000년대 북한의 무역, 특히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과의 무역을 살펴보면 수출은 무연탄, 어패류 등의 1차 상품이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입은 석유(약30%)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 최해범(2008),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한 무역추이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9권 4호 154-160쪽

응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비민주성⁴³⁹⁾, 미국의 압박⁴⁴⁰⁾, 합리적 선택⁴⁴¹⁾으로 북한의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하거나⁴⁴²⁾ 비용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⁴⁴³⁾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이런 전략은 고비용, 고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북한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국내정치적 결과물인 동시에 허약한 국가의 대중동원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체제로부터 가장 이익을 얻는 세력들은 중공업을 매개로 하는 이익연합이다. 또한 이들은 일종의 “군산복합체”로 대외적 압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특권화된다. 즉, 이들은 군사화를 통한 안보화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국제정치적 위험성, 즉 체제가 외부의 공격으로 몰락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들의 이익만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사라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북한 지배체제의 총체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군정치-강성대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족주의적 기획은 국내정치적 권력관계의 제약으로 인해 개혁을 할 수 없는 북한의 지배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변화의 압력에 대한 북한체제의 대응은 기존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강화하는 보수적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아울러 이런 경향은 북한을 더욱 주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변화를 억제할 힘과 유인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된다. 국내적 차원에서 북한체제를 개혁할 세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의 저발전과 왜곡에 의해 시민사회도 저항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강대국들의 현상유지 정책은 국내정치에 개입할 유인을 축소시킨다. 즉,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439) 북한체제의 비민주성을 강조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악의 축”(an axis of evil)과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로 함축된다. 이런 시각은 다음을 참조. 진봉근(2005), “북핵문제 해결방안: 북핵구조의 이해와 해법”,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29-31쪽; 홍관희(2005),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핵 억지정책으로 최악 상황 대비해야”, 통일한국 6월호 16-17쪽

440) 이런 시각에서는 특히,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선제핵공격을 명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로 상징되는 강경한 대외정책에 초점을 둔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정성장(2007),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관리 및 해결방향”, 세종정책연구 제3권 1호 71-75쪽; 박봉규(2003),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정치·정보연구 제6권 2호 28-29쪽

441) 황지환(2009),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국제관계연구』 14권 1호; 전경만 외, 『북한핵과 DIME 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88-89쪽

442) 즉, 모든 비민주주의 국가 또는 미국의 압박을 받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443)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차문석(2007),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 핵과의 연관성 및 ‘이중화 전략’”, 국방정책연구 제76호; 조명철 외,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박은홍,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서울: 아르케, 2008).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3세계의 정치와 경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5).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전략과 남북경협』(서울: 산업연구원, 2005).
-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2009).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경만, 『북한핵과 DIME 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서울: 시대정신, 2005).
- 조명철,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존 에렌버그, 김유남 역,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서울: 아르케, 200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Linda Weiss, 박형준 역, 『국가몰락의 신화』, (서울: 일신사, 2002).
- Nikitin, P. I., 오영수 역, 『정치경제학 입문Ⅱ』, (서울: 동녘, 1990).
- Susan Shirk, 최완규 역, 『중국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9).

2) 논문

-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쉽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45집 5호(2011).
- 고일동·연하청,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서울: 오름, 2008).
-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권 2호(2009).
-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민족과 문화 제4집(1996).
- 김병로,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 김시윤, "국가와 경제발전: 약탈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8권 2호(2004).
-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2003).
- 김정완, "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권 1호(2008).
- 류길재,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 박봉규,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정치·정보연구 제6권 2호(2003).
- 박상익, "선군시대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2009).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43집3호(2009).
- _____,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2012).
- 박정동, "자본축적구조로 본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북한연구학회보 4권 1호(2000).
-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2009).
- 백준기, "'8월 종파' 문제 재론: 종파, 분파 그리고 당내경쟁",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서재진, "세계체제이론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궤적",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서울: 황금알, 2004).
- 성채기,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손광낙,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9집(1997).
- 양문수, "2000년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북한경제리뷰(2007).
-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1999).
- 이근, "남북관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역사비평 88호(2009).
- 이기현, "중국 전환기 국가성격에 대한 재고찰-분권화된 약탈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중소연구 34권 3호(2010).
- 이무철, "북한의 지역자립구조와 행정적 분권화의 한계", 통일문제연구 41호(2004).
- _____, "북한의 중앙-지방관계: 중국과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5집 4호(2005).
- _____,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통일정책연구 8권 2호(2000).
- _____, "농민시장", 『북한의 경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 이우영, "북한에서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가능한가?",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이일영 외 5명, "북한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동향자료(2003).
- 장준영, "황금에서 다이아몬드로", 국제정치논집 52집 4호(2012).
- 전봉근, "북핵문제 해결방안: 북핵구조의 이해와 해법",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2005).
- 정광민, "김일성 유일체제와 경제시스템 변동", 국방정책연구 25권 4호(2009).
- 정성장,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관리 및 해결방향", 세종정책연구 제3권 1호(2007).
-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2004).
- 정우곤, "북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경제적 계층구조 변화",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2006).
- 정진상, "북한의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2003).
- 차문석,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 핵과의 연관성 및 '이중화 전략'", 국방정책연구 제76호(2007).
- _____, "북한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51호(2009).
- 최용환, "세계화시대 북한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13집 2호(2005).
- 최해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한 무역추이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9권 4호(2008).
- 한병진, "사유화와 러시아 국가하부구조의 쇠퇴", 국제지역연구 15권 1호(2006).
- _____,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국제지역연구 15권 4호(2006).
- 홍관희,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핵 억지정책으로 최악 상황 대비해야", 통일한국 6월호(2005).
- 홍철,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제2사회 개념의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2003).
-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국제관계연구 14권 1호(2009).

3) 학위논문

- 남근우, "북한의 북종과 저항의 정치 :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 (1950-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국외 자료

1) 논문

Janos Kornai,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los* v.39(1986).

Joel Hellman,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 *World Politics* 50:2(1998), pp. 203-234.

Oliver Schlumberger, "Rent, Reform and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http://eadi.org/gc2005/confweb/papersps/Oliver_Schlumberger.pdf

Peter B. Evans,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the Third World State", *Sociological Forum* v.4 n.4(1989).

Victor Nee and Peng Lian, "Sleeping with the Enemy: A Dynamic Model of Declining Political Commitment in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No.2(1994).

북한 문화외교의 태동(광복 이후부터 ~ 1950년 6·25전쟁이전까지)

모순영(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북한 문화외교의 전개 및 특징
 - 1. 북한 문화외교의 부문별 전개
 - 가. 문화교류
 - 나. 국제행사
 - 2. 북한 문화외교의 특징
 - 가. 국제적 환경 마련: 대외선전사업 강화
 - 나. 소련 중심의 문화외교 주력
- III.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1950년 6·25이전까지의 북한 문화외교 전개양상을 살펴본 뒤,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의 목표는 '문화'를 매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는 '외교'와 결합되어 국가 간의 갈등해소와 협상을 관철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문화'는 국가 간 친선과 연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외정책과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광복 이후 안정된 정권 수립을 위해 국제적 환경⁴⁴⁴⁾을 마련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외선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선전사업의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문화투사로 양성해야 했고, 따라서 대외선전사업에서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특히 이 시기 북한은 광복 이후 '강대국의 정치적 후원'이 절실했고, 대외적으로 '친선과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외교를

444) 광복 이후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는 중대한 목표에 직면했다. 북한은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2월 22일 외무국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외교의 역할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권 발권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북한이 직면한 당시 현실은 북한 문화외교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부여된 중요한 역할은 북한 문화외교의 대상국을 소련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북한에서는 체육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소련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소련의 모든 경축일 행사를 재현하는 등 소련 집중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문화외교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광복 이후의 문화외교 전개를 분석하기 위해 문학예술, 대외공연, 영화, 국제행사를 현황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 특징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 마련, 문화 인프라 구축, 소련 문화의 유입 배경을 중심으로 특징을 모색할 것이다.

II. 북한 문화외교의 전개 및 특징

1. 문화교류

가. 문학예술

광복 이후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 문화외교는 문화교류 전 부문에 걸쳐 소련 집중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소련문화를 우수하고 선진적인 문화로 인식하여 문화예술인 및 인민대중들에게 이를 반복하여 선전해야 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파급효과가 높은 도서를 번역출판 하여 직접 보급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번역출판에서는 소련공산당 역사를 비롯한 소련기행, 소련문학 관련 서적들이 활발히 출판되었는데, 이는 북한 인민들의 소련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복 후 240만부에 이르며 그중에는『소련공산당역사』,『레닌선집(選集)』,『스탈린약전』등을 비롯하여 선진적 과학이론과 문예이론들이 소개되었다. 문화사절단 일행중 이기영, 이상, 이태준 등은 각기 소련기행을 출판하였으며, 기타 소련에 관한 각 부문의 소개문들이 발표되었다. 씨모노브의 "낮과 밤"을 위시하여 수십 종의 시, 소설, 연극 등이 채택되었다.⁴⁴⁵⁾

특히 광복 이후 북한 출판물은 맑스 레닌주의에 관한 중요한 문건과 도서들이 많이 발행되었다. 광복 이후 3개년 동안 이에 관한 도서 총출판 부수는 1,871,382부이며, 『소련공산당(불쉐위끼)약사』를 비롯하여『레닌선집』,『레닌주의제문제』,『스탈린약전』, 수 개국 공산당 대표자들의『보도회의 문건집』등이 출판되었다.

북한은 이를 두고 고상한 사상과 선진과학에의 문이 개방되었고, 해외서적들은 북

44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p. 146.

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요구와 환영 속에 계속 발행되었다며 그 의미를 두었다.⁴⁴⁶⁾

한편 이 시기 북한은 소련에 북한문학 예술인들의 유명 작품들과 함께 리기영 원작 「내고향」 등과 잡지 『새조선』(로문판)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을 소개하였다.⁴⁴⁷⁾

출판방송부문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는 '따스'를 비롯하여 전세계 주요통신을 받았고, 북경에 지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소문화협회에서는 문예지 『조소문화』를 발간하였다.

문학예술부문 중 미술에서는 소련 미술가 휘노게노브가 방문하여 광복 이후 초기 북한 미술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1947년 12월부터 1948년 초에 평양, 원산, 청진에서 열린 모스크바미술동맹 작가들의 전람회를 통해 "소련의 문화적 우월성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시"⁴⁴⁸⁾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나. 대외공연

광복 이후 북한 문화외교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소예술교류공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공연은 광복 이후 북한과 소련 양국간의 친선을 목적으로 한 교류공연으로, 조소문화협회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주최로 열린 이 교류공연에서 북한은 '향토무용 봉산탈춤' 공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49년 조선방소예술단의 공연⁴⁴⁹⁾을 북한 최초 국제무대 출연으로 문화교류의 출발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앞서 정의한 문화외교의 개념에 비춰볼 때 본 연구에서는 1946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조소예술교류공연'을 북한 문화외교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처럼 '조소예술교류공연'이 소련과 북한 쌍방의 문화를 상호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이 교류공연을 북한 문화외교의 출발로 본다.

무대예술부문 중 음악은 1947년 2월 소련 음악사절단이 북한을 방문 공연하였고, 안기옥 외 고전악인들 3·4인은 1947년 국제민청축전에 참가하였다.⁴⁵⁰⁾ 특히 1949년 조선방소예술단의 소련 순회공연 참가를 기점으로 음악예술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무대예술부문 중 무용은 1946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소예술교류공연에서의 봉산탈춤과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1949년 조선방소예술단의 "반야월성곡"의 성과를 들 수 있다. 1949년 10월 개최된 조소문화순간을 계기로 국립예술극장 무용단 사업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고, 소련 무용가 싸-진씨의 도움 및

44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p. 153.

44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1951~1952), p. 391.

44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358.

449) 대외공연에서는 "북한이 최초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조선방소예술단 공연이 있다. 1949년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각지를 순회공연한 이 공연은 조소양국 인민의 친선을 강화하며 북한의 음악예술을 더욱 발전시킴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1951~1952), p. 388.

450) 이 시기 북한 음악은 민중고전 대가곡, 세계적 고전인 비제 <카르멘>을 상연하는 등 국립예술극장 내에 편입된 고전악극단이 내놓은 창극 <興夫傳> <朴긴다리> 등을 내놓아 고전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쓰탈린대원사의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등은 인민의 애호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356.

소련 예술단의 공연은 민족무용의 창조와 신인육성 발굴에도 기여를 하였다. 무대예술부문 중 연극도 무용과 마찬가지로 조소친선 및 조소문화순간의 지원으로 창조적 성과를 얻었으며, 연출, 연기, 무대, 미술 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⁴⁵¹⁾ 특히 1948년부터 1949년 상반기에 걸쳐 북한 연극운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작품들이 상연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립극장의 "투쟁의 노래", "외과의 크레체트"(번역극), "을지문장군전" 등과 시립예술극장의 "로씨야사람들"(번역극), "원동력" 등은 많은 환영을 받았다.⁴⁵²⁾

다. 영화

영화부문에서는 소련 및 중국 독일과 기타 외국영화들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소련 영화 <청년근위대>, <제3작전>, <학자 미츨린>, <쓰딸린그라드교전>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이 영화들은 북한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사회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⁴⁵³⁾ 북한에서 제작된 최초의 총천연색 영화 "5·1절"(정춘채 작품)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2. 국제행사

광복 이후 북한은 체육부문에서는 1947년 8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민청축전에 농구대표팀이, 1949년 8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청년 및 대학생축전에 조선체육대표단이 축구, 육상에 출전하면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 사회단체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해 1946년 6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세계민주청년연맹에, 1946년 10월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이 국제민주여성연맹에, 1947년 5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하였다. 이는 공화국 수립 이전 제한된 국제무대 진출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1947년 6월에는 세계민주청년연맹 주최의 세계청년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의 종합공연을 김일성이 직접 관람하기도 하였다.

2. 북한 문화외교의 특징

451) 국립극장 "뉘비모아" 원작 <흑인소년 눈송이> 라웅 연출, 인민군 예술극장 "과집쏘보끄" 원작 <제2전선의 배후> 윤흥기 연출, 내무성 예술극장 <이완끄드비>, 철도성 예술극장 <애국가 끈쓰만진 짜슬르노브>, 청년예술극장 <청년근위대>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1951~1952), p. 389.

452) 이처럼 조소친선과 소베트문화순간을 경축하고, 소련현대작가들의 작품들이 번역상연 되었는데 이것은 선진소련연극의 우수한 형상성을 몸소 실천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으로 연극이 제요소들, 연출, 연기, 무대미술 등 각부문에 지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48년 하반기부터 1949년 10월까지 상연발표된 주요작품들은 <어느한나라에서> 이꼬라이 웰다 작, 이수약 연출, <로씨야사람들> 꼬씨모노 작, 최용 연출, <푸른거리> 아니뜨리·꾸로브 작, 이석울 연출, <장갑열차> 이와노브 작, 윤경 연출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355.

453) 1949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영화편수는 극영화 123편, 기록영화 78편, 뉴스가 있다. 이것의 상영회수는 42,996회이며 관객수는 16,430,977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359.

가. 국제적 환경 마련: 대외선전사업 강화

북한은 광복 이후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에 기초한 대외활동을 기본적으로 중시 하되, 김일성 중심의 정부수립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을 중요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 친선관계 활동을 목표로 강력한 국가와의 연대가 필요했고, 이 연대를 통해서 김일성 중심의 단일권력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제국주의 형성과 전쟁세력 팽배를 반대하고,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의 명분을 내세웠다.

사실상 북한은 궁극적으로 광복 이후 안정된 정권 수립을 위해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외선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외선전사업의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문화투사로 양성해야 하였으며, 따라서 대외선전사업에서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5월 24일에 열린「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대외선전사업 강화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대외선전망을 조직하고 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은 동방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으며 많은 동방민족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며 현재는 어떻게 살며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차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가를 소련, 중국 기타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진영국가들과 친선 및 협조 관계를 맺으며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동정과 지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⁴⁵⁴⁾

우리의 대외선전사업이 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중국 동북사람들까지도 북조선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대외선전사업의 이와 같은 락후성을 빨리 없애야 하겠습니다.⁴⁵⁵⁾

이외에도 김일성의 초기 문건인 1945년 10월 18일의「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베푼 환영연에서 한 연설」과「조국광복회 10대 강령⁴⁵⁶⁾」,「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데 대하여」등의 문건에

454)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34.

455)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34.

456) 조선광복회 10대 강령은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할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연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노동신문』, 1961년 5월 5일자.

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형제적 우의와 전투적 단결'을 통한 국제 혁명역량과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⁴⁵⁷⁾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맺었으나, 특히 소련과의 관계에 주력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 시기 소련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자 전 세계 지식인과 문화인들의 모범국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련군사령부와 혹은 소련군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우호적 연대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조선인민들은 소련의 과학 예술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이를 연구 섭취하는 사업을 전인민적으로 전개하였다...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소비에트문화를 계속섭취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수립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확고부동한 경제적 사태를 하였으며 또한 그 빛나는 성과를 사태로 하여 조선민족문화의 육성개화에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해방 후 4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조선민족문화는 가장 찬란한 민주주의적 발전 개화를 보이었다.⁴⁵⁸⁾

특히 이 시기 북한과 소련간의 문화교류는 조소친선과 조소대외관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왜냐하면 소련정치권력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그들의 세력 하에 종속시키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⁴⁵⁹⁾ 결국 광복 이후 소련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결핍을 채워줌과 동시에 절대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당시 소련 문화를 선진문화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북한 문화가 발전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나. 문화 인프라 구축: 조소문화협회 및 소련문화회관

이시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소련과 사회주의를 향한 소련의 경로를 따르려고 하였다.⁴⁶⁰⁾ 북한은 광복 이후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1945년 11월 '조소문화협회'를 평양에 창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건립을 시작으로 1948년 7월 '평양 소련문화회관' 개관, 1949년 8월 '원산 소련문화회관'을 개관하며 북한 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이시기 소련 문화 유입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457) 전영선·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사)남북문화연구소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p. 205.

45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p. 361-362.

459)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p. 404.

460)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붉은군대 환영위원회'로부터 '조소문화협회', '소련문화회관'을 신설하면서 질적·양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의 축전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평양 소련문화회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조소문화협회위원장인 이기영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위원장 케메노브에게 축전을 발송하였다. 그는 서신에서 강조하기를 "문화회관을 통해 소련의 선진적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조선과 소련의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⁶¹⁾

북한은 소련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하여 1948년 1월 6일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문화원의 개관에 관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명령서>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사용 용도를 밝히고 있다. 이 명령서에 의하면, 북한은 북한과 소련 인민 사이의 문화관계 발전과 교류 증대, 양국 인민간의 친선강화를 목적으로 북한내 문화원(조소문화회관)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늦어도 1948년 2월 10일까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앞으로 건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영구히 양도하도록 지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1948년초 북한의 정치권력인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의해 문화원의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지만, 문화원(조소문화회관)의 사용 용도에 맞는 수리와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물자지원은 광복 이후 북한 내에서 기대할 수 없었으며,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그것들을 모스크바로부터 충당해야만 하였다. 결국 북한은 다량의 건축자재와 재정적인 지원을 소련에 요청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광복 이후 인프라 구축에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⁶²⁾

이 시기 북한 내에 소련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북한과 소련의 문화교류활동은 주로 조소문화협회를 지원함으로써 전개되었다. 1945년 11월에 발족된 조소문화협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그 협회 기관지인『조소문화』의 창간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창간사에서는 "조선의 민족문화를 창립하기 위하여 위대한 선진국인 소련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구,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소문화의 교류와 조소문화협회의 사명이 크다"⁴⁶³⁾라고 하여 소련 문화의 선전과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후 1948년 7월 개관된 평양 소련문화회관에서는 "강연회, 보고회, 야회, 영화감상

461) 결국 소련은 평양 소련문화회관을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당시 냉전이 고조되어가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의 선전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문화센터'로 활용하였다.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p. 414.

462)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pp. 405-412.

463) <조소문화>, No. 1, 1946, p. 3;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p. 415. 재인용.

등의 사업수단을 통하여 소련의 국가와 사회제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북한 주민에게 알렸으며, 조소문화협회의 사회과학분과 회원과 활동가들에게는 레닌과 스탈린의 전기를 학습시킬 의도로 <10월 혁명의 레닌>, <1918년 레닌>, <맹세>, <무장한 사람> 등의 영화를 관람시켰고, 체육 스포츠분과에서는 <최고의 전투선수>, <전위의 중심>, <프라하의 소비에트 체육인> 등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또한 강연회, 보고회, 특별전시회, 영화감상 등의 수단을 통해 소련의 모든 경축일 행사를 재현하였다.⁴⁶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북한과 소련간 문화교류에 있어 문화예술인 및 인민대중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었다. 1949년 4월 개최된 조소문화협회 제3차 대회에 각 생산조장, 기업소의 조소친선계문화인들 및 문학가, 예술인, 교육가, 학자, 협회 활동가들이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조소친선과 소비에트문화순간 경축공연'에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의 연극, 음악, 무용 등 7,848 씨클 단체와 180,000여명의 씨클원이 참가하였고, 각계각층의 인민 2,283,089명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소련의 공산주의 건설모습을 소개하는 38,353회의 사진전람회에는 10,815,334명의 군중이, 3,270여회에 걸쳐 상영된 장편영화관들과 이동영화에는 1,769,000여 명의 군중이 참관하였고, 1949년 한 해 영화 관객수만 16,430,977명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은 광복 이후 조소문화협회와 소련문화회관 설립으로 문화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⁴⁶⁵⁾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다. 소련 문화의 유입 배경

(1) 당대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들의 소련에 대한 동경

1949년 2월 방소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공식 방문한 백남운은 소련방문기 『소련인상』⁴⁶⁶⁾을 통해 당대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들의 소련에 대한 동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자연과 투쟁한 거룩한 인민이여! 개척자인 인민의 승리를 영원히 축복하는 광장이다! 소련 인민의 행복이여! 과연 방대한 나라여! 소련 영내의 문턱을 겨우 밟기

464)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pp. 417-422.

465) 북한은 내부적으로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동맹'을 결성하여 예술과 예술가들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예술인 조직체계를 완성하였다.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예술단체는 우익단체인 '평양예술문화협회'였으나 점차 활동이 축소되었고 좌익 중심의 '평양지구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조직이 결성되고, 확대되면서 체계를 갖추어 갔다. '북조선예술총동맹'은 1945년 10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되면서 그 산하에 7개 동맹 조직을 두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이후 1951년, 1953년, 1961년에 걸쳐 조직 통합과 분야별조직으로의 해체를 거듭하였다. 전영선·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사)남북문화연구소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pp. 204-205.

466) 저자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를 편찬한 역사학자로, 김일성 수상, 문화선전상 허정숙 등의 관료들과 함께 1949년 2월 소련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이때 '소련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작한 나의 초인상(초인상)이 이와 같이 감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산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기차는 그대로 설해(설해)를 달리고 있다. 오전 11시의 조반 식탁에 올은 양안식 반숙 계란과 우유에 재인 밀가루 전병은 더욱 풍미가 좋은 편이었다.⁴⁶⁷⁾

전세계 근로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조선 인민의 해방자 천추의 은인이신 스탈린 대원수와 면회하게 된 것은 실로 나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감명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감격에 넘치는 광영으로서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스탈린은 위대한 레닌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업을 발전시킨 공산주의사상의 태양으로서 일국사회주의국가의 완성자인 동시에 공산주의 사회의 창건자이며 조직자이다. 그러므로 소련 인민과 볼셰위끼당의 영명한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인류 사회의 숭앙하는 최고 스승이며 전세계 근로인민의 경모하는 구성이신 것이다. 바로 그 스탈린 대원수 한 책상 위에서 전개된 조소협정에 관한 원칙적인 회담에 참가한 것은 큰 광영이며 행운이었다.⁴⁶⁸⁾

광복 이후 북한 주민들도 소련문화를 동경하며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러시아혁명 이후에 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과 혁명가들이 소련 문화를 동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련문화의 접촉은 강제적이거나 보다는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소련문화를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문화의 발전은 전세계 인류의 문화발전에 새 기원을 이루었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가져온 쏭베트문화 전세계 수억만 노동인민들의 문화이며, 쏭베트문화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여러 세기 동안에 인류가 달성한 우수한 문화의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쏭베트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인류문화발전의 최고층위를 이루고 있다"⁴⁶⁹⁾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소련 문화를 수용했던 이유는 소련 사회주의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인간형, 사회주의적 인간형이야말로 북한의 국가건설을 추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⁴⁷⁰⁾

소련의 작가, 예술가들에 의하여 더욱 형상화된 그 관후하고 겸허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적 앞에서는 불요불굴하여 강인성 있고 조국에 일체를 바치는 쏭베트 인민의 새로운 인간타입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성격을 변화시키며 창조하는데 다시없는 정형이 될 것이다.⁴⁷¹⁾

467) 백남운, 『쏘련인상』, 도서출판 선인, 2005, pp. 28-29.

468) 백남운, 『쏘련인상』, 도서출판 선인, 2005, p. 11.

46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p. 361-362.

470) 정진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쏭련'의 이미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54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150.

471) 김오성, 「민족문화발전의 새단계: 조소협정에 관련하여」, 『조소문화』, 1949년 5월호, p. 29.

이처럼 소련 문화를 받아들인 북한 문화도 수준 높은 선진문화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광복 이후 소련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북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이후 북한 문화외교의 특징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소련과 국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소련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북한은 광복 이전부터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연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⁴⁷²⁾으로 대외활동을 제시한 이래 김일성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동정치학교에서 이를 더 구체화하여 대외활동방침을 "앞으로 우리 나라에 세워질 민주주의국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 민족들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교관계를 맺으며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⁴⁷³⁾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대외정책 아래 북한은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 형성된 국제혁명역량 연대성 및 혁명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관계를 옹호하였기 때문에 북한과 소련의 친선관계는 당연한 것이었다. 때문에 북한과 소련은 북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우편물 교환 및 전보연락에 관한 임시협약'⁴⁷⁴⁾을 1946년 8월 평양에서 체결하게 된다.

특히 북한과 소련간 최초의 국교관계 수립 및 국제협약에 이은 문화협정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더욱 공고화하였고, 소련으로부터 기자재 반입 및 소련 견학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소련 문화, 즉 선진문화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각종 사절단과 견학단을 파견하였다. 1949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련평화옹호대회>에 허헌, 박정애를 보냈고, 같은 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로브탄생 100주년기념대회>에는 김광진, 김택영, 리호림을, 소련적십자사 적반일사회에 리동영을, 11월에 개최된 <10월 혁명기념대회>에는 최창익, 박영신, 김순남, 리태준을, 국제녀맹리사회에는 박정애를 파견하는 등 국제친선 뿐만 아니라 소련 문화를 수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2)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

광복 이전 소련군 대위로 잠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일성이 북한 문화외교의 첫 대상국가로 소련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단일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소련의 지원이 절실했다. 북한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복구도 소련의 지원이 필요했다.

47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128.

47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89.

474) <정료>, 1946. 8.20일자

김일성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브야츠크 촌에서 '88 독립보병여단'⁴⁷⁵⁾ 생활을 하면서 소련군 장교들의 신임을 얻었다. 또한 스탈린이 싫어하였던 코민테른에 관계한 적도 없었으며, 조선공산당에서 어떤 종파주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련의 후견을 얻는 좋은 자원이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대북한정책의 시행에 기꺼이 협조하여 소련군의 신망과 지지를 획득하였다.⁴⁷⁶⁾ 1945년 9월 스탈린은 김일성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불러 크렘린궁과 별장에서 단독으로 만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 후보로 낙점한 것이다.⁴⁷⁷⁾

1945년 10월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의 김일성 연설문도 소련군이 작성하였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될 때까지의 소련군의 역할은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군 사령부에 제출해야 했다.⁴⁷⁸⁾ 소련군 사령부가 북한 초대 내각과 최고 인민회의 의장단을 선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첫째, 소련에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정책을 지지하는지 여부 둘째, 조선 해방 이전 사회주의 혁명 활동 셋째, 일제 압박 속에서 투쟁한 경력(감옥살이 등)과 친일파 숙청에 대한 확고한 의지 넷째, 인민을 이끌 수 있는 정치력과 전문성 등이었다.⁴⁷⁹⁾

김국후의『평양의 소련군정』⁴⁸⁰⁾의 기록을 보면, 1947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평남 남포시당 제2차 열성자대회 주석단 가운데는 김일성 초상화가 태극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왼쪽에 레닌, 오른쪽에 스탈린 초상화를 배치함으로써 당시의 권력지도와 정치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따라서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가 광복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의 북한 문화외교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3) 스탈린 체제의 안정

광복 이후 북한이 정부 수립을 목표로 일련의 과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중국

475) 필자가 관련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김일성의 소련군 복무 기록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국후의 저서『소련의 평양군정』에는 "김일성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년간 소련군 제88정찰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고 기록하였고, 백학순의 연구「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에는 "김일성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 연해주의 88독립보병여단에서 생활하였다"고 하였고, 돈 오버더퍼의 저서『두 개의 한국』에는 "1941년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는 다른 중국인 유격대와 함께 일본군에 쫓겨 만주 국경을 넘어 소련군 훈련소에 이르렀고 김일성은 그곳에서 4년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의 소련 연해주 군활동을 "1941년부터 1945년까지"로 기록한다.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p. 213;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p. 55; 돈 오버더퍼(Don Oberdorfer), 이종석 옮김, 『두 개의 한국』, 길산, 2002, p. 43.

476)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p. 55.

477)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pp. 71-72.

478) 이주철, 「북조선로동당의 당원 확장과 당의 변화」,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p. 5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 8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북한관계자료집』 5, p. 151.

479)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p. 281.

480)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은 국공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내전 초기에는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수세로 몰려 중국에 인민공화국이 건설될 가능성 조차도 불확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권력을 안정화시킨 스탈린 체제의 소련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광복 이후 북한과 중국의 일부 지역 간에는 비공식적인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1945년 말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연안' 공산주의자 그룹과 중국의 동북부와 북한을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넘나들었던 중국의 조선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마오쩌둥과 다른 저명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저작이 번역되어 북한에서 읽혀졌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문학잡지인『연변문화』도 북한에서 읽혀졌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적 영향은 소련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것이었다.⁴⁸¹⁾

이처럼 이 시기 북한이 소련과 문화외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련 정권이 스탈린체제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내전중인 중국과는 공식적인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수교 및 문화협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게 된다.

북한이 소련 중심의 문화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방 이후 북한 지도부의 대소관, 스탈린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소련군이 조선을 해방시킨 후 소련정부와 소련군으로부터 조선의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원조를 받았으나 앞으로도 소련의 지원이 없으면 조선의 인민경제와 문화를 복구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⁴⁸²⁾고 요청했고, 스탈린은 이에 대해 경제원조와 전문가 파견 및 연수 등을 확답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교류는 1949년 10월에 개최된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경축대회'를 들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은 스탈린 대원수에게 각 대회 명의로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북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소련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양국간 문화교류에 관한 북한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순간중에 중앙 및 각도전문예술단위들에서 소련의 문학예술인들의 작품으로 33회의 공연을 하였다. 전조선 인민들의 환호와 참가로써 진행된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을 경축하기 위하여 1949년 10월 21일 소련예술대표단이 모스크바로부터 방문하였다. 소련 예술대표단 일행은 1949년 11월 15일까지 체류하였다. 평양, 청진, 성을, 함흥, 흥남, 원산, 강계, 신의주, 남포, 해주 등지에서 음악, 무용 등 19회의 공연을 하는 한편 조선의 문학예술인들과의 좌담회를 통하여 소련 예술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남기었다.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은 영구 불멸한 조쏘친선과 조선인민들의 민족문화를 일층 발전시키는데 거대한 성과를

481)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Shipping Advice(SA) 2008, box 9, item 12, inaugural issue, 『연변문화』, 1948;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p. 147.

482)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도서출판 선인, 2010, p. 309.

거두었다.⁴⁸³⁾

북한은 1949년 12월 제7차 단일민주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쓰딸린이 일본 제국주의 속박에서 조선 민족을 해방시키고 국토통일과 독립 달성에 승리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고무시켰다"⁴⁸⁴⁾며 스탈린의 70회 생일을 민족적 축제로 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의 특별위원회는 정부, 당, 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되었는데 위원장은 김일성이며, 위원으로는 김두봉, 박헌영, 홍명희, 김책, 허가이, 박일우, 김삼영, 최용건, 김달현, 이영, 백남훈, 김원봉, 이극노, 이용, 김병채, 김창준, 강량욱, 허정숙, 박창옥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평양에서는 284회의 강연회에 67,772명이 참가했으며 청진에서는 135회, 함흥에서는 127회, 흥남에서는 109회, 해주에서는 126회, 신의주에서는 113회의 강연이 각각 개최되어 쓰딸린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찬양했고, 북한 작가와 시인이 쓴『쓰딸린과 소련군』이 출판되었다.⁴⁸⁵⁾ 1949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쓰딸린탄생 70주년기념대회>에는 김두봉, 김달현, 리승엽, 김원경, 신종섭, 리금순, 김광진, 김태영 등을 대표단으로 소련에 파견하기도 하였다.⁴⁸⁶⁾

물론 당시 북한 지도부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경력을 쌓은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체제 확립기에 있어서 공산주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문화외교를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의 소련에 대한 지원 요청 및 북한 내 쓰딸린 위상은 북한과 소련간의 문화외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4) 소련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우호적 연대감

북한은 소련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문화 등을 북한 주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소련의 경축일 행사 재현에서부터 강연회, 보고회, 야회, 영화상영회 등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주민 동원은 북한과 소련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소련에 대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북한에게 소련은 북한의 해방을 위해 피를 흘린 "유일한" 존재였다. 이러한 서술은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남한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한 대비효과를 낳았다.⁴⁸⁷⁾

미영은 카이로선언을 허명무실하게 떠들어댔을 뿐으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한 개의 탄환도 소모한 일도 없으며 한방울의 피도 흘린 일이 없다. 쏘베트 군대

48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p. 363-364.

484)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도서출판 선인, 2010, p. 458.

485)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도서출판 선인, 2010, pp. 458-459.

48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1951~1952), p. 391.

487) 정진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쏘련'의 이미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54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145.

가 자기 형제의 시체를 넘어 선혈을 흘리면서 고귀한 희생의 댓가로 조선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다면 미국군대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황해를 거쳐 선유격으로 일제가 투항한 훨씬 이후에 남조선에 상륙하였다.⁴⁸⁸⁾

미군정의 획족한 강압과 악질적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팻쇼분자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은) 그 성장과 발전이 곤란하나 북조선에 있어서는 해방군 붉은 군대의 원조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의 지도아래에서 조선의 해방구로서 또 민주주의운동의 근거지로서 폭풍우 같은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⁴⁸⁹⁾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9월 한 달 동안에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12편의 영화 상영 및 8회의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948년 7월 개관된 평양 소련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소련군사령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국교를 맺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사령부의 영향력과 기존에 형성된 소련군에 대한 인민의 우호적 연대감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평양에서 '붉은군대 환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학자, 교사, 예술가, 법률가, 종교인 등이었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일반인들의 정서에서 일제의 청산, 새로운 선진문화의 확립, 소련인들 생활의 이해, 북한과 소련의 친선강화 등이었으며, 얼마 뒤 이 위원회는 '붉은군대 친선협회'로 명칭을 바꿨다.⁴⁹⁰⁾

북한 문화 인프라 구축 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쏘문화협회 발족식에도 소련군 대표 쿠세프 중좌가 직접 참석하였다. 1945년 11월 발족된 조쏘문화협회는 위원장 황갑영, 부위원장에 김봉철을 선출하였고, 발족대회에 소련군대표 쿠세프 중좌, 김일성, 조선민주당대표 오영진, 조공평남도위원회 대표 윤창섭 등이 참석하였다.⁴⁹¹⁾ 조기천, 전동혁, 그리고 임화 등을 포함한 저명한 문학가들이 1945년 9월 평양역 앞에 '조선신문사(Soviet Army Press Company)'를 세우고, 조선어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것은 소련-북한 문화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었다.『조선신보』는『소비에트 신보』로 이름을 바꾸어, 미하일 강이라고 불리는 한인계 소련군 소좌의 책임하에 있었다.⁴⁹²⁾ 1948년 9월 평양의 내각 청사 앞에서 소련군정 지보부와 북한의 초대 당정 고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구성원을 살펴보면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데베프 소장, 김일성 수상,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헌영 부수상, 한일무 강원도당 위원장, 박일무 내무상, 허가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창옥 당선전부장, 최창익 재정상, 주영하 당 중앙위원회, 김책 부수상, 김열 함남도

488) 홍순철, 「쏘베트군대의 위대한 은공은 친추만대로 길이 찬양될 것이다」, 『조쏘친선』, 1950년 2월호, p. 7.

489) 이청원, 「파시즘이 난무하는 남조선」, 『조쏘문화』, 1946년 9월호, pp. 151-153.

490) 강인구,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원, 1997, p. 163.

491) 『정로』, 1945. 11.14.

492) Lim Un,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Tokyo: Jiyu-sha, 1982, p. 143.

당 위원장, 기석복 당선전부 부부장, 장철 인민군 후방국 부국장, 김승화 김일성대학 부총장, 최경덕 직총위원장, 이훈일 군단장, 한설야 문화예술총동맹 위원장, 태성수 노동신문 사장, 박창식 평양시장, 박정애 여맹 위원장, 김찬 조선중앙은행 총재, 김광협 군단장, 오기섭 노동상, 김일 군단장, 장순명 함북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하였다.⁴⁹³⁾

특히 북한은 소련 문화 보급을 위해 강연, 전람회, 연극, 영화, 음악 좌담회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고, 112개소의 로어강습소를 개설하였다. 문학, 체육 등 5개 부문으로 나눈 전문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련문화를 연구하였고, 그 성과를 인민대중에게 보급전달 시키기 위해서 조소문화협회회원인 학자, 문화인 또는 사회활동가 등 504명이 참가하였다. 1949년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조소친선과 쏘베트 문화순간' 경축공연에는 씨클 단체와 씨클원이 직접 나섰다. 또한 소련의 공산주의 건설모습을 소개하는 사진전람회에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참관하였고, 장편영화관들과 이동영화는 3,270여 회에 걸쳐 상영하였는데 여기에도 다수의 주민이 참관하였다.⁴⁹⁴⁾ 특히 조소문화협회는 1948년 6월말 기준 협회 위원수가 756,352명으로, 협회 주최로 개최된 각종 전람회는 1948년 초기 3,088개 장소에서 4,880회에 2,966,189명의 관람자가 있었으며, 소련을 소개하는 보고대회, 강연회, 좌담회 등은 동기간에 27,014회에 걸쳐 2백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⁴⁹⁵⁾ 따라서 이같은 북한 주민들의 소련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은 소련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우호적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Ⅲ. 맺음말

광복 이후 6.25전쟁 이전 시기까지의 북한 문화외교 특징은 문화외교의 대상국이 소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예술 관련도서의 번역과 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예술의 기술향상과 발전, 소련영화 상영, 소련 관련도서의 번역출판, 조소음악인 교류회, 사진전람회 등 다양한 군중문화 행사를 북한이 적극 수용하였고, 이를 위해 북한은 조소문화협회, 조소문화회관을 활용하여 '조소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련 문화예술인들의 북한 방문횟수, 방문기간, 참가자 및 관람자수가 증대되었고, 공연 장소가 평양 외 강계, 신의주 등지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체육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소련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이 시기 북한은 1950년 3월 평양에 중국 신화통신사 주 분사를 설치하였다. 국교수교 대상국인 형

493)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49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1951~1952), p. 391.

49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p. 147.

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각종 행사에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친선협조관계와 국제민주단체들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활발한 문화외교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두고 북한은 당시 소련 문화를 선진문화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북한 문화가 발전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광복 이후 정권 수립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위해 문화외교 및 문화교류의 근본목적인 '친선과 연대 강화' 보다는 '강대국의 정치적 후원'을 위해 문화외교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연구사』 90, 한국사연구회, 1995.
- _____,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원, 1997.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 김오성, 「민족문화발전의 새단계: 조소협정에 관련하여」, 『조소문화』, 1949년 5월호.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김일성저작집』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돈 오버더퍼(Don Oberdorfer), 이종석 옮김, 『두 개의 한국』, 길산, 2002.
- 박종호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도서출판 선인, 2010.
- 백남운, 『쏘련인상』, 도서출판 선인, 2005, pp. 28-29.
-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 이청원, 「파시즘이 난무하는 남조선」, 『조소문화』, 1946년 9월호.
- 전영선·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사)남북문화연구소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 정진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소련'의 이미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54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52.
-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북한현대사 1』, 한울아카데미, 2004.
- 홍순철, 「쏘베트군대의 위대한 은공은 천추만대로 길이 찬양될 것이다」, 『조소친선』, 1950년 2월호.
- 『노동신문』, 1961년 5월 5일자.
- 『정로』, 1945. 11.14일자.
- 『정로』, 1946. 8.20일자
- 『조소문화』, No. 1, 1946,
- Lim Un,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Tokyo: Jiyu-sha, 1982.
-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